

2017
통일로

제36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논문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 책자는 「제36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모음집으로, 논문의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목 차

최우수

- *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 민관협력 6차 산업형 모델을 중심으로 -
장윤수 | 전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우수

- * 남한 및 북한 관련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인식조사 및 영향력 분석..... 53
오유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유지연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장려

- * 남북 협동조합 연계를 통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방안..... 89
나혜일 |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우정 |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 * 남한 ‘서커스’와 북한 ‘교예’ 비교를 통한 민족문화 공통성 제고 연구... 121
이영호 | 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 * 통일교육 핵심역량 탐색 및 단위학교 활용 가능성 분석..... 169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을 중심으로-
추가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입 선

- *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평석 205
김연진·진호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239
- 소규모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생활에너지 협력과 풍력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
김대연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외교학 전공
- *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 217
- 기업 인수합병(M&A) 후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손정원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 *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 277
-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
김민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하경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 통일인문학과 ‘민족’이라는 이름의 타자 309
- 소설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
유현성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최우수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관협력 6차 산업형 모델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전공 장윤수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남북 농업현황과 구조분석
- III. 남북 농업협력사업 사례분석
- IV. 남북 농업협력 모델 개발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관협력 6차 산업형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은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고,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오늘날의 경제강국을 이룩하였고, 2009년부터는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된 공적 원조 대상에서 북한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공감대 조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 부문은 여러 원조 부문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부문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위기로 인한 기아사태와 빈곤문제를 겪고 있어 식량원조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업개발협력은 북한이 자생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통일의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대비책중의 하나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와 제한적인 사업 지원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자본 부족으로 원조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식량·비료의 인도적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식량지원은 대북 지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분야이지만,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이루기에 한계가 있는 단기적 목표이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북 농업협력은 1차적인 식량의 인도적 지원이 주를 이루어왔고,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대북지원 정책에서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기아 및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농업

구조와 남북 농업협력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남북 농업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남북한을 비교 분석한 이유는 농업 구조에 있어 공통의 문제점 혹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남북 농업협력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남북 농업협력을 활성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북 농업협력은 북한의 태도 변화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나 인도적 지원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남북 농업협력이 북한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1차)과 가공·유통(2차), 관광(3차)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6차 산업형 민간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6차 산업 모델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협력단지 배후 지역과 외부와의 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성 공업지구 배후지역, 금강산 관광지구 배후지역, 나선특구와 신의주 특구 배후 지역 등이 선정되었다. 해당 지역에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차 산업 부문에서는 공업단지의 배후에 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및 공업단지의 인구에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까지도 포함하였다. 3차 산업 부문에서는 1,2차 산업 추진에 있어 확보된 농촌 인프라를 관광 산업의 발전에 활용하는 농촌 관광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 농업민관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물의 생산 뿐 아니라 가공과 관광 산업이 연계되어 성공적인 6차 산업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단계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부문의 기술과 자본,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 농업협력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기아에 허덕이는 취약계

층에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인류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 분야를 포괄하는 6차 산업형 모델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이 공적개발원조를 받을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평화적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에 더해 기업과 민간 지원단체의 기술과 자본,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투입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농업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식량안보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북한의 농업은 기아 사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 상태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과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농업협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과제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은 공적원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¹⁾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위기로 인한 기아사태와 빈곤문제를 고려하면 북한은 농업 개발 협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수원국 중 하나이다. 또한 농업 부문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가져올 위험을 생각해보면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및 발육상태는 심각한 장애를 불러 올 수 있고, 이는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식량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어린이, 임산부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소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²⁾

1) 이조원, “북한 ODA의 실현가능성과 조건,” 『북한 ODA 그것은 가능한가? 학술회의 자료』 (중앙대학교, 2008), pp. 28-57.

2) 최영경·전운성, 『지구촌의 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 (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P. 157.

기존의 대북 농업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³⁾ 그러므로 남북 간 농업협력은 쌀·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 농업협력모델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농업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6차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 생산기술이 미약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업의 6차 산업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도 6차 산업화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많은 6차 산업 정책 속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었지만 효과를 거둔 정책도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는 정부 정책 경험과 민간에서 6차 산업화에 도전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개발협력에 민관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농업 현황과 대북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 후에 민관협력 6차 산업형 모델을 연구하여 남북한농업의 발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남북한 농업의 현황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남북 농업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협력 사업은 민간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개발협력 사례의 성과를 모형을 통해 단순화하였다. 각 사업별로 투입된 자원, 활동, 산출, 결과를 단순화한 모형을 통해 투입과 산출을 파악하였다. 그 중 성과가 명확히 도출되는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 사업과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례를 분석하여 6차 산업 모델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3) 송정호, “대북개발지원 사업의 가능성과 제약,” 『통연협 논단』 제2호(2009), P. 231.

Ⅱ. 남북 농업현황과 구조분석

1. 농업 노동력

북한의 인구는 1990년 이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총인구는 1985년에서 2015년의 사이 34.0% 증가했다. 북한의 농촌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농촌인구는 984만 명으로 1985년에 비해서는 23.7% 증가하였다. 북한에서도 총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공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과 비교하면 농촌인구가 증가했다는 점과, 1985년부터 20년 간 농촌인구비율 변화율이 2%대인 것을 보면 북한 산업구조에서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남한의 4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농업 노동이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농업의 기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1> 남·북한의 농촌인구 변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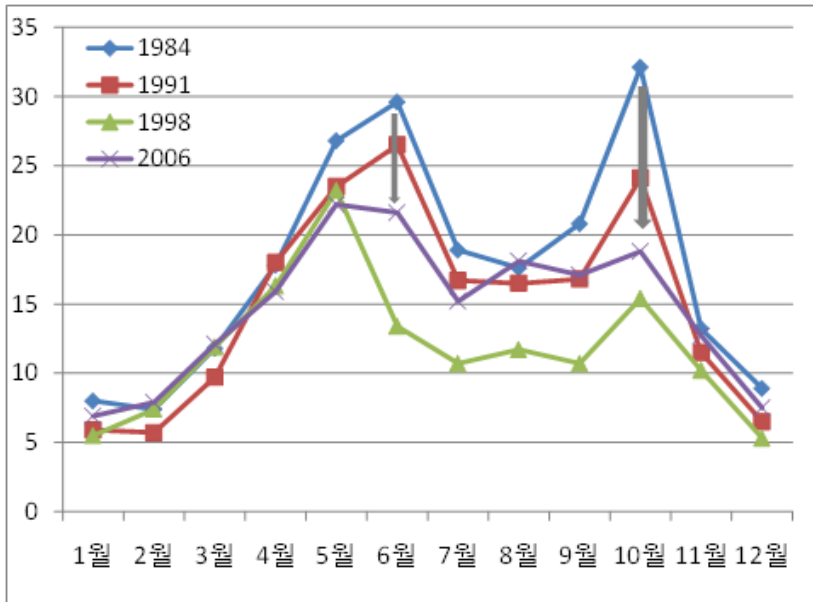
년도	남한		북한	
	총인구	농촌인구(%)	총인구	농촌인구(%)
1985	40,806	8,521(20.9)	18,778	7,954(42.4)
1990	42,869	6,661(15.5)	20,194	8,404(41.6)
1995	44,851	4,838(10.3)	21,764	8,919(41.0)
2000	46,858	4,210(9.0)	22,840	9,270(40.6)
2005	48,138	3,434(7.3)	23,813	9,572(40.2)
2010	48,580	3,063(6.8)	24,501	9,749(39.8)
2012	50,004	2,962(5.9)	24,763	9,797(39.6)
2014	50,424	2,752(5.5)	25,027	9,832(39.3)
2015	50,617	2,569(5.0)	25,155	9,842(39.1)

출처: <http://www.fao.org/faostat/en/#data>.

남한의 1985년에서 2015년의 총인구는 22.9% 증가하였는데, 농촌인구의 비율은 20.9%에서 5.0%로 크게 감소하였다. 문제점은 이러한 감소폭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남한의 총인구는 1985년 이후 4천만 명을 넘어서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2018년부터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점은 인구와 고령화와 감소 속도는 농촌지역에서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2년 34.7%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2년에는 4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전국인구의 65세 예측 비율인 17.2%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남한이 농촌 인구도 작고 투입된 노동시간이 작음에도 월등한 농업 생산성을 가질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농업의 기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남한의 월별 농가노동일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농업 노동력 투입에 대해 살펴보면, 1984년에서 2006년 사이 노동일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업 노동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노동력에 관한 문제도 결국 자본재 중 고정자본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 문제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북 농업협력에 있어 남한의 단기적인 유희 농기계의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기계 수리 및 조립 시설에 대한 지원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4) 통계청 발표자료,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2016.12.08



<그림 1> 농가의 월별 노동일수 변화 추이(M자형)

2. 경지면적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한 경작지 확산을 목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자연개조 5대 방침’과 ‘자연개조 4대 방침’이 시행된 결과 1990년 경지면적은 214만ha이다. 이후 농경지 면적은 2005년까지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정체상태에 있다. 북한의 경지면적 구성을 살펴보면 1985년부터 20년 동안 논과 밭의 비율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산악지대 및 고원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식량작물을 생산할 경작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남한의 총 국토면적은 1천 3만ha로 이 중 경지면적은 16.7%인 167만 9천ha, 북한의 총 국토면적은 1천 227만ha로 이 중 경지면적은 15.6%로 나타나 남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논과 밭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경지면적에서의 비중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지면적에서 논의 비

중은 1985년 61.8%에서 2015년 54.1%로 감소했다. 밭의 경우에는 1985년 38.2%에서 2015년 45.9%로 그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생산 작물의 변경으로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토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산림에서 개간을 통해 밭으로 전환된 지역도 밭의 비중 증가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표 2> 남·북한의 경지면적

(단위: 1,000ha, %)

년도	남한			북한		
	경지면적	논(%)	밭(%)	경지면적	논(%)	밭(%)
1985	2,144	1,325(61.8)	819(38.2)	2,140	640(29.9)	1,500(70.1)
1990	2,109	1,345(63.8)	764(36.2)	2,141	645(30.1)	1,496(69.9)
1995	1,985	1,206(60.8)	779(39.2)	1,992	585(29.4)	1,407(70.6)
2000	1,889	1,149(60.8)	740(39.2)	1,992	576(28.9)	1,416(71.1)
2005	1,824	1,102(60.4)	719(39.6)	1,907	609(31.9)	1,298(68.1)
2010	1,715	1,010(58.9)	984(41.1)	1,910	609(31.9)	1,301(68.1)
2012	1,730	966(55.8)	764(44.2)	1,910	571(29.9)	1,339(70.1)
2014	1,691	934(55.2)	757(44.8)	1,910	571(29.9)	1,339(70.1)
2015	1,679	908(54.1)	771(45.9)	1,910	571(29.9)	1,339(70.1)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남한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여주는 <표 3>을 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통일계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단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78년에는 10a당 단수가 474kg로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의 경우 <표 2>의 경지면적을 통해 식량난의 원인은 경지면적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과거 통일벼 사례는 북한 토질에 맞는 종자의 개량과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의 식량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표 3> 남한의 쌀 재배면적, 생산량 및 10당 수량

구분	쌀							
	계			일반계			통일계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생산량	단수	면적	단수
단위	천ha	천M/T	kg	천ha	천M/T	kg	천ha	kg
1965	1,228	3,501	289	1,199	3,464	289	-	-
1970	1,203	3,939	330	1,184	3,907	330	-	-
1974	1,204	4,445	371	1,008	3,561	353	181(15.0)	473
1975	1,218	4,669	386	924	3,248	351	274(22.5)	503
1978	1,230	5,797	474	290	1,263	435	929(75.5)	486
1980	1,233	3,550	289	616	1,797	292	604(49.0)	287
1985	1,237	5,626	456	890	3,890	437	343(27.7)	504
1990	1,244	5,606	451	1,103	4,881	442	138(11.1)	520
1992	1,157	5,331	461	1,155	5,324	461	0.8	531
1995	1,056	4,695	445	1,055	4,694	445	-	-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주 : ()는 전체 쌀 재배면적에 대한 통일계품종 재배면적의 비율임.

3. 농업 자본재

남한의 주요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 농기계가 보급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농기계 과잉 보급이 농업경영의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농가호수가 112만호로 조사되었으며, 1ha이하를 경작하는 소농의 비율이 69.1%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소농인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농기계 대수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 <표 4>의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 농기계가 과잉 공급되어 기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표 4> 남한의 주요 농기계 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1965	1,111						
1970	11,884	61					
1975	85,722	564		16		56	694
1980	289,799	2,664		11,061	13,652	1,211	1,616
1985	588,962	12,389		42,138		11,667	5,437
1990	756,489	41,203	50,699	138,405	55,575	43,594	17,749
1995	868,870	100,412	239,496	248,009	66,960	72,268	28,408
2000	939,219	191,631	369,150	341,978	72,315	86,982	55,573
2005	819,684	227,873	392,505	332,393	60,008	86,825	70,363
2010	698,145	264,834	407,997	276,310		81,004	77,830
2012	653,420	272,898	403,183	244,560		79,439	77,136
2013	639,517	277,649	407,571	235,612		78,854	78,282
2014	609,864	277,234	396,550	220,204		75,970	76,859
2015	598,279	282,860	407,134	213,405		78,984	78,311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북한 농기계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80년대 북한 농기계 수준은 남한과 대등한 수준이었다고 분석된다. 오히려 북한의 농업 기계화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까지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농기계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급격히 축력과 인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가 유도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1990년대의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는 농기계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떨어뜨렸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 공급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움직이던 트랙터 까지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⁵⁾

북한에는 500ha 규모의 토지에서 영농하는 협동농장 약 3000개가 운

5) 이용범(2005), “북한 농업 개발 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 통일심포지엄 자료 재정리.

영되었는데, 당시 협동농장마다 트랙터, 이앙기 등이 보급돼 있었다. 농장마다 트랙터를 보급했다고 보면 전체 트랙터 공급 규모는 8만~12만대로 추측되며, 2015년 기준으로 1만대 이상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북한 농업에 농기계가 활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남한 측의 과잉 공급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중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나 사용이 가능한 혹은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사용이 되지 않는 농기계를 일정 부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⁶⁾

유동자본재 부분에서는 농자재로서 비료 및 농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5>를 보면 1980년부터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농약의 생산량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생산성 향상에 농자재의 역할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특히 수도작용 농약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기농 쌀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유동자본재에 있어 북한 식량생산의 저해 요인으로 심각한 비료 부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종자와 에너지 투입(연료, 전기, 농약 등) 문제가 유동자본재 중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6) 한국농어민신문(2015.01.02.), http://fert-kfia.or.kr/new/02_info/list.asp?page_name=view&code=bbs07_02&An_num=3222&PageNo=40&StartPage=31&pageNum=7&subNum=3

<표 5> 남한의 비료 및 농약 보급현황

구분	비료			농약				
	생산량	소비량	자급율	생산량			1ha당 사용량	
				수도작용	원예용, 기타	계	전체	수도작
단위	성분 천M/T		%	성분 M/T			kg	
1970	590	563	105					
1975	860	886	97	2,919	5,723	8,642		
1980	1,345	828	162	6,942	10,489	17,431	5.0	5.2
1985	1,398	807	173	6,819	10,939	17,758	7.0	5.7
1990	1,646	1,104	149	8,316	18,294	26,610	10.4	6.8
1995	1,778	954	186	4,692	21,714	26,676	11.8	4.6
2000	1,546	801	211	6,688	22,771	29,459	12.2	6.8
2005	1,461	722	202	5,110	18,859	23,969	12.8	4.7
2009	865	500	173	4,060	19,686	23,746	11.7	3.9
2010	1,006	423	238	2,577	17,609	20,166	11.2	3.4
2012	897	472	267	2,562	15,775	18,337	9.9	2.8
2013	890	459	260	2,213	17,049	19,262	10.9	2.7
2014	860	453	258	2,236	18,474	20,710	11.3	2.8
2015	775	439	177	2,532	19,478	22,010	11.6	2.5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4. 농업 생산성과 식량수급⁷⁾

북한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1985년에 419만 3천 톤이고, 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에는 482만 3천 톤의 식량이 생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식량작물은 15.0% 증산되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주요 생산 작물은 쌀, 옥수수, 밀과 보리 등이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쌀 생산량은 1970년 148만 톤에서 1980년 124만 5천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7) 이재동, “남북한 농업협력과 NGO의 역할,”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평화석사학위논문, 2005) 참고.

1990년에 145만 7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 다시 121만 1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감소, 수해 또는 냉해 가뭄 등의 기후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쌀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부터 국내외 단체들의 인도적인 식량생산 지원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통해 식량공급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옥수수의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옥수수 기술을 발전시켰고, 북한 농산물 중 옥수수는 전체 밭 면적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 식량작물이다. 옥수수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표 6>에서 2000년 기타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감자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변화

(단위 : 천M/T, %)

년도	생산량	쌀(%)	옥수수(%)	기타(%)	증감률
1985	4,193	1,519(36.2)	2,072(49.4)	602(14.4)	-10.2
1990	4,013	1,457(36.7)	1,949(48.5)	607(14.8)	-12.2
1995	3,451	1,211(35.1)	1,851(53.6)	389(11.3)	-16.3
2000	3,590	1,424(39.7)	1,440(40.1)	726(20.2)	-15.0
2005	4,537	2,024(44.6)	1,630(35.9)	883(19.5)	5.2
2009	4,108	1,910(46.5)	1,301(31.7)	896(21.8)	-4.6
2013	4,806	2,101(43.7)	1,762(36.7)	944(19.6)	2.8
2015	4,512	2,016(44.7)	1,645(36.5)	851(18.8)	-6.0
2016	4,823	2,224(46.1)	1,702(35.2)	897(18.6)	6.9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표 7>의 북한의 농업생산성 지표를 보면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해왔다. 198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 없이 생산성 향

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보당 쌀 생산량은 1995년 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 북한의 농업생산성 지표

(단위: M/T, kg)

년도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M/T)	단보당 쌀 생산량 (kg)
1985	2.43	237
1990	2.32	226
1995	2.32	210
2000	2.28	264
2005	2.82	346
2009	2.55	326
2013	2.58	368
2015	2.41	352
2016	2.57	389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1995년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갑자기 하락하였고 1997년까지 연간 350만 톤을 하회하였다. 이 양은 최소소요량에 170만 톤 이상 모자라는 양이었고, 국제 사회의 식량지원에도 식량난은 최고조에 달했다. 2000년대에는 사정이 나아져 2003년에는 425만 톤, 2005년에는 450만 톤의 식량이 생산되었다. 특히 2005년에 작황 호조로 인해 식량 부족량이 연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한 수치에 불과하였다.⁸⁾

국제사회의 식량지원도 줄어들고 있어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식량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작물과 축산 생산은 더 위축되고 있다.⁹⁾

8) 김영훈·지인배, "북한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pp. 329-331.

9)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 쌀 수급사정이 악화되어 쌀 시장가격이 상승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식량생산은 정체되어 있다가 2013년부터는 증가 추세에 있다. <표 8>을 보면 2010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50만 톤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508만 톤으로 늘어 5년간 12.9%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식량 생산량은 불과 3년 동안 15.2%나 증가해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식량 생산량이 상승한 것은 2012년 이후 농업개혁 조치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 결과로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¹⁰⁾ 2016년에는 480만 톤으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여 부족량이 40만 톤으로 증가하여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만M/T)

년도	국내 생산공급량 (양곡연도 기준)	도입량	소요량	공급량	부족량
2010	450	41	531	491	40
2011	469	42	534	512	22
2012	441	33	536	473	63
2013	492	(30)	539	522	16
2014	503	(30)	542	533	9
2015	508	(30)	547	(538)	9
2016	480	(30)	550	(510)	40

주: ()은 예상치

출처: 김영훈, "2015년 상반기 북한농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5);
FAO Statistics; FAO/WFP, 2013 재인용.

김영훈, "2016년 북한 농업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7); FAO
Statistics;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CFSAM), 각년도 재인용 .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 김영훈,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와 2014/2015년 식량수급 전망," 『KREI 북한농업 동향』 제16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pp. 6-7.

5. 시사점

남북한 농업의 현황과 농업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력 측면이다. 남한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에 북한은 일정한 농촌인구비율 변화율을 유지하고 북한 산업구조에서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농촌인구가 남한의 4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농업 노동이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향후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을 하면 남한의 과잉 농기계 문제와 농촌 고령화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 농업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농기계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이 가능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일정 부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토지의 측면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전체 면적이나 경지면적이 더 넓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식량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토질의 문제, 전기·관개배수 시설 등 농업 기초 인프라의 부족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인 쌀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은 과거 우리나라가 1960~70년대에 겪었던 식량난을 극복한 경험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쌀 과잉 문제가 농정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는 쌀 수급 문제의 해결, 대북 관점에서는 현지의 주민들 인식변화와 행정체계 개선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재의 측면이다. 먼저 고정자본재 측면에서 남한의 농기계는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 농기계는 가격이 비싸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막상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효율이 낮고 감가상각을 고려

하면 사용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나 내용연수 이전에 바꾸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경우에는 농기계가 태부족의 상태에 있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노후가 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 농업 협력에 있어 농기계 지원이 가능하다면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자본재에서는 북한 식량생산의 저해 요인으로 심각한 비료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 1970년대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며 생산량도 크게 증가한 부분을 고려하여 농업 유동자본재의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의 전제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대화를 통해 지원의 환경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농업지원은 인도적 목적 외에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북 지원이 통일을 대비한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한국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계되어 추진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Ⅲ. 남북 농업협력사업 사례분석

1. 사업주체별 남북 농업협력사업 사례

북한 농업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농업개발 차원의 지원, 경험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으로 나뉜다.¹¹⁾ 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민간부문은 민간지원 단체(NGO)와 사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공공부문

정부차원의 북한 농업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 지원과 비료 및 농약 지원 등 영농물자 지원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유·무상을 합쳐 약 285만 톤이며, 비료지원 규모는 약 255만 톤 정도이다. 1995년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면서 1999년 비료 15만 5천 톤, 2000년 비료 30만 톤 및 차관 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 정부는 북한에 비료 30만 톤의 무상 지원과 함께 쌀 40만 톤은 차관형식으로 제공하였다.¹²⁾

2004년에는 쌀 재고량 부족으로 인해 국내산 쌀 10만 톤과 수입산 30만 톤으로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35만 톤, 차관형태로 쌀 50만 톤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1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을 경유하여 매년 옥수수 1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¹³⁾ 식량과 비료지원은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으나, 이것이 북한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1)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p. 5-6.

12) 권태진,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8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pp. 26-27.

13) 전지현, "정부·기업·민간단체의 상호보완적 남북농업협력 방향과 모형설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80.

〈표 9〉 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실적

년도	직접 식량 지원 (무상, 차관)	WFP 경유 지원 (무상)	비료 지원 (무상)
1995	국내산 쌀 15만톤	-	-
1996	-	혼합곡물 3,409톤	-
1997	-	옥수수 5만톤 혼합곡물 18,241톤 분유 300톤	-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999	-	-	15.5만톤
2000	외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	30만톤
2001	-	옥수수 10만톤	20만톤
2002	국내산 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3	국내산 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4	국내산 쌀 10만톤 외국산 쌀 3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5	국내산 쌀 40만톤 외국산 쌀 10만톤	-	35만톤
2006	국내산 쌀 10만톤	-	35만톤
2007	국내산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민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30만톤
총계	쌀 265만톤 옥수수 20만톤	옥수수 등 64만톤	255.5만톤

주: 1995년, 2006년의 쌀 직접지원은 무상지원이며, 나머지 직접지원은 식량차관
출처: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통일부 자료 재인용

또한 정부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2005년 남북농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을 교류, 산림자원 보호 등의 협력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남북경협공동위원회를 세워 종사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였고 유전자원저장 고의 건설 등을 지원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 개발협력이 시행되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이전부터 북한에 지원을 했었지만, 단순 물자지원과 교류협

력 증진 차원에 집중하였다. 이후 전라남도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농업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¹⁴⁾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농업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연도	주요사업	비고
경기도	2002-2004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 농업개발 지원 산림개발 지원
	2006	벼농사 지원(3ha), 농기계 지원	
	2006-2008	농촌환경 개선, 벼농사 지원	
	2007-2008	양묘장 조성 등 산림녹화사업	
강원도	2000	못자리용 비닐 지원	농자재 지원 농업개발 지원
	2001-2004	연어 지어 방류 지원 연어 부화장 건립 지원	
	2004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지원	
	2008	양어사료공장 건립지원	
	2001-2008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	2006	농자재 및 농업기술교류사업	농자재 및 기술 지원
충청북도 (제천)	2004	과수원 조성 사업	자재 지원
전라북도	2003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
전라남도	2003-2004	농기계 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	자재 지원 기술 지원
	2005	못자리용 비닐, 온실, 기술 지원	
경상남도	2006-2008	벼농사 지원	농자재 지원 기술 지원
		시설온실 지원	
		딸기묘 생산 협력사업 소학교 건립 및 시설 지원	
제주도	1999-2009	제주산 감귤 지원(11차)	인도 지원 자재 지원
	2008	돼지 농장 건립 지원	

주: 2007년 이후의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않음

출처: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훈,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2012), PP. 17-18. 재인용
전지현, "정부·기업·민간단체의 상호보완적 남북농업협력 방향과 모형설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범수, "남북강원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태와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3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최용환, "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1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황재성,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2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4)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p. 51-53.

2) 민간부문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인도지원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에 개발지원사업으로서의 목표가 추가되어 다변화되었다. 즉, 북한의 농장에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업개발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취약하였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만큼 지원 규모가 작았고, 상업적 교역을 수반하기 어려워서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¹⁵⁾

<표 11> 민간지원단체의 남북 농업협력사업

단체명	시작연도	주요사업	비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	축산 지원(젓염소 목장)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건설지원	농자재 지원
월드비전	1998	채소온실농장 지원 중서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농업개발지원
굿네이버스	1998	축산지원(젓소 목장) 양계장 설비 지원	인도지원 농업개발지원
북고성군 농업협력단	2002	고성온실농장 지원	농업개발지원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02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농기계 지원사업 평양 남새비닐온실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 농업개발지원
통일농수산 사업단	2004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 지원	농업개발지원
한국JTS	1998	농업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농협중앙회	1997	농업기자재·설비, 콩종자 지원	농자재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2002	농업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남북농업발전 협력 민간연대	1999	씨감자 및 씨감자생산설비 지원	농자재 지원
평화의 숲	1999	산림보호, 양묘장 복구 지원	산림개발지원

출처: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정영재. "남북농업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정."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5)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 6.

일반 NGO와 달리 민간기업은 상업적 농업협력을 취해 북한의 농업 개발과 시장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민관협력은 여러 주체들이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점차 진화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2> 민간기업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단체명	시작연도	주요사업	비고
두레마을	1998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계약재배	농업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국제옥수수재단	1998	새 품종 생산력검정 시험 재배 적지 확정 신품종 수퍼 옥수수 공동 연구	생산력 향상 및 생산기술 연구
현대아산	1998	금강산 영농단지(고성온실농장)	농업개발
백산실업	1998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버섯류 생산, 수출	확대재생산 수출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2003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등)	가공 및 제품개발
안동대마방직	2004	북한 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농산물 생산 및 제품 개발
제일유통	2004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과일 및 수목 생산	확대재생산
통일고려인삼	2005	인삼 재배 및 가공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출처: 이재동. "남북한 농업협력과 NGO의 역할."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평화학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훈. "북한 농업개발협력과 남북교역의 비전." 농업농촌의 길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2. 남북 농업협력 우수사례 분석

기존의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4단계(자원-활동-산출-결과) 모형으로 사례를 단순화하였다. 여러 사례 중 투입과 성과가 잘 드러난 사업사례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산출 결과가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월드비전의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사업과 경기도 지방자

치단체와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체인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을 선정하였다.

1)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사업¹⁶⁾

북한의 국토 면적 중 80%가 산지로 밭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주식인 쌀로 식량수고를 자족시킬 수 없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자농사혁명을 제시하여 이후 감자연구소가 신설되었고, 감자 재배면적의 확대와 재배기술 발달에 집중되었다. 월드비전의 전문가들도 일시적인 식량지원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고 감자생산 증대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사업을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함께 추진하였다.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자원	2. 활동
* 연구인력 투입 - 농업생물학연구소 - 식물보호학연구소 - 설계연구소 - 작물재배연구소 - 감자지도과	- 조직배양, 수정재배, 감자재배기술 - 병해충 방제 - 온실설계 및 시공 - 씨감자 생산 - 시험사업
3. 산출	4. 결과
- 조직배양과 수정재배 기술을 이용한 씨감자 생산체계 기술이전 받았음 - 씨감자 생산 사업장 4개지역으로 추가 확대 - 비닐(PE)멀칭, PE터널 재배, 관비재배 기술 등 공동연구 - 조직배양과 바이러스 검정설비 및 수정(영양액) 재배시설 설치 (평양농업과학원, 대흥단 감자연구소)	- 2006년까지 정주, 배천, 함흥, 평양, 대흥단 사업장 한 해 생산능력 1,070만 알 - 2007년부터 대흥단 씨감자 사업장 규모 확대로 1,260만 알 생산

출처: 이용범·김혜영, "월드비전의 북한농업 개발협력사업이 전환기 북한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 월드비전 국제사회 복지연구』 (서울: 한국월드비전, 2013).

<그림 2>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 성과모형

16) 이용범·김혜영, "월드비전의 북한농업 개발협력사업이 전환기 북한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 월드비전 국제사회 복지연구』 (서울: 한국월드비전, 2013), pp. 11-14.

2)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¹⁷⁾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은 북한측 당곡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와 민중 화해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차체와 민간단체의 인력 및 재원과 대북교섭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대북사업 지원모델이다.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시행된 이 사업은 남과 북이 공동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북한의 지역단위 종합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례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구축된 북측 파트너와 상호 신뢰가 사업에 성공을 가져다 준 점은 훗날 남북 개발협력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에 대한 성과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1. 자원	2.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차체: 기술 전문인력, 70억원 - 민간: 사업경험 - 북한: 노동력(11개 작업반과 분조당 15~20명으로 구성된 31개 분조) (벼농사, 채소, 축산, 기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방북 - 2006년: 20회/276명 - 2007년: 12회/106명 - 2008년: 2회/21명
3. 산출	4.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농사 협력사업(100ha → 200ha) - 농기자재 지원 - 벼농사 파종·육묘·이앙·방제·생육관리 기술 이전 - 농기계 수리 기술 이전 - 농로 포장 - 도정공장 건설 - 식수용 관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이 공동 경작한 100ha에서 정보당 평균 5.12t을 수확 - 트랙터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정비 - 59채의 주택 개량 사업 - 농기계 수리센터 만들 - 소학교·유치원을 보수 - 탁아소·진료소도 신축

출처: http://nkis.ipa.re.kr/ipa2008.artboardv15/mboard.asp?exec=view&strBoardID=UnityK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5006&SearchYear=2011&SearchMonth=6
『중앙일보』, 2007년 10월 3일

<그림 3>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의 성과모형

17) http://nkis.ipa.re.kr/ipa2008.artboardv15/mboard.asp?exec=view&strBoardID=UnityK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5006&SearchYear=2011&SearchMonth=6

씨감자 생산기술 협력사업은 연구인력의 투입으로 조직배양, 수경재배, 감자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장 별로 1,000만알 이상의 감자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에서는 남한에서는 기술 전문인력과 70억원을 투입하고,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100ha에서 정보당 평균 5.12t의 벼를 수확하였다. 해당 지역에는 과급 효과로 도로와 주택이 개량되고 학교, 탁아소, 진료소 등이 건립되었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자본과 결합하여 진행되었다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증대 목표 달성 뿐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이 어려운 농업 인프라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 시사점

이상 문헌연구와 모형을 통해 대북 농업협력사업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우수 사업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식량난 해결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기술발전과 농업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넓은 범위의 분야를 다루는 농업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남북 농업협력 모델의 경우 일시적인 식량·비료의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에 비해 북한과 교류가 활발해 현장경험이 많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모델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6차 산업형의 북한 농업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1) 민관협력의 필요성

북한은 아직 경제개발이 미약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자원의 부족, 영세한 경영규모, 정부의 재정 지원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여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능력의 한계와 거버넌스의 취약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공공부문에 의해 인프라가 공급되는 전통적인 공공사업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이 대신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표 13〉 남북한 농업분야 민관협력 형태

협력사업 형태		주체	주요사업	정부 역할
공익적 교류협력	인도지원사업	공익 기관 NGO 정부	식량, 비료지원 보건의료지원 긴급구호지원	직접 참여 제도 구축 기술, 재정 지원
	개발지원사업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교류 협력 생산기반 복구지원	ODA 방식
상업적 교류협력	교역	기업	농업관련재화 교역	제도 구축
	경제협력사업		농산물 계약재배 농업관련산업 투자	

출처: 김영훈, "북한 농업개발협력과 남북교역의 비전" 농업농촌의 길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남북한의 농업협력사업은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공익적 농업협력사업과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적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업복구계획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그 목적은 북한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과 농업기술의 교류를 통해 북한농업의 회생과 농업부문에서의 남북한 간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적합한 협력주체는 정부, NGO, 학계 등이다. 반면에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은 남한측 사업시행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북한과 농업협력을 한다는 점이 공익적 협력사업과 구별된다.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에는 농산물 교역, 농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농업투자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형태는 민간기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¹⁹⁾ 따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모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8) 손혁상·박보기·김남경,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참고

19) 김영훈, "북한의 농업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과학기술정책 통권』 제14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pp. 8-9.

2) 6차산업 모델의 필요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 ODA 사업을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한 <표 14>를보면 대다수의 사업이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DA의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식량 생산성이 낮고,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분야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협력 대상의 특수성, 통일을 대비한 농촌 인프라 사전 구축, 민간의 참여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생산 기술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남한에서 기업의 농업 진출은 기존의 농민들의 생산기반 붕괴와 정서적 반발감 등으로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농업협력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다. 남북 농업개발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대북 농업개발 진출을 지원해주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농업 진출을 통한 이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한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북한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표 14> 농업 ODA사업의 6차 산업 모형에 따른 분류

1차	2차	3차
농지제도 및 관리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촌 관광자원화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단지 구축	산림자원의 보존과 관광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식품 안전·위생 검역	관광인력 전문교육
관개·배수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공 기업지원	농촌종합개발
농업기술 개발 및 지원		
농업인력 육성		
친환경농업		
영농기계화		
산림녹화		
임산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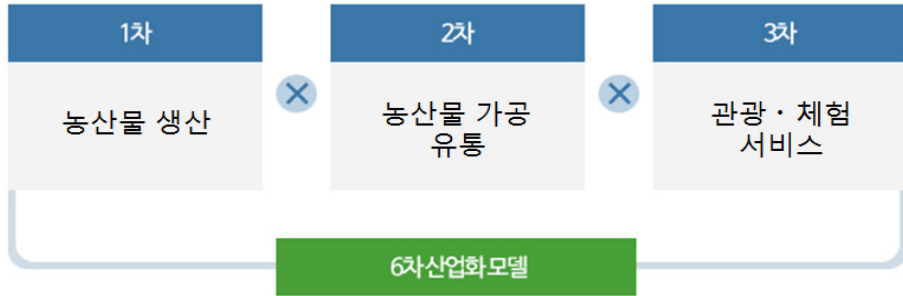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http://211.171.208.92/index.html>) 참조.

IV. 남북 농업민관협력 모델 개발

1. 6차 산업형 모델의 의의

6차 산업이란 1990년대 중반 이마무라 나라오미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농업이 1차 산업(농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및 3차 산업(관광 등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6차 산업의 핵심은 생산, 가공과 유통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대북 농업민관협력 6차 산업 모델은 기존의 인도적 관점에서의 쌀·비료 지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 지원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각 단계는 생산(1차)-가공·유통(2차)-서비스(3차) 산업으로 연결되어 가치사슬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업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토지와 수로 개발 등 농업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 된다. 가공단계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고 가공시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유통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 시설, 도로 개선 등 유통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 단계에서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 등이 있으며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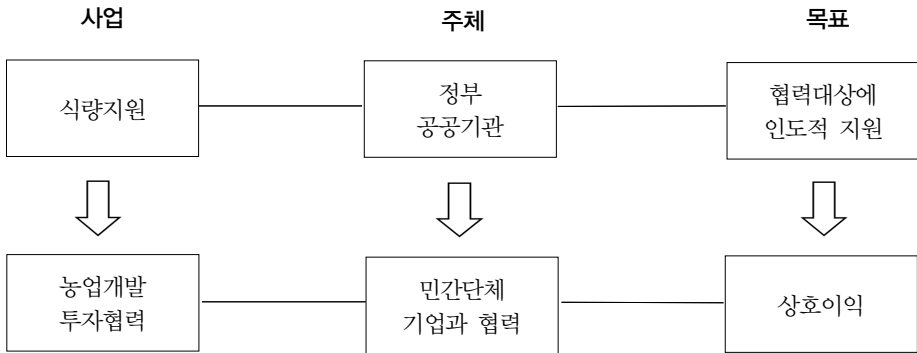


<그림 4> 농업 6차 산업화 모델

2. 농산물 생산·조립(1차)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량이 연간 450만 톤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어났다. 낮은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농정 개혁 조치를 취해왔다. 2012년에는 ‘6·28방침’으로 농정 개혁을 취했으며, 2014년에는 ‘5·30조치’로 새로운 경영관리·분배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주요 내용은 노동력당 0.3ha 농지 배분, 국가수매 40%와 농가분배 60%이다. 그러나 주요 곡물의 토지생산성은 여전히 남한의 67.4%에 불과한 상태이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정상 소요량에는 크게 부족하여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²⁰⁾ 따라서 북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는 우선순위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개발에 있어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림 5>에서와 같은 전략적 연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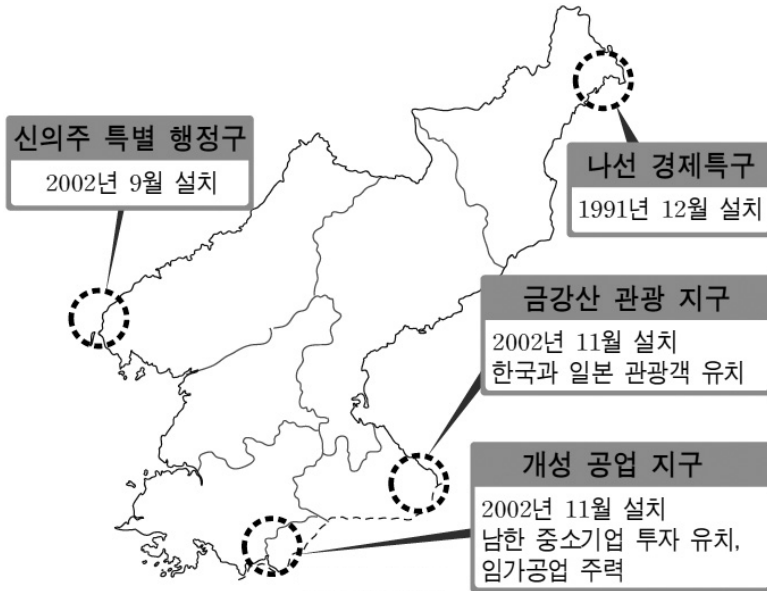
20) 김영훈, “북한 농업개발협력과 남북교역의 비전,” 농업농촌의 길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그림 5> 농업개발협력 전략적 연계의 변화

6차 산업 농업민관협력 모델의 특징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농축산물의 생산(1차) 뿐 아니라, 가공(2차)과 관광 및 서비스(3차)업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범 6차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1차 산업 단계에서의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이후에 이를 판매할 곳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체제에서는 외부와의 교역이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외부와의 경제협력단지 배후 지역에 시범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개성 공업지구 배후지역 : 개성공단 경험과 북한의 개성특구, 남한 시장과의 인접성으로 지리적 이점
- 금강산 관광지구 배후지역 : 강원도와 공동 농업개발협력 경험이 있고, 관광과 결합하여 6차 산업 모델 시너지 효과가 기대
- 나선특구와 신의주특구 배후 지역 : 농산물 가공단지와 연계하여 중국, 러시아 등의 육로 해외 수출이 가능, 장기적으로 유기농업특구 모델의 실현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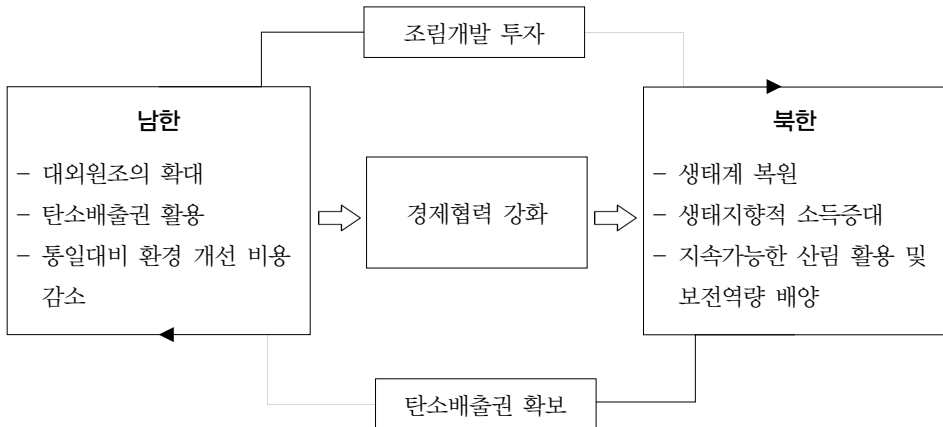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sscho00&dogNo=220367227546&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 (통일부, 2009)

<그림 6> 북한 주요 경제특구 지도

농산물의 생산 이외에 1차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림사업이 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급경사지를 개간하거나 연료림 목적으로 나무를 베어내면서 북한의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급경사지를 개간한 논밭은 토양 유실과 산사태에 취약한데다 몇 년 경작하고 비옥한 토양이 유실되면 경작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농업생산에 비효율적이다. 관목과 풀이 약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산림이라고 볼 수 없는 민둥산은 북한 전체 면적의 11.3%인 13,878km²나 관측돼 산림파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에 시급히 나무를 심어야 할 민둥산 면적은 서울시(605km²)의 23배에 달하여 대규모 산림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에 있어 산림복구 비용은 소멸되는 비용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성 지출로 볼 수 있다.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산사태 방지, 병충해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업에서 조림사업에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호이익

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독일 통일 사례에서 동독의 환경수준을 서독의 환경수준으로 도달시키기 위해 대기를 정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비용이 225억DM(약 335억 달러)²¹⁾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었다.²²⁾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전체 황폐지(163ha 기준) 복구를 위해서는 49억 그루의 나무를 필요하고, 조림 비용이 약 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그림 7〉 조림사업개발 탄소배출권 사업 연계 모델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을 복구시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구지역은 개성공단, 금강산 인접지역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광 및 농업개발과 연계하여 산림복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⁴⁾ 복구된 산림자원은 자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과 같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의 시행이 가능

21) <http://www.history.ucsb.edu/faculty/marcuse/projects/currency.htm>

US Santa Barbara, Prof. Marcuse 1991년 기준 기록 참조.

22) Jan Prieue &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Frankfurt a.M.』 (1991) p. 60.

23) "북한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 『한국경제주평』 통권 287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

24) 박중화·유재심, "원격탐사를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조사," 『환경논총』 제48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pp. 3-24.

하게 될 것이다.

조립사업의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산림복구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산림복구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이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의 경우 국가 배급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4월부터 8월까지 취로식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로식량지원사업은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 산림복구, 농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보수 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근로와 식량을 연계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

고려해야할 사항은 북한의 체제가 개인별 소득 획득이 아니라, 공공배급제 방식이라는 점이다.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량이 그룹 및 조직단위로 식량을 지원할 경우 개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전용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원활한 취로식량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농촌의 소규모 지역단위별 추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²⁵⁾

3. 농산물 가공과 유통(2차)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1차)하는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장재봉(2013)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농산물 가공 산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매우 높고, 이를 통해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1, 2, 3차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필(1999)은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유발수요의 창출과 원료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25) 강동완,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3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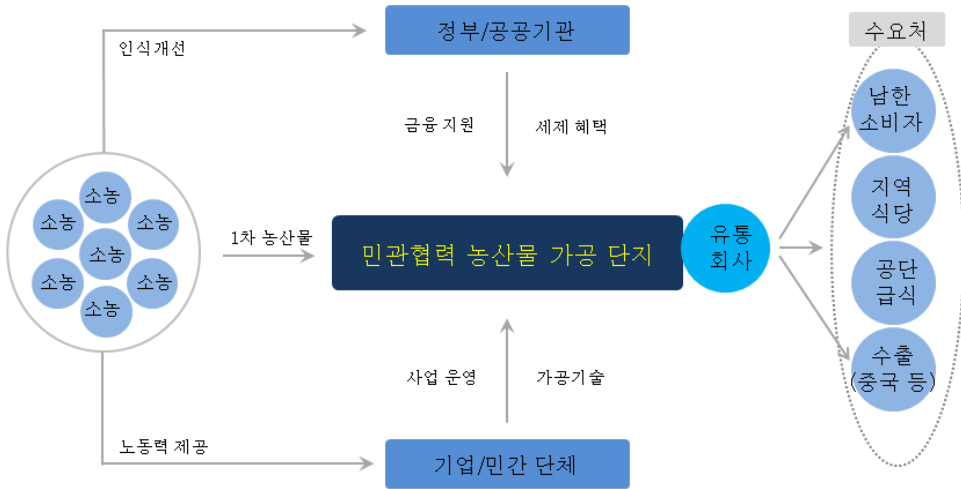
한다. 이런 점에서 농업개발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어 사업의 지속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쌀 생산성 증대와 미곡종합처리장 및 가공단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또한 쌀값 폭락은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남한의 남아도는 쌀을 농업개발협력 가공단지에 납품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쌀을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여 쌀을 가공하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게 된다.

둘째,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원료산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유희인력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남북 협력단지와 근접한 지역에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송과 보관 등 기타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수요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농산물가공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가공을 통해 맛과 향이 좋은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품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 부족 상태에 있으므로 쌀의 생산과 쌀가공산업의 발전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의 개선에 따라 가공 식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업체의 입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업단지의 배후에 위치하는 것이 산업 연계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개성공단 배후지역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이다. 기존에 경제협력 경험이 있고, 개성공단의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식자재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에 따라 농업개발협력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중심축으로 공동 농업개발협력을 농업개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개발협력의 추진방향은 단순 식량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남북 교류 증대와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8> 농산물 가공단지 체계도



<그림 8> 농산물 가공단지 체계도

북한의 농업은 농약과 화학 비료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작물이 저농약·무농약 수준으로 생산된다.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아 유기농업단지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장점이 있다. 남한에서 처리에 큰 비용이 드는 퇴비등을 북한에 공급하여 현재의 산성화되지 않은 토양의 장점을 살릴 필요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식량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수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북한은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고 유기농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을 시범적인 형태의 소규모로 시행하여 유기농업 재배기술 전수 위주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성, 금강산 특구 지역 외에도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나선 경제특구를 유력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 소비자에게 북한산 친환경 농산물의 인식 제고
- 해외(중국, 러시아, 일본 등)신수요 창출



<그림 9> 북한 친환경농산물산업 선순환 체계도

4. 관광(3차)

6차 산업화 추진에 있어 농업개발은 관광 산업의 발전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6차 산업화를 북한에 적용할 때 그 대상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내외국인에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이 유리할 것이다. 2차 산업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개성공단 배후 지역은 고려 도읍지로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 왕건릉 등 무수한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는 도시이다. 2007년 개성관광이 시작되었으나 2008년 중단된 상태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금강산이 위치한 동부지역과 백두산이 있는 북부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들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15〉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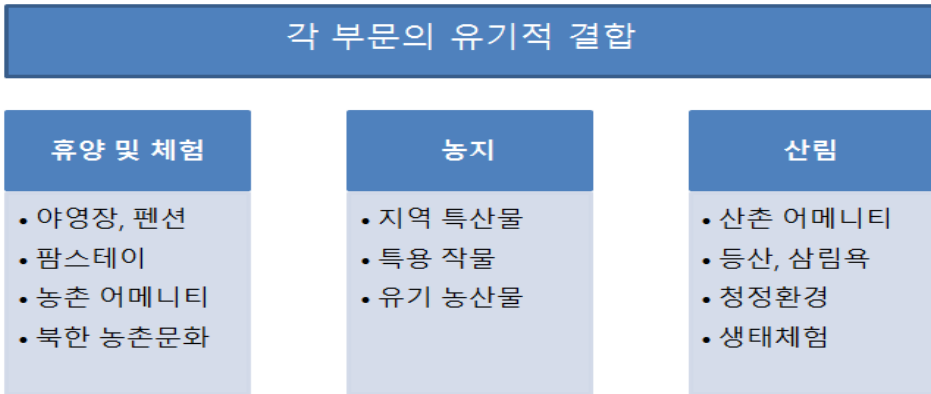
지역	관광 자원
원산 금강산 지구	명사십리, 비로봉(1638m), 해금강, 내금강, 만물상
백두산지구	장군봉(2750m)
개성지구	왕건릉, 선죽교, 만월대, 박연폭포
묘향산지구	비로봉(1909m), 국제친선전람관
신의주지구	옛 성곽 및 누각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203521> 한국경제 2015년 2월 3일 기사 참조.

특히 금강산 지역은 1998년부터 약 10여 년간 북한관광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지만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현대그룹이 금강산 일대에 설치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 지역에 대한 사업 경험과 인프라는 향후 6차산업화 민관협력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²⁶⁾ 농촌 관광의 측면에서 북한은 오염되지 않은 생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큰 단점이다. 따라서 우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 북한의 농촌 문화 체험과 같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6차 산업 모델의 장점은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설치하기에 앞서 생산과 가공을 위해 인프라가 설치되기 때문에 관광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26) 김성훈·김용현, "한국의 대북한 농업개발지원의 6차 산업형 민관협력 모델 연구," 『통일과 평화』 7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그림 10> 북한의 농촌관광 자원



다만 북한은 대부분의 관광기관이나 편의시설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관광부문의 서비스수준이 미흡하여 외환, 보험, 응급의료시설 미비 등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성역화구역 등 제한구역이 과다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5. 6차 산업형 모델의 전략

6차 산업형 모델의 추진에 있어 추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대북 농업 정책에 있어 쌀 지원, 계약재배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6차 산업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수급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aT만으로는 수행해야 할 역할이 방대하다. 따라서 대북 농업민관협력의 강화에 있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구심점이 될 단체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한데 통일부가 남북 협력기금의 지원체계를 관리한다면 농식

27) 김영봉,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05).

품부에서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점이 있는 기관 다수가 참여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통은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 생산 기반 조성은 농어촌공사, 농업 기술 이전은 농촌진흥청 등 다수의 기관에서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T/F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인력을 파견하여 남북 농업협력 지원센터와 같은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 농업협력 지원센터가 민간단체와 기업, 관련 기관이 북측 농업인 및 관련자의 농업기술 교육, 농업 관련 인적·물적자원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북 농업협력을 위한 창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 농업협력 지원센터 내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물류센터, 농산물 검역·방역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생산에 있어 지역선정과 품목선정, 투입원료조달 그리고 기술지원까지 제반 업무를 협의 및 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 물류센터는 남·북한산 농산물의 반출입, 농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선별, 포장, 검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역·방역센터는 남북한으로부터의 농축산물과 동식물 등의 반출입과 관련 북한의 낙후된 검역·방역 문제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또한 추진 주체 뿐 아니라 추진 단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중심이 된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협력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16>에서는 단계적인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28) 홍준, “농업교류 협력을 통한 북한산 콩의 마케팅 전략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표 16> 단계별 남북한 농업분야 민관협력 주요 사업

단계	기간	목표	주요 협력내용
1차	1~5년 (단기)	· 식량난 해소 · 농업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 · 농업전문가 파견 및 기술 교류 · 농업 생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종자 정선 및 보관시설 확충 · 농기계 수리시설 및 조립공장 확충
2차	6~10년 (중기)	· 농가 소득증대 · 지역경제 발전	· 식품가공산업 육성 · 유기농특구 등 수출농업단지 형성 · 계약재배 기반 조성으로 수급 조절 · 남북한 연해주 공동농업개발 협력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3차	11~15년 (장기)	· 주민 삶의질 개선 · 외화획득	· 농촌 의료, 교육 등 기반시설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한 남북협력 · 농촌관광 기반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협력 · 산림종합복구로 산림관광 활성화

출처: 권태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농촌경제 제35권 제3호:87-110(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2)참조

V. 결 론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 뿐 아니라 농업개발원조 경험의 부족으로 북한농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독립된 주체로서 1차적인 식량·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과 농업 기반 지원에 힘썼지만,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기아 및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남북 농업민관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 관련 사업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 과

거 남북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대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농협이나 aT와 같은 공기업을 활용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6차 산업의 개념으로 식량의 증산 뿐 아니라 식품 가공업, 관광업 등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으로 남북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대북 농업민관협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협력에 일어난 변수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거래 경비, 접촉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 또한 공여국의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그 시행착오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을 시행할 경우 위험과 불확실성도 크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이다.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불분명하다.²⁹⁾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대북 농업민관협력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인류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 분야를 포괄하는 6차 산업형 모델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이 공적개발원조를 받을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평화적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에 더해 기업과 민간 지원단체의 기술과 자본,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투입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대북 지

29) 김영훈, "북한 농업개발협력과 남북교역의 비전," 농업농촌의 길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원 사업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시행한 기존의 사업들은 인도적 관점에서 쌀·비료의 지원이었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이를 수치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활성화 하자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남북 대화는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통일 한국과 인도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도적 노력으로 일환으로 농업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에 있어 기존의 지원 모델을 발전시키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 모델의 실제 추진에 있어 예산의 투입 규모나 구체적인 민간 기업의 사업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외 학술지〉

강동완.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3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권태진.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8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권태진·김영훈·지인배.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김범수. “남북강원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태와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3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김성훈·김용현. “한국의 대북한 농업개발지원의 6차 산업형 민관협력 모델 연구.” 『통일과평화』 7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봉.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05).

김영운·유욱.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 세미나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영훈. “북한의 농업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과학기술정책 통권』 제14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김영훈·지인배. “북한농업 현황과 남북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김영훈.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김영훈. “북한 농업개발협력과 남북교역의 비전.” 농업농촌의 길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김영훈. “2015년 상반기 북한농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김영훈.“패키지형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7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김영훈.“북한 농업정책의 변화와 2014/2015년 식량수급 전망.” 『KREI 북한 농업동향』 제16권 제4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김영훈.“2016년 북한 농업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7).
- 박종화·유재심.“원격탐사를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조사.” 『환경논총』 제48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 손혁상·박보기·김남경.“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 송정호.“대북개발지원 사업의 가능성과 제약.” 『통연협 논단』 제2호 (2009).
- 이동필. 『농외소득원 개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이용범·김혜영.“월드비전의 북한농업 개발협력사업이 전환기 북한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 월드비전 국제사회 복지연구』 (한국월드비전, 2013).
- 이용범, “북한 농업 개발 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 (통일심포지엄 자료집, 2005)
- 이재동. "남북한 농업협력과 NGO의 역할."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평화학석사학위논문, 2005).
- 이조원.“북한 ODA의 실현가능성과 조건.” 『북한 ODA 그것은 가능한가? 학술회의 자료』 (중앙대학교, 2008).
- 전지현.“정부·기업·민간단체의 상호보완적 남북농업협력 방향과 모형설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영재.“남북농업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정.”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최영경·전운성. 『지구촌의 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 (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최용환.“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1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통계청 발표자료,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2016.12.08)

황재성.“남북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홍준,“농업교류 협력을 통한 북한산 콩의 마케팅 전략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Jan Prieue &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Frankfurt a.M.』 (1991).

〈신문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20352> 『한국경제』 . 2015년 12월 3일

http://nkis.ipa.re.kr/ipa2008.artyboardv15/mboard.asp?exec=view&strBoardID=UnityK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5006&SearchYear=2011&SearchMonth=6 『중앙일보』 . 2007년 10월 3일.

〈인터넷 자료〉

<http://www.fao.org/faostat/en/#data>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sscho00&logNo=220367227546&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http://www.history.ucsb.edu/faculty/marcuse/projects/currency.htm> US Santa Barbara, Prof. Marcuse

우 수

남한 및 북한 관련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인식조사 및 영향력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오유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유지연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연구의 필요성
- I.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가설
- III. 연구방법
- IV. 연구 결과
- V.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VI 제언

【참고문헌】

【요약문】

남한 및 북한 관련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인식조사 및 영향력 분석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를 남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생 87명을 대상으로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적 경험을 기술 연구(descriptive study)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남한 국민의 북한 관련 가짜 뉴스 식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본 224명을 대상으로 실제 기사에서 발췌한 제목 3개와 가짜 뉴스 제목 3개를 제시한 후 해당 제목의 진실 및 거짓 여부에 응답하도록 한 후, 결과를 토대로 성별·연령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디어 규제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 북한 관련 뉴스의 제 3자 효과, 일반적 뉴스의 제 1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인과 정부의 역할을 고찰한다.

핵심어: 남북 관계, 가짜 뉴스, 제 3자 효과, 제 1자 효과, 미디어 규제

I. 연구의 필요성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위태로웠던 남북관계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매번 그 위력이 더해져왔고, 이번 6차 핵실험은 이전 5차 핵실험보다 10~20배 크기가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이어졌다(유영규, 2017).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핵실험 직후 하루 새 두 번의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지욱, 2017).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손제민,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위원장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강력한 핵보유국임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고 자축하며 “피의 대가로 이뤄낸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했다(윤지윤, 2017). 이로써 북 정부는 추석 연휴를 한 달 남짓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공조할 생각이 없으며 철저한 고립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셈이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핵 보유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을 내어 “한반도의 전면적, 실질적, 비가역적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유신모, 2017).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그리고 스페인 외교부는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사실상 외교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다(정용수, 2017). 뿐만 아니라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미국 시민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찬성한다는 다소 과격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김현기, 2017). 이렇듯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담한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간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비록 남한과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두 국가지만, 뿌리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등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다.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와 달리 2000년대 들어 남한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로와 최경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 국민의 60.6%가 북한 역사의 주요 사건들(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 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72.3%가 남한 역사의 주요 사건들(5·18 민주항쟁, 4·19 혁명, 2002 월드컵 등)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p.124~125). 또한 남·북간 왕래가 단절된 상황임에도 상당 비율의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적 매체(방송, 영화, 서적 등)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각각 31.5%, 77.7%)(p.123).

이러한 낙관적인 동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식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극적 소재의 소문과 유언비어는 일파만파 퍼지며 그 영향력을 키워간다. 더욱이 분단 상태일 때도 미디어를 통해 비교적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했던 동독·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195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최소한의 소통만 유지해오고 있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추측만 무성하다.

“북한, 꺾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CIA, 북한과 문재인 정권과의 연관성 극비조사”

위는 남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있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전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한 유저가 연합뉴스를 사칭하여 유포한 기사이며(이현택, 2017), 후자는 가짜뉴스 사이트인 ‘노컷일베’에서 당당히 조회 수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파죽지세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란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 지거나 조작된 뉴스로, 대부분은 실제 기사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 가짜임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로는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대표적이다. 실

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로서 1위가 “카카오톡과 같은 문자메시지와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각각 29%), 2위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24%)였다(한정훈, 2017).

가짜뉴스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번 퍼지면 제동을 걸기 어려우며 실제로 영향력 또한 크다. 지난 4월 카카오톡 대화방을 중심으로 “안랩이 V3 오픈소스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져 결국 안랩 측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했다(박지은, 2017). 또한 2016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성노예 거래”를 한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트럼프 후보의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이 가짜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였으며(Hunt, 2016) 심지어 한 시민이 힐러리의 악행을 알리겠다고 해당 피자 가게를 향해 여러 번 총을 쏜 것이다(The Washington Post Editorial Board, 2016).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파급력을 가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는 통상 실제 뉴스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분간해 내기가 어렵다. 미국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연구진이 7800여 명의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80% 이상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Brito, 2016). 더욱이 남·북한의 경우 2009년부터 금강산, 개성, 평양 관광교류가 일제히 끊기는 등(통일부, 2017) 소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왔으며,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도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남북주민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95%라는 높은 수준으로 이질화되어있을 것”(p.121)이라고 인식하며, 서로를 “경계·적대대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증가하고 있다(p.113~114)(김병로·최경희, 2012).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 미디어 이용 정도 등이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와 일반적 분야의 뉴스(건강·사회·문화 등)를 비교하여 각 뉴스에 대해 사람들의 분별력 수준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제 1자 효과(Innes & Zeitz, 1988)와 제 3자 효과(Davison, 1983)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관련 뉴스의 영향력 및 정부 규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가설

1. 제 3자 효과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중매체가 생산해내는 수많은 메시지에 대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고 인식할까,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까?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있다. 이네스와 자이츠의 ‘제 1자 효과’(Innes & Zeith, 1988), 그리고 데이비슨의 ‘제 3자 효과’(Davison, 1983) 이론이다.

먼저 데이비슨은 1957년 한 사회학자와 나눈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소위 말하는 ‘고학력군’인 기자들이 스스로를 ‘일반인’과 분리하여 자신들은 신문 사설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반 독자들은 강력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Davison, 1957). 또한 해당 사회학자가 당시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우편함에서 발견한 경쟁 후보의 홍보물의 질이 매우 뛰어난을 알게 됐다. 그는 “[경쟁 후보의 전단 때문에] 분명 많은 표를 빼앗길 것(p.3)”이라고 여겨 곧바로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전단을 공들여 배포했다. 하지만 사회학자의 예견과 달리, 사전 출구조사 결과 그 어느 후보의 홍보물도 유

권자들에게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 두 사건을 계기로 데이비슨은 ‘제 3자 효과’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대중매체가 타인, 즉 제 3자의 태도와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칭한다(Davison, 1983). 따라서 설득적 메시지는 직접적 타인이 아닌, 메시지의 영향력을 ‘짐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에서 그 효과가 드러난다. 경쟁 후보의 전단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여 맞대응을 시도한 사회학자처럼 말이다.

제 3자 효과는 설득적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이라고 인식될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예시로 텔레비전에서 비춰지는 폭력, 포르노그래피, 반사회적 랩 가사 등이 있다(Perloff, 2009). 덕과 멀린(Duck & Mullin, 1995)은 그들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부정적·긍정적 미디어 콘텐츠와 공익광고 캠페인을 보여주고 각각의 내용이 자신과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 비해 폭력,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다룬 부정적 콘텐츠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자신 $M = 1.89$, 타인 $M = 4.17$, 7점 척도). 반면 공익 광고 캠페인의 경우 그 영향력이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자신 $M = 4.13$, 타인 $M = 4.41$, 7점 척도). 비슷한 맥락에서 코헨과 데이비스(Cohen & Davis, 1991)는 1988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 부시 후보와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의 네거티브 광고 전략이 각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 결과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격당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은 그다지 영향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광고에 설득당하여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피실험자들은 신종플루 관련 언론보도에 의한 공포를 자신보다 지인, 그리고 지인보다는 일반인이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함이 드러났다(김옥태·김규찬, 2010).

이러한 성향이 드러나는 이유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동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메시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잘 속거나 양향을 받기 쉽다고 간주”하는 것이다(김옥태·김규찬, 2010, p.347). 비슷한 이론으로 'Better-than-average-effect'가 있는데(Perloff & Fetzer, 1986),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평균적인 동료 혹은 지인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나쁜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일어난 반면 타인이 처한 나쁜 상황은 그 사람의 내부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인과 추론", causal inference)(Heider, 2013).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회사에 지각을 했다면, 갑은 스스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각한 것은 심각한 교통체증(외부 요인) 때문이야, 하지만 을이 지각한 건 그의 게으른 성격(내부 요인) 때문이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자기고양 동기, Better-than-average 효과와 인과 추론은 스스로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타인의 분별력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콘텐츠의 유포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터와 화(Gunther & Hwa, 1996)는 싱가포르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해 연구했는데, 보통 ‘규제’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권위주의적 정부”와 “마지못해 따르는 대중”(p.1)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함을 알아냈다. 민감한 주제(나체 노출, 혼외정사, 사생아, 긴 머리 남성 등)를 다룬 텔레비전 콘텐츠의 방영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인식을 묻은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자신보다 타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신이 민감한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답한 사람은 9~12%에 불과했다. 더불어 대다수의 응답자,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정부가 텔레비전 콘텐츠에서의 혼전 성관계, 동성애 이슈와 욕설 등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동일 선상에서 사람들은 방송뿐만 아니라 음악 시장도 규제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랩 음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McLeod & Eveland, 1996).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에게 TV 맥주광고를 보여준 결과 해당 광고가 술자리에 대한 인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제 3자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맥주광고 규제를 지지한다는 태도가 나타났다(한미정·김중은, 2004).

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미디어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민감한 사안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일수록 타인이 받을 영향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일반적인 뉴스와 특정하게 ‘가짜’ 뉴스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규제 필요성을 느끼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연구 가설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쟁점에 대해 자신보다 타인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즉 제 3자 효과에 입각했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현재 남한과 북한은 소극적인 교류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비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대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북한에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 3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 가설 1: 사람들은 일반적인 미디어보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구 가설 2: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 3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제 1자 효과

반면 ‘역(逆) 3자 효과’라고도 불리는 ‘제 1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주로 공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디어 메시지가 타인보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칭한다. 이 현상은 이네스와 자이트가 데이비슨의 제 3자 효과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응답자들이 미디어 폭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영향을 받

지 않지만(제 3자 효과)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Innes & Zeitz, 1988).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답했을 땐 1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을 땐 0점을 부여했으며 영향의 정도를 1점~3점으로 매기게 했다. 그 결과 폭력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신이 0.25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으나,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에 대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0.53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교통안전, 범죄 예방, 장기기증 등 사회적 가치가 있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스스로를 노출시키기를 희망한다(Hoorens & Ruiter, 1996). 군터와 톨슨(Gunther & Thorson, 1992)은 일반 상품 광고와 공익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측정했는데, 두 광고가 그 목적에 관계없이 긍정적 내용을 담을 경우 제 1자 효과가 두드러짐이 밝혀졌다. 동일 맥락에서 화이트와 딜론(White & Dillon, 2000)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장기기증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에 대해 95% 이상이 “전반적으로 장기기증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연스레 이에 따른 제 1자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장기기증 공익광고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여겼으나, 인식된 영향의 정도가 타인(M = 4.38)보다 스스로(M = 5.57)에게 크다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응답자들이 해당 공익광고를 보기 전에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알았을 경우,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 1자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 1자 효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헨릭센과 플로라(Henriksen & Flora, 1999)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금연 공익광고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른 어린이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데이(Day, 2008)는 제 1자 효과의 인식적 측면에서 한 발짝 나아가 그것이 실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앞선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안을 담은 광고에 대해서는 강한 제 1자 효과 성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유

권자들이 해당 사안을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투표 행위’를 실행함이 밝혀지면서, 제 1자 효과가 행동적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제 1자 효과는 제 3자 효과가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들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Golan & Day, 2008). 수많은 종류의 설득적 메시지에 따라 개인이 표출하는 반응은 일괄적일 수 없기에 제 3자 효과와 제 1자 효과는 서로의 허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연구 가설 2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룬 가짜 뉴스가 제 3자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반면 연구 가설 3에서는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문화 등을 다룬 일반적 분야의 뉴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 즉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관계가 위태롭고 서로에 대한 시선이 비호의적이다. 하지만 건강·문화 등 일반적 뉴스의 경우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연구 가설 3은 일반적 분야의 뉴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에 대하여 제 1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 가설 3: 일반적 분야(사회·건강·문화) 관련 뉴스에 대해서 제 1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이 연구의 목표는 남한 또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과 가짜 뉴스의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과 동시에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연구는 사전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과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두 번째 연구와 세 번째 연구를 설계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 국민의 가짜 뉴스 식별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며 세 번째 연구는 그러한 가짜 뉴스가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언론학과 수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해당 수업의 수강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국가 간 인식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스웨덴, 프랑스,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대만, 영국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편한 언어를 선택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54세($SD = 1.53$)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18명(20.7%), 여성이 64명(73.6%), 무응답 5명(5.7%)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87명의 학생 중, 대학생이 84명(96.6%), 대학원생이 3명(3.4%)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는 2017년 7월 15일부터 2017년 21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문 조사 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로서, 연령별·주거 지역별 할당 표본을 추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최종 응답자는 총 23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부적절한 10명의 표본을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24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9.24세($SD = 11.03$)였으며, 정치적 성향은 진보 74명(33.0%), 중도 108명(48.2%), 보수 42명(18.7%)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 거주자가 130명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였다. 상세한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단위:%)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09	48.7	직업	대학생	19	8.5
	여성	115	51.3		대학원생	2	0.9
연령	20대	55	24.6		전문직	36	16.1
	30대	54	24.1		사무직	106	47.3
	40대	56	25.0		농업/어업	1	0.4
	50대 이상	59	26.3		자영업	18	8.0
학력	교육 받지 않음	-	-		전업주부	28	12.5
	초등학교 졸업	-	-		무직	12	5.4
	중학교 졸업	-	-		기타	2	0.9
	고등학교 졸업	53	23.7		연봉	소득 없음	28
	대학교 졸업	146	65.2	1000만원 미만		18	8.0
	석사 학위 취득	18	8.0	1000~2000만원 미만		30	13.4
	박사 학위 취득	3	1.3	2000~3000만원 미만		52	23.2
	전문 학위 취득	4	1.8	3000만원 이상		96	42.9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

(1) 미디어 이용

평소 뉴스 소비를 위해 미디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제시된 미디어 이용 문항들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Salwen, 1998). “지난 1주일 동안 뉴스 기사 혹은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다음에 제시된 경로 중 어떤 것을 통해 주로 뉴스 기사 혹은 보도를 접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지난 1주일 동안 TV 뉴스를 얼

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각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리커트 7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많은 것으로 간주하였다(1점 = 1일, 7점 = 7일). 응답의 평균은 5.19($SD = 1.69$)이며,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57이다.

(2) 제 3자(제 1자) 효과지각

본 연구에서는 제 3자 효과와 제 1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뉴스 기사를 다룬다. 첫 번째로 제 3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뉴스 기사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북한 이슈가 선택되었고, 제 1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낮은 사회, 문화 이슈가 선택되었다.

각각의 뉴스 제목에 대한 제 3자(제 1자) 효과를 측정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뉴스가 자신의 태도 또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M = 4.47$, $SD = 1.01$, Cronbach $\alpha = .859$)과 타인의 태도 또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M = 4.81$, $SD = 0.99$, Cronbach $\alpha = .940$)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뉴스는 내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 내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문항(Shah, Faber, & Youn, 1999)을 응답자들로 하여금 리커트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뉴스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북한 이슈, 사회문화 이슈)의 뉴스 제목들에 대한 제 3자(제 1자) 효과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기사 제목마다 해당 기사가 응답자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타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으로는 “위와 같은 뉴스는

나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뉴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로 구성된다. 북한 이슈 관련 각 뉴스가 자기 자신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추정치의 평균($M = 3.60$, $SD = 1.16$, Cronbach $\alpha = .871$)과 타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추정치의 평균($M = 3.92$, $SD = 1.17$, Cronbach $\alpha = .865$)값을 구하였고, 이어서 사회, 문화 이슈 관련 뉴스가 자기 자신의 태도($M = 4.02$, $SD = 1.17$, Cronbach $\alpha = .877$)와 타인의 태도($M = 4.24$, $SD = 1.17$, Cronbach $\alpha = .872$)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제 3자 혹은 제 1자 효과는 앞서 측정된 두 개의 문항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뉴스의 영향력”을 평가한 값에서 “자신에 대한 뉴스의 영향력”을 평가한 값을 빼 것으로 측정했다. 따라서 빼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뉴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간주하여 제 3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빼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신에게 뉴스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칠 것으로 간주함으로 제 1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미디어 규제 및 가짜 뉴스 규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지지 정도와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변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 미디어 내용 규제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에 제시된 것을 참조하여(Rojas, Shah, & Faber, 1996),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상이라도, 개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역코딩)”,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완전히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역코딩)”,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편향되어있던 간에 그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권리를 가진다(역코딩)”, “모든 집단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몇 집단의 자유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를 벗어난 견해를 다루는 미디어 콘텐츠는 유통되어선 안 된다”, “규모가 큰 집단을 모욕하는 미디어 콘텐츠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

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 집단의 언론보도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의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리커트 형의 7점 척도 위에 표기하게 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미디어 규제에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 = 3.68$, $SD = 0.80$, Cronbach $\alpha = .663$).

다음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했는데, 살웬(Salwen, 1998)의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정부는 가짜 기사거리를 금지하기 위해 법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모든 텔레비전 뉴스에서의 가짜 기사거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온라인 상 가짜 기사거리를 금지해야 한다”, “얼마나 편향돼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권리는 가진다(역코딩)”, “얼마나 논란의 소지를 가지든, 모든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역코딩)”의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위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응답자들이 가짜 뉴스 규제에 지지하는 정도의 평균은 5.50($SD = 1.21$)이며,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3이다.

IV. 연구 결과

1.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대학생 37명과 외국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 및 남북 관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묻는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답변이 유사하게 나타난 문항들이 있는 반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문항들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을 묻는 12개의 문항들¹⁾ 중에서 가짜

1) 1. 최근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2.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 모두 높은 비율로(약 80~90%)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즉, 대학생들에게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듣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 학생의 경우 “인터넷, SNS를 통해”, “뉴스 및 언론보도를 통해”, “수업시간에”,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들었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인터넷,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수업시간에”,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되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미국인 학생들에게서 “예전부터 거짓된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 발언을 통해 유명해졌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The Daily Show’, ‘The Colbert Report’ 등의 TV 프로그램과 ‘The Onion’이라는 정치 풍자 뉴스 웹사이트에서 정치 담론에 흔히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인 학생들이 위와 같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Reilly, 2012).

본인이 실제로 가짜 뉴스를 읽거나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인 학생은 83.8%의 비율로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외국인 학생은 74.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은 해당 뉴스를 읽은 경로로써 “SNS”, “인터넷 뉴스 기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언급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SNS에서”, “인터넷 뉴스 기사”, “메신저를 통해”, “과학 저널에서”, “잡지에서” 뉴스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인이 읽은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언제 발견하였는지 물었는데,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엔 54.1%가 “다 읽고 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

3. “가짜 뉴스(Fake News,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어디서 들었나요?
5. 본인이 실제로 가짜 뉴스를 읽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6. 그 가짜 뉴스는 어디서 보거나 읽었습니까?
7. 본인이 실제로 접했던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인 걸 언제 발견하셨나요?
8. 본인이 실제로 접했던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인 걸 어떻게 감지하게 되셨나요?
9. 가짜 뉴스를 접한 후 당신은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10. 가짜 뉴스를 접한 후 당신은 잘못된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11. 가짜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원하지 않는 가짜 뉴스에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 “읽자마자” 또는 “중간에” 가짜 뉴스인 것을 알았다는 답변이 각각 13.5%였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읽자마자 발견하였다는 의견이 32.0%, 중간에 발견했다는 답변이 14.0%, 다 읽은 후에 발견했다는 의견이 26.0%로 나타났다. 한국인 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사를 다 읽은 후에야 가짜 뉴스임을 알아챈 반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읽자마자 알아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떻게’ 가짜 뉴스임을 감지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학생들은 “과장된 표현, 과격한 어휘 때문에”, “나중에 해당 뉴스가 가짜 뉴스임이 밝혀져서”, “직접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을 통해”, “내가 알던 내용과 달라서”, “정정 보도를 통해”, “지인을 통해” 가짜 뉴스임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생들은 “나중에 루머임이 밝혀져서”, “거짓임이 명확해서”, “댓글을 통해”, “내용이 말이 되지 않아서”, “내가 알던 사실과 달라서”, “직접 사실 확인을 통해”, “다른 기사에서 해당 기사가 가짜 뉴스임을 밝혀줘서”, “기사의 출처가 의심스러워서”, “제목이 과장되어서”, “비논리적이어서”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가짜 뉴스를 감별하는데 있어서 1) 개인의 팩트 체크 능력 및 사전 지식, 2) 뉴스 기사 액면 타당도의 부재, 3) 팩트 체크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 장치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짜 뉴스를 접한 후의 대처 행동에 대해서는 29.7%의 한국인 학생과 30.0%의 외국인 학생들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37.8%의 한국인 학생들과 64.0%의 외국인 학생들은 해당 뉴스의 잘못된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다고 대답하였다. 앞서 물은 ‘정정’하려는 노력에서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답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알리려는’ 노력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의도치 않게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게서 가짜 뉴스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은 “가짜 뉴스가 제작되고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뉴스 신

되도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근절하고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 “처벌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판단력이 없는 수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해롭다”, “사람들이 선동당할 수 있다”, “위험하다”, “사람들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정책이 필요하다” 등으로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에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불쾌하다”, “화가 난다”는 반응과 더불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판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부분은 남북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²⁾로 구성되었다. 북한에 대한 뉴스보도에 얼마나 신경 쓰는가를 묻는 문항은 1점(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신경 쓴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 학생들의 평균은 4.43점($SD = 1.18$), 외국인 학생들 평균은 4.40점($SD = 1.45$)으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한의 뉴스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적대적이다)에서 7점(우호적이다)으로 측정하였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81점($SD = 1.12$), 외국인 학생들은 3.40점($SD = 0.87$)으로 한

- 2) 1. 북한에 대한 뉴스보도에 얼마나 신경 쓰는 편입니까?
2. 남한의 뉴스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남한에서 생산된 “북한 관련”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4. 북한에서 생산된 “남한 관련”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5. 남한 또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보거나 읽은 적이 있습니까?
6. 해당 가짜 뉴스는 어디서 보거나 읽었습니까?
7. 남한 관련 가짜 뉴스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그렇다면 객체는 누구입니까?
9. 남한 관련 가짜 뉴스는 나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0. 남한 관련 가짜 뉴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1.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그렇다면 객체는 누구입니까?
13.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나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4.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5. 남한 정부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인 학생들에게서 남한 뉴스매체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의 뉴스매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항들 중 남한에서 생산된 북한 관련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인 학생들은 “언론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신뢰한다”는 의견과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약 70.2%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28.0%정도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반대로 북한에서 생산된 남한 관련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90% 이상의 한국인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10%미만의 학생들이 “신뢰한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의 학생은 “신뢰할 수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게서 북한 뉴스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외국인 학생들에게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남한 또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인 학생들의 37.8%가 “있다”고 대답했고, 외국인 학생의 26.0%가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경로에 대해서는 “소셜 저널리즘을 통해서”, “신문에서”,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티비에서”, “군대에서 입수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학생들 또한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남한 뉴스에서”, “중국 뉴스에서” 보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짜 뉴스는 말 그대로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뉴스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의 ‘출처’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주체’와 영향 받는 대상, 즉 ‘객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제 3자 효과를 측정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에게 남한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수 세력”, “북한 또는 북한 정부”, “남한 정부”, “언론인”,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개인 혹은 단체”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엔 “가짜 뉴스 웹사이트”, “뉴스 매체”, “기자”, “북한”,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이 한국인 학생과 유사하게 나왔고, 유일한 차이로 함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서구의 국가들에서 만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객체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인 학생들은 “남한 시민”, “북한 시민”, “여당”이 가짜 뉴스의 객체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외국인 학생들은 “일반 시민”, “북한 시민”, “남한과 미국 정부”, “외국인”, “지도자”, “한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답하였다.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남한 관련 가짜 뉴스의 주체가 서구 뉴스 매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이 남한 관련 가짜 뉴스를 접한 후로부터 남한에 가길 꺼려하기도 하고, 부모님 또한 남한에 가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는 그만큼 남한 관련 가짜 뉴스가 남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한 관련 가짜 뉴스의 제 3자 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가짜 뉴스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t 검증을 통해 그러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t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들은 남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6) = -4.62; p < .001$]. 외국인 응답자들 또한 남한 관련 가짜 뉴스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 = -7.50; p < .001$]. 즉 두 집단 모두 남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제 3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2. 남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영향력 비교(한국인)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3.14(1.42)	4.03(1.40)	-4.62***

*** $p < .001$

표 3. 남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영향력 비교(외국인)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3.27(1.39)	4.82(1.28)	-7.50***

*** $p < .001$

북한과 관련된 내용의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학생들은 “극우보수”, “남한 정부”, “남한 내 북한 추종 세력”, “북한과 적대적인 언론이나 단체”, “북한 정부 또는 미디어 관련자”, “가짜 뉴스를 통해 안보 불안을 조정하려는 세력”,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의 지지자”, “미국 미디어”,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 “북한 정부”, “인터넷 트롤”, “남한 정부”, “김정은” 등 유사한 대답을 내놓았고, 한국인 학생들과는 달리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주체를 미국 정부로 꼽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객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학생들은 “남한 시민”, “전 세계 사람들”, “김정은 정권 또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수 지지자”, “북한 시민”, “북한 독재 세력 및 고위 관료”, “SNS 이용자”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과 동맹국들”, “미국 시민”, “뉴스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 “김정은”, “북한”, “북한 고위 관료”,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남한 시민”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객체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남한 관련 가짜 뉴스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그만큼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제 3자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표 4>와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t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들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5) = -5.29; p < .001$]. 외국인 응답자들 또한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 = -5.22; p < .001$]. 즉 두 집단 모두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제 3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4.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영향력 비교(한국인)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3.64(1.36)	4.75(1.05)	-5.29***

*** $p < .001$

표 5.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영향력 비교(외국인)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3.71(1.58)	4.98(1.54)	-5.22***

*** $p < .001$

마지막으로 남한의 정부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한국인 응답자들은 “무시하고 있다”,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가짜 뉴스 유포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나, 일망타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부추기고 있다”, “가짜 뉴스임을 밝히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외국인 응답자들은 “사실 관계 파악을 한다”, “현재 남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와 비교해 북한에 관대한 입장이다”, “잘 모르겠다”,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최대한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고 한다”, “조사한다”, “가짜 뉴스 유포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대답을 내놓았다.

2. 가짜 뉴스에 대한 식별 능력

가짜 뉴스에 대한 식별 능력 측정을 위해 실제 기사에서 발췌한 제목 3개와 가짜 뉴스 제목 3개를 제시한 후 해당 제목의 진실 및 거짓 여부에 응답하도록 했다. 설문조사에 활용한 진짜 및 가짜 뉴스 제목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연구에 활용된 진짜 뉴스 및 가짜 뉴스 제목

진짜 뉴스	〈2017년 6월〉 北, 억류 美 대학생 웹비어 ‘혼수상태’ 로 석방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文 대북기조 흔들리나
	〈2017년 7월〉 北 김정은 “중국 더 이상 못 믿어... 러시아와 협력할 것”
가짜 뉴스	〈2012년 11월〉 北 김정은, 2012년 미국 인터넷 매체인 디어니언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에 선정돼
	〈2016년 5월〉 한국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북 식당 여성종업원 12명 중 한 명인 서경아 양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해
	〈2009년 10월〉 안랩, V3 소스코드를 북한에 제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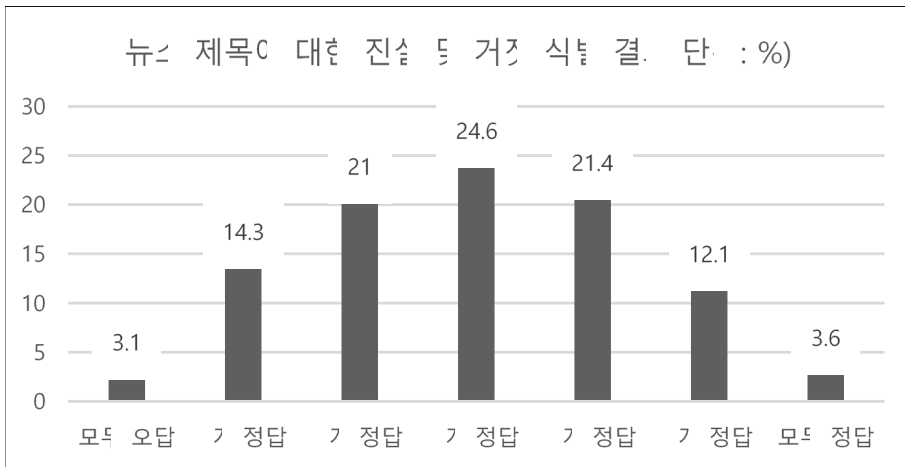


그림 1. 6개의 진짜 및 가짜 뉴스 제목에 대한 식별 결과(단위: %)

〈그림 1〉에 제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224명 중 진짜 뉴스 3개를 모두 진실로, 가짜 뉴스 3개를 모두 거짓으로 응답한 사람은 8명(3.6%)에 불과했다. 6개 중 5개를 구분해낸 응답자는 27명(12.1%)이었으며, 4개를 정확히 구분해낸 참여자는 48명(21.4%)이었다. 이어서 3개는 55명(24.6%), 2개는 47명(21.0%), 1개는 32명(14.3%)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한 개도 구분해내지 못한 응답자는 7명(3.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일반인은 북한 관련 기사를 보고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별-연령대별 정확히 구분해낸 기사의 개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평균 3.28개를 구분해낸 데에 비해 여성은 2.68개를 구분하여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0개, 30대가 3.00개, 40대가 2.93개, 50대 이상이 3.34개로,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 응답자는 3.59개로, 전 참가자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상세한 집단별 차이는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두드러진 차이는 성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사를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답률이 상승하는 데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3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게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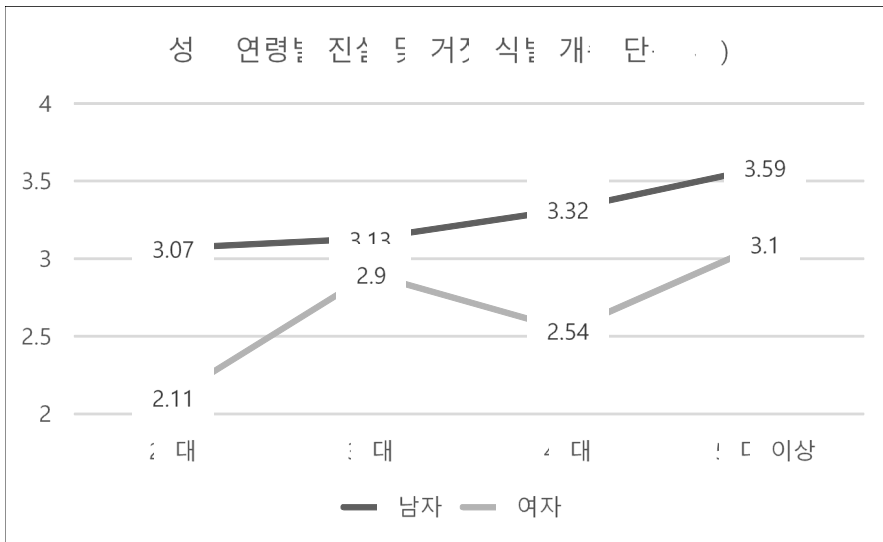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연령별 진짜 및 가짜 뉴스 제목 식별 결과(단위: 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별-연령별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고

자 참가자의 평소 뉴스 소비 정도를 측정된 변인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원 변량 분석(ANOVA) 결과,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3, 216) = 1.43, p = .24$], 성별 차이는 상당히 유의한 수준 [$F(1, 216) = 3.64, p = .06$]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평소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서 제시된 북한 관련 뉴스 판별 능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특이현상이 평소 뉴스 소비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3. 가설 검증

(1) 일반적 미디어 규제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연구 가설 1은 대중들이 일반적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증이 활용되었는데, <표 7>에 제시된 t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3.68점, 즉 4점 기준으로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조금 더 보이는 데에 비해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에 지지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50점을 표시하였다. 이는 규제에 상당히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이 두 항목은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23) = -19.10; p < .001$]. 따라서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7. 일반적 미디어 및 가짜 뉴스 규제 지지정도의 차이

대상	일반적 미디어 규제	가짜 뉴스 규제	t값
<i>M(SD)</i>	3.68(0.80)	5.50(1.21)	-19.10***

*** $p < .001$

(2) 북한 관련 뉴스와 제 3자 효과

가설 2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서로를 경계, 적대 대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

하여 이질적인 북한사회를 다룬 뉴스기사에 대한 영향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제 3자 효과를 예측하였다.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는 t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3개의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 = -7.51; p < .001$]. 따라서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제 3자 효과를 예측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8.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영향력 비교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3.05(1.32)	3.42(1.39)	-7.51***

*** $p < .001$

(3) 사회·문화 관련 뉴스와 제 1자 효과

연구 가설 3에서는 남한의 사회와 문화를 다룬 뉴스에 대해 제 1자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이는 곧, 동질적이고 익숙한 사회 모습을 다룬 기사에 대한 영향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t 검증을 거쳐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문화 관련 뉴스에 대해서도 앞서 제시된 북한 뉴스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제 3자 효과가 나타났다[$t(223) = -6.69; p < .001$]. 그러므로 제 1자 효과를 예측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9. 일반적 뉴스의 영향력 비교

대상	자신	타인	t값
<i>M(SD)</i>	4.03(1.30)	4.32(1.34)	-6.69***

*** $p < .001$

V.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의 존재 및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짜 뉴스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생겨났다. 본 연구는 가짜 뉴스의 연구 범위를 ‘남북 관련 가짜 뉴스’로 좁혔으며 구체적인 해석을 통한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1)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조사, 2) 가짜 뉴스의 제 3자(제 1자) 효과 분석, 3) 가짜 뉴스 폐해의 최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로써 일반적 가짜 뉴스 및 남북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련 가짜 뉴스 현상 및 개인적 경험에 관한 기술 연구 결과의 제시를 통해 이해를 모색하였는데 다양한 인종의 응답자 표본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인식차를 직접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을 지닌다. 물론, 이 사전조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전국 규모의 표본이 아닌 편의표집을 통한 표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이 주관식 문항이었기 때문에 분석이 애매한 표본이 다소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활용한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분석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 국민의 가짜 뉴스 식별 능력을 알아보고자 실제 뉴스 제목을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90퍼센트 이상의 일반인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가짜 뉴스 식별 능력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뉴스 식별을 더욱 잘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예상한대로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지지되었다. 그러나 일반적 분야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

서 제 1차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 연구 가설 3에서는 반대로 제 3차 효과가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 1차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보다는 자신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일컫는데, 본 연구에서 일반적 분야 관련 뉴스에 대해 제 1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연구에 활용된 뉴스 제목이 응답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VI. 제언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가 합쳐져 생성된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는 1분에 3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며, 인기 SNS인 트위터(Twitter) 사용자들은 매 분 34만 개 이상의 트윗을 나누며 소통한다(Kapko, 2015). 하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넘쳐난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16.7%가 잘못된 인터넷 검색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부형권·임우선·김지현, 2009). 특히 가짜 뉴스의 경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실제 기사와 유사한 형식을 띠기 때문에 판별해내기가 어렵다. 현재 남북 국민 간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만큼, 정보 전달자이자 의제 설정자로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보든과 튜(Borden & Tew, 2007)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언론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조명했다. 그들은 “저널리즘의 가시적인 기능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언론인에게 “도덕적 책무(moral commitment)”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론인을 떠올렸을 때 신문 기사를 쓰거나 보도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기술적’ 면모에 집중한다. 하지만 보든과 튜는 이러한 ‘기술적 행동’은 언론인이 아닌 누구라도 행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진정한 언론인은 그들의 도덕적 책무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살얼음판 같이 위태로운 남북 관계 속에서 언론인이 행해야 할 도덕적 책무는 무엇일까? 바로 서로의 존재를 적대시하며 정보를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공론장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다. 하버마스(Habermas, 1964)에 의하면 ‘공론장’이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인데, 이 거대한 공간에서 언론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본문에 언급된 바 있듯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미디어 노출량이 많을수록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잘 구별해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대해 많이 보고 듣지 못했을수록 가짜 뉴스에 더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언론은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관계가 입증된 올바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 또한 핵심적이다. 본문의 통계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사람들은 가짜 뉴스의 사회적 파급력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언론이 공론장을 통해 정보의 열린 교류를 성사시킨다면, 정부는 공론장의 관리자로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를 체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묘사 되냐에 따라 남북 관계를 굳건히 만들 수도,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의 불씨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며 공론장이 매끄럽게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로, & 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1), 101-139.

김옥태, & 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344-367

김현기. (2017.08.08). 미국인 10명 중 4명 '북한 핵시설 공습 찬성'.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824134>>

박지은. (2017.04.18). "V3 북한공급?" 가짜뉴스에 빨난 안랩.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418010011226>>

부형권, 임우선, & 김지현. (2009.09.24). 검증안된 '저질정보' 홍수... '검색'도 해맨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080612/8589209/1#csidxd1b229c71034f7bb075fa3b7ea17539>>

손제민. (2017.09.03). [북한 6차 핵실험]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 모색" NSC에서 지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31651001&code=910100#csidx9a0c16459f9301791c7a898077bb22d>

송지욱. (2017.09.04). 트럼프·아베 하루 새 두번 통화..."북한에 가장 강력한 압박". *TV 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90030.html>

유신모. (2017.08.05). 아세안 10개국, 북한 핵, 미사일 폐기 강력 촉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51651001&code=910100#csidx9a0c16459f9301791c7a898077bb22d>

708051935001&code=910302#csidx0e4c78d3fac5eddb36becef781d780d>

- 유영규. (2017.09.29). CTBTO 사무총장 "6차 北 핵실험, 과거보다 10~20배 큰 듯".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898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BSNEWSSEND>
- 윤지윤. (2017.09.10) 北 6차 핵실험 축하연...김정은 "피의 대가, 위대한 승리". *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06678_21376.html>
- 이현택. (2017.08.16). '북한이 콰에 미사일 발사' 가짜뉴스 등장.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6/2017081601631.html>
- 정용수. (2017.09.16). [뉴스분석]'페르소나 논 그라타' 도미노로 압박 나선 국제사회, 북중러는 3각 관계 강화하며 제재 물꼬?!.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950490>>
- 통일부. (2017). 2017 통일백서. 통일부.
- 한정훈. (2017.07.31). 팩트체크, 가짜뉴스 영향력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650/NB11501650.html>>
- 한미정, & 김종은. (2004). 미디어효과 지각과 광고규제 및 보도강화에 대한 태도. *방송통신연구*, 301-328.
- Brewer, P. R., Young, D. G., & Morreale, M. (2013). The impact of real news about "fake news": Intertextual processes and political sati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5(3), 323-343.

- Brito, S. (2016.12.16). Study finds students unable to identify fake news. *The Stanford Daily*.
<<http://www.stanforddaily.com/2016/12/16/study-finds-students-unable-to-identify-fake-news/>>
- Cohen, J., & Davis, R. G. (1991). Third-person effects and the differential impact in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Journalism Quarterly*, 68(4), 680-688.
- Davison, W.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1). 1-15.
- Davison, W. P. (1957). The mass media in West German political life. *West German Leadership and Foreign Policy*, ed. by Hans Speier and Davison (Evanston, Ill., 1957), 267.
- Day, A. G. (2008). Out of the living room and into the voting booth: An analysis of corporate public affairs advertising under the third-person effec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2), 243-260.
- Duck, J.M., & Mullin, B. A. (1995). "The perceived impact of the mass media: Reconsidering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77-93.
- Golan, G. J., & Day, A. G. (2008). The first-person effect and its behavioral consequences: A new trend in the twenty-five year history of third-person effect research.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1(4), 539-556.
- Gunther, A. C., & Thorson, E. (1992).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5), 574-596.
- Gunther, A. C., & Hwa, A.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television influence and opinions about censorship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3), 248–265.

Habermas, J., Lennox, S., & Lennox, F. (1974).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1964). *New German Critique*, (3), 49–55.

Heider, F. (2013).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Psychology Press*.

Hoorens, V., & Ruiters, S. (1996). The optimal impact phenomenon: Beyond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599–610.

Hunt, E. (2016.12.17).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dec/18/what-is-fake-news-pizzagate>>

Innes, J. M., & Zeitz, H. (1988). "The public's view of the impact of the mass media: A test of the "third-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5). 457-463.

Kapko, M. (2015.04.29). "1분" 인기 소셜 네트워크에선 무슨 일이. *IT World*.
<<http://www.itworld.co.kr/slideshow/93182>>

McLeod, D. M., Eveland Jr, W. P., & Nathanson, A. I. (1997).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2), 153–174.

Perloff, L. S., & Fetzer, B. K. (1986). Self-other judgment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02.

Perloff, R. M. (2009). Mass media, social perception, and the third-person effect.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3, 252–268.

- Reilly, I. (2012). Satirical fake news and/as American polification discours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35(3), 258–275
- Rojas, H., Shah, D. V., & Faber, R. J. (1996). For the good of others: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63–186.
- Salwen, M. B. (1998).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and support for censorship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3), 259–285.
- Shah, D. V., Faber, R. J., & Youn, S. (1999). Susceptibility and severity perceptual dimensions underlying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6(2), 240–267.
- The Washington Post Editorial Board. (2017.11.25). ‘Pizzagate’ shows how fake news hurts real people.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pizzagate-shows-how-fake-news-hurts-real-people/2016/11/25/d9ee0590-b0f9-11e6-840f-e3ebab6bcdd3_story.html?amp;utm_term=.9b01ac07035e&tid=a_inl&utm_term=.909ca7e1e635>
- White, H. A., & Dillon, J. F. (2000). Knowledge about others' reaction to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e impact on self persuasion and third-person percep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4), 788–803.

우 수

남북 협동조합 연계를 통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방안

승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혜일

승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송우정

《 목 차 》

【요약문】

【본 문】

I. 서론

II. 북한 현황

III. 사례연구

IV. 남북 협동조합 통합을 통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 협동조합 연계를 통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방안

현 시기는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북한 정부에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유도하고 북한정권 유지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통일을 염두 해 두었을 때는 이후 한국 정부의 사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 북 간의 극심한 경제, 구조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사회가 오로지 한국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의 북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북한 민간부분에 지원하는 형태의 효율적인 개발 방식으로 북한 협동조합을 이용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북한개발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북한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이용의 의의 등에 대해서 논한다.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과연 북한사회에 협동조합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북한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 협동조합이 발전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써, 기업에게 생산과 분배 등에 대해 자율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부분에서는 북한개발을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했다면, 이후에는 그 직접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먼저 사례연구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과정 및 성공요인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조합주의적 사유제로 변환하여 협동조합을 탄생시킨 체코와 쿠바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배경

과 발전과정을 논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북한 협동조합 개발 방안을 총 3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의 협동조합이 한국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의 형태로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지역의 협동조합과 합작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두 번째 중기단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나진-선봉의 협동조합을 타 경제특구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것을 다시 타 지역들로 연계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적인 연계 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분야 또한 확장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여 북한의 전 지역 협동조합이 협력시스템을 이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북한 협동조합 개발방식이 북한의 지역개발과 한국의 통일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며 마치고자 한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 취약계층에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에 각 350만 달러, 450만 달러를 공여함으로써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¹⁾ 이와 동시에 한국사회에서는 이를 비판 또는 옹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눈여겨 볼 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65%가 넘는 지지율²⁾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대북지원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60%³⁾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복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76.9%⁴⁾의 높은 비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 및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취약계층 및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유지와 핵개발에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그 밑바탕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

1) <http://news.joins.com/article/21957754>

2)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762

3) 리서치뷰 진행, 2017년 9월 17~18일, <http://www.insight.co.kr/news/120436>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행, 2017 9월

9~1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01>

갈 수는 없으며 시기와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통일을 우리의 미래에 염두 했을 때, 북한개발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흡수통일이 아닌 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남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구조적 차이는 통일 자체를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과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 및 부담을 필요로 한다. 이는 통일 한반도의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전후에 북한 주민들이 오로지 한국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북한개발을 위한 노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는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지원 자체의 효과성 문제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이로 인한 남남갈등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북한 정권이 아닌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형태,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립하여 통일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한국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 민간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할 때,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최근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시에, 이미 북한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기 때문이다.⁵⁾ 본래 개발도상국에 협동조합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협동조합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그 구조를 만드는 데에만

5) 인터뷰, ARIMOTOSHUN, 2017년 4월 24일

몇 년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은 이것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현존하는 북한 협동조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방안을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둔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협동조합 현황 분석 및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협동조합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비교적 잘 이용한 쿠바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 할 것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협동조합의 단계별 북한 협동조합과의 연계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협동조합 시스템이 북한개발에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한 협력에 이바지함으로써 통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협력 논의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 볼 경우,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마셜플랜을 시작으로 미국의 목소리를 선두로 하여 인프라 건설 등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원조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자 저발전이 정치,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80-90년대에는 IMF와 World Bank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방식의 원조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오히려 많은 저발전 국가를 고채무 빈곤국으로 만들었으며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MDG(새천년개발계획)를 통해 국가의 경제개발 보다는 개개인의 인권 및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개발에서의 중요 행위자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개인의 인권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를 강화하자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진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본래 환경보존과 관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다. 이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개발을 이루는 방향을 의미하지만 2015년 UN이 MDG의 후속 개발 아젠다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에서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단순한 환경부문뿐 아니라 사회, 경제 등의 분야를 망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⁶⁾

2)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개발, 민간분야의 개발 등의 논의가 떠오르면서 주목되는 개발 방안이 저개발국에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소유, 운영에 대한 정의와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규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공동 소유 방식을 지닌다. 또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모두가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등 기존 상법 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의 특성을 지닌다.

상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익배분도 투자자가 우선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불투명하다. 반면에 협동조합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단순히 상행위를 넘어서 조합원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에 이르는 공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익 배분 또한 이용자인 다수 조합원이 우선이며 사회에 기여도도 높다.

협동조합의 특징⁷⁾으로는 첫째로 이용자 소유 회사라는 점이 있다. 즉,

6) 박지연 (Jiyoun Park) · 문경연 (Kyungyon Moon) · 조동호 (Dongho Jo),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19권4호, p.124

협동조합 조합원은 이용자인 동시에 소유자이며 투자이익이 아니라 사업 이용에 따른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참여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이용자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에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평균비용 수준에서 결정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조합원의 협동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조합원의 공동행동은 영리회사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협동조합이 최근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 및 작동하는 것이고 그 철학이 인간개발,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했으며, 협동조합의 철학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전체선(全體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선(共同善)을 중요시하는 연대주의 시장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점은 국가의 경제개발이 아닌 인간 개개인의 발전에 집중하는 인간개발이나 “Leave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SDG의 철학과 상당부분 맞닿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서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 미그로 생협은 가격인하로 물가안정 기여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GDP의 30% 수준차지하며 고용의 유지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⁹⁾

7)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HERI insight 연구보고서, 2011

8)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우리나라 협동조합법 제의 개정을 덧붙이며-”,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집 제3호, p156

9) 출처 : <https://www.coop.go.kr/COOP/introduce/overseasCase5.do>

이외에도 2008년 경제위기에서도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부문 협동조합 기업이 250개 창업 되었고, 캐나다에는 10년 이상 존속하는 영리기업이 20%인데 비해 협동조합은 40%에 한다. 프랑스에서는 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 소매시장의 25%를 협동조합 경제가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0억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1억명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다국적기업의 125% 수준) 이미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그 이념이 최근 개발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구축된 이후에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북한의 자립적 지역개발을 위해 북한 지역공동체에 협동조합을 구축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해볼 것이다.

II. 북한 현황

1. 북한의 협동조합 현황¹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자체를 만들어주기 이전에 공동체에게 조합주의의 시스템을 이해시켜야 한다. 의사결정 및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모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구축시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후에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실제로는 협동조합 탄생 이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몇 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협동조합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심지어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체제가 운영되고 있

10) 현재 북한의 협동조합의 발전현황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는 굉장히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북한 협동조합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북한 관련 전문가 ARIMOTOSHUN와의 인터뷰를 통한 자문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 및 요약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현 북한학계에서는 북한의 협동조합체제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편의협동조합, 축산가내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며 경영 쪽, 금융 쪽 운영시스템은 이러한 양식으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행거래 또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합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축소되었다가 외화벌이를 시작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가 밖에서만 협동조합 식으로 물물교환 같은 것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상행하면서 특히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식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장마당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 이를 당의 상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가안전보위부 혹은 이들이 관리하는 돈주가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그 사람이 속해있는 조합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금융조합과 같은 형태인데, 이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처럼 형성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원리에 대해 모두가 평이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미 실질적인 협동적 소유가 활성화 되어 협동조합이 여러 형태로 존재 및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북한의 협동조합 발달이 가능한 배경 중에 하나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체제로서 국가가 생산, 분배, 소비 등의 모든 부문에 관여 및 계획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조합주의적 소유제형식을 띠는 협동조합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 또한 사회주의국가로서 어떻게 협동조합의 발달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2014년도 1월 6일 김정일이 진행한 담화인 '5·30 담화'에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짐작

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에서 중요부분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¹¹⁾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 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다.

기업체들은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 새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해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제시해 기계설비와 토지, 시설물 등 국가적,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관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각 기업의 자체적 책임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체들이 모든 생산과정과 분배 등을 국가의 지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생산 시설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판매, 개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것은 북한이 생산과정

11) 김규현,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최근 북한의 변화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17. 에서의 ‘ 2.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 방법을 담은 ‘5·30담화’ 요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요약정리함

12) 이는 김규현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최근 북한의 변화상”에서 언급되었던 북한 연속극 ‘침단선’ 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제난을 겪으며 중앙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봉화기계공장’이 예산으로 식량을 구입할 것인지, 공장에 부품을 도입할 것인지, 침단 기계장비를 제작할 것인지로 의견이 나뉜다. 결국에는 침

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부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체 단위, 기타 민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결과물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커졌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허가되었고 무역에 대한 자율성도 커졌기 때문에 민간분야로의 개발을 위한 원조, 지원 등의 영역도 넓혀졌다고 볼 수 있다.

Ⅲ. 협동조합 사례연구

북한의 협동조합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볼 때, 북한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을 이용 및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어떤 제도 및 배경에서 잘 발전하며 어떤 지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협동조합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방식을 살펴보고,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조합주의적 사유제도의 전환을 이룬 체코와 쿠바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1)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 몬드라곤 그룹¹³⁾

몬드라곤은 스페인 몬드라곤시 바스크 지역에 자리잡은 생산자협동조합

단 기계장비 제작에 성공하는데, 이전에 궁여지책으로 낡은 기계를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3) KBS 스페셜 다큐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을 요약함

그룹이다. 257개의 산하기업과 7만 4천명의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몬드라곤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그룹과 금융그룹 그리고 유통그룹이다. 먼저 산업그룹은 가전, 자동차, 첨단산업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그룹은 스페인에서 전국에 368개 노동금고를 가지고 있고 유통그룹으로는 유통업체 에로스키 매장을 전국에 2,500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고용창출에 기여한 착한 기업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스페인에서는 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고용률이 20% 낮아졌다. 그런데도 몬드라곤은 2008년 그 한 해에만 1만 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냈다.

2) 몬드라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협동조합 정신 준수

몬드라곤 그룹이 몬드라곤 바스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금은 스페인이라는 국가 경제까지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협동조합 정신을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일곱 가지 협동조합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며 개방적인 조합원자격원칙
2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관리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원칙
4	자치성과 독립성의 원칙
5	교육, 연수, 정보제공의 원칙
6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7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원칙

제 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이다.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탈퇴도 자유롭다. 특히 사상이나 신조에

의해 거부되거나 강요받지 않는다. 제 2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조직이며,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 운영된다.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제 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이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어 자본금을 조달하고 출자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제 4원칙은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원칙은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이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협동의 장점을 알도록 해야 한다. 제6원칙은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이다. 협동조합은 지역 간에 또는 국가 간에 함께 도와가며 일해야 한다. 제 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이다.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신들의 생활개선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¹⁴⁾

몬드라곤 그룹의 10대 운영원칙이 바로 협동조합 정신을 잘 반영하였는데 몇 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자격은 모두에게 개방한다. 2) 1인 1표주의에 기초해서 민주적으로 조직한다. 3) 노동자에게 최고결정권을 부여한다. 4)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한다. 5) 모든 조합은 조합 간에 협동한다. 6) 임금은 균등하게 정한다. 7) 사회민주화와 정의와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킨다.¹⁵⁾

이를 바탕으로 몬드라곤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표적인 발전 방식은 다음과 같다.

3) 몬드라곤 발전 방식

14) 협동조합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7대원칙을 요약함

(<http://www.coop.go.kr/COOP/introduce/rule.do>)

15) 몬드라곤 홈페이지 10대원칙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

(1) 자본조달 내부지원체계¹⁶⁾

몬드라곤 그룹은 내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1959년 협동조합은행‘노동인민금고’를 형성했는데, 노동인민금고는 조합원들끼리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작은 기능도 하였다. 그 조합원은 주로 노동자 협동조합과 기타 협동조합처럼 기업이었다는 점이 초기 설립 때의 특징이다.

노동인민금고는 내부 필요 자금까지 공급하는 중대한 역할도 맡았다. 기존 조합을 더 키우고 싶거나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싶을 때 최대한 자력으로 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컨설팅, 자원 재배분으로 점차 기능 영역을 확장했고 자본의 유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2) 일자리 공유체제

몬드라곤에서는 휴직자는 복직하고 복직자는 휴직하는 일자리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폐업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그룹 소속 타회사에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몬드라곤 그룹 소속 다노나 가구회사는 750명의 조합원이 일하고 있었다. 세계경제위기로 600여명이 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휴직자들에게 월급의 80퍼센트를 주고 1년마다 바꿔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조합 내 조합원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의 경쟁력도 제고하며 고객만족은 점차 향상시킨다.¹⁷⁾

이러한 체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 나 혼자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내 기업 하나 살리려고 다른 기업 죽이게 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함께 사는 조합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한다.

16)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발전시스템에 관한 비교분석』 221쪽

17) KBS 스페셜 다큐‘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을 요약함

(3) 연합회 및 컨소시엄 구조의 발달

몬드라곤 그룹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같은 분야의 조합은 연합회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분야 조합들은 서로 컨소시엄이 있으며, 협동조합 총연맹조직까지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왔다. 이를 통해 결정비용이 높은 분야에 큰 투자를 하게 될 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⁸⁾

2. 체코 바우처 민영화

1) 체코의 경제체제전환 추진과정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수준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와 견줄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산업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가장 산업화된 10개국 중의 한 국가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1989년에 이르는 시기에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중앙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인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성 및 생활수준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1960년대부터 구동구권 각국에서 여러 차례 경제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계획경제체제 틀 안에서 경제주체들의 생산의욕을 증대하려는 사회주의적 경제개혁으로는 경제성장의 저하를 막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비로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런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된 기본정책은 경제자유화, 체제전환기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경제안정화, 생산수단의 민영화, 바우처 민영화 등이 있다.

2) 바우처 민영화와 그 과정

바우처 민영화란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주식을

18)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발전시스템에 관한 비교분석』 227쪽

염가나 무상으로 분배, 판매하는 바우처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¹⁹⁾ 이 제도는 공산체제하의 특권계층을 기업경영에서 배제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먼저 1991년 민영화부(Ministry of Privatization)는 민영화 대상 4338개 기업의 목록을 발표했다.(대상기업의 자산가치는 1조 2천억 코루나) 그리고 92년 4월 민영화부에서 민영화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소유권이 국가재산기금(Fund of National Property)으로 이전되었는데, 국가재산기금이 매각조치, 재산양도, 매각수입 징수, 재산권 행사 등을 담당했다.

세부적인 방식으로는

- (1) 4,338개 대상기업에 대한 23,607개 민영화를 계획했다.
- (2)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1,000 코루나 (35미불 혹은 평균 주급에 해당)상당의 바우처 구입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 (3) 투자 민영화펀드(IPFs)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바우처 방식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이 지나친 분산으로 인한 경영권 공백발생(control vacuum)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펀드 관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재정정보를 입수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체코의 민영화를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한다.²⁰⁾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은 98년 총 GDP의 약 75%가 민간부문에서 산출된 것으로 평가한다. (90년 10%, 92년30%, 93년 45%, 95년 70%, 96년 75%)

바우처 민영화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²¹⁾ 또한 기본적인 재산이 없는 대중들에게 기업지분의 지분을 지급하기에 중산계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19) 주OECD대표부, “체코의 경제 체제전환과 시사점”, 노무현 사료관, 2006, p.19

20) 주OECD대표부, “체코의 경제 체제전환과 시사점”, 노무현 사료관, 2006, p.22

21) 양종삼, “A study on the voucher privatization of the Czech Republic”,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1999, p.97

3. 쿠바의 협동조합

1) 쿠바의 경제체제와 협동농장

쿠바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또한 쿠바는 배급제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쿠바의 시민들은 '라보데가'라고 불리는 국영상점에서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한 배급쿠폰을 내고 의식주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²²⁾ 하지만 사회주의 노선을 걸던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 등으로 쿠바의 경제상황이 난관을 겪게 되자, 1993년부터는 조금씩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²³⁾

쿠바는 1993년 전후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준 독립적 주식회사의 확대, 개인 달러 보유 및 사용 합법화, 개인 자영업의 확대, 국격기업의 보조금 축소와 분권화 등이 그 예이다.

1994년 9월에는 농민시장 설치를 허용했다.²⁴⁾ 즉 '국영농장의 협동화'이다. 자원의존적인 쿠바의 농장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영농장의 식량 생산량은 급격하게 준 것과 달리 자영농과 협동농장들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공업 부문 노동자들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농장의 분권화를 추진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국영농장을 협동농장으로 다시 편성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쿠바의 협동조합 경제정책

정부는 1993년 9월 국영농장을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UBPC)으로 전환했다.²⁵⁾ 또한 협동농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농지의 이용권을 가족 또는 개인에게 주어 경작하게 만들었다.²⁶⁾ 이에 따라 평균 규모

22) 채인택,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 경제체제 개혁이나 공산독재 고수냐", 중앙시사매거진, 2016.12.12

23) 곰돌이CO쿠바, "쿠바에서 보물찾기", 아이세움, 2009

24) 정경근,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38

25)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173

26) mesa-Lago, Merket, socialist, and Mixwd Economics, p295-298

2800에이커, 97명의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2600개 정도 만들어졌다.²⁷⁾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의 규모는 작아졌다. 비록 토지 소유권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농장원들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주기도 했다. 1994년에는 농민시장이 도입되면서 추가 생산물에 대한 시장판매가 가능해졌다.²⁸⁾

IV. 남북 협동조합 통합을 통한 북한 지역사회 개발방안

현존하는 북한의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진정한 지역개발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 협동조합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많은 지원과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을 한국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자 한다.

한국 민간부분의 협동조합과 기업체들이 연계하여 북한의 협동조합들에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 정부는 본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 한국 협동조합들에의 지원을 도맡는다. 이러한 방식의 북한개발을 위해서 초기단계, 중기단계, 완성 단계로 나눌 경우 북한과 한국의 협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1. 초기단계

북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의 초기단계는 한국이 민관협력을 통해서 북한일부 지역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한국정부를 통한 민간부분 직접 지원은 대부분 북한이 용납하지 않고 한국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북한정부로의 지원만을 허

27) 김연철,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42쪽

28)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162

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협동조합과의 직접적 연계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협동조합 지원을 나진-선봉과 같은 경제특구에서부터 시작한다.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은 북한의 경제특구 중 가장 오래되고 대표성을 띤다. 이러한 경제특구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외국의 투자 및 지원에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 특별한 법, 제도와 질서가 적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경영, 가격의 시장결정 등 다른 경제체제요소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 (1) 지대 안에서는 일부 대중소비품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는 시장가격체계가 적용된다.
- (2) 지대 안의 환율도 시장수요와 공급관계에 상응하여 탄력성 있게 조정된다.
- (3) 지대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계획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 (4) 지대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북한의 기업체들도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시장체계에 맞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위의 특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진-선봉의 기업체들은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훨씬 자유롭게 자체적인 생산활동과 결과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체 단위로 자율적인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더 쉬운 환경이고,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또한 허가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9)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라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정책에 대하여』, 일본 동경에서의 투자촉진 세미나 연설문, 1996. 7. 15. (남궁영, “북한 경제특구정책: 운용 및 성과”,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2000), p241에서 재인용)

둘째, 한국 협동조합과 북한협동조합간의 합작조합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경제 특구지역의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의 경우로 북한 민간부분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이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민간지원을 허가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한국 협동조합과 북한 협동조합간의 합작조합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지역의 경우에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 이미 존재하며 관련 법률 또한 정해져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방식		공동	공동	단독(외국인투자자)
출자비율		당사자간 협의	출자지분 개념없음	외국인 100%
감자		허용안됨	규정없음	허용안됨
설계승인 처리기간		1개월 내 (지대내는 50일 이내)	50일내	80일내
경영방식		공동	단독(북한측)	단독(외국인투자자)
경영조직		이사회	규정없음 (다만, 상설공동협의 기구 설치)	규정없음
분배	이익	공동(투자비율)	공동(계약조건)	단독(외국투자자)
	손실	공동(투자비율)	단독(경영자)	단독(외국투자자)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원칙: 국내거래는 합영 자재생산 · 원칙: 무역기관 여타 합영, 합작회사를 통합	규정없음 (외국기자재 수입시 국가승인 필요)	국내거래는 해당무역기관을 통합

출처: 통일부, 한국무역협회(2005) (이장로, 이제홍, 이춘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 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2006.에서 재인용)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합영, 합작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기업은 북한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일컫는다.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북한 측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경영은 북한 측이 담당하며 외국인투자 지분의 상환과 이윤분배는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조건에 따르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만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 및 운영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³⁰⁾

이처럼 이미 상당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미 북한에 존재하는 기업의 협동조합과 한국의 조합이 합작하는 형태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불가할 경우, 한국의 기업을 본 협력에 포함시켜 협동조합과 기업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함께 북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교적 개방적인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합작조합 형태로의 지원을 시도함에도 이것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기업을 포함시켜 투자형태로 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단순히 한국 협동조합이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북한 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과정에 한국 기업을 포함시켜서 합작기업을 통한 투자의 형태를 띄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과정에서는 기업이 경영 및 기술지원, 한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운영방식 및 기술지원 등을 진행한다. 기업의 합작 혹은 합영의 형태로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욱이 북한이 허가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우선은 정부와 한국 협동조합 (혹은 기업포함)이 북한

30) 이장로, 이계홍, 이춘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2006.

의 협동조합과 합작하여 지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이루어지게끔 한다. 이후 북한 현지의 협동조합에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해당 협동조합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나눔으로써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나진-선봉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게끔 기반을 다지는 것까지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2. 중기단계

초기단계에서 나진-선봉 경제특구내의 협동조합이 한국의 협동조합과 합작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중기단계는 이것을 타 경제특구로 확장시켜 협력하는 시기이다.

본 협력의 목표는 북한의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단순히 한, 두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두 지역에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연결시키고 더 큰 단위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북한 전역의 지역개발에 공헌하게끔 하고자 한다. 초기단계가 그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고 기초가 되는 시스템을 안정화한 시기라면, 중기단계 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 전역의 협동조합을 연계시켜 기술 이전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각 지역 발전에 공헌하도록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는 나진-선봉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을 이외의 타 경제특구의 협동조합과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9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특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모두 타 지역에 비해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유입에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며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자율성도 훨씬 크다. 따라서 나진-선봉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및 발전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타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시키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제특구들의 협동조합을 먼저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출처: 노희영, 「[분단 70년-기묘에 선 남북관계] “빈사상태 북한 경제특구를 통일시대 여는 신남북경협 요충지로”」, 서울경제, 2015년1월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622009>

초기단계에서 발전시킨 협동조합을 조금씩 타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 시키는데, 이 과정은 마치 모회사-자회사 시스템처럼 나진-선봉지역의 협동조합이 타 지역 협동조합에 자문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나진-선봉의 협동조합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할 경우 재정적 지원도 함께하지만, 이것이 불가할 경우 운영 시스템 및 기술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한다. 타 경제특구 협동조합에의 재정적 지원까지 한국이 진행하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타 경제특구의 협동조합도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공헌하게끔 한다. 또한, 각 지역끼리 협동조합을 통해 연결시킴으로서 공통의 경제관련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3. 완성 및 자체적 발전 단계

마지막 단계는 경제특구외의 다른 일반 지역의 협동조합으로까지 연계시키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먼저 중기단계에서 타 경제특구의 협동조합을 나진-선봉의 협동조합과 연계시켰듯이, 경제특구의 협동조합들을 주위 다른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정부와 협동조합은 북한의 나진-선봉 협동조합과 합작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 협동조합이 타 경제특구의 협동조합을, 타 경제특구의 협동조합들은 주위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각 협동조합은 자신의 하위단위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전국의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함께 북한의 협동조합이 분야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확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단계 까지는 지역적 확산을 조금 더 목표로 두고 협동조합의 분야의 확산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협동조합이 각 많은 타 지역들과 연결된 이후에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각기 다른 분야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한 지역 내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한국 정부와 협동조합은 자문의 역할을 수행, 북한의 협동조합 시스템이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의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은 계속 되겠으나 전폭적인 원조와 같은 형식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등은 첫 단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이로써 북한 전 지역을 협동조합으로 연결시켜 다른 지역의 협동조합 간의 교류, 한 지역 내에서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또한 상위 단위의 협동조합에게 지속적으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자문 등을 받음으로써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발전하여 북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축이 되게끔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한국 협동조합과의 합작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함으로 남, 북간의 교류에도 도움을 주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에도 북한 전역을 이어주면서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경제 체제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V. 결 론

최근, 통일에 있어서 통일 방식과 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통일 단계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구조적 차이가 심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대통합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통일을 이루고 나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 정신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와 불안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이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오로지 한국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북한개발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자립적 경제 발전과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협동조합 현황 분석 및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이용하였던 쿠바를 분석하여 북한 지역공동체에 협동조합을 구축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가 북한지역 개발 및 남북한 협력하는 방식으로서 참고 되었으면 한다.

개발 분야에서는 개개인의 인권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그 방안으로는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을 제시한다. 협동조합이란 본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조합원에 의한 공동소유 방식을 지니며, 조합원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에 이르는 공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익 배분 또한 이용자인 다수 조합원이 우선이며 사회에 기여도도 높다.

북한은 현재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14년 경부터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라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기업체 단위, 기타 민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결과물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도 협동조합의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허가되었고, 무역에 대한 자율성도 커졌기 때문에 민간분야로의 개발을 위한 원조가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개발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실용적인 통일 및 개발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방식을 통해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참고하고, 체코와 쿠바의 성공적인 조합적 소유제 전환 방식을 통해 협동조합이 어떤 사회적 제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더 크고 튼튼한 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연대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조직과 경영을 하고, 일자리 공유제를 시행했다. 자금이 부족할 때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때는 노동인민금고를 통해 내부 필요 자금을 공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컨설팅, 자원 재배분을 하였으며 자본의 유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다. 더불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및 컨소시엄들을 활성화시켰다. 이를 통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회·비즈니스·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으며, 사람과 기술 개발에 의한 훈련과 혁신을 끊임없이 육성하여 협동정신을 함양시킨다.

체코와 쿠바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조합적 소유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공산체제하의 특권계층을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외국자본의 독점이 없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생산성과 책임의식을 높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초기단계는 지원의

물꼬를 트는 단계이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국정부나 민간단체가 민간부분을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나진-선봉지대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계획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북한 기업체들도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시장체계에 맞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자율적인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에 한국 협동조합은 북한협동조합과 합작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자 한다. 경제 특구지역의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민간 협동조합 기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는 북한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지역의 경우에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 이미 존재하며 관련 법률 또한 정해져 있어 충분히 가능한 지원 방식이라 본다. 이렇게 나진-선봉 지대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이 타 지역 조합과 연대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컨설팅하면서 북한 전역의 지역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비전을 세우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전문가들의 자문과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였던 스페인의 발전방식을 알맞게 잘 적용한다면 남북한 합작 협동조합 기업체가 성공적인 협동조합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간 협력은 남북한 공통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통일 한국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합작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함으로써 남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전역을 이어주면서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경제 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추후 개혁개방 될지라도 우리식보다는 중국식으로 경제체제가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았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의 경제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사회의 협동과 합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남북한 전역에서 운영되고, 남북한 주민들이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공통점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질 것이다. 이는 통일 후의 한국 경제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만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이 지속되면서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처럼 몇 백 개의 사업체가 서로 일자리를 공유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위해 내부적으로 기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존 사업체 간 일자리 공유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사업체로서의 일자리 창출까지로 통일 이후에 일자리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안에서는 조합원들 개개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지면서 책임이 함께 한다.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주인의식이 노동의 소외를 줄이고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반 기업은 소수에게 이윤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기업 내 노동자 임금격차가 300배가 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익금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최대한 많이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몬드라곤과 같이 최대 임금격차가 10배를 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환원되는 시스템이라면 남북한 사회의 병폐였던 빈부격차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남북한 국민들이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 정신을 함양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고방식을 익히게 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시 된다는 점을 체화하면서 북한지역 주민들은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 더불어 협동조합 특성 상 기술적 교육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인 만큼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하고, 배우고, 나눈다면 북한지역주민들의 개인의 인적 기술적 역량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선진 시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다.

위와 같이 협동조합을 이용한 북한 지역 개발은 ‘함께 살고 함께 만드는 통일 한국’을 풀뿌리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고 지속적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연대하는 ‘상생하는 한국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곰돌이CO쿠바, 쿠바에서 보물찾기, 아이세움, 2009

김연철,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해외 단행본〉

Carmelo Mesa-Lago, Market, Socialist, and Mixed Econom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국내 학술지〉

김종우 “동유럽 국가의 농산물 생산자 협동조합 현황”,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12권 제3호(2000).

박지연 (Jiyoun Park)·문경연 (Kyungyon Moon)·조동호 (Dongho Jo),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19권 제4호(2016).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의 개정을 덧붙이며—”,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집 제3호(2016).

송재일, “협동조합법제에서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3집 제3호(2015).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발전시스템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 31권 제2호(2014).

주OECD대표부, “체코의 경제 체제전환과 시사점”, 노무현 사료관(2006)

남궁영, “북한 경제특구정책: 운용 및 성과”,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2000).

이장로·이제홍·이춘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2006).

〈해외 학술지〉

Mario A. González-Corzo, “URBAN AGRICULTURE IN CUBA: AN UPDATE”, ASCE, Vol 26(2016).

MacLeod, Greg & Lerner, “Sally, From Mondragon to America: experiments i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s Journal, Waterloo 24.4 (1998).

GeorGia Kelly, “The Mondragón Cooperatives: An Inspiring Economic Hybrid”, TIKUN MAGAZINE, Vol 28(2013).

Francisco López Segrera, “The Cuban Revolution: Historical Roots, Current Situation, Scenarios, and Alternatives ”, Sage Publications, Inc, Vol 38 No 2(2011).

Camila Piñeiro Harnecker, “Cuba's New Socialism: Different Visions Shaping Current Changes ”, Sage Publications, Inc., Vol 40 No. 3(2013)

Aaron Major, “Cooperatives and Socialism: A View from Cub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8 No 3(2014)

Rory Ridley-Duff, “Communitarian governance in social enterprises Case evidence from 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and School Trends Ltd”,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 6 no 2(2010)

〈학위논문 (국내 및 동양, 서양)〉

양종삼, “A study on the voucher privatization of the Czech Republic”,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경근,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신문기사〉

정용수, 「문제인 정부 첫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연내 국제사회 통해 800만 달러 지원키로」, 중앙일보, 2017.09.21.,

<http://news.joins.com/article/21957754>.

이대락, 「문재인 지지율 65.6%로 4주 연속 하락, 안보 위기감 확산 여파」, BUSINESS POST, 2017.09.25.,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762.

권길여, 「국민 61%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 반대한다」, Insight, 2017.09.22., <http://www.insight.co.kr/news/120436>.

조정훈, 「국민 76%, 남북대화채널 복원 공감」, 통일뉴스, 2017.06.2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01>.

Michael Muckian, 「Cooperative Principles Drive Cuban CU Development」, Credit Union Times, March 24. 2015.

〈인터넷 자료〉

몬드라곤 홈페이지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COOP/introduce/rule.do>)

〈기타〉

김규현,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최근 북한의 변화상”, 아테나워 재단과의 워크숍 발표문, 2017.09.

KBS 스페셜 다큐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라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정책에 대하여』, 일본 동경에서의 투자촉진 세미나 연설문, 1996. 7. 15.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HERI insight 연구보고서, 2011 인터뷰, ARIMOTOSHUN, 2017년 4월 24일

장 려

남한 '서커스'와 북한 '교예' 비교를 통한 민족문화 공통성 제고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이영호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일제강점기 일본 곡마단의 도입과 영향
- III. 해방이후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
- IV. 서커스와 교예속에 나타난 민족 공통성
-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한 '서커스'와 북한 '교예' 비교를 통한 민족문화 공통성 제고 연구

서커스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문화속에 다양한 전통연희의 방식으로 뿌리내려왔다. 그러나 일본의 국권 침탈과 함께 조선에 들어온 서양식 서커스인 곡마단 공연은 도입되자마자 오랜기간 우리민족과 함께 했던 전통연희를 대체하며 빠르게 정착해 간다. 이 과정에서 남사당을 비롯한 전통연희패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되다가 일부는 곡마단으로 흡수되고 만다. 일제강점기 곡마단은 전통연희패와는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몰락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흡수한 전통연희자와 내용은 해방후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방이후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남북한은 곡마단의 교예를 남한은 '서커스'로 북한은 '교예'로 명명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남한의 서커스는 1960년대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으나 TV의 등장 등 다양한 불거리의 등장으로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 한때 20여개에 이르렀던 남한내 서커스단은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채 사라지고 현재는 동춘서커스만이 유일한 서커스단으로 남아 있다.

반면 북한은 전시중이던 1952년에 일제 강점기 곡마단에서 활동하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평양교예단을 창단하였고 교예배우를 전문 육성하는 평양교예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예를 예술로까지 승화시키며 현재의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결코 같지 않았다. 북한의 교예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술의 한 분야라는 인식속에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더해져 현재의 세계적인 명성과 예술의 한분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남한의 서커스는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해 1970년대이후 대중의 무관심과 서커스

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 부족 그리고 후진 양성의 실패속에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는 서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통연희와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맥을 이어왔다는 공통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남한의 서커스에는 전통연희인 농환과 솟대타기를 계승한 종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북한의 교예에는 전통연희적 요소와 민속놀이를 교예적으로 창작하여 민족교예라는 형식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1957년에 창작된 <널뛰기>는 대표적인 민족교예 작품으로 전통민속놀이를 교예화한 것으로 내용은 물론 사용하는 음악과 배우의 의상까지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꽃줄놀이>, <상모놀이>와 같은 전통연희와 전통놀이를 바탕으로한 민족교예를 꾸준히 창작하고 있다.

역사속에서 우리의 전통연희는 전승 과정에서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연희문화를 적절히 결합하여 우리 것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전통이 있어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유연한 흡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분단이후 다른 체제와 문화속에서 살아오며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된 남북한 상황에서 서커스와 교예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공통성을 찾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적절해 보인다. 또한 정치·외교·군사적인분야에서의 관계 개선과 함께 체제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민간차원의 사회·문화·예술의 교류 차원에서도 서커스와 교예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 서커스는 기존의 정통서커스를 대체하여 새롭게 아트 서커스라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발맞춰 여러분야의 교예형식을 포괄하면서도 민족적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교예극 <춘향전>을 공연한바 있다. 만약에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간의 교류가 현실화 될 경우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우수한 교예 인프라가 결합하여 민족적 정서가 담긴 스토리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서커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북한은 분단이후 70여년동안 교류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를 영위하며 살아온 결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동질 의식은 매우 희박해 졌다. 서로 달라진 남북한사이에 상호 소통을 통한 민족공통성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의 민족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외교·군사적인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상이한 체제의 통합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공통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시점에 소통과 민족공통성의 모티브로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모든 면에서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곡예라고 불리며 남녀노소 모두의 흥겨운 오락거리였던 서커스¹⁾도 사라져 가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나마 최근에 뉴 서커스(New Circus) 또는 아트 서커스(Art Circu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화려한 묘기와 각종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외국 서커스단의 내한공연은 추억속 서커스와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현시점의 서커스에서 오랜 기간 면면히 이어온 우리민족의 전통연희를 떠올리는

1) 이 글에서 사용되는 '서커스'라는 명칭이 해방이후 외국 서커스단의 내한공연 등에 영향을 받은바 크지만 곡예(曲藝)나 곡마(曲馬) 등의 용어가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용어이며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후 남한의 곡예는 '서커스'로, 북한의 곡예는 '교예'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때 '서커스'와 '교예'는 묘기를 표현하는 동작이란 개념이 아닌 장르적인 용어로 사용 예정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전통연희에서 아크로바틱적인 요소나 동작을 표현할 때는 곡예, 묘기 등의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다른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별도 구분 표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서커스를 지칭하는 단어인 ‘곡예(曲藝)’, ‘곡마(曲馬)’, ‘기예(技藝)’, ‘잡기(雜技)’ 등의 명칭이 대체로 일제강점기이후 등장한 용어인데다 최근에 일반화된 서커스(Circus)란 말의 유래나 공연 형식이 서구²⁾에서 도입되었고 한 세기전만 해도 이런 말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커스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문화속에서 다양한 전통연희(傳統演戲)³⁾의 방식으로 뿌리내려왔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불교, 유교, 한자 등과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의 연희자산인 산악(散樂)·백희(百戲)가 전래되면서 곡예적인 요소의 전통연희도 유입되었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을만큼 역사적 근원도 유구하다. 고려시대에는 나례(儺禮)나 연등회, 팔관회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도 잡희(雜戲) 같은 전통연희가 이뤄졌고, 그 전통은 조선시대에 나례나 외교행사 같은 국가공식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잔치 자리에서도 펼쳐지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온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 전통연희는 단순히 곡예적인 요소만이 아닌 춤과 노래, 가면극 등이 포함된 종합공연 형태를 유지하며 계승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국 연희단 특히 일본을 통해 유입된 곡마, 곡예들은 전통적으로 전래되어온 연희적 요소에 많은

2) 서커스의 어원은 동그라미나 바퀴 등을 뜻하는 키르쿠스(Circus)에서 유래 되었으며, 키르쿠스(Circus)는 전차경주, 격투기, 검투사와 동물의 싸움 등 대중적인 오락이 이뤄지던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와 관련된 용어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서커스는 1768년에 영국의 흥행사이자 직접 마상곡예를 펼치기도 했던 필립 애슬리(Philip Astley)가 공연한 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공연에는 기예(Acrobats), 허공에서 팽팽한 줄을 타는 줄타기 곡예(Ropedancers), 그리고 광대의 공연(Clow) 등 서커스의 기본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커스’ 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에스틀리 극단의 곡마사였던 찰스 휴즈(Charles Hughes)가 독립하여 1782년 ‘로열서커스(Royal Circus)’라는 서커스단을 창립하면서부터이다. 심영임,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무용의 예술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10쪽 ; 『다음 백과사전』 검색,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2XXXXX00316>. 등 요약정리

3) 전통연희에는 줄타기·숫대타기·땅재주·환술 등 곡예적인 산악·백희의 종목들은 물론 가면극·판소리·창극·꼭두각시놀이 등 연극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곡예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논하는데 있어 명확하지 않은 명칭일 수 있으나 현대적인 서커스나 북한의 교예에서도 종합 버라이어티한 성격과 연극적 요소가 많이 내포된 관계로 전통 계승되어 오는 근현대 이전의 곡예 내용을 지칭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이 열리는 마을 공터의 공연이 가설무대지만 실내 공연 형태로 바뀌고, 떠돌아 다니던 모습도 일정기간 한 곳에 머무는 상설공연 형태로 전환되는 것 또한 이 당시의 변화된 모습이다. 곡마단은 도입후 경쟁관계에 있던 전통연희의 자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는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속에 북한은 서커스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체성을 잃고 타락한 곡예, 곡마를 대신하여 독자적이고 주체성이 강한 북한식의 '교예'란 예술 장르로 재창조하여 국가적 보호와 적극적인 장려속에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전시중인 1952년에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평양교예단은 교예를 예술적 경지로 이끈 북한의 대표적 교예단이며, 서커스와 관련된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북한 교예의 특징중 하나는 줄타기, 무동쌍기, 땅재주 같은 전통연희적 요소와 널뛰기, 줄넘기 같은 전통 놀이를 응용 창작한 민족교예를 주요 종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해방이후 남한의 서커스는 196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이후 TV의 보급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남한의 서커스는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인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프로그램속에 농환이나 솟대타기와 같은 전통연희의 곡예적인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를 비교 분석하여 민족적 정서와 공통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을 통합하는 민족적 공통성의 대상으로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에 주목하고 분단이후 이질화된 요소 속에 잔존하는 민족적 정서와 전통연희에 뿌리를 둔 문화적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통일 시대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는 해방이후 상호 다른 명칭 사용 등으로 이질화된 요소가 많아졌지만 결국은 유구한 민족문화속 전통연희라는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계통분화되었고, 지금도 그 내용에는 민족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공통성 발굴 요소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인식이 실질적 통일 과정을 만드는 주요 기반이자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심리적 간극을 사전에 좁혀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란 인식하에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사이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민족적 공동성 요소를 파악하는 일 또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북한에서 교예는 예술의 한분야로 인식되면서 이론적 근거가 어느 정도 정립된 것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사업도 그렇다고 보존해야할 근대 문화의 유산이란 인식도 아닌 어중간하게 놓인 위상처럼 학문적 접근 역시 매우 부진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도 미진한 편이다.

남북한 서커스와 교예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서커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동시대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연극이나 영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양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은 편이다.

일제 강점기 서커스는 일본을 통해 곡마단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도입된 결과로 인해 주로 곡마단의 도입 과정을 다룬 연구와 남사당같은 전통연희패들이 이동하는 예인집단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문화사적인 연구가 있다. 먼저 야야시 후미키(林史樹)와 신근영, 허정주 등의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서커스(곡마)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서커스의 흐름을 분석 연구하고 있는데 허정주⁴⁾는 그의 학위논문을 통해 공연민족지(performative ethnography)적인 관점에서 근대이전부터 동춘서커스의 최근 공연 프로그램까지를 검토하여 구조적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신근영 역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서커스가 국내에 도입되는 역사적 경

4) 허정주, “한국 곡예/서커스의 공연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위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방법으로 당시 발행된 국내외 신문기사 등을 빠짐없는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사료적 수단으로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발굴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사에 다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신근영은 석사학위논문⁵⁾을 통해 전통연희의 곡예적인 요소를 검토한 이후 연구의 외연을 넓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곡마단(서커스단)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⁶⁾하고 있다.

하야시 후미키(林史樹)는 한국의 서커스에 대해 연구한 일본인 학자로 한국내 서커스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동춘서커스단의 일원으로 체류하면서, 관련자들의 구술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⁷⁾ 그의 연구는 비정주집단으로서의 서커스단원들의 유동성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는데, 그는 한국(남한) 서커스를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다른 최초의 연구서라는 의의를 갖는 한편, 서커스의 국내 도입시기에 대한 논란 등 몇 가지 과제도 안겨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성과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 교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남한의 서커스 연구는 연구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커스단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고 그나마 유일한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단의 연구도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의 아트 서커스와 비교 등을 통한 문제점 및 방향 제시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서커스의 흐름과 역사성, 전통연희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현실성에 의문이 드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신근영, “숫대타기의 역사와 연행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6) 신근영, “1950, 60년대 곡마단의 연행 양상과 특징”, 『민속학연구』 제35호, 한국민속학회, 2014.

7) 하야시 후미키(林史樹), “한국 서커스에 비취진 「일본」-고정화된 「지배-피지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韓國サーカスに映しだされる「日本」-固定化した「支配-被支配」観からの脱却を目指して-)”, 『일본학연구』 제37집, 2012, 95~98쪽 ; 하야시 후미키(林史樹) 저, 장미선 옮김, 『서커스가 왔다!: 한국 서커스의 삶과 이동 이야기』, 제이앤씨, 2013.

북한의 교예 관련 국내 연구는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고 연구 성과 역시 전무한 형편이다. 북한의 교예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총괄 소개하는 책에서⁸⁾ 예술분야의 한 장르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북한 교예를 다룬 유일한 논문인 김미진의 연구⁹⁾ 역시 교예 형태와 종류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북한의 대외 교류의 성과를 고찰한 연구¹⁰⁾에서 대외교류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북한 교예단의 활약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를 민족공통성 제고의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남북한 간의 상호 이질화속에서 민족공통성을 찾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한편 본 주제의 연구를 위해 남한과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문헌을 기초로 한 내용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또한 문헌 분석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남한 서커스와 북한 교예의 유사성 및 차이점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 주제의 당위성 제고에 활용한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이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에 깃든 민족공통성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서커스와 교예의 공통적인 출발점이자 민족공통성의 실마리가 되어 줄 일제 강점기 서커스(곡마)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한 자료는 두 가지 방향에서 활용하였다. 첫째, 남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 및 연구논문이다. 북한은 교예를 예술의 한 분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예술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관련 연구서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예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단행본 형태의 저서인 『교예 예술리론』,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 22』, 『교예론』 등을 중심으로 참고하

8)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예술』, 역락, 2004.; 정병호, 『북한의 공연예술2, 고려원, 199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북한문화예술의 이해2』, 1990.

9) 김미진, “북한 교예의 기원과 형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0) 전영선·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모순영, “김일성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문예잡지인 『조선예술』, 『천리마』, 『민족문화유산』 등에 실린 교예관련 글을 참고하였다. 이밖에 최근의 북한 교예 동향 파악과 정확한 일자 확인 등을 위해 『로동신문』과 함께 『조선중앙년감』, 『조선문학예술년감』같은 북한에서 발행하는 연감도 함께 살펴보았다.

두 번째 활용한 자료는 서커스와 교예 관련 영상자료의 활용이다. 이 연구가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의 상호 이질적인 요소와 공통적인 요소 파악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여 관련서적이거나 논문만으로는 내용적인 분석이나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관람한) 내용 이외에 경험하지 못한 공연 관련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영상자료에는 직간접으로 구할 수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나 DVD 이외에 영상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유튜브(<https://www.youtube.com>)] 검색을 통해 연구에 활용하였다.

Ⅱ. 일제강점기 일본 곡마단의 도입과 영향

1. 일본식 서커스 '곡마단'의 도래

19세기말 쇠국으로 외부 세력의 유입을 차단했던 조선은 갑오경장을 통한 개혁과 함께 일본 및 구미 열강과의 수교를 통해 낯선 이국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외적 변화 속에서 조선의 민중들은 이제껏 보지 못한 신과극, 무성영화, 창가 등의 근대적인 공연들을 접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일본을 거쳐서 도입된 곡마단의 곡예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문화속에 뿌리내린 전통연희를 규모의 장대함과 내용의 신기함을 무기로 전통연희의 자리를 밀어내며 새로운 불거리로 자리잡게 된다. 더군다나 1910년의 일제의 의한 강제 병합은 이런 추세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 땅에 일본화된 서양식 서커스인 곡마단 공연이 처음 선을 보인 것

은 대체로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¹¹⁾ 곡마단의 곡예는 도입되자마자 빠르게 전통연희를 대체해 나가게 된다. 여기에는 서구적 근대성 추구가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었던 신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층에게 전통연희는 청상해야할 구시대 잔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일조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3·1운동을 기점으로 더욱 무르익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통연희는 급격히 퇴조하고 신과극마저 자체 개혁을 시도하다가 지방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리고 그 공백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 신극운동이 메꾸어 나가게 된다. 특히 서구적인 연극론이 무대 공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론적 배경이 미약한 전통연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¹²⁾

전통연희의 빈자리는 언어적인 전달력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도 오락적 기능에 충실한 곡마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많은 외국 연희단이 조선에 유입되었는데 이 시기 일본 연희단의 유입으로 곡예(曲藝)라는 용어도 이 땅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곡예는 일본의 대중오락인 미세모노(見世物)에 서양식 아크로바틱한 기예가 결합된 것이었다.¹³⁾ 곡마단의 곡예가 대중화되고 인기를 끌게 되는데는 왕실의 관람도 한몫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된 영친왕을 비

11) 일본인 학자 하야시 후미키(林史樹)는 선행연구자인 아쿠네(阿久根巖)나 나카타니(中谷)의 의견을 인용해 1890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소개로 궁중의 초대 를 받아 조선에서 공연을 가진 아리타양행회(有田洋行會)라는 단체가 최초의 서커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근영은 그의 논문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처음 조선에 건너오게 된 것이 1898년의 일이므로 1890년에 그가 조선 왕실을 오갔다는 것에서 1890년 도입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대신 당시 신문기사를 근거로 1910년 9월 바로프스키(Barovsky) 곡마단의 공연을 조선 최초의 곡마단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허정주는 1903년 5월자 『황성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1900년대 초부터 일본 곡예단이 조선에 들어와 곡예를 펼쳤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의 서커스와 관련된 상기의 주장들이 대체로 당시의 신문기사나 기록이 없는 구전을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근대적인 신문이 창간되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 모두 기사화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료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2) 유수영, “근대이후 유랑극단의 공연활동 - 1950년 이후 ‘포장극단’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61집, 한국민속학회, 2015, 270쪽.

13) 신근영, “일본 연희단의 유입과정과 공연양상”, 『한국민속학』 57집, 한국민속학회, 2013, 361쪽.

뜻하여 순종의 관람 사실이 조선민들에게 알려졌고 이는 곡마단의 인기로 이어지게 된다.

『순종실록』 부록 2권 순종 4년 9월 8일(양력) “태왕 전하(太王殿下)를 모시고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쇼쿄쿠사이 덴카쓰 [松旭齋天勝] 의 재주 시범을 관람하였다. 종척(宗戚),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이왕직 고등관 및 그 부인들도 관람하였다. 창덕궁(昌德宮)에서 만찬(晩餐)을 준비하였다. 귀족과 이왕직 고등관에게는 기념품을 하사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에게는 주찬료(酒饌料)를 차등 있게 지급하고, 천승(天勝) 등 직물 1권(卷)과 은병(銀瓶) 2개(箇) 및 금(金) 500원(圓)을 상으로 하사하였다.”¹⁴⁾

3·1운동 이후에는 바로프스키 곡마단의 공연을 비롯한 일본, 이탈리아 곡마단의 내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규모 인원과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 형태로 조선 관객을 곡마단에 더욱 친숙하게 만들었다.¹⁵⁾ 이처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다양한 문물은 일본을 거치면서 일본화된 형태로 이 땅에 수용되었듯이 서양의 서커스 역시 일본을 거치면서 그들의 전통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도입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한반도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10여개의 곡마단을 포함해 대략 30여개의 곡마단이 전국을 누비며 공연을 이어간다.¹⁶⁾ 일부 곡마단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멀리 만주까지 원정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곡마단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새로운 단원의 충원은 곡마단에게 있어 늘 고민거리였다. 아무리 이들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광대에 대한 전통적인 천대 의식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이로 인해 간혹 곡마단 공연이 이뤄지는 마을에서 아동이 실종되거나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면서 곡마단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형성은 곡마단을 조선말 전국을 유랑하던 남사당패와 동일시하여 전국 각지를 떠도는 새로운 유랑집단으로 인식하

1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zc_10409008_003, 2017.09.16. 검색.

15)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9~53쪽 요약정리.

16) “인터뷰: 84년 역사 동춘서커스 박세환단장”, 『주간조선』 통권 2087호, 2009.12.28.

게 만들었다.

또한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유발된 전쟁은 전국을 전시체제로 몰가가며 전국의 모든 곡마단에게 경영난에 허덕이게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모든 흥행물에 입장세를 부과하고, 흥행취체규칙¹⁷⁾을 공포하면서 곡마단의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¹⁸⁾ 결국 경영난을 이기진 못한 곡마단들은 서로 합병과 규모의 축소 등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고,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남은 곡마단은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2. 곡마단으로 흡수되는 전통연희

일제 강점기 일본을 거쳐온 서양식 서커스인 곡마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있었지만 곡마단이 유입되기 전에도 이 땅에는 남사당패, 솟대쟁이패와 같은 전통적인 연희문화가 존재하였다. 비록 조선시대에 ‘광대’라는 최하층의 천민으로 천시를 받았고, 나라마저 일제에 빼앗겼지만 이들은 여전히 조선 민중의 시름을 달래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기존의 전통연희들은 당대 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낡고 단조로웠다. 당시 활동했던 남사당패 등의 공연 종목들은 전통적인 신명을 돋우는 ‘놀이’가 주류였던 탓에, 새로운 볼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묘기’는 부족했다.¹⁹⁾

전국을 떠도는 전통연희패들은 일본 곡마단의 유입이후에도 일정기간 양립하며 존재하였고, 일제의 강제 병합이후 원활할 통치와 수탈을 목적으로 전국에 철도망이 깔리면서 장이 서는 장시를 떠도는 형태에서 철도가 통과하며 생긴 새로운 도심지 중심으로 유량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곡마단과 전통연희패들은 일부 공연 내용에서는 상호 유사한 면이 있었

17) 1944년 조선총독부 법령 제197호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의 사전허가제로 일제의 공연예술인에 대한 감시와 숙정을 위해 제정한 법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하여 요약한 내용.

18)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77쪽, 당시 곡마단의 경영난뿐만아니라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연희자)들의 경우에도 일당형식의 출연료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19) 허정주, “한국 곡예/서커스의 공연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2쪽.

지만, 곡마단의 공연은 전통연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점차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런 과도기에는 곡마단과 전통연희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식도 출현하게 되지만 이는 곡마단의 출현 시기가 남사당패, 솟대쟁이패, 대광대패 같은 전통연희패들이 자구의 길을 모색하던 때와 맞물려 있고, 전통연희패중 잡기를 위주로 하던 패들이 1920, 30년대에 대부분 소멸했다는 점²⁰⁾은 이들의 상당수가 곡마단에 흡수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조선인 최초의 서커스가 등장할 무렵인 1925년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는 곡마단내에 일본에서 근대 서커스를 경험했거나 국내에 있던 일본인 곡마단에서 활동하던 부류와 전통연희패에서 유입된 인력이 뒤섞여 활동하게 된다. 그렇지만 곡마단이 점점 인기를 끌면서 반대로 전통연희패의 공연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회 격변 속에서 전국을 떠돌던 전통연희패들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자신들의 이름 대신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곡마단'이나 '곡예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목을 끌고자 하는 시도 등 여러모로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관심 부족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연희패를 떠나거나 아니면 곡예 대신에 연주나 노래 같은 다른 특기를 배워 생계유지를 이어간다.

당시 전통연희패의 어려웠던 상황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획연재물 「인간문화재」중 1월 5일에 땅재주의 김봉업(당시 67세)을, 1월 23일에 줄타기의 이정업(당시 54세)를 다루고 있는데 땅재주의 김봉업은 “지금은 기력이 부쳐 땅재주를 못하는데 30년전에 우연한 기회에 손을 잡았던 해금으로 살아가고 있고, 줄타기를 장기로 하는 이정업은 줄타기 이외에 고수로 행세하는데 이는 줄타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예전에 배웠던 고수를 병행한다”는 사연²¹⁾을 담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전통연희의 맥을 이어온 패들이 대체로 1930년대 생계곤란 등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1994, 28쪽. 심우성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전승되었던 남사당패는 개다리패, 오명선패, 심선옥패, 안성 북만이패, 원육덕패, 이원보패 등 대략 6개 었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책 43~44쪽.

21) 예용해, 『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69~81쪽. 내용정리.

이처럼 오랜기간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전통연회는 그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갔지만 일부는 일본화된 서양 서커스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난 곡마단을 통해 계승되어 해방이후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 교예를 이어주는 공통의 요소 역할을 하게 된다.

Ⅲ. 해방이후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

1. 남한의 서커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찾아온 해방은 한반도내에 하나된 민족 국가 건설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체제라는 분단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곧 오랜 기간 단일 문화를 영유해온 민족 문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북분단은 상호 교류와 왕복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이질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일본 곡마단의 영향을 받은 곡예(서커스) 역시도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라는 명칭의 변화만큼이나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의 서커스는 해방 직후 좌우 대립의 혼란과 곧이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여느 공연예술처럼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전시 기간중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커스단의 공연은 계속 이어졌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남한 서커스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맞이한다. 동춘서커스 박세환 단장에 따르면 휴전후 신광서커스가 생겨나고, 3년후에는 자유, 대륙, 동춘, 서울, 제일, 대양서커스 등 1960년대 서커스의 황금기를 이끈 서커스단이 차례로 창단하게 된다.²²⁾ 서커스의 인기는 ‘씨-커스단’·‘곡마단’·‘곡예단’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서커스단 이외에 ‘예술단’·‘마술단’·‘연예단’·‘여성농악단’ 등의 이름을 붙인 단체들도 공연의 수준 여부를 떠나 레퍼토리에 서커스 종목을 한 두개씩 추가하여 공연에 할애하였다.²³⁾ 1968년 무렵 남한의 서커스단은 파악된 것만 동춘, 신국,

22) 서유상, “박세환 동춘서커스단장”, 『민족21』, 2005년 1월호.

자유, 대륙, 세기동물단, 태백, 대동, 동남, 중앙, 아세아, 동보, 한국마술단 등 대략 12개²⁴⁾이며 기타 소규모 서커스단을 포함할 경우에는 대략 20여개의 서커스단이 1970년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유일의 서커스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춘 서커스단의 경우도 한때 단원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번창했으며 여러 명의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²⁵⁾ 또한 변변한 오락거리가 없었던 시절이었던만큼 서커스에 출연하는 곡예사는 인기 있는 연예인 대접을 받곤 하였다.

1960년대 남한내 서커스가 전성기를 구가하며 인기를 끌었던데는 외국 서커스단의 내한공연도 한몫을 하게 된다. 외국 서커스단 중에서는 특히 서독 서커스단이 규모나 수준면에서 주목 받으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내한하는 외국서커스단을 통칭하는 브랜드化하며 서커스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외국 서커스단의 공연은 '서커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한내 서커스의 침체를 가져오는 부메랑이 되기도 하였다. 완성도 높은 외국 서커스단의 공연을 경험한 관람객에게는 국내 서커스 공연이 더 이상 흥미로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각 가정마다 TV가 널리 보급되는 1970년대 들어서는 남한내 서커스가 서서히 내리막 길을 걷게 되었고, 서커스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서커스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연극'의 축소였다. TV 연속극에 익숙해져가던 관객에게 서커스단의 상투적인 내용의 연극은 전혀 흥미롭지 않았던데다 연극에 출연하던 인기 배우들이 새로 개국한 TV나 영화쪽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연극은 서커스의 레퍼토리에서 서서히 빠지게 된다. 특히 연극은 TV 드라마가 일반화되면서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서커스 레퍼토

23) 허정주, "한국 현대 곡예/서커스의 시대적 변화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30집, 한국 공연문화학회, 2015, 595쪽.

24) 김지훈, "동물조련의 연희양상과 원리 - 동춘서커스단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제 42집, 한국어문교육학회, 81쪽.

25)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78쪽. 동춘서커스 출신의 스타로는 영화배우 허장강, 장항선과 원로 코미디언 서영춘, 이주일, 배삼룡, 남철, 남성남 등이 있다.

리에서 완전 사라지게 되고 그 빈자리는 서커스의 하이라이트인 공중곡예가 자리잡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서커스계는 또다시 구성상 변화가 생기는데 레퍼토리에서 ‘쇼’ 분야마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 시기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된 ‘다양한 볼거리 문화’ 양식들의 증가현상이 가져온 결과이다. 특히, TV, 영화,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국내외의 유명 공연 단체들의 국내 공연, 전국적으로 연중무휴로 계속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화려한 가수들의 공연으로 인해 더 이상 서커스단에서 선보이는 ‘쇼’가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²⁶⁾ 서커스에서 연극과 쇼의 부재는 곡예뿐만 아니라 소리와 춤, 가면극 등이 망라되었던 전통연희의 유습이 사라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몇몇 서커스단은 2000년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대부분 문을 닫고 현재는 동춘서커스만이 유일하게 서커스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동춘서커스의 시작은 일본 고사쿠라 서커스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동수가 조선인 30여명을 모아 꾸린 동춘연예단이 시작이었다.²⁷⁾ 이후 동춘서커스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활발히 공연하는 등 1960년대까지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당시 동춘서커스는 여타 악극단이나 연예단체처럼 1960년대 전성기까지 곡예적인 서커스 공연 이외에도 마술, 신파극, 쇼 등을 어우르는 종합적인 공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1960년대 동춘서커스의 공연 내용에는 전통적인 곡예 종목인 대나무묘기, 남사당 줄타기, 접시돌리기 같은 전통연희적인 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26) 허정주, “한국 현대 곡예/서커스의 시대적 변화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30집, 2015, 601쪽.

27) “창간15주년/대한민국 명장열전 10 : ‘영원한 광대’ 동춘서커스단장 박세환”, 『파이낸셜뉴스』, 2015.08.23.

<표> 1960년대 동춘서커스 공연 프로그램²⁸⁾

제1부 : 마술	제2부 : 몸 재주	제3부 : 연극(신파극)	제4부 : 쇼
.손으로 하는 마술(손마술) .기구를 사용하는 마술(대마술) .얼굴마술	.1인그네 .대나무묘기(장대타기) .통굴리기 .의자 탐 쌓기 .외발자전거 타기 .사다리 묘기 .남사당 줄타기 .접시돌리기 .3인 그네뛰기 .불 속 뛰어넘기 .쇠줄타기 .공중 오토바이 타기 .고공 줄타기 .공중비행	.〈불효자는 읍니다〉 .〈자장가〉 .〈원한 맺힌 두 남매〉 .〈안개낀 목포항〉	.각종 춤: 킁킁춤 이나 '차차차' .각종 노래와 코미디

대나무 묘기는 흔히 솟대타기, 장대타기란 이름으로 불리던 종목으로 높은 장대위에 매달려 다양한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고, 남사당 줄타기는 곡예적인 요소가 강한 전통연희의 대표 공연물이다. 또한 접시돌리기는 줄타기와 함께 현존하는 남사당놀이의 대표적인 버나돌리기이다. 이런 공연종목들을 통해 남사당 출신의 전통연희자들이 서커스단으로 유입된 흔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동춘서커스도 다른 서커스단과 같이 1970년대이후 TV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와중에 다른 서커스단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춘서커스단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등에서 공연을 펼쳐보이고 있으나, 최근 지역 축제의 운영에서 손익을 중시하는 추세이다보니 국내 서커스단보다는 체류 및 초청 비용이 저렴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초청된 기예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현재 남한내에서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동춘서커스가 유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동춘서커스 조차도 고령의 출연진

28) 허정주, 「한국 곡예/서커스의 공연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3~44 쪽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허정주는 박세환 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의 곡예를 전수받을 젊은 사람을 찾지 못해 대부분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제3국인으로 출연진을 구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북한의 교예

1) 몸으로 하는 예술로 탄생한 교예

북한에서 서커스를 부르는 용어는 ‘교예’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교예를 남한의 서커스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 남한의 서커스가 곡마, 곡예란 말을 대신하여 서커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과 민족 정서가 담긴 새로운 예술의 장르로 교예를 탄생시킨 것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발전시킨 종목을 창작해서 육성한 결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북한에서 교예는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한 장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주로 사람의 육체적인 기교동작을 형상수단으로 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²⁹⁾로 교예를 정의한다.

현재 북한의 교예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여러 나라의 서커스나 중국의 기예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북한의 교예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던데는 일제 강점기 곡마단에서 활약하던 인력의 활용과 함께 당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던 동구 공산권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선진 쓰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공화국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곡예 예술이 달성한 풍부한 경험들을 광범히 섭취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요구하는 곡예 예술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³⁰⁾

북한이 자랑하는 화려한 공중교예나 널뛰기 같은 민족교예 종목만 보

2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2, 299쪽.

30) 박경화, “곡예 예술의 높은 발전을 위하여 - 2월 27일 곡예 예술인 열성자 회의 보고요지”, 『생활과 무대』 평양: 국립출판사, 1956, 79쪽.

면 북한의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교예는 사상성이 많이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예술이 그렇듯 교예도 체제 안전을 위한 선전 수준으로 적극 이용되고 한다.

일찍이 김정일은 교예 종목에 정치적 목적을 부여공연에 자신의 치적을 내외에 알려왔다. 2011년 6월부터 8월초까지 중국 여러 지역을 순회 공연한 평양예술단의 종목중 <메기풍년>³¹⁾이나 2010년에 창작된 평양교예단의 <비단짜는 처녀들>³²⁾들은 김정일 시대의 정책과 그 성과가 담긴 종목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들어와 교예 내용이나 제목은 정치적 목적이 더욱 짙어진다. 김정은 등장이후 창작된 국립교예단의 <만리마의 나래펴고>는 김정은시대의 속도전인 만리마를 선전하고 독려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만든 교예극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들어 창작된 희극교예중에는 <망조가 든 개싸움>, <때려잡을 놈>, <막을 수 없는 민심>, <침략의 말로>³³⁾ 같이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일지 예측 가능한 종목은 대외적인 대북재제속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단면을 교예로 표현한 것이다.

교예는 대내 선전 이외에도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피바다가극단, 평양예술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등과 함께 평양교예단(국립교예단)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유지와 제3세계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예술 단체의 해외 순회 공연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해당 국가의 지지와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³⁴⁾

31) 북한에서는 열대성 메기가 적은 사료소비와 빠른 성장속도로 1998년부터 양식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온천지역이 많은 북한은 북한 전역에 메기 양어장과 가공시설을 갖춘 메기공장을 건설하여 식량난 극복에 적극 활용한 바 있다. 2002년 11월 28일자 『로동신문』에는 “피내도 피내도 끝이 없다”는 제목에 기사속에 “온 나라 온 천지대에 메기 공장들이 일떠서고(건설되고)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메기 탕집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32) 비단짜는 처녀는 영변에 위치한 비단공장에서 일하는 처녀동무를 말하는 것으로 영변의 비단은 6.25이후 생산된 지역 특산물로 1954년 견직공장을 시찰하던 김일성이 지역 명산 약산을 생각하며 특별히 ‘약산단’이라 이름 지었다고 할만큼 유명한 것이다. 약산단의 산지인 영변의 비단을 생산하는 처녀 동무는 힘든 현실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2013년~2015년 『조선문학예술년감』중 교예작품목록 참조.

이처럼 북한의 교예단은 수준 높은 기량으로 대외적인 교류 사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외국 서커스축제에 적극 참가하여 많은 수상을 이끌어냈다. 평양교예단(현 국립교예단)은 1972년 4월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현대마술 축전에서 처음으로 금상을 수상³⁵⁾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서커스계의 3대 국제 페스티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서커스페스티벌’과 ‘러시아 세계서커스페스티벌’, ‘스페인 피게레스 국제서커스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최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북한의 교예들중 공중교예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중 전회비행>, <날아다니는 처녀들>, <공중 철봉비행>, <공중 5회전 돌기>, <공중 널그네비행> 등 공중교예 종목은 외국에서도 그 창의성과 묘기의 난이도를 인정할만큼 수준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수준 높은 교예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북한의 김광훈과 벨기에의 안야 다엘레만스, 영국의 니콜라스 보너 등이 공동으로 감독한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평양교예단의 현역배우인 한정심이 여주인공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영화³⁶⁾였다.

북한의 교예는 높은 수준만큼이나 북한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사랑을 받고 있다. 김일성탄생일(태양절)같은 국가명절이나 추석 같은 민속명절에는 ‘평양교예극장’이 가족나들이 장소로 인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절을 맞아 조선중앙TV에서는 주기적으로 공연실황을 TV로 방영할만큼 교예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이다.³⁷⁾

34) 모순영, “김일성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1쪽.

35) 『조선중앙통신』, 2007.06.11.

36) 영화에서 주인공인 김영미역을 맡은 한정심은 2003년과 2011년에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 출전하여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 평양교예단(국립교예단)의 최고수준의 교예배우이다.

37) 2017년에도 1월 2일(15:58)과 1월 3일(11:22) 그리고 1월 16일(15:42)과 1월 18일(15:22)에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만리마의 내려피고」”를 1, 2편으로 나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했고 국제근로자절로 휴일인 5월 1일(16:18)에는 장수 인기프로인 「명랑한 텔레비전 무대」를 통해 일부 교예종목을 선보였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通』,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2017.09.07. 검색결과.)

이렇듯 북한의 교예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찍부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교예학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의 교예 교육의 핵심이자 수많은 교예 배우들의 산실은 '평양교예학원'이다. 평양교예학원의 시작은 1952년 국립극예단내에 연구생 제도를 도입하여 어린 학생들을 교예배우로 양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김일성은 “곡예배우를 전망성있게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체격이 좋고 예술적 소양이 있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곡예단에서 일반 지식과 곡예를 배워주면 훌륭한 곡예배우로 될수 있을 것입니다”³⁸⁾라는 교시를 내려 뼈가 굳지 않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교예배우로 육성을 지시하였다. 이후 1956년 8월에는 '곡예학교'라는 명칭으로, 1959년 9월에는 '평양곡예전문학원'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1972년 6월에 '평양교예학교'로 정식 설립되게 된다. 지금의 평양교예학원이란 명칭은 1992년 9월에 학원으로 승격하면서부터이다.

교예학원의 교육과정은 일반예술교육과 달리 교예기초훈련과 전공훈련, 무용과 음악교육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졸업작품으로 새로 창작하여 꾸준한 연습 과정을 거친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수상을 한 <공중그네비행>, <날아다니는 처녀들>, <3단비행>, <공중철봉비행>, <쌍그네비행>, <날으자 더 높이> 등은 모두 교예학원의 졸업작품들이었다.³⁹⁾

이처럼 북한이 일찍부터 교예학교를 설립하여 교예배우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데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활약하던 곡예배우와 전통연희의 연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교예학교 설립이나 후진 양성도 없었을 것이며 북한 교예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38) 김동철, “조국해방전쟁시기 교예예술인후비육성에 깃든 위대한 불멸의 령도”, 『조선예술』 2014년 10호, 19쪽.

39) “교예배우후비육성기지 - 평양교예학원”, 『조선예술』 2012년 8월호, 57쪽.

2. 체력교예, 주체교예 그리고 민족교예

교예는 크게 배우의 육체적인 동작으로 재주 형상을 표현하는 체력교예, 코믹한 재주와 동작으로 웃음을 주는 희극교예, 배우의 빠른 손놀림과 기재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요술, 훈련된 동물의 재주로 교예 형상을 창조하는 동물교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⁰⁾ 체력교예는 또 공연되는 장소와 무대형태에 따라 공중교예, 지상교예, 빙상교예, 수중교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종목별로 아름다운 조형미가 표현되는 조형교예, 민첩한 동작으로 수행되는 전희교예, 그리고 고도의 균형 능력을 필요로 하는 중심교예 등의 세부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교예를 특징짓는 단어는 ‘체력교예’와 ‘주체교예’ 그리고 ‘민족교예’일 것이다. 체력교예는 형태적인 특징을 주체교예와 민족교예는 내용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 북한 교예에서 체력교예는 교예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교예종류들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본다.

체력교예는 다른 교예보다 재주형상의 높이에서 월등하다. 요술이나 동물교예에서 재주가 아무리 노고 신기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체력교예의 재주에 비길 수 없다. 희극교예의 재주동작도 체력교예의 재주동작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동물교예에서 동물이 수행하는 전희나 거꾸로 서기와 같은 재주동작도 체력교예의 재주동작을 동물에게 모방시킨 것이다. 체력교예는 동물교예나 희극교예, 요술과 달리 보조적인 수단이 없이 배우의 발달된 육체적 기능만으로도 형상을 창조한다.⁴¹⁾

또한 체력교예는 체육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재주동작이나 운동동작 등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있고 체육의 종목들이 체력교예작품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봉재주>, <륜돌리기>, <오토바이재주>와 같은 교예종목은 체육종목을 교예작품으로 재현한 것이며, 체육종목인 <곤봉체조>, <탄력망체조>, <교예체조>와 같은 것은 체력교예에서 파생된 것이다.

40) 북한은 교예 형태구분에 사용하던 ‘교예막간극’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2009년이후(『조선문학예술년감』 기준) ‘희극교예’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41) 『광명백과사전 6 : 문학예술』,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830쪽.

북한 교예를 특징 짓는 또다른 키워드는 '주체교예'와 '민족교예'이다. 먼저 주체교예는 주체문예이론을 각 예술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주체문학, 주체무용, 주체음악 등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주체교예'는 '주체적 문예 정책'에 따라 창작되고 연기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창시자인 김정일은 1973년 12월에 평양교예단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주체교예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체교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교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이 옹계 결합되고 체육문화적으론 발전된 주체교예의 고상하고 우아한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고, 교예단안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교예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교예가 근로인민대중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정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인민적 교예로 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정열과 창조적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²⁾

북한 교예를 특징짓는 또다른 단어인 '민족교예'는 주체교예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⁴³⁾ 따라서 교예에서 주체를 세우려면 민족교예를 바탕으로 민족의 우수한 교예 유산을 찾아내어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주체교예와 민족교예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체교예는 그 뿌리를 항일혁명 당시 유격대원들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재주겨루기를 하던 것에서 뿌리를 찾은 것에 비해 민족교예의 근원은 수천년의 오랜 역사를 지난 <호선무>, <마상재>, <금환재주>와 같은 역사적 민족문화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북한 교예에서는 일찍이 고조선과 고구려 시기부터 발달해온 다양한 교예적 전통이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민족교예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교예는 현재도 새로운 민족교예 종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공

42) 남용진·박소운,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8 : 교예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17쪽.

43) 교예론에서는 “민족교예는 주체교예의 얼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53쪽.

연하고 있지만 민족교예의 대표작은 교예 초창기인 1957년에 발표된 <널뛰기>이며 민속놀이와 결합된 교예형태로 새롭게 찾아내어 창작된 작품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민족교예 종목으로는 전통연희적인 요소가 담긴 <바줄타기>, <공재주>, <무동쌍기> 같은 종목과 <호선무>, <상모놀이>, <마상재>, <널뛰기>, <그네뛰기>, <꽃줄놀이>와 같이 전통무용이나 무예, 민속놀이가 결합된 형식의 종목들이 있다.

한편 교예에는 형식에 대한 분류 이외에 ‘교예조곡’, ‘교예극’이란 낯선 형식이 있다. 이전까지는 교예조곡은 원래 ‘교예묶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에서 일정한 순서가 있는 기악 혹은 교향악악곡의 모음을 뜻하던 ‘조곡’이란 형식을 교예와 결합하여 탄생한 형식이다. 보통 각자 독립된 체력교예 중심의 교예 종목을 일정한 주제속에 묶어 공연하는 것으로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기존 종목을 주제에 맞도록 각색하기도 한다. 보통 서막과 종장 부분은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교예조곡으로는 1997년 8월에 김정일이 관람했던 조선인민군교예단(평양모란봉교예단)의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리>나 2013년 7월에 전승절 60돌을 기념한 평양교예단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이 교예조곡 형식으로 공연된 작품이고 2017년 초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⁴⁴⁾된 평양교예단 종합교예 <만리마의 나래펴고>도 교예조곡 형식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 교예조곡에서 더욱 발전한 ‘교예극’이란 예술 형식으로 <춘향전>이 공연된 바 있다.⁴⁵⁾ 교예극 <춘향전>은 지상교예뿐만 아니라 공중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등 모든 체력교예종목들과 함께 동물교예, 희극교예, 요술까지 결합된 종합적인 형태이다. 이처럼 북한 교예는 다른분야와는 달리 세계교예축전 등에 참가하는 등의 국제적인 감각과 경향을 받아들여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여 그들이 자부하는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44) 2017년 1월 2일(15:58~17:00)과 1월 3일(11:22~12:11)에 걸쳐 방송. 북한정보포탈 『북한통』 조선중앙TV 프로그램 검색 결과.

45) 『로동신문』, 2012.10.09.일자 및 『로동신문』, 2012.11.04.일자 기사내용 참조

IV. 서커스와 교예속에 나타난 민족공통성

1. 민족공통성과 새로운 방향

1) 서커스와 교예로 전승된 전통연희 요소

‘곤두박질’, ‘얼른’, ‘살판’이란 말은 전통연희에서 유래되어 현재도 남북한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연희는 분단이후 7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북한 일상 언어속에 파고들만큼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친근한 존재였다.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는 부르는 호칭만큼이나 이질화된 요소도 많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전통연희와 관련 있거나 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교예에 비해 상당부분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남한의 서커스에서도 전통연희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남한내 유일한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의 공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저글링(Juggling)이 등장한다. 작은 링과 모자 등을 이용한 저글링은 전통연희의 농환(弄丸)과 같은 손재주의 일종이다. 그리고 접시돌리기는 남사당패의 공연중 버나돌리기를 계승한 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2개의 긴 장대에 매달려 다양한 동작을 연출하는 종목은 북한의 <유쾌한 해병들>과도 유사함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말기부터 1930년대까지 활동했던 솟대쟁이패의 솟대타기(長竿戲)의 전통 계승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서커스는 공연종목뿐만 아니라 구성에서도 전통연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양에서 생겨난 서커스가 일제강점기에 곡마단이란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전통 곡예적인 형태로서의 서커스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승 발전되어온 산악·백희에서 유래된바 있다. 산악·백희는 춤, 노래, 연주, 가면극, 곡예를 모두 포함한 종합예술 형태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일제강점기 곡마단을 거쳐 서커스단으로까지 계승되어 왔다. 따라서 현대 서커스가 외래 서커스의 ‘모방’만이 아니라, 일정부분

유구한 전통연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발전되어 왔던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한의 서커스는 1960년대를 정점으로 그 인기가 하락하면서 연극이나 가수 공연같은 쇼가 사라지고 오로지 아크로바틱한 곡예 요소만 남아 서커스하면 곡예적인 면만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교예 역시 오래전 우리 민족의 전통연희에서 그 역사를 찾고 있는데 특히 고구려 팔청리 무덤벽화에 등장하는 마상곡예를 교예의 대표적인 전통으로 꼽고 있다.⁴⁶⁾ 이밖에도 호선무, 금환, 새미놀이, 땅재주, 법고놀이 등과 조선 후기 사당패의 무동쌍기, 광대의 줄타기, 마상재 등도 북한 교예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교예 유산을 바탕으로 ‘민족교예’라는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 민족교예란 힘을 바탕으로한 체력교예중에서 민속놀이나 전통연희적 요소를 교예적으로 창작 표현한 교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교예의 대표작인 <밧줄타기>, <널뛰기>, <2인 그네>, <줄넘기> 등은 민속놀이를, <상모놀이>는 전통풍물의 12발상모를 <말타기>, <말춤추기> 등은 마상곡예의 전통을 계승한 민족교예 종목이다.

말타기교예인 <경승마>는 팔청리고분벽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만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며 고려시대 이후 펼쳐진 ‘마상재’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종목이다. <줄타기> 교예는 줄을 타면서 무등을 쌓거나 회전하기 등을 하며, 줄의 각도에 따라 평줄타기, 경사지게 매어놓은 줄 위에서 벌이는 <사선줄타기>, 여러 줄을 매고 하는 <3단사선줄타기>, 수직으로 늘어뜨린 줄을 타고 벌이는 <늘인줄타기> 등의 종목이 개발되었다. 줄 위에서 <자전거타기>는 세계교예축전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한 대표적인 공연종목⁴⁷⁾으로써 민속놀이와 전통연희적 요소를 계승한 것

46) 팔청리벽화무덤에 그려져 있는 장면에서 두 남자가 말을 타고 큰 빨나팔을 불면서 북치는 사람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재주를 보여 주는 화폭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의 동작 연기는 말고삐를 쥐지 않고 량손으로 빨나팔의 대를 쥐고 윗몸은 좌, 우로 혹은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연기를 하였다. 이들은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량손에 쥔 빨나팔을 능숙한 숨씨로 불어 대는 말타기재주를 형상하였다. 특히 말타고 춤추는 재주에다 고취악을 결합시켜 형상하므로써 발전된 고구려 말교예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효수, “고구려 말교예”, 『천리마』, 2000년 12호.

47)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73쪽.

들이다. 이밖에도 2011년에 국립교예단을 통해 발표된 <상모놀이>는 농악의 12발 상모놀이를 모티브로 창작된 민족교예 중목이다.

서커스나 교예공연에 반드시 필요한 음악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에는 없는, 서양음악 창법과 전통음악적 창법을 결합한 민족창법, 국악기와 양악기를 결합한 배합관현악단 그리고 양악기와 결합하는 서양음악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량된 개량 국악기를 사용⁴⁸⁾함으로써 북한 교예의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창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통놀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널뛰기>나 <상모돌리기> 등에서는 반주음악으로 민요를 사용함으로써 공연 중목을 더욱 흥미롭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예공연시 재주를 보다 형상적으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환등(프로젝터)도 민족교예 중목의 경우 조선화를 활용한 배경을 투사하고 있고, 교예 배우들의 복장 역시 전통적인 의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⁴⁹⁾

2) 같은 뿌리속 다른 길을 걸어온 서커스와 교예

남한의 서커스가 1960년대 전성기를 정점으로 사양화의 길을 걸으며 현재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의 교예는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을만큼 발전하였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 사이에는 현 시점기준으로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많은 간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사이에 발전과 정체라는 상이한 길을 걸어 현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자부하는 남한에서 왜 서커스 분야만큼은 북한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만 가는 것인가? 그 이유해 대해 살펴봄으로써 침체된 남한 서커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와 남북한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8) 이춘길, “남북한 공연문화예술 교류프로그램 구상”, 사회과학연구, 제17권, 2012, 41쪽.

49) 민족교예의 대표작인 <널뛰기>의 배경음악으로는 민요인 ‘노들강변’, ‘풍년가’를 사용하고 있고, 무대의 배경 화면으로는 조선화 기법의 모란봉 등을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투사한다. 또한 출연진 의상으로 여성 배우는 한복(조선옷)을 남성 배우는 고구려 고분벽화속 무사복 형태의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한다.

첫째, 북한의 교예는 사회주의 주체문예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목적하에 통제와 지원으로 발전된 것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호없이 오로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해 발전과 정체의 과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모든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예 역시 주체문예론에 입각하여 높은 예술성으로 혁명의 각 시기에 당의 정책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속에 창작되었다. 이렇게 창작된 교예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당 정책의 효율적인 전파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며 발전될 수 있었다. 또한 예술의 여러 장르처럼 주체사실주의에 기초하여 발달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⁵⁰⁾을 담은 것을 창작 목적함으로써 ‘민족 교예’라는 독특한 형식의 교예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1960년대 최전성기를 기점으로 1970년대 TV 보급 등의 영향으로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 현재의 명맥만 유지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서커스를 전통연희를 바탕으로한 대중예술로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단순한 오락거리로만 인식하고 무관심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정부차원의 시도와 지자체의 지원노력⁵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북한의 교예가 국가가 주도하며 인민을 계도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사회적 무관심과 함께 외부 변화에 능동적 대처없이 현실에 안주한 결과 대중예술로 인정받지 못한채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교예를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연극, 영화 등과 함께 예술의 한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초기에는 교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김일

50) 정규창, “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체제유지전략에서의 상징성”, 서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72쪽.

51)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부가 경비를 지원해 상설극장을 세우는 안이 있었으나 1998년 서울시장 교체로 무산되었고, 1995년 8월에 서커스 엑스포 개최와 곡예사의 인간문화재 지정, 상설극장 건설 등을 내용으로하는 ‘동춘서커스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되었으나 이 또한 계획으로 그쳐 실제 정부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인터뷰: 84년 역사 동춘서커스 박세환 단장”, 『주간조선』 통권 2087호, 2009.12.28.)

성에 의해 “인간생활에 랑만과 열정을 주는 훌륭한 예술”⁵²⁾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이후에는 예술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잡게 된다. 이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비즈니스로 이해되었고, 결국 대중들의 무관심과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으로 서커스에 대한 침체로 직결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런 기조에는 서커스를 광대들의 비천한 놀이쯤으로 인식하는 뿌리깊은 대중들의 인식이 포함되긴 했지만,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악극단이나 예술단 소속 배우나 가수들이 TV 등으로 진출하여 대중예술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성숙에 서커스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더욱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한의 서커스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변화의 추이에서 도태된 결과 대중예술 모든 분야가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 비해 천장고가 높아야 하는 서커스의 특성을 살린 변변한 전용극장 하나 없이 현재도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는 빅탑(대형 천막)을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여부가 남북한 서커스와 교예의 수준 차이를 만든 요인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일찍부터 교예학원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을 적극 추진한데 비하여 남한의 서커스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선배가 후배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일부는 어깨 넘어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후배 양성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남북한 간 수준차이를 만든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서커스에 대한 인식 부족은 신규 단원 모집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규 단원의 모집이 남한 서커스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52년 6월에 ‘국립곡예단’ 창립과 동시에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갖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⁵³⁾ 이런 노력을 통

52)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40쪽.

53) 곡예 극장 어린 연구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인민반, 초급반 제도를 설치하고 담당 교양 지도원을 고정 배치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기술 종목별로 자기 소질에 맞는 기능을 전공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박경화, “곡예 예술의 높은 발전을 위하여 - 2월 27일 곡예

해 북한은 국립교예단을 창립하고 2개월만에 공연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교예학교를 설립하고 배우를 양성하는 과정이 조기에 가능했던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곡마단에서 활약하던 연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⁴⁾ 이는 평양교예단 단장겸 평양교예학원 원장인 박수익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교예단을 창립하자면 무엇보다도 배우 선발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서 지난날 곡예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곡예 배우로서 발전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⁵⁵⁾

이처럼 북한의 교예는 일제강점기 곡마단에서 활약하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교예배우 양성에 힘을 기울였고 여기에 더해, 당의 지원과 김정일의 관심 속에 국가적인 예술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교예는 세계서커스페스티벌 참가와 순회공연을 통해 북한과 북한 예술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북한 교예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데는 북한 교예의 개방적인 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교예는 민족적인 요소 즉 민족교예를 교예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민족 고유의 것에 집착하지 않은 유연함도 발휘한다. “교예분야에서는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민족교예 형식을 기본으로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 과정에 생겨난 교예형식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⁵⁶⁾는 김정일의 교시처럼 외국의 새로운 서커스적 요소를 배척하지

예술인 열성자 회의 보고 요지”, 『생활과 무대』, 평양: 국립출판사, 1956, 82쪽.

54)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대표적인 교예배우 김봉애는 8살에 부친을 잃고 9살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던 곡마단에서 배우인생을 시작는데 1954년 김일성에 의해 설립초기인 ‘국립교예단’에 들어가 교예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전영선, “북한문화예술인 물29-김유식·박소운·김상남”, 『북한』 2007년 7월호 통권 제343호, 북한연구소, 2000, 197~198쪽, 내용정리.

55) 조선중앙TV, “주체교예예술이 걸어난 자랑찬 60년-평양교예단 1”, <https://www.youtube.com/watch?v=JmKJjmrInQQ#t=20.3399683>.

56)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54쪽.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북한식 교예로 변형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식으로 응용 창작되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만리마 나래펴고>에서 중국식 요요(yo-yo)인 쿵주(空竹)를 활용한다거나 모스크바 국립서커스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Giant Wheel'을 활용한 <비약> 등의 종목은 국제서커스 페스티벌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교류한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3) 교류와 협력 그리고 새로운 방향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발점은 같았으나 분단이후 많은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는 많은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될 수 없다.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는 분단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전통연희와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따라서 민족공통성 회복 차원에서 서커스와 교예는 교류와 통합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하는데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내에서 명맥이 끊어진 전통연희 종목의 발굴과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남북한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요한 사항이다. 각종 자료에는 존재하지만 연수자가 없어 전승이 중단된 남사당패의 '땅채주'와 같은 종목은 곡예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운동에 소질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을 때 재현 및 계승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 곡예 기능자가 체육전공자나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⁵⁷⁾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교예를 탄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록에만 남은 전통연희

57) 과거 곡예 예술에서 일정한 기술을 소유했던 동무들과 체육 기본을 소유한 동무들을 중심으로 하여 첫 공연의 영광스러운 막을 열게 되었다. 박경화, "곡예 예술의 높은 발전을 위하여 - 2월 27일 곡예 예술인 열성자 회의 보고 요지", 『생활과 무대』, 평양: 국립출판사, 1956, 80쪽.

종목의 복원과 침체적 남한내 서커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한국)에서 북한의 교예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드물다. 교예라는 말이 북한식 서커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 교예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99년 12월에 있었던 서울통일농구대회때 농구단과 함께 방문한 평양교예단의 교예였다. 그보다 앞서 남한지역은 아니지만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양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이 1999년 8월부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 교예의 교류가 단순한 초청 행사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의 통일 농구를 통해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접한 이후 북한 교예단의 초청공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간의 과열된 양상으로 인한 과도한 초청비용과 정산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은 단순한 이벤트성 교류의 폐단을 그대로 들어낸 사례일 것이다.

남한의 서커스는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존폐의 기로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적인 서커스의 몰락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1980년대 다양한 미디어와 불거리가 등장한 이후 서양의 서커스도 서서히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라지게 된다. 2017년 5월에는 1871년부터 시작되어 한때 ‘지상최대의 쇼’로 불리던 미국의 링글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 앤 베일리의 서커스(Ringling Bros. and Barnum & Bailey Circus)가 146만에 막을 내렸다. 링글링 서커스는 대공황과 2번의 세계대전 등에도 그 전통을 이어왔지만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것이다.⁵⁸⁾ 이처럼 지금 전세계적으로는 태양의서커스로 통칭되는 아트서커스를 지향하는 서커스를 제외한 정통적인 서커스는 존폐기로에 놓여있거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정통 서커스를 지향하던 북한의 교예나 중국의 기예에도 스토리텔링과 특수효과가 도입되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58)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116009800038/?did=1947m>.

이러한 세계적인 아트 서커스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우선은 남북한 공동 창작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우수한 교예 인프라가 결합하여 세계적인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남한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세계적인 한류(韓流) 확산에 활용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창작 방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민족적 정서가 공유될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문화예술교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남한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자본주의 퇴폐풍조 유입으로 보고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가장 크게 비난해 온 것이 바로 '남조선 문학예술의 반동성과 퇴폐성 그리고 예술성 없음'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민족 고유의 정서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일반대중에게 호소력이 높은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⁵⁹⁾ 이는 남북 문화교류의 선례에 비취 남과 북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때 상호 교류도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그런면에서 북한이 2012년 10월 8일에 초연한 교예극 <춘향전>⁶⁰⁾은 향후 남북교류와 공동제작시 주목해야할 작품이다. 교예극 <춘향전>은 기존에 각 종목을 나열한 병렬식 구조에서 탈피해, '교예극'이란 새로운 형식처럼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진 스토리가 담겨있다.

이는 서커스 각 종목을 유니버스식으로 구성한 기존 서커스와 차별화된 아트 서커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일정한 주제와 흐름속에 전개된 '교예조곡' 형식에서 진일보하여 민족교예적 요소

59) 도재경,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의 평가와 과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0쪽.

60) 교예극 <춘향전>공연이 8일 평양교예극장에서 첫막을 올리였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기자, 언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교예극은 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요술 등 교예의 모든 요소들을 극적방식으로 결합하여 춘향과 몽룡사이의 사랑관계를 형상함으로써 봉건적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료리도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동신문』, 2012.10.09.

가 담긴 지상교예뿐만 아니라 공중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등 모든 체력교예종목들과 함께 동물교예, 희극교예(막간극), 요술까지 모두 결합된 종합적인 작품이다.⁶¹⁾ 무엇보다 소설 ‘춘향전’은 남북한에서 모두 다양한 장르로 다뤄진 익숙한 소재이고, 교예극 <춘향전>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에서도 어느 종목보다 감동을 준 종목이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인 널뛰기를 교예적으로 해석했던 <널뛰기>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교예극 <춘향전>과 같이 민족적 정서가 가득 담긴 고전극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민족 공통성이란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공통성 제고를 위한 제언

분단이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사이의 서로 다른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어느 특정분야만의 현상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현상이지만 이를 문화적인 시각으로만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문화에 대한 개념차이에서 비롯된 바 크다. 남한은 세계화된 일반 개념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다원주의적 주장들이 공존하는 반면, 북한에서의 문화 개념은 철저한 북한의 세계관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말해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에서 언어·예술·관습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질화로 민족문화의 전통적 요소들이 각기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남한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개인주의를 존중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⁶²⁾

61) 이몽룡과 춘향이 만나는 단오의 흥겨운 모습을 대표적 민족교예 종목인 <널뛰기>와 <줄넘기>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몽룡이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은 전통 외출타기로 구성하였다. 방자와 향단이의 만남과 월매가 물에 빠지는 장면 등은 희극교예 형식을 취하고 있고, 수중교예를 통해 광한루 주변의 연못을 재현하였다. 이밖에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장면에서 이몽룡이 사라지는 장면은 요술로, 옥에 갇힌 춘향의 고통스런 모습과 이몽룡과 춘향의 극적 만남이후 행복한 결말은 <그네중심교예>, <2인 회전조형> 같은 화려한 공중교예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화의 근본적인 뒤틀림은 분단이전인 일본의 식민지 문화의 전파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강제병합 이후 우리 전통문화를 미개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개화된 문명을 전파한다는 계몽적 관점으로 식민지 문화를 한반도에 이식하였다. 이는 해방이후까지 심각한 문화적 외상을 안겨주었고 이들이 이식한 식민 문화는 분단 이전부터 민족문화의 변용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전통연희로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에게 오랜기간 전승되어 왔던 연희적 요소는 일제 강점기 곡마단의 유입을 통해 1차 변이를 겪게 된다. 곡마단의 연희속에는 민족문화의 전승 요인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제의 통제된 문화정책속에서 서양식 서커스와 일본의 전통연희가 결합된 곡마단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대중적인 오락으로 파고 들게 된다.

일제의 패망으로 찾아온 해방은 변용된 민족문화가 새롭게 통합되고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였음에도 남북 분단이란 현실속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도 식민지배의 변형을 극복하고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념과 사상에 대한 상호 이질성속에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민족적 정서와 미(美)에 대한 심미적 정서면에서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내용에서 들어나는 민족적 정서는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한은 정치·군사적 갈등속에서 교류의 첫 단초와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민족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육 교류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뤄진 남북문화예술 교류가 남북한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1회성 이벤트로 기획된데다 문화예술 교류가 늘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맞춰 교류와 중단을 반복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북한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민간교류에 늘 소극적 태도였던 북한의 소극적 태도

62)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2, 218쪽.

역시 장애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민족공통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성과 있는 남북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부침이 없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며 민족교류와 우리민족끼리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그리고 남한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의 교류에 있어 북한 교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교예를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국가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에 비해 남한의 서커스는 철저한 마케팅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 정체를 거듭되었고 현재는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남한내에서의 서커스에 대한 낮은 위상과 이해도로 인해 북한 교예를 바라보는 시선은 ‘신기하다’, “놀랍다”는 반응과 배우들에 대한 “불쌍하다”는 인식에 머물고 있어 민족적 정서를 찾거나 예술적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배타적인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민족 고유의 문화란 것도 어떤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살아있는 문화전통으로 끊임없이 재편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⁶³⁾ 우리의 전통연희는 과거로부터 발전 계승되어온 것에 새로운 외래 문화가 적절히 결합된 속에 발전되어 왔다. 이는 우리 전통연희 문화가 시대를 망라해서 타국가, 타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되어 왔기에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유연한 흡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서커스와 교예가 새롭게 통합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유연한 흡수성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민족문화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보다는 상호 체제 선전 성격을 띠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문화예술부문의 교류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남한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의 수단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남한)의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남북한간 대화의 필요성이

63)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2, 204쪽.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 분위기가 확산되어 단혔던 남북한간 대화의 채널이 다시 열린다면 그 결과물로 문화예술 교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 힘입는다면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와의 교류도 그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V. 결 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서커스는 청동기인의 유물이나 제천의식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다. 주변국과 교류가 잦았던 삼국시대에는 전통연희의 내용도 더욱 다양하고 한층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러한 전통연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타임캡슐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전통연희 문화는 국가나 왕실의 연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모이는 마을 입구나 장터같은 생활 공간을 파고 들면서 우리 민족의 친숙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외연을 넓혀간다.

그러나 일제의 의한 강제병합은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던 것처럼 전통연희사에서도 일대의 변곡점이 된다. 일본화된 서양 서커스인 곡마단은 규모의 장대함과 내용의 신기함을 무기로 빠른 시간내에 남사당 같은 전통연희패를 밀어내게 된다. 이로인해 조선인 최초의 서커스단이 만들어질 무렵인 1930년대 전후로는 전통연희의 급격한 쇠락이 이뤄지면서 일부 연희자들은 곡마단에 흡수된다. 일제강점기 곡마단은 전통연희패의 경쟁자로 등장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점차 우위를 차지하며 전통연희 몰락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지는 전통연희를 흡수하여 해방이후 남북한 서커스와 교예로 그 전통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도 하게 된다.

해방이후 남한은 서커스로 북한은 교예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달라진 명칭만큼이나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서커스는 1960년대의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안주하다가 1970년대이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현재는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한 상태에 있다. 반면에 북한은 전시중인 1952년에 평양교예단을 창단하고 곧이어 전문배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평양교예학교를 설립하여 교예를 예술로까지 승화시키며 남한의 서커스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후 북한의 교예는 세계 서커스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체제선전의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해방이후 서커스와 교예의 서로 다른 행보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교예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술의 한 분야라는 인식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더해져 현재의 세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남한의 서커스는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해 대중의 무관심과 서커스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 부족 그리고 후진 양성의 실패 등이 원인이었다.

현재의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서커스와 북한의 교예 속에는 전통연희와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맥을 이어왔다는 공통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남한의 서커스에는 전통연희인 농환과 솟대타기를 계승한 종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북한의 교예에는 전통연희적 요소와 민속놀이를 교예적으로 창작하여 민족교예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교류,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 그리고 반목으로 일관한 결과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사이에 상호 소통을 통한 민족공통성 회복이 중요하게 되었다. 민족공통성 회복이 민족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 아닌 것처럼 분단이후 적지 않은 시간속에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각기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만큼 다름을 인정하는 전제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자기 것이 정통이란 생각으로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특히 민족문화로 한정해 본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민족 고유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자신의 문화가 더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온 적통임을 내세운다. 반대로 이러한 주장의 기조에는 상대의 문화가 더 이질화되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어 결국 남북교류의 장애가 되곤 한다.

우리의 전통연희는 과거로부터 발전 계승되어온 것에 외래에서 유입된

새로운 문화를 적절히 결합하여 발전해 왔기에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유연한 흡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서커스와 교예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공통성을 찾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적절해 보인다. 이는 남북 교류에 있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북한 입장에서도 교예가 남한의 서커스에 비해 객관적 우위에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문화예술 교류보다 거부감이 적은 분야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전세계 서커스는 기존의 정통서커스를 대처하여 새롭게 아트 서커스라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우수한 교예 인프라가 결합하여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서커스가 만들어진다면 태양의 서커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최근의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상황은 극도의 긴장속에 놓여있다. 극도의 긴장감 고조는 역으로 대화로의 국면전환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에 나선다면 곧이어 가시적인 문화예술교류도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공동제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아트 서커스가 남북한 주민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감동을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김영아, 『몸의 예술 서커스를 말한다』, 한신대학교출판사, 2013.
- 박영정, 『북한 연극/희극의 분석과 전망』, 연극과인간, 2007.
-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1994.
- 예용해, 『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 오진령, 『곡마단 사람들』, 호미, 2004.
-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2004.
- 전영선, 『북한의 사회와 문화』, 역락, 2005.
- 정병호·이병옥·최동선, 『북한의 공연예술 II』, 고려원, 1991.
- 하야시 후미키 저, 장미선 역, 『서커스가 왔다! : 한국 서커스의 삶과 이동이야기』, 제이앤씨, 2013.

<북한 단행본>

- 『광명백과사전 6 : 문학예술』,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 국립출판사 판, 『생활과 무대』, 평양: 국립출판사, 1956.
-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남용진·박소운,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8 : 교예예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김정분, 『미학개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박소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34 : 교예예술리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86.
-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 22 :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6.
-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21 : 민간극과 교예』, 평양: 사회과

학출판사, 2006.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형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조선대백과사전(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국내 학술지〉

김미진, “북한 교예의 기원과 형태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2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5.

김보라·김재범,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를 통해서 본 동춘서커스의 의미 중심 핵심 전략연구”, 『인문사회21』 제7권 제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김지훈, “동물조련의 연희양상과 원리 - 동춘서커스단을 중심으로”, 『어문학 교육』 제42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2.

신근영, “일본 연희단의 유입과정과 공연양상”, 『한국민속학』 57집, 한국민속학회, 2013.

신근영, “1950, 60년대 곡마단의 연행 양상과 특징”, 『민속학연구』 제35호, 국립민속박물관, 2014.

신현옥, “남북 민족문화상징 통합 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창간호,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08.

양승국, 「1910년대 신파극과 전통 연희의 관련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9집, 한국극예술학회, 1994.

양정호,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8호, 남북문화예술학회, 2011.

유수영, “근대이후 유랑극단의 공연활동 - 1950년 이후 ‘포장극단’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61집, 한국민속학회, 2015.

이지영, “한국 농환(弄丸)과 서커스 저글링의 현재적 연행 양상”, 『민속학연구』 제2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

이춘길, “남북한 공연문화예술 교류프로그램 구상”,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 이호승,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14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 전영선, “남북 문화공통성 창출을 위한 방안”, 『통일인문학』 제61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 전영선, “특별기획: 북한문화예술인물 29, 김유식, 박소운, 김상남”, 『북한』 통권 제343호, 북한연구소, 2007.
- 전영선·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 허정주, “한국 현대 곡예/서커스의 시대적 변화 양상 - 1960년대~2000년대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30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학위논문〉

- 김지니,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기능과 역할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도재경,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의 평가와 과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모순영, “김일성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신근영, “숫대타기의 역사와 연행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근영, “일제 강점기 곡마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규창, “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체제유지전략에서의 상징성”,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허정주, “한국 곡예/서커스의 공연민족지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기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목란비디오, 『실황록화 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 2000.

조선중앙TV, 「주체교예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60년-평양교예단 1, 2」,
<https://www.youtube.com/watch?v=JmKJjmrInQQ#t=20.3399683>,
(2017.05.07. 검색.)

조선중앙TV,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만리마의 나래피고> 1, 2」,
<https://www.youtube.com/watch?v=2k0lodWQ6xI>, (2017.05.07. 검색.)

조선신보, 「인터뷰: 조영합작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주인공 한정심」,
<https://www.youtube.com/watch?v=GE5ro7m773U>, (2017.05.20. 검색)

기타 북한신문 및 정기간행물 : 『로동신문』,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2015), 『조선예술』, 『천리마』, 『민족문화유산』 등.

장 려

통일교육 핵심역량 탐색 및 단위학교 활용 가능성 분석

-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추가람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통일교육 핵심역량 탐색 및 단위학교 활용 가능성 분석

-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을 중심으로 -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역량에 대한 언급이 일부 나타나 있으며, 통일 준비 역량 강화를 통일교육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중점적으로 길러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가 설명도 역시 부족하다. 토의, 생활 관련 소재를 활용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현안 쟁점과 사례를 통한 접근법과 같이 실제 역량 개발을 위한 통일교육의 교수 방법 관련 지침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통일교육에서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역량 설정이 부재하는 실정이다. 최근 상당수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핵심역량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실제 통일교육지침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선행연구 가운데 통일 관련 역량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단위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고, 문헌을 기반으로 한 탐색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특정 역량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수준이었기에 역량 탐색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 통일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와 사회 교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통일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역량을 고려해 델파이 조사의 기초적 틀을 작성하는 것이며, 1차 델파이 조사 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1-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 역량을

취합하는 것이다. 1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개방형·비구조화 설문 형태를 띠며,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델파이 결과 선정된 역량 중 중복을 제거 및 통합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폐쇄형으로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 나온 항목들의 타당도(CVR), 신뢰도(Cronbach α) 등을 고려해 기준값을 충족하는 역량만을 가지고 3차 델파이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역량을 도출해냈다. 최종 선정된 역량은 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통일 편익 이해 역량이다. 한편 개별 역량 항목을 요인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여 4개의 상위 역량군을 구성하였다. 역량의 핵심 내용을 부각할 수 있도록 두문자를 따서 4C를 구성하였는데 각각은 갈등해소 역량군(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 역량군(Civil competency), 문화 역량군(Culture competency), 자기화 역량군(self-Conceptualization)이다.

마지막 단계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별 역량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혹은 가중치를 설정하여 역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최종 역량 중 평균 점수에 있어 동점인 간문화와 다문화 역량($m=4.38$) 그리고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역량($m=4.19$)에 대해 AHP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문화가 간문화에 비해 그리고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침의 주안점과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핵심역량 간의 상관관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의지 확립은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과 관계가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시민참여 역량, 민주시민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과 관계가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은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역량과 연결되어 남한 내의 갈등해소를 통해 북한과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선결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평화문화 역량과 통일문화감수성 역량으로 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하여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된 주안점 외에도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 역량과 간문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일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족 통합적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통일 편익 이해 역량을 통해 실제 국익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델파이조사와 그 우선순위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단위학교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통일교육지침서와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탐색된 핵심역량에 기반 한 관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케 하였다. 이는 우선 역량과 교과와의 연계를 보다 눈에 띄게 만들어 주었고 또한 교육의 목표와 성취 간의 괴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울러 우선순위로 제시한 역량은 교과를 다룰 때 중점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길러줄 것인지에 대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사고의 배양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실제 통일교육이 역량 함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에 추후 역량 활용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통일교육, 핵심역량, 델파이, AHP, 단위학교, 활용가능성

I. 서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비중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평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을 받음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 54.2%가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을 한 것을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영향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6).

아울러 최근(2017. 9. 9 기준)의 국제적 상황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과 6차 핵실험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은 주변국들의 외교적 대응은 우리 사회에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청소년기의 통일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하여 통일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양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져왔다(황인표, 2006; 조정아 외, 2014). 가령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분단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고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와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다문화 시대와 같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보다 높은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조정아 외, 2014; 박성춘, 이슬기, 2017). 따라서 차기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13). 따라서 차기 개정안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개념이 가질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개정 교육과정은 그 구성의 중점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

춘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에 두고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역량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6).

핵심역량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개념으로서 OECD, UNESCO를 비롯해 선진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진미석, 2016). 아울러 21세기 사회의 삶 속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무엇'에 대한 답으로 역량은 자주 회자되어 왔으며 이번 차기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최근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바이다(소경희, 2007).

아울러 박성춘·이슬기(2017)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통일 한국을 살아가는데 있어 역량의 함양은 통일 이전, 통일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상상해보았을 때 일관성 있게 개인의 삶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은 반공-안보-민족적 성격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다문화 시대에 사회 통합적 성격의 통일교육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교과들은 해당 영역의 역량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가령, 김지숙(2017)은 실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의 성격과 핵심역량을 분석하였고, 박재진 외(2014)는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자의 핵심역량 모델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홍원(2013)은 핵심역량 관점에 기반하여 국어교육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오지향 외(2013)는 음악교과의 핵심역량 수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별 교과별로 역량 관점에 기반을 두거나 혹은 해당 교과의 역량 탐색을 위한 시도를 한 선행 연구가 있다.

현재 통일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지침서에 드러난 통일교육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통일부, 2016). 여기서 말하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는 길러

져야 할 무엇이다. 즉 인식과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6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역량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있다. 통일 준비 역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량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앞서 목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길러져야 할 무엇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은 토의, 생활 관련 소재를 활용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현안 쟁점과 사례를 통한 접근법 등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듯 실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방법 지침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정작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역량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통일교육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창식·황연경(2016)의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유은정(2016)은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평화문화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창식·황연경의 연구는 개별 영역에 대한 통일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한 데 의의가 있으나 이는 단위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고 문헌을 기반으로 한 탐색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유은정의 연구는 개별 역량 하나에 대한 연구에 그쳤기에 역량 탐색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통일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합의된 역량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설정한 핵심역량은 통일교육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단위 학교 시행까지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역량 탐색을 위한 기초조사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역량의 우선순위분석을 위해 AHP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셋째, 핵심역량을 차기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에서 활용가능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의 이해

1) 학교통일교육의 변천

통일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추세 그리고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황인표, 2016). 지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통일교육을 바라본다면 현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그것이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은 주로 정권의 교체가 진행되면서 바뀌어왔다. 전후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당시의 주된 목표는 반공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는 반공교육의 기초를 길러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이는 제2공화국으로 이어졌으며, 정부 수립기를 포함한 혼란스러운 과도기 통일교육의 주요 쟁점은 반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박찬석, 2002).

한편 군부 통치기에 들어서면서 제3-5공화국을 거치며 통일교육은 여전히 반공주의를 계승하며 승공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제6공화국으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의 태동을 보였다. 1987년 5차 교육과정은 통합중심교육을 표방했으며 당시 과외금지조치가 해제되며 군부 시절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통일교육 또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는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다르게 현재의 의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통일교육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시기를 통일안보교육의 시기 혹은 안보교육의 시기라고 말한다(박찬석, 2002 ; 황인표, 2006; 박성춘·이슬기, 2017).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며 제6공화국을 지나 문민정부시기 이래로 통일교육의 모습은 민족 통합적 통일교육을 지

향하게 된다. 이는 6차, 7차에서부터 2007, 2009, 2015개정교육과정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박성준, 이슬기, 2017).

한편 안승대(2014)는 위 시기의 구분과 비슷하게 광복이후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를 반공교육 시기로 분류하고 1988년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를 통일안보교육시기로 보고 있으나, 1993년 이후를 통일교육기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며 그 구분점을 2008년으로 잡고 있다. 이는 민주화시기 이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북한 정책에의 차별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령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통일에 앞세웠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안보중심 기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동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현행 학교통일교육은 현재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이 하나의 목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정부의 영향력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이다(황인표, 2016). 아울러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에 따른 통일에 대한 관점이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이 미래지향적이라거나 장기적이지 못하다(박찬석, 2017). 이는 앞서 기술한 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통일교육 양상과 그 이전의 차이에서 드러나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의 경우 정부 위주로 진행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통일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조휘제, 2011).

물론 통일교육에 내재한 근본적 한계를 타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맥락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으며(조정아, 2007),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서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와 괴리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 효용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

다. 특히 통일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도 갈등을 겪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의 남남갈등을 비롯해 대북 정책에 대해 갈리는 의견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통일교육 자체에 내재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통합이며 아울러 사회적 통합이 뒷받침되어야 통일교육을 비롯한 통일프로세스의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이슈가 있다. 황인표(2011)는 통일교육의 현상 유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기능주의적 접근이 전제된 발전적 통합론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박성춘·이슬기(2017)는 지난 통일교육이 반공, 안보, 민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교육을 이끌어 왔으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문화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모색과 나아갈 방향의 제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재정립에 윤활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9개정교육과정에 이어 통일교육이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 속해 있다(교육부, 2016). 또한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핵심역량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의 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도록 하는 핵심역량을 여섯 가지를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개념의 등장과 맞물려,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가졌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비록 통일교육이 정치적 맥락 속에 좌우된다고 하나 오히려 정치적 맥락을 스스로 간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통일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기능

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핵심역량의 이해

위와 연장된 논의의 선상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이를 다시 2015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역량(competency)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자주 회자되는 말로서 그 등장배경은 학교교육에서의 본질적으로 던지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은 학교교육의 전형이었던 자유교육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것이 21세기에든 유효한 것인지 판단을 맡기게 되었다(소경희, 2007). 인문적 성격의 지식과 대비되는 실천적 지식이나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빛을 보게 되면서 숙달하려고 하는 업무나 직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계가 깊은 용어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역량’ 개념이다. 그리고 ‘핵심역량’이라 함은 역량 중에서도 특히 핵심(key)이 되는 것을 지칭한다.

역량은 본래 직업사회에서 등장한 용어이지만 OEC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논의가 대중적인 삶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1997년부터 시행된 DeSeCo(Desig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프로젝트로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광범위한 역량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소경희, 2007). 특히 핵심이 되는 역량이라 함은 개인이 맞닥뜨리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유능하게 수행하거나 효과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규정되게 되는데, 이는 지식, 인지, 실천적 기술을 넘어서서 태도나 가치, 감정, 동기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그 토대를 구축한다. 또한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령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이라 함은 통일교육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특정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핵심역량은 교육에 대해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증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의 교육의 모습이 배우는 것과 행하

는 것, 즉 앎과 행의 괴리가 컸다고 볼 때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방대한 지식의 소유보다는 지식의 활용과 총체적인 능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돌이켜보면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미석, 2016).

3.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1950년대에 국방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0여년 뒤 1960년대에 이 방법이 공개되고 연구방법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다. 델파이 기법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 사람의 의견보다 두 사람의 의견이 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에 다수의 판단이 소수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집단적 합의에 필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며 주로 미래 혹은 변화예측, 목적과 목표 연구, 종합적 계획의 수립, 문제확인 및 해결책 탐색, 효과성 및 준거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이종성, 2001).

델파이 기법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전문가 집단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의 선택은 대표성과 적절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자 절차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델파이 기법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1차에서부터 순차적인 설문을 시작한다. 이 때 순차적인 설문을 라운드(Round)라고 하며, 전문가들을 패널(Panel)이라고 지칭한다(안진성, 2011). 1차 설문에서는 개방형의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산하게 하며, 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됨을 목적으로 한다(이종성, 2001).

위에 언급하였듯이 1차 설문에서는 비 구조화된 양식의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다. 다음으로 2차 설문은 완료된 1차 조

사를 기반으로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폐쇄형 설문을 실시한다. 이 때 척도는 주로 리커트 척도(5점 혹은 7점)가 사용되며 이들의 답변에 대해 통계적 처리를 하고 평균, 중위수, 사분위수 등을 구해 다음 3차 설문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3차 설문에서는 주로 전문가 집단의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하며 이때는 2차 설문의 통계적 처리로 나온 결과를 제시하는데 가령 전문가 1인이 택한 답과 다른 전문가들이 택한 답의 사분위수, 중앙값 등을 제시하여 이를 비교하게 하고 답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3차에 걸친 라운드가 진행되고 나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족스럽게 수렴되지 않을 경우 재차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진성, 2011).

한편 델파이 기법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제시로 이를 보완하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주로 일반화 가능성도 계수로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을 사용하며 타당도의 경우 내용타당도비율인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을 산출하여 아래 연결과의 기술통계에 함께 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의 산정 방법은 아래 연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1971년 T. L. Saaty에 의해 제창된 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의 한 방법이며, 불확실한 상황 혹은 다양한 평가기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이다(키노시타 에이조 외, 2012).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간단히 말해, 평가기준 혹은 요소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상대적인 중요도 혹은 가중치를 부여해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결정의 계층을 구조화하고,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고 중요도를 설정한 후에 우선도를 계산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단계인 의사결정 계층의 구조화는 문제를 계층구조로 분해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계층 최상층에 최종목표를 두고 중간층에 평가 기준을 둔다. 마지막 최하위층에는 대체안을 두어 전체 계층구조를 완성 시킨다.

다음으로 요소간의 쌍대비교와 중요도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쌍대비교란 한 계층에 있는 요소 간에 짝을 이루어 상위 계층에 있는 관계 요소를 평가기준 삼아 1:1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가령 통일의 핵심역량 중 다문화 역량과 간문화 역량이 있다면, 상위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좌측의 다문화 역량 방향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 혹은 우측의 간문화 역량 방향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쌍대비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쌍대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각 계층의 요소 별 중요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모든 결과는 행렬로 표현되며 따라서 행렬 간 계산을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매기게 되고 최종적인 우선도를 구하게 되며 이와 같이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순서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도출함을 1차 목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각 역량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복합 가중치 설정을 통해 최종 역량 및 역량군을 선정을 목적으로 도출된 핵심역량 중 동점 평균에 대해서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인 AHP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연구모형의 단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표 1> 연구모형의 주요내용

구분	단계적 연구모형의 주요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델파이 조사의 기초적인 틀을 작성하여 조사방법론의 틀을 정립한다. · 델파이 기법 활용 이전 전문가 집단 선정을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추천받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를 실행하여 1-3차에 걸친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개별 항목의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하여 부합하는 역량과 부합하지 않는 역량을 구분하고 전문가 집단의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탐색한다. · 1-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를 추출하여 개별 역량 항목 및 역량군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조사로 도출된 개별 역량을 나열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가중치를 설정해 역량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AHP방법을 활용한다. · 도출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역량을 역량군으로 묶어 거시적인 틀에서도 역량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개정교육과정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2. 연구 대상 및 절차

1) 연구 대상

델파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대상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델파이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기에 생기는 자료타당도 문제이다. 이는 델파이 방법의 목적이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를 통해 예측함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이종성, 1984; 2001). 따라서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인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검색된 국내 통일교육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선정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차 집단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문가의 추천으로 연구대상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을 구성되면 1차에서부터 순차적인 설문을 시작한다. 1차 설문에서는 개방형의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산하게 하며, 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됨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종성, 2001).

전문가 예비 선정 과정은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8월 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에 참석하여 사전미팅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에 추천과 소개를 통해 전문가집단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미팅 후에 전문가 집단 목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선정된 전문가 집단에게는 e-mail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한편, 2차 조사(20명)와 3차 조사(20명)는 1차 조사를 토대로 나온 후보 역량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이며 학력은 석사학위 이상부터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1차와 2차는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3차에서는 교수집단이 71.4%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연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며 준수한 회수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선정 시 교수나 연구원 외에 교사를 고려한 이유는 현장의 단위학교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강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 <표 2>은 1~3차 연구대상의 배경 특성을 나타낸다.

<표 2> 연구 대상 배경 특성 및 참여비율

분류	연령		학력		참여비율					
					1차		2차		3차	
					인원	회수율	인원	회수율	인원	회수율
교수	60대	1	박사	14	14	100%	14	100%	10	71.4%
	50대	10								
	40대	3								
교사	50대	1	박사	2	4	100%	3	100%	3	100%
	40대	3	석사	2						
강사	40대	2	박사	1	2	100%	2	100%	2	100%
			석사	1						
연구원	50대	1	박사	2	2	100%	2	100%	1	100%
	30대	1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위 <표 1>을 토대로 진행되며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단계이며, 2단계는 이를 토대로 1차에서 3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3단계는 이를 토대로 통계분석 및 AHP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문항을 우선순위대로 배열하고자 한다. 개별 단계는 하나의 연구과제로 상정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설문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22명으로부터 결과를 받았다. 2차 조사는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대상 20명을 상대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되, 2차 조사 결과와 함께 타 전문가의 응답 사분위점, 전체 값의 중앙치 그리고 본인의 이전 응답을 함께 제시하였고 이전에 실시한 응답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지 형식과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델파이 방법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계층 분석적 의사 결정 방법(AHP)을 사용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설문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통일교육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는 기술통계 결과 제시를 위한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값으로는 통계 구한 결과 값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수(Q1, Q3)을 제시하였고 이에 더해 델파이 조사 결과 값에는 추가로 신뢰도지표로 Cronbach's α 값을 그리고 타당도지표로는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 비율)을 분석하였다. Lawshe(1975)에 따르면 CVR값, 즉 내용타당도 비율이 일정 값을 넘어야 해당 문항의 타당도가 보장된다. CVR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_e : 부합하다(essential)에 응답한 패널의 수

N : 전체 패널의 수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를 통해 탐색된 역량은 총 15개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3차 델파이 조사의 토대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했기에 CVR 값은 .42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2차 설문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통합하여 수정하거나 제거하였다(Lawche, 1975).

특히 2차 조사 결과 CVR 기준 값(0.42)을 충족하지 국제 이해역량, 인간 안보 역량, 상황 판단역량, 통일한국 상상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은 제거 및 통합하였다. 역량의 통합 및 제거는 통일교육 전문가와 서면 및 대면 상의 하에 진행하였다.

<표 3> 2차 델파이 역량 탐색 결과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20	4.30	0.657	0.8	0.841
평화문화	20	4.70	0.470	1	0.858
다문화	20	4.45	0.759	0.7	0.849
시민참여	20	4.15	0.813	0.5	0.838
통일문화감수성	20	4.50	0.688	0.8	0.841
소통	20	4.15	0.988	0.5	0.821
국제 이해	20	3.50	0.889	0.1	0.827
인간 안보	20	3.70	0.733	0.3	0.852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20	4.05	0.759	0.5	0.849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20	4.05	0.605	0.7	0.847
상황 판단	20	3.40	0.821	0	0.828
통일한국 상상	20	3.75	0.851	0.2	0.840
심미적 감성	20	3.20	0.894	-0.4	0.840
통일문제 자기화	20	3.95	0.826	0.5	0.843
통일편의 이해	20	3.70	0.733	0.5	0.832

2차 델파이 이후 역량의 통합 및 제거 3차 델파이를 실행했다. 아래 <표 4>는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최종 역량 10개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표 4> 3차 델파이 역량 탐색 결과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16	4.38	0.619	0.875	0.719
평화문화	16	4.63	0.500	1	0.753
다문화	16	4.38	0.806	0.625	0.725
시민참여	16	4.25	0.775	0.625	0.751
통일문화감수성	16	4.44	0.727	0.75	0.704
소통	16	4.19	0.981	0.5	0.677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16	4.13	0.806	0.5	0.766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16	4.19	0.544	0.875	0.781
통일문제 자기화	16	4.19	0.655	0.75	0.736
통일편의 이해	16	3.94	0.443	0.75	0.741

3차 조사 결과 간문화 역량에서부터 통일편의이해 역량까지 10개의 역량은 모두 CVR 기준 최소 값(n=15일 때 .49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설문 결과와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모여 의견 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뢰도 또한 대부분이 0.7이상으로 유의하게 나와 분석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 역량 및 역량군(4C competency group)

위 <표 4>에서 도출된 10개의 역량은 15명 CVR 기준 값인 .49 이상 이므로 총 응답자 16명일 때 소통과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역량 수 치에 해당하는 최소값 0.5가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10가지 역량 모두를 최종 역량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역량군을 설정하여 비슷한 요인의 역량을 묶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 역량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통일편의이해, 남남갈등해소의식과 실천이 하나의 요인 1로, 민주시민공동체의식, 시민참여가 요인 2로,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 역량이 요인 3으로,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자기화가 요인 4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된 역량을 개별 역량군으로 종합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4개 역량군을 각각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첫째로 통일편의이해와 남남갈등 해소의식과 실천역량의 경우 북한에 대비한 우리나라 안의 사정을 주로 논하는 것이다. 통일로 인해 가져올 편익에 대한 인식은 국익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역량이며 편익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남남갈등 해소의식과 실천역량은 남한 내부에서 정치적 의미의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각각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보다 중요한 사회 통합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통해 통일을 바라보는 건전한 정치적 역량 배양과 통합을 시사한다. 이러한 두 역량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역량군은 갈등해소 역량군(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으로 명명하였다.

둘째로 민주시민공동체의식과 시민참여 역량의 경우 시민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시민공동체의식 역량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된 지금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가질 수 있는 모순을 지양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북한도 미래에 같이 살아야 할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기 위한 역량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참여 역량은 통일 문제에 관한 시민적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통일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SNS 등을 활용하여 소통의 장을 형성하기도 하며 청원을 통해 의견의 규합과 수렴 그리고 개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규합은 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은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휩쓸리지 않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두 역량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역량군은 시민 역량군(Civil competency)으로 명명하였다.

셋째로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의 역량 다섯 가지는 문화와 관계, 소통이라는 공통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모두 문화의 다양성, 차이의 인정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간문화 역량은 언어적·문화적으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이다(추병완, 2014).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다문화 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문화 역량은 인류애에 기반 한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질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평화적인 역량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Bjerstedt, 2003). 또한 통일문화감수성 역량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하나의 동포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을 자각하고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연민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역량은 '타자성'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자아 중심적 독백을 벗어나 서로 다른 둘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규칙을 만들어감으로써 서로에게 인간다움이 더욱 충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 한 새로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는 소통을 지향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위 다섯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역량군은 문화 역량군(Culture competency)으로 명명하였다.

넷째로 단일 역량군의 단일 역량에 해당하는 통일문제자기화 역량은 통일교육의 대상 학습자가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통일문제를 자기문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주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상위 역량군은 자기화 역량군(self-Conceptualization)으로 명명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를 고려할 때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위 역량의 실행 여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역량 자체의 배양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보다 적실성 있게 꾸려져야 할 것이다. 아래 <표 5>는 개별 요인으로 분류된 역량군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역량군 4개는 각각 갈등해소 역량군(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 역량군(Civil competency), 문화 역량군(Culture competency), 자기화 역량군(self-Conceptualization)으로 분류되어 개별 핵심어의 두문자를 따서 '4C'로 그룹 지을 수 있다.

<표 5> 역량군 요인

요인	역량	역량군
1	통일편의 이해, 남남갈등 해소의식과 실천역량	Conflict resolution
2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시민참여 역량	Civil
3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 역량	Culture
4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	self - Conceptualization

3. AHP 우선순위 분석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모형 단계에 해당하는 본 연구 단계에서는 AHP방법을 통해 개별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AHP방법은 델파이 기법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가령 평가지표의 개발연구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안진성, 2011). 이 연구는 그 특성상 델파이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며 역량의 탐색은 곧 평가지표의 탐색과 그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통일교육이 시행되는 초, 중, 고등학교는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반복적으로 혹은 하나의 역량의 하위 영역에 대해 위계적으로 통일역량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에 따른 역량의 구분은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 학생의 역량에 따른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10개의 역량을 평균 순위로 묶고 이 중 동점 평균에 대해 쌍대비교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점 평균으로는 간문화 역량과 다문화 역량이 평균 4.38로 같았고 소통

역량과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그리고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이 4.19점으로 같았으며 아래 <표 6>에 같게 색칠된 5개를 대상으로 하여 쌍대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중요도 요인 우선순위 분석 대상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16	4.38	0.619	0.875	0.719
평화문화	16	4.63	0.500	1	0.753
다문화	16	4.38	0.806	0.625	0.725
시민참여	16	4.25	0.775	0.625	0.751
통일문화감수성	16	4.44	0.727	0.75	0.704
소통	16	4.19	0.981	0.5	0.677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16	4.13	0.806	0.5	0.766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16	4.19	0.544	0.875	0.781
통일문제 자기화	16	4.19	0.655	0.75	0.736
통일편의 이해	16	3.94	0.443	0.75	0.741

중요도 분석결과 간문화 역량과 다문화 역량 사이의 비교 결과 다문화 역량의 가중치가 0.5298로 간문화 역량의 0.4701에 근소하게 앞섰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역량이 간문화 역량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소통과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그리고 통일문제 자기화의 비교 결과에서는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소통은 0.567의 가중치를, 민주시민 공동체의식은 0.229의 가중치를, 통일문제 자기화는 0.203의 가중치를 가져 우선순위는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의 순으로 매겨졌다. 이를 해석하면 다문화 역량이 간문화 역량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기에 간문화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가중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한편 소통 역량이 민주시민공동체의식과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

으며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과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 간에는 가중치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모든 역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열하면 그 순서는 아래 <표 7>¹⁾과 같다.

<표 7> 동점 평균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 따른 배열 최종순위

역량	가중치	우선순위
다문화	0.530	1
간문화	0.470	2
소통	0.567	1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0.229	2
통일문제 자기화	0.203	3
최종 순위별 역량		우선순위
평화문화		1
통일문화감수성		2
다문화		3
간문화		4
시민참여		5
소통		6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7
통일문제 자기화		8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9
통일편의이해		10

1) 한편 응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관성 지수(CR, Consistency Ration)를 평가하여 그 값이 0.2 이상은 제외하였다.

4. 통일교육역량의 활용

1) 핵심역량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이 절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4개의 역량군(4C Competency: Conflict resolution, Civil, Culture, self-Conceptualization) 하의 10개의 개별 역량을 차기 개정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가운데 통일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과와 사회과의 총론을 살펴봄으로써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2016 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 통일교육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다. 각각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올바른 통일의식의 확립,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판단 능력 배양,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통일부, 2016). 구체적으로 목표를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통일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역량 탐색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민족 통합적 패러다임과 분단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면, 핵심역량의 배양을 통해 현재 통일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가통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 물론 이 견해가 민족 통합의 패러다임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침서의 내용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말하는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하는 것,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 이는 통일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성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역량이라 함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 중에서 특히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일준비의 역량이라 함은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우리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10가지 역량을 도출했다. 이는 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통일편의이해이다.

선정된 역량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통일교육지침서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하기에 단위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통일교육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현실적합성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오기성, 2012).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의지 확립은 통일문제자기화 역량과 관계가 깊다.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의 노력 중 하나로 남한 내의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다문화 역량과 간문화 역량을 요할 것이며 또한 시민참여 역량과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역량 그리고 소통 역량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함양과 더불어 평화문화 역량과 통일문화감수성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관념을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역량 중에는 기존의 통일교육지침서에서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역량이 있는데, 이는 통일편의이해 역량이다. 통일교육의 민족 통합적 성격만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미경, 2006).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을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주안점을 두는 내용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아래 <표 8>은 통일교육지침의 주안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에 핵심역량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8> 통일교육지침의 주안점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

구분	핵심역량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지를 확립	통일문제자기화 역량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시민참여 역량 민주시민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
민족공동체를 형성 노력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역량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평화문화 역량 통일문화감수성 역량
다문화 시대의 도래	다문화 역량 간문화 역량
젊은 세대 관심 제고	통일편의이해 역량

2) 핵심역량에 기반 한 교과 목표-성취기준 일치

앞서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요 목표와 주요 내용을 도출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도덕과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과의 경우 초등학교 급에서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다루고 있다. 이는 3-4학년 군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화되어 통일의지와 애국심 고취를 교육 목적으로 한다. 5-6학년 군에서도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라는 주제로 통일의지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 도덕과에서는 역시 같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인간존중,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 윤리,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 북한 이해와 통일윤리의식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균형 있는 북한관과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주된 교육 기능으로 보고 있다.

도덕과의 초·중학교 급에서 다루지는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민족 통합적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안점과 연계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고차원

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급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도덕과의 특성상 통일편의이해에 관한 내용을 주된 학습요소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일문제자기화 역량과 평화문화 역량 등을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사회과를 살펴보면 정치, 지리, 역사 등의 교과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도덕과와 비슷한 주요 쟁점을 다루되 개별 교과에 맞는 이슈들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가령, 지리 교과의 경우 북한의 자연·인문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교류개방지역과 남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성취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는 통일 문제 자기화와 통일편의이해 역량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통일교육 지침서와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습요소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 성취기준에 누락된 기능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역량을 활용한다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제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얼마나 잘 교육하고 있는지와 같은 실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선순위로 제시한 역량은 교과를 다룰 때 중점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길러줄 것인지에 대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사고의 배양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실제 통일교육이 역량 함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통일교육에서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비롯해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별 교과 총론을 분석하였다. 개별 단위학교는 위 지침서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지침의 성격은 교육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다. 지침서에 드러난 통일교육의 목표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통일부, 2016).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는 길러져야 할 ‘무엇’이라고 볼 때,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역량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6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 준비 역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역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앞서 목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길러져야 할 ‘무엇’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역량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이 연구에는 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통일교육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창식·황연경(2016)의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와 유은정(2016)의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평화문화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가 있다. 비록 이창식·황연경(2016)의 연구가 개별 영역에 대한 통일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한 데 의의가 있으나 이는 단위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다. 또한 문헌을 기반으로 한 탐색에 그쳤으며 이미 설정된 통일교육의 지침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었기에 이 연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아울러 유은정(2016)의 연구

는 개별 역량 하나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에 핵심역량 탐색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했으며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AHP분석을 사용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1차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다양한 역량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폐쇄형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의 역량이 선정되었으나 내용타당도계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역량을 제외하고 3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0개의 역량이 결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역량으로는 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통일편의이해 역량이 있다.

한편 선정된 10개의 통계처리 결과 역량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상위 역량군으로 묶어 쉽게 역량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역량군은 전문가와의 상의 후에 각각 갈등해소 역량군 (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 역량군(Civil competency), 문화 역량군(Culture competency), 자기화역량군(self-Conceptualization)으로 분류하였고 개별 핵심어의 두문자를 따서 '4C'로 그룹 지었다.

아울러 선정된 10개의 역량에 대해 평균 점수에 있어 동점인 간문화와 다문화 역량($m=4.38$) 그리고 소통,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통일문제 자기화 역량($m=4.19$)에 대해 AHP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우선순위는 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남남갈등 해소의식 및 실천, 통일편의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단위학교 통일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개정교육과정의 도덕과와 사회과 교과의 통일 관련 영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출된 역량의 대부분이 목표와 내용에 녹아 있었으나 성취기준과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동시에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보다 탄탄히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을 통해 핵심역량의 활용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첫째로는 핵심역량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핵심역량에 기반 한 교과 목표-성취기준 일치에 있어 합의된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불일치하는 교육과정 및 실제에 대해 수정하며 적실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추후에 도출된 역량을 보다 잘 기르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도 있는데 지면의 한계 상 이곳에서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통일교육지침이 각 교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반영 정도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출된 역량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세종: 교육부.
- 김지숙(201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 성격과 핵심역량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30(1), 1-18.
- 박성춘·이슬기(2017).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 박재진·윤지현·강성주(2014). 역량 중심의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자의 핵심역량 모델 개발 및 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4(4), 509-541.
- 박찬석(2002). 학교통일교육의 변천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139-159.
- 박찬석(2017). 2016년 이후의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54, 265-28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경희(2013). 총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교육연구와 실천**, 79, 87-100.
- 오기성(2012).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문화연구**, 24(1), 187-220.
- 오지향·정진원·정은경(2013). 음악교과에서의 핵심역량 수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209-229.
- 유은정(2016).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평화문화역량 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한국보훈논총**, 15(4), 39-65.
- 이미경(2006). 평화통일담론의 정립과 활성화 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15, 91-123.
- 이종성(1984). Delphi 예측방법의 Bayesian 접근. **연세교육과학**, 25, 9-19.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창식·황연경(2016).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과검증. **통일문제연구**, 28(2), 31-60.
- 안승대(2014).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57, 135-152.
- 안진성(2011).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조정아(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285-306.
- 조정아·박영자·남신동·이현정·전영선·김선혜·김윤영(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박영자·남신동·이현정·전영선·김선혜·김윤영(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서울: 통일연구원.
- 조휘제(201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인.
- 진미석(2016). 핵심역량은 교육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핵심역량교육연구**, 1(1), 1-24.
- 추병완(2014).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개발. **윤리교육연구**, 33, 353-373.
- 최홍원(2013). 핵심역량의 관점에 기반한 국어교육의 재구조화 연구. **새국어교육**, 97, 171-207.
-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 권재현 역.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서울: 도서출판 청람.
- 통일부(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6). **2016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통일부.
- 홍선주·김경임(2017).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커피 로스터리 운영 중요 요인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학회**, 20(1), 215-233.
- 황인표(2006). **도덕교육과 통일교육: 북한이해의 교과 교육 관점의 통일교육**. 서울: 울력.

- 황인표(2011).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일고. *윤리연구*, 83, 221-262.
- 황인표(2016). 학교통일교육에서의 통일교육 쟁점들.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편),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639-658). 인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Bjerstedt, A.(2003). "*Developing Preparedness of Peace: Objectives, Methods,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in Peace-Related Education.*"Peace Education Reports. Lund Univ. (Sweden). Malmö School of Education. ED38640.
- C. H. Lawche(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입 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평석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c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김연진·진호성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대상판결
- III.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
- IV. 구체적 쟁점별 대상판결의 태도 검토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평석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c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이 글은 2012년에 선고된 2012도635 판결과 2012도7455 판결을 비
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속에서 법
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일반론적으로 접근
하여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규범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률이 기
능적으로 양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문리해석,
수범자인 국민의 법인식과 이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취지로부터 판단컨대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일반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남북교류
협력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론에 진입하여 우선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제3
조의 ‘목적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되 법문
자체가 비교적 추상적이기에 수범자나 법해석자의 입장에서 다소의 혼란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지 않을 사안
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적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등이 제시된다.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을 채택한 사실은 납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안
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 경우 필요최소한 이상의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이 상당한 형사특별법의 특성상 엄격한 제한해석과 치밀한 논증이 필요
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하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2도635 판결에서는 특히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의 가벌성이 문제
되었는데, 의례적인 묵념 수준에 그친 참배가 과연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
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의문이지만,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미
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

당한 결론이다. 2012도7455 판결에서는 특히 방문증명서 발급 후 방북 중의 회합행위의 가별성이 문제되었는데, 이 행위 또한 명백하게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성숙 발전한 한국 시민사회에 비추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에 대한 순차적이고 정확한 인과관계의 검토가 필요했으나 이를 충실한 검토 없이 넘어간 대법원의 판시는 다수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I. 서론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에 있어 80년대 후반까지는 국가보안법만이 적용되었으나,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며 남북한의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¹⁾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이 법 자체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국가보안법의 개별 조문에 의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등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조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재정적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근거법인 남북협력기금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서 타 법과의 관계, 제26조에서 타 법률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리적 해석만으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 특

1) 1988.7.7.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화해와 협력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히 지난 10여 년간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으나,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언제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이른바 ‘위장신분 개성관광 사건’, 이하 대상판결1)과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이른바 ‘방북승인 후 회합 사건’, 이하 대상판결2)의 기초사실 및 재판경과, 그리고 판결요지를 각각 정리하고(아래 II.), 각 판결이 공통적으로 세부쟁점으로 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 및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판단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아래 III.),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각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가벌성을 논한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아래 IV.).

II. 대상판결

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대상판결1)

가. 기초사실 및 재판경과³⁾

2008년 11월 말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의 여파로 북한의 이른바 12.1조치가 이루어져 개성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조경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2) 이인영 의원실,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법제 검토」, 평화정책세미나, 2017.,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8.,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등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27. 선고, 2009고단2130, 2009고단3183(병합), 2010고단1021(병합), 2010고단1497(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참고

① 피고인은 개성공단 입주 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북한 방문승인 신청을 할 경우 간편하게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경기도 모 시의회 의원, 교수 등을 포함한 59명의 개성시 관광 희망자들의 직업을 ‘개성공업지구 내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통일부로부터 방북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 방북을 주선한 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부분 생략,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다.

② 피고인은 통일부가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호에서 컴퓨터를 반출승인대상품목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0.경 방북자들을 이끌고 개성시내 방문을 하던 중 개성시내 소재 봉동관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북한 측 관계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노트북 1대를 건네준 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주선으로 방북한 이들에게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곳에서 만난 북한 측 관계자들의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라는 구령에 맞추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동조’한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방북자들의 직업을 개성공단 입주 회사의 직원으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방북승인을 받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인 노트북 1대를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24회에 걸쳐 59명의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이자 공산주의체제 선전의 상징물인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거나 참배하도록 주선하는 행위가 곧 북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공감의 표

시로 인식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위상화 및 체제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판단 하에 유죄를 인정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2008년 경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2008년과 2009년 초 각 김정일의 66번째, 67번째 생일을 맞아 북한 참사관의 지시를 받아 김정일의 건강을 기원하는 문구가 기재된 페넌트를 주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개성시 관광을 원하는 59명에 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낸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

는 것을 말하고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의 전원합의체 법리⁵⁾를 적시한 후, 이 사건 방북자들 대부분 피고인이 개성시 관광에 앞서 “김일성 동상 참배는 의례적인 것이니 해도 되지만, 종교적 이유 등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참배 요구나 권유를 받은 사실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참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북한 측 관계자들의 구령에 따라 수초간 의례적인 수준에서 묵념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나 방북자들이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참배행위를 주선하거나 참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상판결2)

본 판결에서는 형사증거법 관련 쟁점도 다수 존재하나,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내용만 다루도록 한다. 또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받지 않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은 채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것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부분은 제외하였다.

가. 기초사실 및 재판경과⁶⁾

피고인 1은 2005년 2월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범민련’) 남측본부의 공동의장으로, 피고인 2는 2003년 2월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자다. 범민련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이들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속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⁷⁾,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0.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에 6차례에 걸쳐 통일부장관에게 방북신청서나 북한주민 접촉 승인서를 제출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수리 불허를 피하기 위해 소속관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아닌 ‘통일연대’로 기재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이에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금지’, ‘국가 법질서 준수’,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북한방문증명서, 북한주민접촉승인서 등을 발급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범민련 북측본부 직원들과 금강산, 북경, 심양, 평양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참고

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졌는데, 각 회합 시 마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이나 북한주민접촉 승인 또는 신고 수리 등을 받아 각종 결의대회나 기자회견,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해왔다. 피고인들은 각 회합 당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이나 북한주민접촉 승인 또는 신고 수리 조건을 위반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 등과 회합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 방향,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관하여 지령을 수수한 점,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 등과 회합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 방향,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관하여 지령을 수수해 왔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으로 기소되었다.

② 피고인 2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소속임을 은닉하고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하달 받고 범민련 활동을 협의할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장관에게 허위 약속서를 제출한 후 북한방문증명서를 발부받아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회합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북측본부 조직원 등과 회합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 방향,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관하여 지령을 수수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회합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잠입·탈출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회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북한 방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방북행위에 대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통일연대 관련자인 것처럼 관계 당국을 기망하여 방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고,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 등과 회합하여 지령을 수수한 후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북 조건 내지 북한주민 접촉 조건을 위반하여 북측 인사와 회합한 것은 사실이나,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방문이나 접촉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이상 그 방문이나 접촉행위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회합죄 부분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증명서나 북한주민접촉 승인이 있더라도 북한 방문 또는 북한 주민 접촉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를 기화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각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회합·통신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 항소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잠입·탈출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한 후, 피고인들이 비록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이나 북한주민접촉 승인 또는 사전신고 수리 조건을 위반하여 북측 인사들과 회합하기는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북한 방문이나 북한주민접촉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도 실제로 하였고 내세운 북한 방문 등의 목적이 단지 북한방문증명서 등을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방문이나 접촉행위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항소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Ⅲ.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

1.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양립가능성

가. 문제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외견상 규율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한편 규율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배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설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및 남북관계 변화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양립가능성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긍정설은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능동적 법률로서 북한을 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법률로서 북한을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법적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은 상호 규율목적과 규율원리가 다르며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북한이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법률은 상호모순·배치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정설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제평화주의,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배경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거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여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입장 등이 있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헌법재판소⁸⁾와 대법원⁹⁾은 모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양립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전제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체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양립가능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①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조문 일부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②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¹⁰⁾, 국가보안법 또한 충분히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입법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③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과연 국가보안법을 배제할 의사였는지 또한 의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냉전의 해체와 함께 남북 정부간, 비정부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이 된 것이나, 그 와중에 북한의 안보위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양자의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성문법인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잃을 정도로 남북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간의 경색이 심화된 이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8)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 631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10)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⑤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년 2차 국민 통일여론조사¹¹⁾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반국가단체로 활동함과 동시에 동반자로서 협력이 가능한 한편,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남북교류협력법은 제4조에서 직접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조문의 규범조화적 해석 및 남북관계의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모두를 보면 충분히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전부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제기하거나 나머지 부분의 적용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을 엄격히 하는 식의 해석론을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가. 문제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양립가능하다면 실제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크게 양 법률이 별개의 구성요건을 규율한다고 보는 이른바 '구별론'과 '일반법-특별법 관계론'이 대립한다.

나. 학설과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을 그 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보는 구별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수의견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¹²⁾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년 2차 국민 통일여론조사, 2017.

대법원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규범력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¹³⁾, 남북교류협력법을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양 법률을 일반법-특별법 관계로 보되 국가보안법이 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이 일반법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¹⁴⁾ 그 근거로 2005년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를 개정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을 “이 법의 목적범위 안에서”로 바꾼 점을 든다. 또한 양 법률의 체계적이고 규범조화적 해석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검토

우선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구별론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해보면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양 법률이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도 특별히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양 법률을 단지 서로 다른 규범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계도 없는 체계로 해석한다면 대체 어느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어느 경우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해지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은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족쇄가 채워질 우려가 있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양 법률의 해석, 적용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양 법률을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

12)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1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14)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69면

아야 한다는 반론¹⁵⁾이 매우 타당하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입법취지 및 입법체계는 상이하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북한과 연관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율대상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을 일반법이라고 보는 견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하는 일반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특별법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보다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② 입법자의 의사 또한 특별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일반법으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동 법률이 북한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협력의 동반자로서 전환된 시기가 아닌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여전한 시점에 특별히 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의 동 법률 개정은 그 규율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다.¹⁷⁾

③ 수범자인 국민이 남북교류협력법을 특별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국가보안법 일반법설의 무엇보다도 강력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남한의 주민의 북한 방문에 있어서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방문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6조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의 지역에 대한 잠입을 처벌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북한 지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고 예외적으로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25전쟁 이후 북한 방문을 비롯한 국가보안

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298면.

16)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69면.

17) 2005년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 시,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 받아온 제3조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을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으로 수정하였다(제17대 국회 회의록, 제253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 규율 사항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이 명백한 금지규범이지, 본래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국가보안법이 일부 사항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범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이 해방 직후 처럼 자유롭게 민간 차원으로 교류하던 와중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그 교류의 내용 중 일부가 형사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거나,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일반법-특별법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남북한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해석론은 평화통일 달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법부로서는 이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합하거나,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더 진일보한 것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일반법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이라고 하여 곧바로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의 판단기준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락을 바꾸어 재차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만 어떠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 밖일 경우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겠다.

3.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의 해석론

가. 문제점

외견상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보이는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로 포섭함에 있어, 예컨대 ‘위장신분 개성관광 사건’에서 발생한 위장신분 방북승인, 미승인 노트북 반출, 김일성 동상 참배 등 남북교

류협력법상의 ‘목적 범위’ 내 인지 불분명한 방북 과정에서의 행위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나. 관례의 태도 (대상판결2)

방북증명서를 가지고 방북하는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일부장관의 방문증명서 발급은 북한 방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일 뿐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위장신분 방북승인과 미승인 노트북 반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였고, 방북 중에 이루어진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행위별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개별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동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해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¹⁸⁾

다. 검토

통일부장관의 방문증명서 발급이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진 모든 개별적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원칙적으로 타

1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방문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적,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 안의 것인지를 검토하고 만약 ‘목적 범위’ 밖의 행위일 경우에 비로소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함이 보다 엄밀한 논증이 될 것이다. 요컨대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일반법의 지위는 인정하나 ‘목적 범위’ 밖의 행위가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적성’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여부는 ‘이적성’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양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가 대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목적 범위’를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영역이 대단히 축소되어 그 입법취지를 몰각할 수 있고, 특히 형사처벌이 될 만한 ‘이적성’이 있는지 애매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과연 정당한 ‘목적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난해하다. 국회는 2005년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정당한 범위의 남북교류협력행위”를 “이 법률의 목적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언해석만으로는 그 적용범위가 투명하지 않다. 향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가보안법을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으로 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의 해석이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견 법논리상 타당한 면이 있으나 아직 이와 같은 해석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4.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판단기준

가. 문제점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비로소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있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 것 이외에는 ‘이적성’ 그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대법원은 ‘이적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조금씩 태도의 변화를 보여왔는데,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그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데 사용된 전례가 있고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판단기준의 설정은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기존 판례의 태도¹⁹⁾

초기에 대법원은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의 반대의견은 이러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 기준을 제시했다. 그 이후에 ‘이적성’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 및 유추해석,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이적단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19) 조국,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52 제3호, 2011, 63-84면을 요약함.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 여부로 이적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89헌가113 한정합헌결정에서 제시된 기준과 유사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여부 판단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과 달리 해악의 실질성을 따져 이적성을 판단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이적단체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준은 그 표현과 위협의 발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한다.²⁰⁾ 대상판결² 또한 기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앞의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활동한 조직 다수를 이적단체로 보았다. 이에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규약·강령·조직과 임원구성·내부결의·대외활동으로 추단되는 단체의 집단의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추단되는 단체의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으로 그 단체가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자유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 한하여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은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을 통해 다시 주장되었다.

20)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96면

다. 검토

‘이적성’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안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은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현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현행 헌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였다. 반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특히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이는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차별성과도 관계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법리적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현행 형법 제91조는 이미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여러 행위와 중첩되며, 단지 국가보안법은 현행 형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는 ‘폭행, 협박 등의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체에의 구성과 가입’을 특히 처벌하려는 것이다.²¹⁾ 이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채택한다면 위험성이 현존하지 않아 사실상 폭동이나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독자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폭동이나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이적행위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기준은 다소 유동적이라 어떠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동일할 지라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2017년 현재의 남북관계라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21) 신동운,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하여」, 토론회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2004, 39-40면

이미 대한민국을 위시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이 공산권을 압도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경제적 수준과 생활환경의 격차는 감히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제도권 내에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사상·이념에 대한 포용력이 증가하면서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은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기도 어려운 상태에 사실상 근접한 것이다.

다만 판례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에서 나아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기준을 형식적으로 병행하여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²²⁾ 여러 소수의견이 굳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 외견상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안보형사범으로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특수성 특히 그 적용에 있어서의 형사처벌 남용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 국가보안법 규정은 비교적 행위정형으로부터 벗어나 넓은 범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도입 취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우리 사회의 수용력이 어느 정도 튼실하게 갖춰진 점 및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교류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굳이 판례의 판단기준을 바꾸지 않더라도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요청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판례의 변화에서 언급된 판례뿐만 아니라 대상판결들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지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의 제시와 같은 포괄적인 새로운 기준의 제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의 기준에 어찌하여 포섭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에 의한 상세한 법적 논증이라 할 수 있다.

22) 조국,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52 제3호, 2011, 63~87면

IV. 구체적 쟁점별 대상판결의 태도 검토

1. 대상판결1의 쟁점 검토

가. 위장신분 방북 알선 행위의 가벌성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조경업체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간편하게 북한 방문승인 신청이 가능함을 기회로 개성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란에 조경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얻어내었다.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은 분명하고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등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판결1의 판단은 어렵지 않게 수긍이 된다.

나.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의 가벌성

대상판결1은 피고인이 김일성 동상 앞에서 구령에 맞추어 참배하도록 주선하고 피고인도 참배한 사실을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외견상 피고인의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가 동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정당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논증이 될 것이다.

피고인은 김정일의 생일축하 페넌트를 준비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또한 24회에 걸쳐 59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라는 구령에 맞추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본인 스스로 참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인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남한과 북한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목적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의 행위에 그 ‘목적 범위’에 비추어 다소 정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된 목적은 북한 인사와 친분을 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 보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권을 약속받을 정도로 이르자 북한 측 관계자 및 북한 정부와의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 뿐이다. 이는 방북자 대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참배는 의례적인 것이니 해도 되고 종교적 이유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거나, 실제로 참배가 이루어졌어도 그 수준이 의례적인 묵념에 그쳤다는 증언으로 뒷받침된다. 비록 북한이 반국가단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 정부와의 교류 시 다소 의례적인 미사 문구를 사용하거나 일부 관례를 따르는 것과 비견될만하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사안은 언제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긍정할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자체가 명문으로 비교적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정당한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에 비추어 그 가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¹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

결²³⁾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판단하였다. 사안의 경우는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폐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옳은 것이다.

2. 대상판결2의 쟁점 검토

가. 방문증명서 발급 후 방북 중 회합죄

대상판결2의 다수의견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는 남북교류협력의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회합 당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이나 북한주민접촉 승인 또는 신고 수리 조건을 위반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조직원 등과 회합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 방향,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관하여 지령을 수수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회합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정당한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그와 같은 순차적 논리전개를 거친 대상판결2의 태도는 합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다소 부실하지 않나 싶다. 2003도758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은 “정부측은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간부라는 사정을 몰랐다가, 이 사건 범민련 모임 회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피고인을 비롯한 범민련 인사들에

2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게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이는 북한 방문대표단의 북한 방문중에 피고인을 비롯한 범민련 인사들이 이 사건과 같은 모임을 가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질서가 위협 당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며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와 이를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사안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 북한 방문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북한 방문 불허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통일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방북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설사 회합행위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일정한 정도까지의 회합행위는 정당한 ‘목적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 아님을 감안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판단하는 대법원은 앞의 사정까지 참조하여 회합행위가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방북승인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방북 중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시의 결론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1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그 논거 제시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선 피고인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문증명서 발급 조건을 위배한 사실이 반드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 위반의 근거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굳이 “명백 현존위험” 기준이 아닌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대상판결2의 판시는 판결문의 독자가 납득할 만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반자유민주적, 반자본주의적 주장과 북한 정부와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을 그 가별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반드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으로 이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회합에서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았을지라도 이를 북한의 의견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점도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적인 재판관을 가정한다면 피고인들의 행위의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사법판단이 필요했다. (1) 피고인들이 완전히 북한 정부의 지배, 통제 하에 있으며 정부기관 파괴와 같은 위험성이 확실한 지령을 받은 게 아닌 이상, (2)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3) 이에 따른 정치, 사회활동으로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고, (4) 형사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했음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과정 없이 논리를 비약하여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합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수준을 지나치게 저평가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학계에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 또한 기준 자체가 결함되었다기보다는 대법원이 엄밀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기준을 다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방문승인을 받은 방북 이후 탈출죄

대상판결²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하였다. 설령 북한 방문자가 그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방문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방문목적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만 의견상의 방문목적이 오로지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²의 판단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

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국가보안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시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북한을 방문한 이상 이는 국가보안법이 정한 탈출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방문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다소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견해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절차를 적법적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는 다시 일반법인 국가보안법으로 돌아가서 그 처벌 여부를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만약 엄밀하게 보아 해당 규정에 포섭될 수 없다면 이는 입법의 흠결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설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을 속였을지라도 애당초 탈출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가 그 숨은 목적에 따라 탈출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숨겨진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를 축소해석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V. 결론

이 글은 주로 2012년에 선고된 2012도635 판결과 2012도7455 판결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속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규범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률이 기능적으로 양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문리 해석, 수범자인 국민의 법인식과 이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취지로부터 판단 건대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일반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남북 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론에 진입하여 우선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되 법문 자체가 비교적 추상적이기에 수범자나 법해석자의 입장에서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지 않을 사안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적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등이 제시된다.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 기준을 채택한 사실은 납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안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 경우 필요최소한 이상의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상당한 형사특별법의 특성상 엄격한 제한해석과 치밀한 논증이 필요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하는 점은 문제이다.

2012도635 판결에서는 특히 김일성 동상 참배 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되었는데, 의례적인 묵념 수준에 그친 참배가 과연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의문이며, 다만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었다. 2012도7455 판결에서는 특히 방문증명서 발급 후 방북 중의 회합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되었는데, 이 행위 또한 명백하게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목적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성숙 발전한 한국 시민사회에 비추어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에 대한 순차적이고 정확한 인과관계의 검토가 필요했으나 이를 두리몽실하게 넘어간 대법원의 판시는 다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법의 실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그 어떠한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위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판단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안보와 기본권의 비교형량의 필요한 사안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더욱 그 판단에 엄밀한 논증과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다룬 두 개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는 그와 같은 치밀함이 결여되어 과연 모든 수범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판시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언처럼 만약 사법부가 국가안보를 다루면서 특히 형사처벌의 가부를 다룬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과 그 이유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 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입법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일부 위헌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개선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 신동운,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하여」, 토론회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2004.,
- 이인영 의원실,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법제 검토」, 평화정책세미나, 2017.,
-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8.,
-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조국,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52 제3호, 2011.,
-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통일부, 2009.

입 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 소규모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생활에너지 협력과
풍력 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외교학 전공 김대연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기존 에너지 협력의 사례 분석 및 사업 방향 도출
- III. 소규모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생활에너지 협력
- IV. 풍력 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 소규모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생활에너지 협력과 풍력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

현대 사회에서의 에너지는 인간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에너지의 확보와 지속적 수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빈곤’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바, 당해 문제는 식량난, 기반시설 구축 부진 및 산업 발전의 저해로 이어지는 빈곤 재생산의 악순환이 된다. 이에 본고는 북한 지역 에너지난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기존 협력 사례를 분석하면, 양자적 협력 사례인 개성공단 전력송전, 다자적 협력 사례인 KEDO 사업 모두 국가 주도형, 외부 지원형 사업으로, 국제정세와 대북관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①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방식의 사업, ②안보적 민감성이 적고 북한 상황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 ③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전수 방식의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태양열 프로젝트’는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해 일상생활의 불편 내지 생존에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 태양열 발전 원리’를 그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당해 사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 자강도 중강군을 선정했고, 겹겹구조의 가옥 형태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와 태양열 전지등을 사업 아이টে으로 채택하였다.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주체별과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국가 주도 에너지협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KOICA, UNDP, 북한

열공학연구소, 그리고 국내기업이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PPP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기간별로는 ‘정착기-성숙기-확산기’의 구분을 통해 각 시기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풍력 프로젝트’는 공장가동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산업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통한 산업에너지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과거 외국 기관의 풍력발전기 건설이 이루어진 바 있는 평안남도 온천군을 선정하였으며, 북한과 사업 시행 NGO의 실정에 맞추어 50kW급 소규모 풍력발전기(E-3120)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프로젝트는 주체의 측면에서 노틸러스 연구소, KOICA, UNDP, 북한 PIINTEC가 협력하는 PPP 방식을 채택해 독자적 다자 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했으며, 사업 기간을 세분화하여 시기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는 북한 주민 생활 개선과 대남 인식 개선, 북한 지역 재건, 그리고 남북한 에너지 체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는 낙후된 북한의 생활·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1차적 목표 달성하는 한편, 사업 확산을 통해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의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는 갖는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에 불과한 한국과,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주제어: 남북한 에너지협력, 재생에너지, 생활에너지, 산업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열에너지, Public-Private Partnership, 에너지 빈곤, 북한 주민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주제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인간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의 부족은 인간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상태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에너지 빈곤’현상이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①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지원 감소, ②홍수, 가뭄 등 거듭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의 한계 ③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폐쇄적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④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원 수입 불가 등이 원인이 되어 ‘에너지난’을 겪기 시작하였다.¹⁾ 이로 인해 현재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표 1>이 보여주듯 남한의 1/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의 에너지 공급이 산업용, 공공용 등에 85% 이상 편중되어 있고 가정용은 1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²⁾,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절기가 길고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북한은 난방연료 부족이 심각하며, 일부 주민들이 불법갱도에서 난방을 위한 석탄을 캐다 굴에 파묻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³⁾

1) 이유진,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 2007, p.93.

2) 홍성국, “최근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 과제”, 북한경제(2007년 가을호), p.65.

3) 이유진, 전계서, p.33.

〈표 1〉 남북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추이 비교⁴⁾ (단위: TOE)

구 분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남한	0.61	1.15	1.38	2.17	3.34	4.10	4.75
북한	1.21	1.19	1.31	1.19	0.80	0.71	0.75

만약 이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빈곤이 지속된다면, 통일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북한에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식량난’, ‘인프라 구축의 부진’ 및 ‘산업 발전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빈곤 재생산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북한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해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북한 에너지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①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북한 주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와, ② 풍력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로 나누어진다. 생활에너지와 산업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①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②통일 이후 국토개발 선순환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협력으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이라는 추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남북한 에너지협력 사업 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對북한 에너지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해 사업 구상의 타산지석으로

4) 홍성국, 전계서, p.66.

삼는다. 이는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 방식과 사업의 주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주체별·기간별로 나누어 사업 내용을 수립한다. 이때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협력기업 선정, 사업비용 추산 등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남북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에너지협력 사례와 그 함의 분석

1. 기존 에너지 협력 사례

1) 양자적 협력: 개성공단 송전

기존의 對북한 에너지협력 중 양자적 방식의 협력 사례로는 한국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이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을 송출한 바 있다. 한국전력은 2004년 12월 북한과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05년 3월부터 전력공급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일반적 송전방식이 아니라 문산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였으나, 2007년부터 개성공단 내에 평화변전소를 준공하고 송전방식으로 북측에 전력을 공급했다. 이후 한전은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평소 10분의 1 수준인 3천 kW 안팎의 전력만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송전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인 2016년 2월, 한국 정부가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11년 만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송전 중단 직전 해인 2015년 한전은 연간 총 1억9천100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공급했다. 이 중 산업용이 9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용(4.3%), 가로등(0.2%), 주택용(0.1%) 등으로도 사

용되었다.⁵⁾

2) 다자적 협력: KEDO 사업

對북한 다자적 에너지협력의 사례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이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KEDO 사업 시작되었으나, 이 사업은 북한이 핵 재개발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되었고 2006년 KEDO는 공식 해체되었다. 신포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 달러이며, 중단 당시 사업 공정률은 34.5%이었다. 이 사업은 10여 년 동안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에는 단 1w의 전력도 지원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경수로 건설 및 시설관리 비용으로 약 11억370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⁶⁾

2. 기존 사례의 실패 원인 분석

1) 국가주도형 지원

기존의 양자 협력인 개성공단 전력송전과 다자적 협력인 KEDO 사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이들 모두 국가주도형 지원으로, 국제정세와 국가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 및 광명성호 발사 사건(2016.2.7) 이후 중단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력송출 또한 중단되었다. KEDO 사업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 중단되었다. 이는 국가주도 사업의 경우 관련 국가들의 대북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속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5) 김영현, “〈개성공단 중단〉 완전 단전은 전력공급 이후 11년 만에 처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02800003.HTML>>, 검색일: 2017.10.5.

6) 이명건, “北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한국 1조3600억원 고스란히 날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Economy/more9/3/all/20060602/8313714/1>>, 검색일: 2017.10.5.

2) 원자력 에너지 지원

KEDO 사업의 경우, 원자력에너지는 핵무기 개발에의 악용 가능성, 안정성과 방사성폐기물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북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점을 상기할 때, 원자력에너지 협력은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따른다. 이는 2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자 KEDO 사업이 폐기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원자로 2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보낼 수 있는 송배전선망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송배전망시설은 심각한 노후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와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송배전망 또한 건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결론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은 북한의 전력시스템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 미고려

과거 대북 에너지협력은 주로 외부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정책 협조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대북송전과 같이 외부적 공급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체제보장 차원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0만kW 대북직접송전 계획의 경우, 이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남한의 송전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3. 사업의 기본 방향

7) 이유진, 전계서, p.35

1) 비국가행위자 중심의 민간-공공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앞선 기존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국가주도형 사업들이 국제정세와 대북관계에 좌우되었던 바, 사업의 일관적 추진을 위해 정치적 민감성이 적은 비국가행위자(NGO·국제기구 등) 주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대북지원 규모를 지원 주체별로 분류한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듯, 정부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2008)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급감했으나,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민간 직접 지원은 이러한 정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업구상에 있어서도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구·NGO 등 비국가행위자가 주도하는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⁸⁾ (단위: 억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정부 차원	당국 차원	1,221	2,000	1,432	-	-	183	-	-	-	-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20	133	216	241	77	21	-	-	-	-	23	1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19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117	1
	계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민간 차원		780	709	909	726	377	201	131	118	51	54	114	28

이러한 사업 방식은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번역하면 민간-공공 파트너십으로 명명할 수 있다. PPP방식은 지속성, 효율성과 측면에서 정부 독자 사업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자금력의 측면에서 민간 독자 사업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 먼저 지속성의 측면에서, 정부 사업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나, 민간 주도 사업은 그러한

8) “대북 인도지원 현황”,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7.10.5.

영향이 적으며 경쟁이나 투명성 등의 요소가 제고되어 부패의 소지가 감소한다. 또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민간 기업·NGO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가 PPP 과정에서 수혜국 인력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한편 자금력의 측면에서, 민간 독자 사업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도달이 어렵고 높은 이자율이라는 기회비용이 있다. 그러나 정부 협력 사업은 공공 자금 투입으로 자본 도달이 용이하고, 정부 보증을 통한 낮은 이자율로 재정적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2) 재생에너지 협력

남북한 향후 에너지협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①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없으며 ②북한의 에너지 체제에 적합하고 ③신속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④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⑤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적은 ‘평화적 에너지’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의 주원료인 석유·석탄은 전쟁물자로 활용 가능해 안보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로 안보적 갈등이 소지가 더욱 높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햇볕,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한 것으로 원료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으며, 소규모로 전력을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력의 군사시설로의 반출 가능성 또한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안보적 마찰이 없는 평화의 에너지로, 군사적 갈등가능성이 상존하는 남북 간 에너지 협력에 적절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 북한의 에너지 체제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은 현재 기존 전력시설(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의 노후화 및 송배전망의 전반적인 붕괴로 인해 중앙집중식의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방안이 적합하며, 실현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는 소도시 혹은 작은 마을 단위로 독립적인 공급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규

모 송전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송배전망 복구라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현장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서론에서 밝혔듯 북한에서 에너지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이며, 긴급한 지원의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 에너지협력은 당장 북한에 인도적인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므로, 이는 시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열은 하루, 풍력발전은 6개월 이내에 건설할 수 있으므로, 보다 즉각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

넷째, 이는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남한의 에너지체제 전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문제점은 국내 시장 발달이 미숙하다는 것인데, 남북 에너지협력을 재생에너지로 추진하면 시장 형성과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산업 발달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어 한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연료원별 발전 비중은 화석연료가 약 65%, 원자력이 약 3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경성에너지 체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남한의 에너지 체제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개선하는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고용과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체제에도 부합한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구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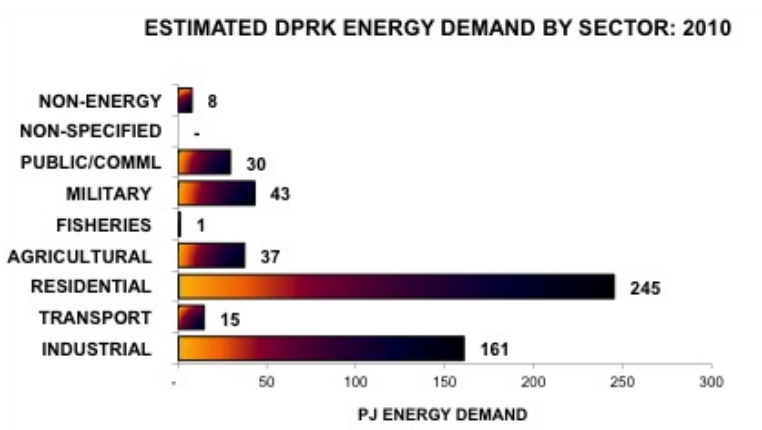
9) 이유진, 전계서, p.46

료 이후 성립된 파리협정(2015)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Intende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컨센서스를 도출해냈다.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력발전의 1/2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에너지이다.

3) 중장기적 기술전수 추구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은 외부의 일시적, 한시적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북한에 자립적 기술력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①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동력을 가지고 지속되게 하며, ②북한의 자력갱생 에너지 정책과 부합해 북한 정부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에너지협력은 단기적으로 외부 지원에 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기술 전수를 통한 사업의 정착과 확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북한 에너지 문제는 곧 남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며, 북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4) 협력 분야 선정: 생활에너지, 산업에너지



<그림 1> 2010년 북한의 분야별 에너지 수요 추정치¹⁰⁾

10) David F. von Hippel and Peter Hayes, “An Updated Summary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autilus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중점분야로는 생활에너지와 산업에너지로 설정하였다. 상기 <그림 1>이 보여주듯 북한은 특히 생활에너지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수요가 높으며, 이 분야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생활에너지의 경우 생존과 에너지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에너지의 경우 고용 증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 분야로 생활에너지와 산업에너지 분야를 선정해 일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업 확산으로 통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Ⅲ. 소규모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생활에너지 협력

1. 태양열 프로젝트의 개요

‘태양열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와 기간 및 주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3> 태양열 프로젝트의 요약

	내 용	
사업 목표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난방 및 온수 지원과 심야전등 사용 지원	
사업 기간	5년 (정착가능성숙기확산기로 구분하되, 지속가능 사업으로 전환 노력)	
사업 주체	Constructor	국내기업 (자립태양열)
	Co-Worker	북한 내 기관 (북한과학원 산하 열공학 연구소)
	Coordinator	국제기구 (UNDP)
	Sponsor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태양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에너지 빈곤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Institute,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an-updated-summary-of-energy-supply-and-demand-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 검색일: 2017.10.6.

는 통일 이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목표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난방 및 온수의 지원과 심야전기(전등)의 사용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당해 사업의 예상 소요 기간은 약 5년으로, 이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착기-성숙기-확산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적합한 정책과 기술적 협력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태양열 프로젝트는 기존의 에너지 력 사례가 실패했던 원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공공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 주체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급주체로서 국내기업(자립태양열), 공동사업자로서 북한 내 기관, 조정자 및 협력자로서의 국제기구(UNDP) 및 후원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개별 주체가 지닌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데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예견되는 주체 간 갈등 양상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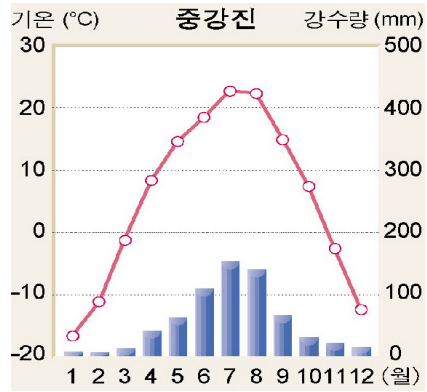
2. 구체적 사업 내용

1) 대상 지역 선정

태양열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내지는 생존에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고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선정할 후, 그 지역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점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프로젝트 대상 지역으로 ‘자강도 중강군’을 선정하였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현지답사를 통한 주거실태 파악, 가구수 조사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헌 자료를 지역 선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림 2>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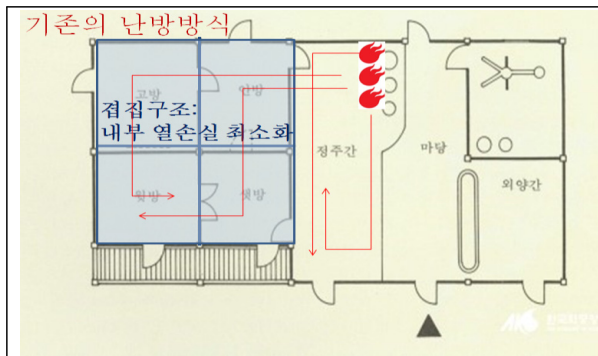


<그림 3> 중강군의 평균기온

북한의 자강도 중강군은 <그림 2>와 같이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그림 3>이 보여주듯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해 한반도에서의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론에서 서술했듯 난방연료 부족은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며, 당해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 내지 생명에의 위협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그것보다 클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열 프로젝트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강도 중강군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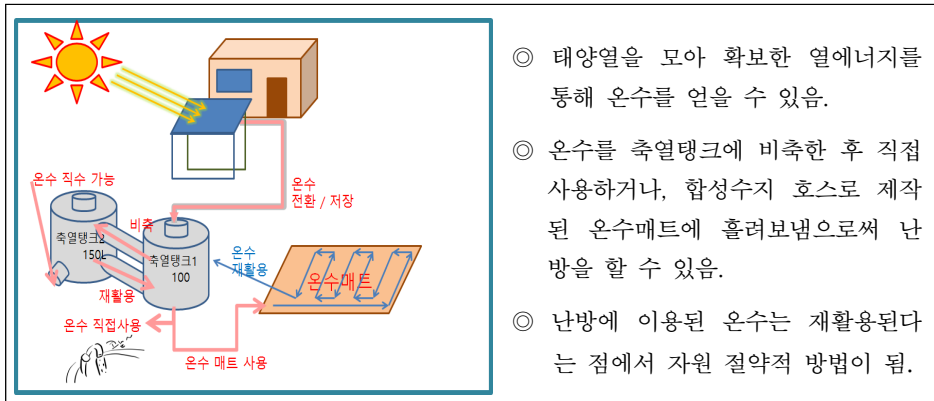
2) 사업 아이템의 선정

아래의 <그림 4>는 북한 자강도 중강군에 소재한 가옥의 대표적인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겹집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4>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대표적 가옥 구조

이와 같은 겹집구조는 열 손실률이 낮다는 점에서 단열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전달의 비효율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공기의 열전도율이 낮다는 특징에 기인한 이중창 구조처럼,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집 내부로 쉽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에 용이한 주택 구조가 중강군의 대표적 가옥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도를 활용하는 기존의 난방 방식 하에서는 불을 때는 주방으로부터 방 안까지의 열에너지 전달 효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가옥 구조를 고려할 때, 설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선 및 배관설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유지·보수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은 열전달 효율이 낮은 겹집구조의 가옥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는 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①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②가옥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태양열 온수기’와 ‘태양열 전지등’을 태양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사업 항목(item)으로 선정했으며, 그 작동원리는 아래의 <그림 5>에 설명된 바와 같다.



<그림 5> 태양열 온수기의 작동 원리

특히 태양열 온수기는 ①DIY 제품으로서 그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용이하며, ②고장 시 각 수관(pipe)만의 교체로 보수가 쉽고, ③태양광 발전기가 200만 원을 넘는 고가인 데에 비하여 약 50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 되며, ④광전지와 같은 고차원의 기술을 요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⑤구리와 스테인리스 스틸 등과 같이 향후 북한 지역에

서도 개발이 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⑥국내에서도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 기술력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는 “태양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탁월한 아이টে므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 주체별 사업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강군에 태양열 온수기 및 전지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KOICA, UNDP, 북한의 열공학연구소, 그리고 국내기업의 다각적인 협조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주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기관인 KOICA의 경우, 크게 재정 및 행정의 측면의 지원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 KOICA를 재정 지원을 담당 기구로 제시한 이유는 본 사업이 수익성 사업이 아닌 ODA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큰 틀에서 본 사업은 개발도생국의 지역 개발 사업이고, KOICA는 국내 정부 유관기관 중 이와 같은 국제적 원조/개발의 경험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들로 현재 한국의 OD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에서 재정적 지원을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 기관인 만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일부·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협조 확보, 북한 지역당국과의 소통 채널 구축, 사업 전반 모니터링 등 행정적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기구(UNDP)는 국제개발협력 노하우 전수와 KOICA와 함께 북한 지역당국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2010년에서야 지정된 만큼 한국은 아직 ODA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떠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국제기구,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을 주로 맡아온 UNDP의 전반적인 지원과 자문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부 산하 기관인 KOICA는 자칫하면 대북관계와 국내 정책에 따라 관리감독 및 소통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

구의 사업 모니터링 및 북한 지역당국과의 소통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사업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원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셋째로 북한과학원 산하의 열공학연구소는 북측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기술전수와 자력 산업으로의 전환을 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열공학연구소에 해당 장비의 생산 및 유지 보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열공학연구소에서 태양열 온수기와 태양열 전지등의 생산 설비와 공급체계의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학원을 사업의 주요 주체로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사업의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미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고, 자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통일국가 수립 이후 북한의 유효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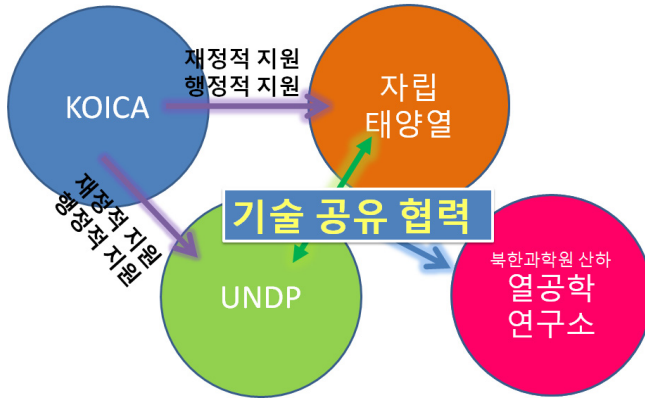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관련 제품을 실제 공급하고,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는 남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참여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기술의 환경적합성을 고려했다. 해당 항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술의 환경 적합성 판별 기준		해당 여부
1	기술 규모가 중강군에 적합한가?	
2	기술의 사용 한계조건이 중강군에 적합한가?	
3	기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4	기술 전수가 용이한가?	
5	기술 유지보수가 간단한가?	
6	상용화된 기술인가?	

<표 4> 기술의 환경 적합성 판별 기준

이 밖에도 중강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인지, 설치비용이 합리적인지,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건설한 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립태양열을 선정하였다.

상기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태양열 프로젝트의 협력 구상도

4) 기간별 사업 내용

위와 같이 각 사업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사업의 진행 단계를 정착기, 성숙기, 그리고 확산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사업 시작 시기부터 첫 번째 사업 년도(사업 시작 기준 00년~01년)까지를 정착기로 상정한다면, 정착기에는 크게 세 단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업 시작을 위한 기술 공유와 민관-수혜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 이전을 주축으로 한 남한의 민관 및 국제기구, 그리고 북한 당국 사이에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에 필요한 구리 및 스테인레스 등 원재료를 북한에서 자체 조달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만 사업 이후 북한 지역당국이 자립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혜 대상 지역에 태양열 온수기 및 전지등이 완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품이 오랜 공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범 지역인 중강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음을 고려하면 첫 번째 사업 년도 안에 보급률을 95%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 년도까지(01~02년)의 기간을 성숙기로 볼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크게 두 단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이전한 태양열 기술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보증 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중강군에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사후 관리 및 보증 지원은 ‘관리사무소 → 분소 → 마을’이라는 3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이때 상주 기술자들은 관리사무소에 거주하며 사업 기간 동안 사무소를 대리점 및 A/S 센터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상주 기술진은 북측에서 파견한 열공학 연구소 소속 인력에게 설치·수리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교육하고,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함께 다니며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난 뒤에는 중강군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소를 설치하여 현지 인력을 실무에 배치하고,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는 파견 인력은 각 분소를 수시로 순회하며 이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한다. 이렇게 분소가 자리 잡고 나면 해당 분소가 각 마을 단위로 제품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강군 주민들이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및 개별 분소 간의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이 사후 관리 및 보증 지원의 최종 단계이다. 또한 사후 관리 및 보증 이외에 성숙기에 완료되어야 할 것은 북측 지역당국 내 자력 기술로의 전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첫 사업 년도에 시작한 생산 설비 구축이 사업 2년차에는 마무리되어야 하며, 생산 설비 건설을 넘어 북한 지역 내 생산 및 수입 등 원자재 조달 경로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산 측면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사무소 자체의 인수인계를 시작해야 한다. 열공학연구소 측에 제반 사무를 인계하고, 일선 분소에서 이뤄지던 기초적 수리 업무 등을 모두 북한 기술진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 체계 전체를 북한 지역당국이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외부 기술진은 완전히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인력의 교육 및 대외 연락 등 2선으로 후퇴하고, 북한이 실무 체계를 온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차후 약 5번째 사업 년도까지의 기간(02년-05년)을 확산기로 잡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는 성숙기의 기술 이전 및 관리 체계까지 완전히 자리 잡게 하고, 본 사업이 북한 전역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추어 북한 지역당국이 현지화하고, 남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 하에 북한 지역당국이 스스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당국이 현대적 행정 체계와 행정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5) 비용 추산

위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추산해볼 수 있다.

<표 5> 태양열 프로젝트 예상 비용 구성표

항 목	비 용	총 액
태양열 온수기	587,000원*5200 가구	3,052,400,000원
온수매트용 합성수지호스	21,000원*5200 가구	109,200,000원
태양열 전지등	16,680원*4개*5200 가구	346,944,000원
전문기술자 임금	30,000,000원*10명*1년 + 30,000,000원*5명*4년	6,600,000,000원
노동자 임금	20,000,000원*20명*1년	400,000,000원
기타 사업 관리비용	10,000,000원*5년	50,000,000원
전체 합계		10,558,544,000원

태양열 온수기의 가격은 자립태양열의 20관 200L의 2017년 9월 기준 가격이며, 태양열 전지등의 제품 정식 명칭은 “태양열 충전식 LED 벽부등”으로 가구당 4개 설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산하였다. 설치 가구수는 사업정착기인 1년 차에 전문기술자 1인, 노동자 2인 1팀이 520개(작업일수 260일 * 하루 설치 2개)를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총 10팀이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상주기술자 인력의 비용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예산을 책정한다면, 이는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ODA

규모(약 2,195,994,635,000원)¹¹⁾의 약 0.005%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정부 및 국민의 재정 및 조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앞서 제시한 청사진과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강군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한반도 전체에서 1월 평균기온이 제일 낮은 중강군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온수와 난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같은 원리로 전등까지 지원할 수 있기에 중강군 주민들의 활동 반경과 시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는 기존의 전기 및 발전 시설 지원 방식이 북한 지역당국에 의해 에너지 분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에너지 사용을 자동적으로 주민 생활의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본래 목표 수혜자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중기적으로는 위 사업의 자립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면, 절약한 비용의 재투자를 통해 기타 지역에도 해당 산업을 확산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급적으로 북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이 북한 주민 전반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 자본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히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통일 후 한민족 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1) “연도별 ODA 지원 현황”,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검색일: 2017.10.6), 2017년 10월 6일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환산.

3. 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한 사업 요약

상기 내용을 KOICA가 사용하는 프로젝트 기획·모니터링·평가 모형인 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태양열 프로젝트의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명: 태양열 프로젝트				
대상 지역: 북한 자강도 중강군		사업 기간: 5년		
대상 집단: 중강군 내 낙후 주택		사업 지원규모: 73억원		
요약	객관적 검증 지표	검증 수단	중요 가정	
□ 전반적 목표 - 중강군의 난방·온수·심야전등 지원	- 북한 생활에너지 부족도 감소 - 북한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 중강군 지역 주민 후생 증가	- 북한 열공학연구소 조사통계 - UNDP 사업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 전반적인 에너지난 해결의 어려움 - 성숙기 이후 북한기술로의 전환	
□ 사업의 목적 - KOICA 후원, 국제기구 설계, 국내기업 시공, 북한기관 협력으로 태양열 온수기술 북한에 전수	- 북한 열공학연구소 연구개발 성과 - 중강군 지역 생활에너지 사용량 변화	- 북한 열공학연구소 성과 보고서 - UNDP에 의한 내부 평가	- 북한과학원 등 북한 정부기관 협조 - OVI ¹²⁾ 관찰에 필요한 정보개방	
□ 결과 1. 중강군 지역 난방·온수·전등 사용 확대 2. 중강군 지역 주민 고용 증대	- 중강군 지역 난방·온수 만족도 면접 조사 - 중강군 지역 심야시간 활동 면접 조사 - 중강군 지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서 - 평가보고서 - KOICA 사전조사 및 사업형성 보고서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북한 열공학연구소 보고서	- 의지와 능력이 있는 수원국 인력 확보 - 주민들의 적극적 의지 - 주민들의 기술 이해도	
□ 활동 1. 프로젝트 계획수립 - 기관 의견 수렴 - 사업 대상지구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사업 대상 가구 선정 - 예산 집행계획 수립 2. 시공직 설정 및 시공 - 가구당 태양열 온수기 1EA, 전지등 4EA 지원 - 시공 관리감독 - 주민들 관리 교육 3. 유지 및 관리 - 효과 측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KOICA, UNDP, 시공업체, 북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투입		- 수원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 각 항목별 정확한 예산 측정 - 참여하는 시공업체와의 높은 수준의 경험과 기술력 보유	
	항목별	기관별		
		KOICA		UNDP
	□ 사업시공: 105억 - 태양열 온수가 58.7만원 - 온수호스 2.1만원 - 태양열 전지등: 1.6만원*4 - 사업대상가구: 5200 가구 - 파견 상주기술자 임금: 3천만원 *10명*1년+3천만원*5명*4년 - 노동자임금: 2천만원*20명	- 사업 시공과 파견 상주 기술자 임금 비용:	- 기타 노동인력 공급비용, 기술전수 비용, 자력기술로의 전환 비용 부담	

IV. 풍력발전을 이용한 산업에너지 협력

1. 풍력 프로젝트의 개요

‘풍력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와 기간 및 주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7> 풍력 프로젝트의 요약

	내 용	
사업 목표	풍력 에너지 공급을 통한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 지역 산업 활성화	
사업 기간	약 3년	
사업 주체	Constructor	국제 NGO (Nautilus Institute)
	Co-Worker	북한 내 기관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PIINTEC)
	Coordinator	국제기구 (UNDP)
	Sponsor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풍력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규모 풍력발전기 건설을 통해 북한 지역에 산업에너지를 공급하여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이 당면한 산업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해 사업의 예상 소요 기간은 약 3년으로, 프로젝트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타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풍력 프로젝트 또한 정부 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PPP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풍력발전 협력 경험이 있는 국제 NGO인 노틸러스 연구소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기관인 KOICA가 후원자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국제기구인 UNDP가 협력자로서 자금 일부를 조달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며, 북한의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이 동업자로서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을 전수받는다. 본 사업의 특징은 북한과 이미 풍력발전 협력 경험이

12)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의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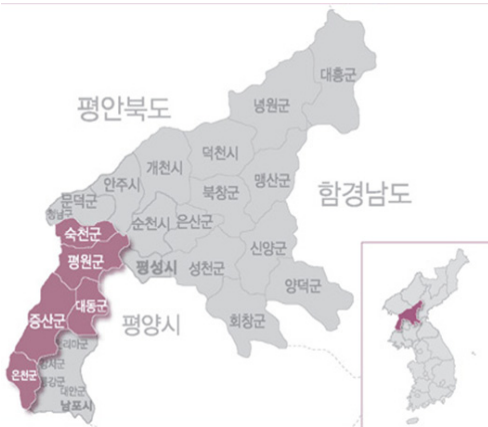
있는 노틸러스 연구소, UNDP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2. 구체적 사업 내용

1) 대상 지역 선정

풍력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①지역 환경이 풍력발전에 적합해야 하며, ②공업지구와 인접해 쉽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③기존의 시설이 있다면 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으로 평안남도 온천군을 선정했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지답사를 통한 부지 조사 등 다방면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헌 자료를 지역 선정의 근거로 삼았다.

평안남도 온천군에는 1998년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총 7기 11kW 규모의 풍력발전기 설치한 바 있으며¹³⁾, UNDP 또한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총 예산 145만 달러 규모의 소형 풍력발전기(1~5kW)를 설치한 바 있다.¹⁴⁾ 북한 자체적으로도 ‘삼산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국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¹⁵⁾ 이는 평안남도 온천군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이며, 기존의 풍력발전소들과 연계해 비용과 효율의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

<그림 7>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의 위치

13) 이유진, 전계서, p.57

14) 김진국, “UN, 북한 풍력 발전 사업 마무리 단계”, 자유아시아방송, < http://www.rfa.org/korean/in_focus/energy-10052012162320.html>, 검색일: 2017.10.6.

15) 이유진, 전계서, p.58

여준다. 또한 온천군에는 경공업 공장들이 위치해 있고 남포 공업지구와 가까운 바, 전력 생산 후 송출의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2) 사업 아이템 선정

풍력 프로젝트는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소규모 풍력발전기인 50kW급 E-3120를 사업 항목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풍력발전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①저렴한 단가 ②북한지역에의 적합성 ③북한 정책과의 합치성 때문이다. 첫째, 풍력발전은 평균 발전원가가 kW당 4.3센트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며 빠른 기술 발전으로 향후 단가 하락이 예상된다. 둘째, 북한은 풍속이 4.5 m/s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18%로¹⁶⁾,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20% 가량 의존하고 있는 수력발전은 동절기, 갈수기에 발전량이 감소하는 데 반해, 풍력은 기간별로 일정한 에너지를 산출할 수 있다. 셋째, 풍력발전은 북한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 북한은 ‘풍력 추진계획’을 3단계로 설정하고, 목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3단계(2015~2020)에 500m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 1000개소의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니, 산업화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된다.¹⁷⁾ 따라서 풍력발전을 이용한 에너지협력은 북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설치할 풍력발전기로는 50kW급 소규모 풍력발전기인 E-3120을 선정하였다. 1mW급 이상 대규모 풍력발전기는 소규모 풍력발전 위주인 북한과 사업 시행 NGO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 배제하였고, 6W~300kW급 소규모 풍력발전기 중 고효율과 적정 규모라는 측면에서 E-3120을 선정하게 되었다.

3) 주체별 사업 내용

16) 상계서, p. 57

17) 상계서, p. 59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틸러스 연구소, KOICA, UNDP, PIINTEC 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시행자인 노틸러스 연구소¹⁸⁾는 기자재 구입, 시설물 건축 등 사업을 설계·수행하며, 전문가를 파견해 북한 측에 기술을 전수한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이미 1998년 북한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KOICA는 후원자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500만 달러 규모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통일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협조를 확보하고 북한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한편 UNDP는 사업의 협력자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공고화한다. UNDP는 2012년 기준 북한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에 565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는데¹⁹⁾, KOICA와 MOU를 체결해 이 중 200만 달러를 본 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UNDP가 자체적으로 북한에서 수행한 풍력발전 사업을 토대로, 노틸러스 연구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대북관계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 차원에서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측 PIINTEC는 노동인력 공급, 북한 정부 입장 전달, 기술전수를 통한 자력 사업으로 전환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PIINTEC는 2003년에 수립된 환경, 에너지, IT 등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PIINTEC 산하 에너지 센터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평양 남부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기도 하였다.²⁰⁾ 따라서 사업과의 유관성, 전문성 측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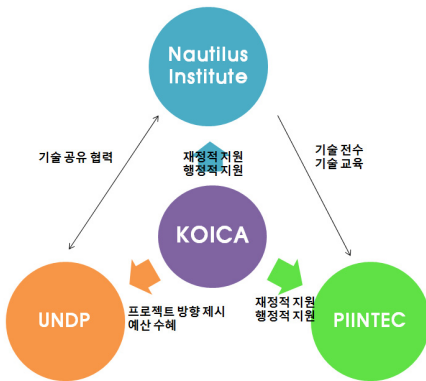
18) 미국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환경 및 안보 분야 전문 연구기관. 노틸러스 북한 풍력발전팀을 조직해 북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도 함.

19) 김진국, “UN, 북한 풍력 발전 사업 마무리 단계”,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in_focus/energy-10052012162320.html> (검색일: 2017.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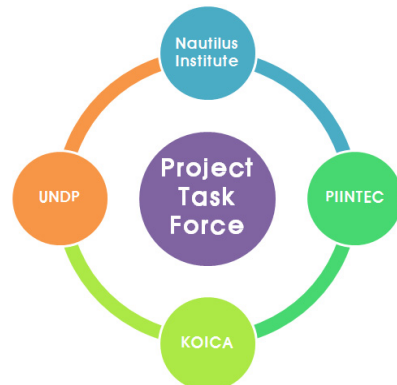
20) 김진규, “[알아봅시다] 평양국제세기술통계정보센터”,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12702011860739002>, 검색일: 2017.10.6

서 북한 측 파트너로 PIINTEC를 선정하였다. PIINTEC는 사업대상지 정비, 토지 배분 및 행정지원, 인프라 건축 인허가 조치, 현지 인력 확보 등 실제 건설에 필요한 제반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사업 정착 이후 이를 자력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자적 협력을 통해, 아래 <그림 8>과 같은 초기 KOICA 주도 사업 시행에서, 점차 <그림 9>와 같은 다자 간 협력기구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독립적 Project Task Force를 확립한다. 즉 점차 한국의 영향을 줄이고 국제적, 다자적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다. 위 기구는 북한 풍력 발전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행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설 개보수를 담당한다.



<그림 8> 풍력 프로젝트 사업 초기 협력 구상도



<그림 9> 풍력 프로젝트 성숙기 협력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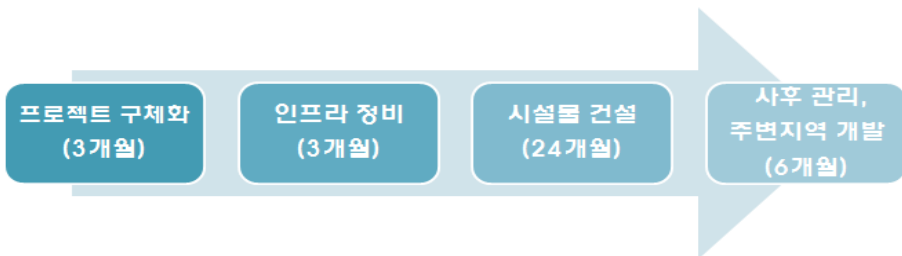
4) 기간별 사업 내용

풍력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3개월(0~3개월)은 프로젝트 구체화 단계로, 건설부지 현황을 파

약하고, 구체적 장소 설정하며, 현장사무소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노동 인력과 건설자재 조달 방안 모색하며, 북한 측과 계획을 조율한다. 이후 3개월(4~6개월)은 인프라 정비 단계로, 기자재를 운반하고, 터다지기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4개월(7~30개월)은 시설물 건설 단계로, 앞선 작업을 토대로 풍력발전기 건설한다. 마지막 6개월(31~36개월)은 사후 관리, 주변지역 개발 단계로, 풍력발전기와 공장 간 송전관을 구축하고, 기존의 송전과 개·보수해 송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건설된 풍력발전기를 통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문제발생 시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공고화한다.

이러한 사업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검증된다면,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Project Task Force는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전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과 다자 기구 주도로 사업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림 10> 풍력 프로젝트의 기간별 사업 내용

5) 비용 추산

“풍력 프로젝트”의 비용 추산은 다음과 같다.

<표 8> 풍력 프로젝트 예상 비용 구성표

항 목	비 용	총 액
풍력발전기 (E-3120)	\$ 75,000*55대	\$ 4,125,000
기타 기자재, 노동자 인건비	\$ 1,000,000	\$ 1,000,000
KOICA, NGO 전문가 파견 비용	\$ 70,000*10명*3년	\$ 2,100,000
기타 사업관리 비용	\$ 500,000	\$ 500,000
전체 합계		\$ 7,725,000

E-3120 풍력발전기 설치비용은 2017년 현재 중국기준 1kW당 1500달러로 추산되며, 북한의 기자재 활용 시 비용의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50kW 발전기 1대의 가격을 약 75,000달러로 추산하여 계산하였다. 전문가 파견 비용은 1인 연 70,000달러 기준으로 3년 간 10인 파견 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 비용은 KOICA의 전문가 등급별 내규에 따라 책정하였다.

이는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ODA 규모(19.1억 달러)²¹⁾의 약 0.004% 수준으로, 현재 정부의 ODA 예산규모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풍력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효과를 단기와 중단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 풍력 프로젝트는 온천군 지역 공장에 전력을 공급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전력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²²⁾, 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력발전을 통한 산업에너지 공급은 공장가동률 정상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온천군 지역 경제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풍력 프로젝트는 북한에 풍력발전을 확산해 에너지난을 완화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풍력발전 기술 전수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공급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 경제는 다시 풍력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70% 넘게

21) “연도별 ODA 지원 현황”,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검색일: 2017.10.6.

22) 권준범, “전력부족 北, 공장 가동률 30% 이하”,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17>>, 검색일: 2017.10.6.

석탄에 의존하는 북한의 전력 생산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친환경적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

4. 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한 사업 요약

상기 내용을 KOICA가 사용하는 프로젝트 기획·모니터링·평가 모형인 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풍력 프로젝트의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명: 풍력 프로젝트			
대상 지역: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		사업 기간: 3년	
대상 집단: 중강군 내 낙후 주택		사업 지원규모: 600만\$	
요약	객관적 검증 지표	검증 수단	중요 가정
<input type="checkbox"/> 전반적 목표 - 북한에 풍력발전기 건설로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산업에너지 문제 해결	- 북한 산업에너지 부족도 감소 - 북한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 온천군 지역 주민 소득 증대	- 북한 내부 풍력에너지팀 조사통계 - 국제 NGO 사업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 전반적인 에너지난 해결의 어려움 - 성숙기 이후 다자적인 협력으로의 전환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목적 - KOICA 주관, 국제NGO 주도로 풍력 에너지 개발협력, 북한에 기술전수	- PIINTEC 연구개발 성과변화 - 온천군 산업에너지 확보량 변화	1. PIINTEC 연구·성과보고서 2. 국제 NGO에 의한 내부적 평가	1. PIINTEC 등 북한 정부기관의 협조 2. OVI 관찰에 필요한 정보 개방
<input type="checkbox"/> 결과 - 온천군 경공업 활성화 - 지역주민 후생 증가 - 중장기적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온천군 공장가동률 변화 - 온천군 고용률 변화 - 온천군 인프라 수, 구조 변화	- 사업수행 및 진도보고서 - 평가보고서 - KOICA 사전조사 및 사업형성 보고서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PIINTEC 풍력에너지팀 보고서	- 의지와 능력이 있는 수원국 인력 확보 - 온천군 관계자들의 적극적 의자 - 인프라 구조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체계 확립
<input type="checkbox"/> 활동 1. 프로젝트 계획 수립 - 기관 의견 수렴 - 사업대상지구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사업지구 선정 - 예산 집행계획 수립 2.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한 풍력발전 단지 건설	투 입		1. 수원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2. 각 항목별 정확한 예산 측정 3. 참여 NGO의 높은 수준의 경험과 기술력 보유
	항목별	기관별	
	1. 인프라 구축: 412.5만\$ 2. 전문가 파견: 210만\$ 3. 사업관리: 50만\$ 4. 기자재 및 인건비용: 100만\$	KOICA, UNDP, Nautilus Institute - PNP의 특징: 각 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은 재정지원을 위한 sponsor로서 자금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기 50kW 11기 구축 - 국제 NGO 지원 - 시공 관리감독 3. 유지 및 관리 - 효과 측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KOICA, NGO, 국제기구 간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p>내용은 KOICA, UNDP, Nautilus Institute, PIINTEC의 다자적인 협력 하에 결정</p>	
---	--	--	--

IV. 결 론

1. 연구의 요약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인간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로, 에너지의 확보와 그 수급 상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빈곤’ 현상은 이미 만성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당해 문제가 식량난, 기반시설 구축의 부진,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지는 빈곤 재생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인 생활에너지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난 해결 방안으로,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기존 협력 사례를 분석하면, 양자적 협력 사례인 개성공단 전력송전, 다자적 협력 사례인 KEDO 사업 모두 국가 주도형, 외부 지원형 사업으로, 국제정세와 대북관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①비국가행위자 중심의 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방식의 사업, ②안보적 민감성이 적고 북한 상황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 ③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전수 방식의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태양열 프로젝트”는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 내지는 생존에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 태양열 발전 원리’를 그 수단으로 채택했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당해 사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 자강도 중강군을 선정했고, 겹집구조의 가옥 형태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와 태양열 전지등을 사업 아이টে으로 채택하였다. 본고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주체별과 기간별로 나누어 그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체별로는 국가 주도 에너지협력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KOICA, UNDP, 북한 열공학연구소, 그리고 국내기업이 협력하는 PPP방식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기간별로는 ‘정착기-성숙기-확산기’의 구분을 통해 각 시기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풍력 프로젝트”는 공장가동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산업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통한 산업에너지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과거 외국 기관의 풍력발전기 건설이 이루어진 바 있는 평안남도 온천군을 선정하였으며, 북한과 사업 시행 NGO의 실정에 맞추어 50kW급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업 아이টে으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풍력 프로젝트 또한 주체별, 기간별로 그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체별로는 노틸러스 연구소, KOICA, UNDP, 북한 PIINTEC가 협력하는 PPP방식을 채택해 독자적 다자 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했으며, 사업 기간을 세분화하여 시기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본고의 논의를 통해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 지역 재건, 북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에도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낙후되었던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초기의 농촌개발 사업에서 출발해 큰 성과를 거두며 非농촌지역으로 확산되고 의식개혁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태양열 프로젝트와 풍력 프로젝트 또한 낙후된 북한의 생활·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1차적 목표에서 출발해, 사업의 확산을 통해 북한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들의 대남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의 남북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에너지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북한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에 불과한 한국과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이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효과적 체질개선책이 될 것이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력 방안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통일에 대비한 일체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가 제시한 두 프로젝트는, 대규모 인프라 재건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는 ‘현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김상현, “북한의 에너지정책과 남북한 에너지기술협력 가능분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2006. 4), pp. 339-343.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제 1호(2010), pp. 59-90.

손기웅·강광규·김경술,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 2권 제 2호(2002), pp. 1-186.

엄철용·김호철, “원칙협상 이론을 활용한 에너지·관광 부문의 남북협력사업 평가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28권 제 4호(2015), pp. 149-176.

유상균·최주영, “민간 참여를 통한 남북 에너지협력 방안”, 국토계획 제 50권 제 1호(2015), pp. 151-163.

이유진,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2007).

임소영·허은영,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설계와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추진방안”, 신재생에너지 제 1권 제 3호(2005), pp. 24-34.

홍성국, “최근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 과제”, 북한경제(2007년 가을호), pp.61-79.

〈인터넷 자료〉

권준범, “전력부족 北, 공장 가동률 30% 이하”,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no=45117>>, 검색일: 2017.10.6.

김영현, “〈개성공단 중단〉 완전 단전은 전력공급 이후 11년 만에 처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02800003.HTML>>, 검색일: 2017.10.5.

- 김진국, “UN, 북한 풍력 발전 사업 마무리 단계”,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in_focus/energy-10052012162320.html>, 검색일:
2017.10.6.
- 김진규, “[알아봅시다] 평양국제과학기술경제정보센터”,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12702011860739002>,
검색일: 2017.10.6.
- 이명건, “北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한국 1조3600억원 고스란히 날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Economy/more9/3/all/20060602/8313714/1>>, 검색일:
2017.10.5.
- David F. von Hippel and Peter Hayes, “An Updated Summary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autilus Institute,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an-updated-summary-of-energy-supply-and-demand-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 검색일: 2017.10.6.
- “대북 인도지원 현황”,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7.10.5.
- “연도별 ODA 지원 현황”,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검색일:
2017.10.6.

입 선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

- 기업 인수합병(M&A) 후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손 정 원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설정
- III.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비교
- IV.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

- 기업 인수합병(M&A) 후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오랜 세월동안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통일 이후 서로 간의 이질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사회적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사회통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청년의 역할과 특징, 위치가 통일에 따른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연구에 활용한다. 그중 '기업 간 합병'과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토대로 조직통합과정(Post-Merger Integration: PMI)을 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사회통합에 적용하여 남북한의 청년층 연령대 설정 및 사회조직을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사회통합 전략 세울 것이다.

기업은 양자 간의 인수합병 절차에서 조직통합과정(Post-Merger Integration: PMI)을 진행한다. 우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문화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TFT와 GKT를 구성하여 문화실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줄여나간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통합에서 비롯된 실질적 통합을 이끌어낸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적인 조직체계를 운영하여 미리부터 순차적으로 변화를 진행할 것을 충고한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이 긍정적 태도로 조직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비통합적 요소들을 적응을 통해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하는 것을 '사회통합'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김

문조와 김종길은 사회통합의 영역을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두 영역이 각각 통합을 이룬 형태가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이다. 이를 조직통합과정(PMI)과 접목하여, 남북한이 서로의 핵심역량을 주고받은 상태를 사회통합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또한 범위 안에 해당한다.

이는 남북한의 각 조직별로 나누어 적용된다. 이에 남북의 사회조직의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의 청년층은 대략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다. 다만 남한의 취업난으로 인한 취업연령 상승, 북한의 취직 시 조직변경 등에 따라 취업을 한 청년은 제외한다. 이에 속하는 각 공식조직으로는 학교, 군대, 남한의 청소년 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 있다. 군대 역시 통일 이후의 변동이 크고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제외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의 평등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의 청소년 단체는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활동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반대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 사상주의에 따른 강제성을 띄지만 조직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두 단체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는 것이 사회통합의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통적 취미생활에 따른 ‘비공식조직’,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사회조직 통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통합할 조직은 공식조직으로 정한다. 체계적인 사회조직 통합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문화실사 측면에서 보면 그 목표를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남북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층은 그중에서도 학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청년층의 조직통합이라고 해서 청년층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GKT와 TFT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정책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서로 끊임없이 의사교환을 해야 한다. 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여 협동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와 군대의 체계 및 관련 내용이 규정된다. 이외의 청년층은 미리 교육받은 사람에게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의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통해, 남한은 각 지방의 대학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가치통합을 위한 문화적 통합을 진행하도록 한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자 상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매우 달라졌다. 게다가 핵 실험이나 미사일발사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 상황에 따른 적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통일도 어려울 뿐 더러 설령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갈등과 분열이 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조차도 통일 이전부터 사회통합을 진행해왔음에도 통일 이후 큰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미래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사회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사회통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통일 과정에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가의 존립 및 체제유지에 청년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남북한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권에 맞는 국민 만들기를 시도했다. 남북한은 가정, 학교, 언론 등을 통해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에 적합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사회화를 진행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회화 대상은 바로 청년들이었다. 청년기는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의 교육과 경험이 개인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남북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 만들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또한, 청년은 노동이라는 생산 활동을 시작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국민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동력원(動力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을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청년들의 특징이 남북한의 통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년은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청년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창조해내는 유행의 선도자이면서도, 때로는 불의에 맞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남한에서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중심에 바로 청년들이 있었다. 북한에서도 청년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수호대이자 당의 후비대로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정권의 유지에 청년들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청년은 매우 불안정하다. 남한은 10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할 만큼 저항과 불안정성을 이 시기의 특징으로 꼽고, 북한은 청년을 체제유지를 위한 옹위자로 생각하면서도 청년들의 열정과 불안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청년들의 열정은 통일 과정에서 상대 청년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불안과 저항은 서로에 대한 배척을 낳고 큰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통일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의 특징을 염두 하여 미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은 아랫세대와 윗세대의 중간에 위치하여 향후 사회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남북통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남북한이 1국가 1체제가 되면 통일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의 진정한 성공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분리, 차별, 불평등, 적대감 등이 증폭된다면 이는 성공적인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멘의 사례와 같이 통일 이후 사회 혼란과 폭동이 발생해 무력에 의해 재통합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나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운동 같이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따라 북한 주민도 통일 이후에 독립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세대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균형을 잡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 청년층의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청년은 국가의 존립 및 체제유지에 큰 역할을 하지만 청년들의 불안정함과 저항적 특성은 남북한 청년들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들의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일한국에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위해 청년층의 통합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청년들이 소속 및 활동하는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전략을 강구해 볼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관한 연구를 활용할 것이다. 조직통합과정(PMI)은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을 인수(acquisitions)하거나 합병(mergers)한다는 의미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식과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은 비슷한 점이 있다. 기업의 인수는 남북한 통일방식 중 ‘흡수통일’과 유사하고, 기업 간 합병은 ‘합의통일’과 유사하다. 인수합병(M&A)은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합의 여부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M&A)과 적대적 인수합병(M&A)로 나뉘는데, 여기서 우호적 M&A는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과 비슷하고 적대적 M&A는 무력 등 비 합의 상태의 흡수통일과 유사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평화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만을 남북통일의 방식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합의통일과 유사한 ‘기업 간 합병’과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과 유사한 ‘우호적 인수합병(M&A)’의 이론만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남북한 통일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무력통일, 흡수통일, 합의통일, 이 세 가지를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남북통일은 반드시 평화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과 같이 전면전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방식은 이제 남북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¹⁾ 통일은 더 이상 두 국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로, 무력 통일시 세계대전에 준하는 범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노병만,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 제검토”,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2000), 6p.

한편, 기업 인수합병(M&A)의 성패는 조직통합과정(Post-Merger Integration: PMI)에 달려있다. 인수합병(M&A) 실패의 주요요인으로 조직통합이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서 기인한다.²⁾ 그렇다보니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이를 남북한 통일과정에 접목해보려 한다. 기업 인수합병(M&A)를 남북한 통일로 가정할 때 조직통합과정(PMI)은 사회통합 과정, 기업의 여러 조직 및 부서는 남북한의 사회조직으로 대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기업 인수합병(M&A)과 조직통합과정(PMI)에 대입해 볼 것이다. 성공적 인수합병(M&A)에 영향을 주는 조직통합과정(PMI)에 관한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확인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전에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과 남북한 청년층의 나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조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후 조직통합과정(PMI)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 조직 통합 전략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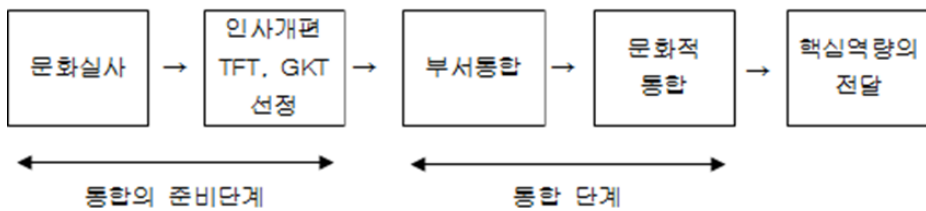
1. 조직통합과정(PMI) 관련 연구

먼저,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을 인수(acquisitions)하거나 합병(mergers)한다는 의미이다.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수합병(M&A)은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사전준비단계, 둘째

2) 김종대, “M&A 이후의 성공적 PMI 전략에 대한 연구: 통합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제1권(2011), p.241.

는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 셋째는 사후통합단계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 인수기업의 인수 의도와 접근방법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M&A)과 적대적 인수합병(M&A)로 나뉜다. 우호적 인수합병(M&A)의 경우 양측이 인수합병(M&A)에 상호 긍정적이어서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형태이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³⁾ 앞서 설명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평화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만을 남북통일의 방식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합의통일과 유사한 ‘기업 간 합병’과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과 유사한 ‘우호적 인수합병(M&A)’의 이론만을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한다.

기업은 어떤 기업을 인수한 후 조직통합과정(Post-Merger Integration: PMI)을 진행한다. 합병도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통합과정(PMI)을 동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직통합과정은(PMI) 기업 인수합병(M&A)의 3단계 중 둘째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와 셋째 ‘사후통합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직통합과정(PMI)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조직통합과정(PMI)의 일반적 절차>

조직통합과정(PMI)은 통합의 준비단계와 통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통합의 준비단계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목표, 리더의 역할, 조직 분위기 등을 실사하는 ‘문화실사’를 진행한다. 이때 문화실사의 목표는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통합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국기술거래소, M&A 이론과 실제, 사회평론, 2004, p.89.

문화 실사를 통해 얼마나 다른지 확인했다면 새 조직의 경영진이 빠른 시일 내에 새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TFT와 GKT를 구성한다. TFT(Task Force Team)는 각 조직의 경영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실제 통합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GKT(Gate Keeping Team)는 인수기업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을 필터링하여 피인수기업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모적인 문화충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TFT가 중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면 GKT는 완충 지대이자 갈등 방지 및 해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개편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부서 간 통합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부서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두 기업의 통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⁴⁾ 두 기업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두 기업의 통합이 완성된다. 문화적 통합을 통해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에 핵심역량을 전달한다. 핵심역량은 기업이 보유한 총체적인 기술, 지식, 문화 등으로 기업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이다. 인수기업의 핵심역량이 피인수기업에 전달되어 두 기업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면 조직통합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조직통합과정(PMI)과 관련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세진(2004)은 사람들이 통합과정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조직통합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통합이 협상 체결 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인수합병(M&A)의 성패를 결정짓는 데 조직통합이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⁵⁾ 또한 준비되지 않은 통합시도는 문화충돌로 인해 부정적 시너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⁶⁾

김준호(2009, E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인수합병(M&A)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통합과정에서 ‘문화적통합’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김준호는

4) 장세진,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4, pp.115-118.

5) 장세진, 2004, p.115.

6) 고광명, “M&A 이후 종업원 저항과 조직통합 및 시너지 실현간의 영향관계”, 경제연구, 제3권(2005), p.205.

합병기업이 기업 간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통합에 대한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공개 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충돌이 장기화된다. 둘째, 강력한 조직문화를 가질수록 환경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며 변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문화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변화된 문화의 강도가 강할수록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넷째, 중간관리자층의 통합에 대한 낮은 몰입은 문화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Larrison and Finkelstein(1999)의 연구에서는 종업원 저항이 조직통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Hambrick and Cannella(1993/209 C논문)는 인수합병(M&A)에 대한 피인수기업 종업원의 부정적 반응이 인수합병(M&A)이 실패하는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Sinetar(1988)는 종업원의 저항은 부수적 스트레스 등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인수합병(M&A) 이후 종업원들이 조직 변화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면 조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통합과정(PMI)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주해식, 2002). 이를 위해 피인수기업 종업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두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신뢰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설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청년층 사회통합의 목표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규범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의 사전적 의미로는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비통합적인 상태’는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등을 의미하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가나 민간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비통합적인 상태를 극복해야함을 뜻한다.

김문조와 김종길(199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은 국가통합을 상정한 후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며 사회통합의 영역을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치영역에는 국가관, 의료복지관, 교육관, 경제직업관, 여가 놀이관, 성 결혼관, 가족 친족관, 대인관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제도영역으로는 국가동원제도, 의료복지제도, 교육제도, 직업제도, 여가 놀이제도, 가족 친족제도, 자발적 결사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조와 김종길은 남북한의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이 각각 통합을 이룬 형태가, 국가통합 이후 종국적으로 달성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실질적 사회통합이라고 말한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으로 분류되는 사회통합의 영역을 조직통합과정(PMI)과 접목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 그림 1 >에서는 조직통합과정(PMI)이 완료 및 달성된 형태가 ‘핵심역량의 전달’이었다. 즉, 조직통합과정(PMI)의 완료 및 달성은 인수기업의 핵심역량이 피인수기업에 전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사회통합도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에서 남한의 핵심역량이 북한에 전달된 상태, 혹은 서로의 핵심역량을 주고받은 상태를 사회통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같은 국민이라 느끼고 삶의 양식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사회통합의 성공으로 설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쪽의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혹은 완전히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봉건적,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버려야 하는 한편, 통일한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핵심역량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김문조, 김종길,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과제 및 방안”, 아시아연구, 제39권 (1996), p.22.

Ⅲ.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비교

한 사회에는 무수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조직이 존재한다. 사회조직에 대해 문화인류학에서는 “공공의 관심과 공동의 지도력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실체”로 정의하고,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분명한 위계와 절차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고 집합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⁹⁾ 이러한 사회조직은 특징에 따라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남북한 청년층이 생활하는 사회조직을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로 나누어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명확한 분석을 위해 청년층에 포함되는 나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⁰⁾ 이와 유사하게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에 소속되는 나이를 청년으로 할 때 만 14세부터 30세까지가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청년층이 시작되는 사이는 각각 고등학교와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모두 중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다. 이처럼 남북한은 약간에 차이는 있으나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청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중에 취업을 한 청년은 제외하려고 한다. 남한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연령이 높아졌고, 취업한 인구 중에서도 청년층의 취업인구가 감소하고 3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증가하는 현실이다.¹¹⁾ 북한의 경우에도 직장에 들어가면 직업총동맹에 가입하게

8)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제7장: 사회조직”, 문화인류학개론, 제1권(1998), p.169.

9) 구정화, 박운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천재교육, 2014, pp62-73.

10) 대한민국 통계청

11) 신인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30대만 차별”,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85861>>, 2017년 9월 12일 19시 36분.

되고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조선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게 되면서 청년동맹에서 다른 조직으로 조직을 옮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조직 비교 및 통합 과정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10대 중반부터 20대를 청년층으로 하되 취업을 한 청년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1. 공식 조직

공식조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¹²⁾ 공식 조직의 예로는 학교, 회사, 군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남북한 청년층은 공통적으로 학교와 군대에서 조직생활을 한다.¹³⁾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한에는 의무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공식 조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다.

1) 학교

남북한의 학제를 비교해보자면 남한은 9년 의무교육 및 12년 학제로 이루어진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 학제이며, 이중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2012.9.25.)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을 발표 하였다. 유치원 2년 중 높은 반 1년을 시작으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다.¹⁴⁾

남북한 학생들은 각각 고등학교와 고급중학교를 마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에는 남북한 모두 교원대학,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이 존재한다. 남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80%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¹⁵⁾

12) 구정화.박윤경.설규주.설동훈.서정민.주은옥, 2014, pp62-73.

13) 북한의 경우, 직장에 들어가면 청년동맹에서 조선직업총동맹으로 이맹한다. 남북한 사회조직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북한의 청년층을 ‘청년동맹’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식조직에서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외한다.

14) 김진숙,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p.54.

15) 이연희, “고졸자 대학 진학률 68.9%…정원 감축해도 충원을 하락세”, 데일리안,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653>>, 2017년 8월 31일 6시.

과 달리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약 1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해야 한다.¹⁶⁾

다음으로 남북한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를 살펴보자면, 남한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 양성,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교육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북한의 학교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와 혁명활동, 주체사상 학습 등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한다.

2) 군대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군대의 제도, 전략, 전력 등을 분석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본 장에서는 청년층이 군 복무를 하는 병역제도에 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한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만 19세 남성이 군 복무의 대상이 된다. 이때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입영일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가능하며 연기는 5회까지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은 2017년 10월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이다.¹⁷⁾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 및 양성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반면,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16) 북한이해, 통일부, 2017, pp189-199.

17) 병무청 홈페이지에 확인하였다.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이때도 대학 입학과 마찬가지로 출신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데 반동 및 월남가족이 있거나,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일 경우 등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현재 남자는 12년, 여성은 지원 시 7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¹⁸⁾

남북한의 군 복무 연한은 남한 1년 9개월, 북한 12년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의 학제와 군 복무 연한을 비교하여 < 표 1 >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군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목적은 국가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군을 통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고, 대외적으로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하여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¹⁹⁾

18) 북한이해, 2017, pp108-109.

19) 김기수, 북한정책론, 팔복원, 2013, pp218-219.

< 표 1 : 남북한 학제 및 군 복무 연한 비교 >

나이 (만나이)	남 한	북 한	
	학제 및 군 복무 연한	학제 및 군 복무 연한	사회 조직생활
30	남자 군복무 (1년 9개월)	남자 군복무 (12년)	청년동맹 가입 (혹은 조선로동당 입당) ²⁰⁾
29			
28			
...			
18			
17	고등학교(3년)	고급중학교(3년)	조선소년단 가입
16			
15			
14	중학교(3년)	초급중학교(3년)	
13			
12			
11	초등학교(6년)	소학교(5년)	
10			
9			
8			
7			
6	(유치원3년)	유치원 높은반(1년)	
5			

3) 남한의 청소년 단체

학교와 군대 외에도 남한에는 또 다른 공식조직이 존재한다. 남한에서는 20대 중반까지의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식조직이 있는데 바로 청소년단체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사회에서는 고등학교생까지를 청소년, 그 이후를 청년으로 지칭하다보니 ‘청소년단체’라는 이

20) 18세 이후 입당이 가능하며 당원이 된 사람은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 가게 된다.

름이 청년층에게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²¹⁾ 엄밀히 말하면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속하는 청년층은 청소년이기도 하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은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는 2017년 9월 기준 62개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한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결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연합회, 국제청소년교류연맹 등 매우 다양하다.²²⁾ 지역별, 종교별, 활동별 등으로 많은 청소년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청소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미래의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료 동영상강의나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학습 부분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고 남한 사람들은 학생들의 학업에 더 관심이 많다보니 북한만큼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4)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반면, 북한에서는 학교와 군대 외에 청년층이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하는 공식조직이 존재하는데,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의무적으로 정치사회조직에 가입하여야 하며 조직 생활에 열심히 참여해 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해야한다.²³⁾ 북한의 조직생활은 사상·이념적 통제를 통해 주입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실생활에서 체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북한에서 청년동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의 후비대로서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이다. 청년동맹은 생활총화나 학습 등을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21)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8, pp.17-21.

2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23) 북한이해, 2017, pp238-240.

충실성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공산주의 교양 등을 실시하며, 수업 이외의 단체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또한,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역할 기대로 이어진다. 특히 선군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군, 즉 청년층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난 속에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왕성한 노동력을 제공할 존재들이었으며, 주민들의 사상적 이탈을 방지할 당의 후비대였고, 선군정치에서 강조하는 군대의 구성원들이었다.²⁴⁾

이들은 경제 건설에도 동원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의 형태로 지하철 공사 등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다. 청년동맹이 조직한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각종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보이자 돌격대는 다른 기구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05 돌격대의 전신인 당원돌격대, 선전선동부가 조직한 6.18돌격대, 도 단위 지역에서 조직한 돌격대, 4.15 돌격대 등이 그것인데,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미덕인 북한에서 각 부서와 기구의 간부들은 돌격대를 내세워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다. ²⁵⁾

당에 대한 충성으로 중무장한 청년동맹이지만 청년들 속에 퍼지고 있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막기란 쉽지 않다. 198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서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친구세대 간의 갈등이나, 청소년들의 물질지향적 취향의 확산, ‘자유주의적 경향의 확산’, ‘외부 세계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이 앞으로 북한이 청년들에 의해 상당한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²⁶⁾

24) 차승주, “김일성사회의주의 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제4권(2011), pp.50-81.

25) 오두환, “돌격대의 역사...김정일 ‘속도전’ 이후 청년돌격대 상설화”,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78>>, 2016년 10월 7일 21시 27분.

26) 차승주, 2011, p.53.

2. 비공식조직

일반적으로 비공식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미에 따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다.²⁷⁾ 비공식조직의 예로는 사내동호회나 교내동아리를 들 수 있다. 이때 동호회와 동아리라도 공식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비공식조직이 아닌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남한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교내동아리와 비슷한 활동이 있다. 바로 소조활동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소조활동에 참여한다. 가장 인기 있는 소조는 음악과 수학이라고 한다.

소조활동은 남한의 ‘방과 후 학교’와도 비슷한 점이 많다. 소조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 수학, 영어, 역사 등을 따로 배우는데, 그 때문에 대학입학시업을 앞둔 졸업반이 되면 북한 학생들이 소조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한 반에 8명 정도로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모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탈북자에 따르면 소조활동을 하면 농촌동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소조활동을 하고 싶어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²⁸⁾

한편,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16학생소년궁전 등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평양을 비롯해 각 도와 시·군에 설립되어 있다. 학생들은 여기서 음악, 무용, 태권도, 컴퓨터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²⁹⁾ 이처럼 북한의 소조활동은 남한의 교내동아리와 비슷하면서도 ‘방과 후 학교’나 ‘영재교육’과도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27) 구정화.박윤경.설규주.설동훈.서정민.주은옥, 2014, pp62-73.

28) 통일한국 편집부,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9 :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은?”, 통일한국, 제341권(2012), pp42-43.

29) 북한이해, 2017, pp191-192.

3.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³⁰⁾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동호회나 향우회처럼 구성원의 취미나 친목에 관심을 두는 친목집단, 다양한 직업 집단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익집단, 환경단체나 소비자 단체처럼 사회문제해결이나 사회 정의 등에 관심을 두는 시민단체가 있다.³¹⁾ 앞서 언급했듯, 공식조직 내에서 결성된 사내동호회나 교내동아리일 경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비공식조직에 속한다. 동네 주민들이 만든 조기축구회나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맛집 동호회 등이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남한에서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자발적 결사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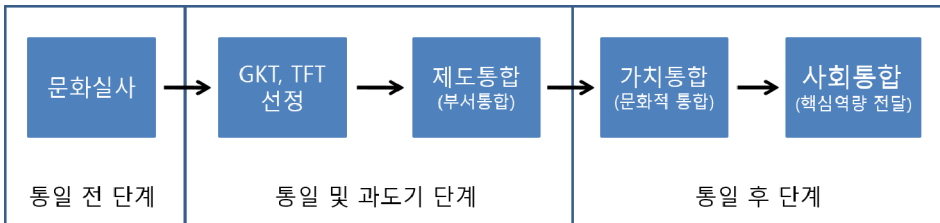
IV.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 전략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기업의 성공적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통합과정(PMI)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통합을 진행할 청년층의 사회조직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 및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언한다. 이때 통합할 조직은 사회조직 중 공식조직으로 정한다. 비공식조직도 공식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조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비공식조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조직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더

30) 자발적 결사체는 취미활동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져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31) 구정화.박운경.설규주.설동훈.서정민.주은옥, 2014, pp62-73.

효과적이므로 공식조직을 통합대상으로 정하고 전략을 제언하겠다.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할 것이며 더불어 조직통합과정(PMI)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남북 간 통합에서 필요한 새로운 전략도 제안해 볼 것이다. 우선, < 그림 1 : 조직통합과정(PMI)의 일반적 절차 >을 남북한의 통합에 맞추어 재구성해 보았다.



< 그림 2 :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과정 >

1. 문화실사

앞서 김준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문화실사의 목표는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척도가 되어 향후 정책실패 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실사 단계에서 남북한이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남북교류다. 남북교류는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기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문화실사의 목표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남북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통해 통일 이후에도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남북교류는 학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남한의 고등학교와 북한의 고급중학교가 지역별, 학년별 등으로 교류를 진행한다. 북한의 학생들이 소속되는 청년동맹은 말단 기층 조직을 ‘초급단체’라고 하는데 이 초급단체는 학급별로 존재하여 한 학급당 한 개의 초급단체를 가진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 남북교류를 하더라도 청년동맹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나 학급별로 남북교류를 진행할 때 좋은 점은 통일 이후에 더욱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로 인해 지역간 왕래가 자유로워지지만 서로 사는 공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학교를 통해 자매결연, 교환학생제도, 수학여행 등을 진행하면 보다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과정에서 ‘자매 주 결연’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남북한도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 도시 내 학교 간에 교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도 학교별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3장에서 살펴보았듯 남한은 80% 달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데 반해 북한은 10% 정도밖에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진행하되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한다. 예컨대 남한의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와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는 평북종합대학(구 신의주 농업대학)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자. 그럼, 그 대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이 위치한 대구광역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대학을 통해 남북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지방 국립대학이 그 지역 주민들을 모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어 대학이 평생교육(성인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군대이다. 북한 남성의 경우 1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한다. 대학교를 통해 교류를 진행해도 군복무를 하는 북한 남성들은 남북교류에 제외된다. 이들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의 남한 민간인과 교류하기도 어렵다. 군대는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남북한 군대의 교류는 국가안보에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GKT와 TFT선정

GKT(Gate Keeping Team)는 인수기업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을 필터링

하여 피인수기업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고 소모적인 문화충돌을 막는다. TFT(Task Force Team)는 각 조직의 경영자들을 연결해주며 실제 통합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TFT가 중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면 GKT는 완충지대이자 갈등 방지 및 해결의 역할을 담당한다.

GKT와 TFT의 구성원은 청년들이 될 수도 있으나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높다. 통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본격적인 과도기 단계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통합 안과 정책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특정 전문가들은 GKT와 TFT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남북한 정책담당자 사이에서 일방적인 의사 전달을 막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 등 소모적 문화충돌을 줄인다.

정책담당자들은 국가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통합 과정 상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놓칠 수 있는데 TFT는 이를 파악하여 알려주고 각 조직의 담당관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GKT와 TFT는 관련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므로 남북통합에서도 교류 협력의 경험이 많은 실무자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GKT와 TFT 구성원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높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간관리자층의 낮은 몰입은 차후 문화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데, 물론 이들을 중간관리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들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낮다면 통합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한편, 조직통합과정(PMI)에서 공동의 비전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데, 이들의 관련 경험과 지식, 통합에 대한 높은 몰입은 공동 비전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전을 설립할 때 남한이 추구하는 가치만 담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문화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쾌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반대로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비전을 설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GKT와 TFT의 관련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자문 역할로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제도통합

앞서 사회통합을 가치영역과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이때 제도영역의 통합을 조직통합과정(PMI)에서 ‘부서통합’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도통합은 통일 과도기 단계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통합 안을 만들고 이 안이 수립되어 사회전체에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우선, 청년층의 사회조직인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제, 교육내용,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법 등이 이 시기에 수립되고 집행시기가 결정된다. 군대도 군 지휘체계, 군사기구, 병역제도, 군 복무 연한 등 군대와 관련한 법제도가 새로 수립될 것이다.³²⁾

학교와 군대 외에 남북한에 존재하는 공식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은 해체나 통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래서 남한의 청소년단체의 경우 공식조직이지만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해체나 통합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면 문제는 청년동맹인데 청년동맹은 사상교양과 주민통제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북한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의무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청년동맹원들도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어긋난다. 게다가 청년동맹원은 노력동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측면이 있다. 노력동원은 조직활동 중 일부이지만 무임금 노동과 다름이 없어 합법적이지 못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제23조 3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여타의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완되는 적절하고 알맞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노동 선택, 노동 조건, 임금 등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³³⁾ 따라서 기존의 역할을 계속 유지한 청년동맹은 통일 한국

32) 교육제도와 군사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남북한의 기존 제도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각각의 제도 통합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주제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33) 세계인권선언 제3조 3항.

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대신 역할을 바꾸어 재교육 조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화, 민주화, 산업화되면 주민들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정치교육, 직업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등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교육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고급중학교 학생이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엔 학교를 통해 재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통일 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다. 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청년동맹을 활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기존에 청년동맹도 당의 정책을 관철하고 사상교육을 진행했으므로 이에 착안해 청년동맹의 구조를 유지하여 당의 정책과 사상을 교육하는 대신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청년동맹원을 교육하는 청년동맹의 ‘지도원’들에게 먼저 재교육을 실시한다. 일부는 지도원 대신 남한 측 전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으나 동맹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전문가가 지도원이 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북한의 지도원을 먼저 재교육한다. 기업 Renault와 Nissan의 인수합병(M&) 사례에서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북한의 지도원이 재교육을 실시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4. 가치통합

가치통합은 조직통합과정(PMI)에서 ‘문화적 통합’ 단계에 해당한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제도통합 외에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치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통합은 가장 조직통합과정(PMI)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 분단되어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치통합이 더욱 어렵다.

가치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 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가 낮

을수록 문화적 통합이 어렵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를 만들 때 남북의 문화를 골고루 반영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 남북한 중 어느 한쪽의 문화를 배제하게 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도 있지만 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쪽이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문화가 강력할수록 변화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모두의 문화가 제도통합에서 고려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가치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앞서 청년동맹에서 이루어지는 재교육은 가치통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년동맹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이라 남한 주민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남한은 독일의 사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을 기초로 하여 성인이 되어서는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이어진다.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대표적인 정치교육 기관으로 정치교육 총괄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을 들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내무성이 관장하는 기관이며 국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주로 정치교육과 관련한 간행물 출판, 학술대회지원,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남한의 경우 독일과 같은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문화실사’에서 대학을 활용한 제안처럼 성인들의 재교육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드는 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을 통일 후 재교육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통합을 위한 재교육을 시작으로 주민들은 지방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통합을 위해 남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을 비교·분석하고 통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해보았다.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후 성공적 조직통합과정(PMI)에 대한 연구를 활용해 통합 전략을 제안해 보았다. 조직통합과정(PMI)을 남북한의 실정에 맞게 문화실사, GKT와 TFT 선정, 제도통합, 가치통합, 사회통합으로 단계를 재구성하고 각 단계별 과제 및 세부적 통합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전략으로 기업의 조직통합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국가는 기업과 다르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인수합병(M&A)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영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경영진에 의해 조직이 변경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할 경우 통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직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추방하거나 조직을 강제로 변경시킬 수 없다. 기업 조직통합과정(PMI)은 부하직원이 상사나 경영진의 지시에 복종하고 경영진에 의해 인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전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통합에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조직통합과정(PMI)을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통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며, 우리가 원하는 통합방안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준비 없는 통일은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합방안을 구상해보며 준비해야한다.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진행된 통합방안 연구는 통합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한 통합방안이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합 단계에서 남북 간에 생기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 통합 단계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다양해지면 통일과 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서 요원해 보이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을 수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통합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구정화.박윤경.설규주.설동훈.서정민.주은옥,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천재교육, 2014.

김기수, *북한정책론*, 팔복원, 2013

북한이해, 통일부, 2017

장세진,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4.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8.

한국기술거래소, *M&A 이론과 실제*, 사회평론, 2004.

〈국내 학술지〉

고광명, “M&A 이후 종업원 저항과 조직통합 및 시너지 실현간의 영향 관계”, *경제연구*, 제3권(2005).

김문조.김종길,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과제 및 방안”, *아시아연구*, 제 39권(1996).

김종대, “M&A 이후의 성공적 PMI 전략에 대한 연구: 통합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제1권(2011).

김진숙,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노병만,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 재검토”,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2000).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제4권*(2011).

통일한국 편집부,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9 :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은?”,

통일한국, 제341권(2012).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제7장: 사회조직”, 문화인류학개론, 제1권(1998).

〈학위논문 (국내 및 동양, 서양)〉

(국내 및 동양)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학위, 발행연도.

(서양) 저자명, 논문제목(이탤릭), 학교, 학위, 발행연도.

〈인터넷 자료〉

저자명, “기사명”, 사이트명, <주소>

신인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30대만 차별”,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85861>>.

오두환, “돌격대의 역사...김정일 ‘속도전’ 이후 청년돌격대 상설화”,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78>>.

이연희, “고졸자 대학 진학률 68.9%…정원 감축해도 충원을 하락세”,
데일리안,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653>>.

장 려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

-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민주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하경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남·북한의 국제운송로 현황
- III. 통일한국의 국제운송로
- IV. 통일한국 운송로 개편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

-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제언 -

세계화 시대에서 ‘운송’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국가 간 경제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다국적 기업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이제 더 이상 수요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류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며, 그 변화 양상 또한 급변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국제 운송로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연구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반도국가임에도 분단이라는 장벽에 그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사실상 섬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단 상황에서의 운송로 현황을 알아보고, 평화 통일을 이룬 시점에서 통일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가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국제 운송로를 선별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 운송로의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와 각 운송수단 별 제언을 제시하였다.

육상 운송로 중 도로 운송의 경우, 남북접경지역에서 총 13개의 노선이 연결 가능해져 통일 도로망이 확충된다. 그 중에서도 운송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노선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AH1과 AH6 2개의 노선이다.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평양~개성 고속도로와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연결로 이 두 개의 노선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철도 운송로는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연결이 가능하다. 철도 운송로 개편이 가져오는 가장 큰 이점은 단절되었던 TKR의 복구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결은 유럽과 아시아 및 동북아의 삼각교역지역을 잇는 주요 루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운송로의 경우, 동해는 나진항~포항항, 부산항 노선과 서해는 남포항~인천항 노선이 물류 측면에서 기대된다. 기존 인프라

의 구축이 중요한 해상 운송로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 대상지인 나진항은 통일한국의 중계화물 처리 역할을 담당하는 항구로 최적화 된 항구이다. 또한 나선 자유무역 지대라는 점과 주변 지하자원을 포함항으로 운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의 경우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륙인 평양,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보한 남포항과 인천항 노선의 복구가 예상된다. 수도권 항만 간의 노선의 복구를 기반으로 평택항과 당진항까지 연계하면 남북 연안 해운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이후 북중국 주요 항만 사이에 해상 운송로를 구축하여 환황해 해양 도시 네트워크로서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통일한국에서의 항공로는 총 9개의 노선이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물류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항공 운송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선은 ‘서울~나진’ 노선이다. 이 노선은 나선지역 및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구, 러시아와의 육로 운송 연결과 청진 공업단지의 직접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진, 선봉지역과 같은 북한의 대외 개방도시는 교류 물량이 많고 고가 화물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의 중국-한국 간 항공화물처럼 화물 차터 항공편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포공항이 국제선 예비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 하다.

통일 후 국제 운송로 개편으로 인해 기대되는 기대효과는 크게 교역비용의 절감과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중심화 실현이다. 노선단축에 따라 시간과 유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막혀 있던 육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수단에 비해 최대 5배 높았던 운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은 가장 중요한 입지여건을 충족하게 되어 동북아의 물류 관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후 국제 운송로의 경우, 물류량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류 및 인적 유통의 예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운송

로를 적절히 분석하여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국제운송로 마련을 위해 본문에서는 육로, 해양로, 항공로 각 특성에 특화된 운송 수단 별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수단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언은 첫 째, 단계적인 남북한 운송로의 통합이다. 신규 노선의 공급보다 기존의 단절 노선의 복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복원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통합운영 모델을 제시 한 후에 단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운송 시설 수준을 일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운송로의 통합 운영을 더 앞당기고,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둘째, 교통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 운송 시설의 경우 낙후되어있으며 및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다. 이는 육로, 항공로, 해상로의 시설 모두 동일하다. 즉, 북한 운송 시설의 일체화된 현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허브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로의 경우 통일한국의 도로 운송망과 동북아 육상교통망을 연계해야 하며, 항로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제 대형 선박이 선착할 수 있는 항만시설 대형화가 필요하다.

I. 서 론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그 국가만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와 경제정책 변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세계화가 심화된 21세기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 간 경제 사이에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다국적 기업의 무한 경쟁으로 무역의 중요도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 전체적으로 수출의 성장률이 총생산의 성장률보다 높아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월드뱅크 정책본부는 'The East Asian Miracle' 레포트에서 한국이 1965년부터 1990년 대 까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를 거시안정성에 기반 한 정부의 개입 중 기업, 산업별 수출 목표 할당으로 꼽았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국제무역에 초점을 맞춘 경제발전 전략은 한국의 뚜렷한 특징이며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함이 명백하다. 무역의 주요 수단으로써 일국의 산업구조 내지는 생산제도와 국제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국제 운송¹⁾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과거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반도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에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북한은 해양 진출에, 남한은 대륙 진출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²⁾ 특히 남한은 대륙과의 연결을 가로막아 사실상 섬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고립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현재 남한은 일본

1) 정한경·김영호·최창열, 세계화와 무역, 개정판, 형설출판사, 2008, 296.

2) 박창호·강상곤,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권 제1호 (2015.03). 16pg

이나 중국과 같은 인접국가에 비해 국제운송로 개발에 대한 시작이 매우 늦은 편이며, 그 연구조차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아시아권 지역 카스피 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ODA 사업을 시초로 국제운송로를 개발하는데 자본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을 시작한지 근 29년이 되어간다³⁾.

중국 또한 국제운송로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이다. 유라시아 대륙엔 세계인구의 75%가 살고 있으며, 국내 총 생산량의 합은 전 세계 GDP의 60%가 넘는다⁴⁾. 이미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동남아로부터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새로운 실크로드의 기적을 꿈꾼다. 한국은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운송로 연구가 쟁점화 된지 11~13년 밖에 되지 않아 이 거대한 기회 속에, 한국만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국제운송로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계적으로 루트를 마련하기보다, 그 루트가 과연 현실적인지, 교통 물류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운송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운송로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떠한 이로운 점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연구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세 가지 차별 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평화통일을 한 통일한국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영토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가정하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들이 분단된 현실을 가정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제약 하에서 구축한 것과 다르다. 한반도라는 영역에 한해서 제약 없이 통일한국의 운송로를 구

3) 성원용, “후해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 국제운송의 정치경제: 트라세카와 남-북 국제운송로를 중심으로”, e-Eurasia, 7권(2008), 15pg

4) 박연직,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경쟁 치열」, 세계일보, 2017.09.10.

축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반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제 운송로 구축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제언에 집중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물류 시설 및 산업 여건 혹은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 ‘한반도의 국제운송로’를 독자적으로 주제로 잡아 다룬 논문은 없었다. ‘국제운송로’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기본적으로 운송로의 물리적인 측면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그 기능적 측면 역시 다루어 볼 것이다. 특히 단순한 노선 보다 무역의 수단으로 이용될 물류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운송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이 국제운송로의 개별적인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것과 다르게 해상, 항공, 육상 세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제운송로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운송의 형태인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이 이루어질 국제운송로 중 운송로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운송로를 분석하여 정리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의 기대 효과를 다루고, 체계적인 국제운송로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Ⅱ. 남·북한의 국제운송로 현황

1. 북한의 국제운송로

1) 육상 운송로

(1) 도로 현황

북한의 도로는 교통정책이 철도부문 위주로 시행되어 철도교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간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지역 내 연결교통수단으로 건설되었다. 도로건설은 지리적 여건, 에너지 절약, 주민 통행통제 등

의 이유로 그 이용이 억제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되어진 도로의 총 연장은 60,987km이며 이중 682km가 고속도로이다. 북한의 간선도로망은 크게 동해안축, 동서연결축, 서해안축, 북부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주요 간선로는 대개 철도와 병행하여 발달되어 있고 주요 지역을 고속도로나 1,2등급의 도로가 연결하고 있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강동, 평양~남포, 평양~원산, 원산~금강산, 평양~개성, 평양~회천, 평양~순안의 총 7개 노선이다. 간선도로망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동서 해안을 따라 철도와 병행하여 건설되어 있다. 주요 도로망은 국도 1호선과 연계되는 서해안축(해주~평원, 개성~신의주), 국도 7호선과 연계되는 동해축(고성~선봉), 국도 3호선과 연계되는 북부내륙축(평간~후창, 신북청~혜산, 평강~초산), 동서연결축(평양~원산, 장산곶~덕원), 동서국경축(신의주~온성)의 5개축으로 구성되고 있다. 서해안축인 평양~신의주간도로는 약 222.8km에 달하며, 북한의 중심 교통축으로 대중국 국경도로의 기능을 겸하는 도로이다. 원산~나진간도로는 동해안축으로 원산, 함흥, 청진을 경유하여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660km에 달하는 동해안의 중추도로로서 경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압록강을 따라 신의주~고무산간을 연결하는 북부 국경축은 동서부를 연결해 주는 도로로 산악지대의 연계와 국경지역의 연계기능이 주 역할이다.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개성과 강원도에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등 1129개의 노선의 도로가 있다. 1978년 평양~원산간의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동서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89년에는 원산~금강산 간 기존도로의 확장이 이뤄졌다.⁵⁾

(2) 철도 현황

북한의 철도망은 크게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횡단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해안축으로는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대표적인 노선으로 낭림산맥 서부의 주요 철도와 교차하면서 서부평

5) 이영균, “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1,12),pp66-69

야지대의 주요 산업 및 농업중심지를 관통한다. 경의선은 평양~신의주 구간의 평의선과 평양~개성 구간의 평부선으로 구성된다. 평의선은 신의주에서 압록강철교에 의해 평양~북경간의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철도교통축이기도 하다. 동해안축의 기본 간선은 평나선으로 평양의 간리~나진을 연결한다. 평나선은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북한을 종단운행하며, 화물수송량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1973년 단선으로 전철화 되었다. 주요 지선으로는 무산선(고무산~무산)과 산업선인 백두산청년선 등이 포함된다. 동서 횡단축으로는 평나선의 일부인 평원선(평양~고원)과 청년이천선(평산~세포청년)이 있다.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개성지역을 지나는 철도는 평양~개성구간의 평부선이 있다. 평부선 주변에는 금속, 기계 화학 등의 공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통과하는 철도노선은 강원선(천내군 용담~평강), 청년이천선, 천내선(용담~천내), 문천향선(옥평~문천향) 등 4개 노선이 있으며 안변~금강산간의 금강산청년선도 1997년 완공되었다.⁶⁾

2) 해상 운송로

북한의 수송체계의 특징은 도로수송을 주축으로 하는 남한과는 달리 철도를 근간으로 하고, 도로, 해운 및 항공은 이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역할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해운, 항만의 비중은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육상운송보다 낮다. 현재 북한의 항만은 8개의 무역항, 5개의 원양수산지항, 30여개의 어항 등이 있다. 북한의 무역항은 남포, 송림, 해주, 나진, 원산, 홍남, 청진, 나진 등인데 이 중 평양 외항인 남포항이 총 무역량의 30%, 청진항이 24%를 처리한다.

남포항은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으로 평양과는 고속도로와 전철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최대 공업단지인 평양공업지구의 해상 관문이다. 홍남항은 1960년 무역항으로 개항되었으며, 일제부처 홍남공업지구의 관문

6) 이영균,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1.12), pp79-85

항으로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청진항은 북한 최대의 무역항으로 총 7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와 도로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며 특히 러시아의 광궤철도가 항만까지 인입되어 있다. 또한 청진~남양~셋별~청진 간 순환철도망과 순환도로망이 정비되어 있다. 청진시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의 나진항은 러시아 극동지역이나 대동남아 무역 중계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3) 항공 운송로

북한의 국내노선의 경우, 북한은 평양의 순안-삼지연, 순안-어랑, 순안-선덕, 순안-원산 등 11개의 국내노선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나, 승객이 적고 비용이 비싸 부정기적이다. 이용자는 주로 업무상의 목적으로 통하는 당의 간부나 외국인이다.⁷⁾

북한의 정기 국제항공노선은 1959년 2월 평양~북경간에 최초로 개설된 이후 1974년 하바로브스크, 1983년 모스크바, 1987년 동베를린, 1989년 소피아가 개설되었으며 1993년에는 방콕, 1996년에는 마카오 간에도 정기 항로를 개설하였다.⁸⁾ 현재 중국(북경, 대련, 심양),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태국(방콕), 마카오, 일본(오사카) 등 5개국에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되었으나, 평양~북경 노선을 제외하고는 활발히 운행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경우 다음의 세 가지 항로를 가지고 있다.⁹⁾ 첫 번째 항로인 R452(VOR/DME) 서수르↔순안항로는 순수 국내항로로서 순안에서 함흥, 김책을 거쳐 러시아와의 경계선인 서수르 비행통보지점에 이르는 항로이다.

두 번째 항로인 A575(VOR/DME) 순안↔골프항로는 평양, 의주, 북경을 연결하고 몽고를 거쳐 몽고와 러시아의 경계선에까지 이르는 국제항

7) 김연명·김제철 외 3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방안 구상”, 교통개발연구원, (2004.01), 21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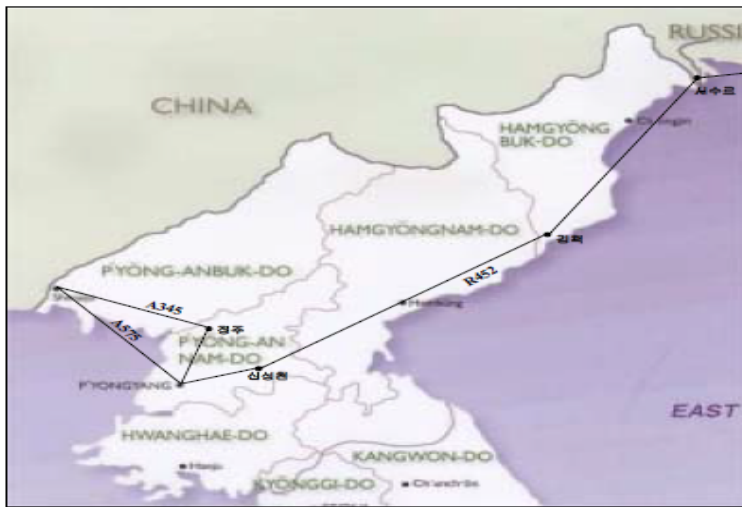
8) 국가정보원, ‘북한의 실태 및 구조개선방안’,(1999) pp435-568

9) 이영균, “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1,12),p107

로이다. 북한 내에서는 순안에서 의주를 거쳐 심양비행정보구역과의 경계선인 골프지점까지의 항로를 의미하며 북한에서는 순안비행장으로부터의 출항항로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로인 A345(VOR/DME) 골프↔순안항로는 중국의 심양 FIR과 평양 FIR 경계선에서의 관제권 이양지점으로 설정된 골프지점에서 시작하여 의주, 안주 NDB를 거쳐 운안공항에 입항에는 항로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위에서 설명한 북한의 항로의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1> 북한의 항로도

2. 남한 국제운송로 개요

1) 육상 운송로

(1) 도로 현황

남한지역의 주요 도로망은 서울~부산의 경부축과 대전~순천의 호남축, 서울~인천의 경인축, 서울~강릉의 영동축, 광주~부산의 남해안축, 광주~대구의 88축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격자형이 되도록 남북으로 7개축, 동서로 9개축을 배치하고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10개축, 부산을 중심으로 5개축, 대구를 중심으로 7개축, 광주를 중심으로 7개축, 대전을 중심으로 6개축의 방사순환형 도로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상형 도로체계의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¹⁰⁾

〈표 1〉 남한의 도로현황

(기준:km)

연도	도로 총연장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포장도로
1980	46,950	1,224	8,231	7,938	11,020	18,534	15,599
1985	52,264	1,415	12,241	10,017	10,166	18,422	12,072
1990	56,714	1,550	12,160	12,298	10,671	20,033	40,544
1995	74,237	1,824	12,052	14,081	13,854	32,424	56,386
1998	86,989	1,996	12,447	17,669	17,155	17,155	64,780

(2) 철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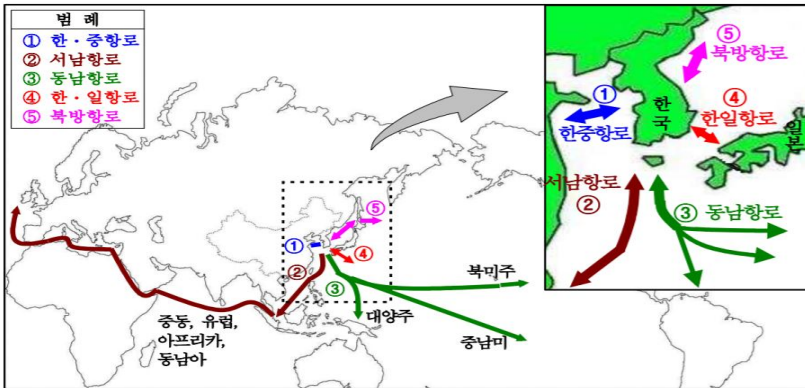
남한에서 컨테이너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72년 9월 18일부터 서울 용산역과 부산 지역 간에 고속직행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운행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제조공장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철도의 컨테이너 수송경로도 부산진과 의왕역 사이의 단일 경로에서 부산과 의왕, 세종시, 삼교, 동산, 동익산, 울춘, 청주 8개 경로로 다원화 되고 있다. 철도컨테이너 운송은 의왕역을 출발하여 부산진역에 도착하여 BCTOC 직 반입 분과 철도 CY에 일시장치 후 터미널 반입 분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이 때 재래부두의 경우 철도노선이 없어 철도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컨테이너 철도의 수송실적은 경부선이 전체의 약 90%정도 차지하고 있다. ¹¹⁾

10) 박신, "남북한 도로체계비교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2005), pp 337-358.

11) 송선욱 "한국 수출입 물류기반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증, (12), (2001), p.3.

2) 해상 운송로

남한은 28개의 무역항과 22개의 연안항, 그리고 각종 어항 410개 등 총 460여개에 달하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¹²⁾ 물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부산, 광양, 울산, 인천이 우리나라의 4대 무역항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무역항을 중심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서해를 통하여 중국으로 직접 통하는 한·중항로 2) 동중국해를 경유하여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향하는 서남항로, 3) 일본열도를 우회하거나 해협을 통과하여 북미주, 중남미와 대양주를 향하는 동남항로 4) 동해와 대한해협을 통한 일본과의 한·일항로 5) 러시아 사할린 동부와 캄차카 반도사이의 오호츠크 해로 향하는 북방항로 등 크게 5개의 중요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세계 6대주와 교류하고 있다.¹³⁾



<그림2> 해상 운송로

3) 항공 운송로

남한의 경우 국제운송을 위한 국제항로와 국내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국내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총 16개 항로 중 국제항로는 9개로서 이

12) 이영균, “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1,12),p121

13) 배형수, “국가 해양력 발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정책 심포지엄, 3회 (2006.08), 30pg.

들 중 일부는 국내항로를 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로 연결하고 있다.¹⁴⁾

<표 2> 남한의 항로 현황

구분	항로명칭
국제항로	A582, A586, A593, A595, B332, B467, B576, G339, G585, G597, G203
국내항로	V11, V549, V543, A586, V547

Ⅲ.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1. 육상 운송로

1) 도로 운송

통일한국은 남북한의 단절된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통일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다. 남북접경지역에서 연결 가능한 노선은 총 13개의 노선으로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1개 노선, 기타도로 6개 노선이다. 남북한이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서부축에 국도 1호선, 지방도 322호선, 기타 도로 2개 노선 등 4개 노선이 있다. 중부축은 국도 3,5, 43호선 및 기타 도로 2개 노선 그리고 동부축(동해안축)은 국도 7,31호선 및 기타 도로 2개 노선 등 4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다. 주 연결도로는 국도 1,3,5,7,31,43호선의 6개 노선이며, 나머지 연결도로는 비법 정도로나 지방도에 의해서 연결된다.¹⁵⁾

아래의 표는 현재의 단절구간과 통일한국의 연결될 연결 가능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14) 이영균,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2001,12), p114

15) 이영균,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2001,12),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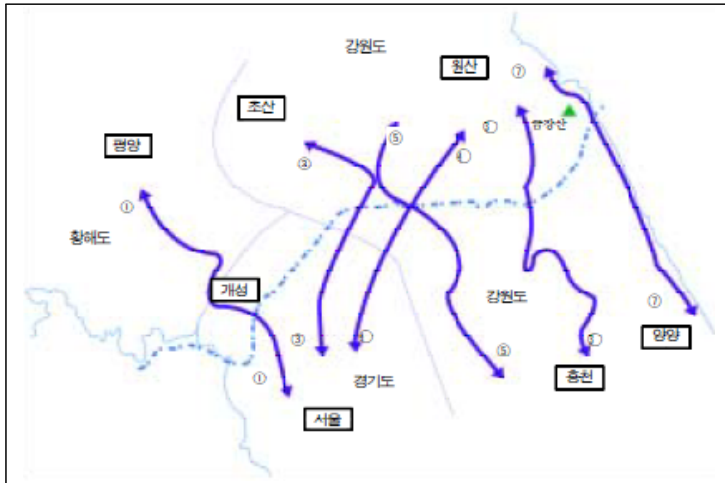
<표 3> 남북한 접경지역 교통현황

구분	단절구간	연결가능도로	
		남한	북한
서부측	파주시 문산-개성 파주시 늘노리-장풍군 림강리 연천군 마거리-장풍군 귀촌리	국도 1호선 비법정도 비법정도 비법정도	고속도로 비포장 2급 이하 도로 도로
중부측	철원군 외촌리-평강군 평강 철원군 읍내리-평강군 천암리 철원군 읍내리-김화군 수태리 철원군 외촌리-철원군 마장리 철원군 주파리-김화군 용현리	국도3호선 국도5호선 국도43호선 비법정도 비법정도	2급도로 2급도로 2급도로 비포장 2급 이하 도로
동부측	고성 포화지리-고성 구읍리 양구군 비아리-금강군 속사리 양구군 건설리-창도군 백현리 양구군 가전리-금강군 속사리	국도7호선 국도31호선 비포장 비법정도 비포장 비법정도	고속도로와 연결 2급도로 2급 이하 도로 2급 이하 도로

자료: 김연규, 안병민, 이선영, 남북한 교통망연결을 위한 기초 조사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2000.12

위 표에서 제시된 연결가능구간 중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사이 (12.1km)를 잇는 경의선(국도1호선) 왕복 4차로와 제진과 온정리 (23.4km)사이를 잇는 동해선(국도7호선) 왕복 2차로는 2004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동년 12월부터 임시운행합의서에 따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통일한국을 위한 도로망 연결은 경의선 및 동해선 노선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두 노선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을 위하나 여객 화물 운송의 주요 운송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간선 축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강산 지역까지만 본격적인 운송로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고 통천, 원산, 함흥 등 금강산 이북의 구간은 도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국도1, 7 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국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연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통일한국에서는 단절된 모든 국도가 연결되어 아래<그림 3> 과 같은 모양의 간선망이 새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⁶⁾



<그림 3> 통일한국의 연결된 도로망

더불어 통일한국은 한반도를 지나는 아시안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다.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AH)는 UN 산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주관 하에 아시아, 유럽 지역 국가들의 참여로 구축하는 국제 도로망이다.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 간 협정에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한 총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총 66개의 노선(8개의 간선망과 58개의 지선망 포함)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141,714km에 이른다. 66개의 노선 중 AH1¹⁷⁾, AH6¹⁸⁾ 2개의 노선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¹⁹⁾ AH1의 경우 부산의 71번 충장대로, 11번영로, 경부고속도로, 한남재로, 통일로를 지나며,

17) AH1의 경우 20,557km로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중에 가장 긴 노선에 해당한다. 일본 도쿄를 출발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 인도를 거쳐 터키와 불가리아의 국경선을 종착점으로 한다. 1호선의 종점에는 유럽 고속도로망과 연결되어 있다.

18) AH6는 대한민국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 시베리아, 중국을 경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이어진다.

19) 김덕녕, 조성민.,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간 실무그룹 회의 및 공동 세미나", 대한토목학회지, 64(1), (2016), pp70-75.

북한 지역에서는 국도 제1호선, 평양-개성고속도로, 평양-희천고속도로, 를 지난다. AH6는 전 구간 남한의 국도 7호선을 이용한다. 국도 7호선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로 이어지며,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진다. 북한에서는 금강군에서 라선특급시를 잇는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 북한 지역의 AH 도로망이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다. 통일한국은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평양-개성 고속도로와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연결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2) 철도 운송

통일한국의 철도망은 기존 400km에 국한되어 있던 남한만의 철도망에서 2배 이상 길어진 1000km로 기존의 철도의 큰 장점인 장거리 수송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차원에서 경의선(문산-개성)과 동해선(고성-온정리)의 철도 연결공사는 이미 종료되어 2007년 5월 시범운행을 마친 상태이다. 이때 운행된 구간은 동해선은 25.5km 서해선은 27.3km이다. 다음의 표는 남북 간 단절된 철도의 현황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에선 다음의 분절된 철도 구간들이 연결될 것이다.²⁰⁾ 이는 운송비용 절감, 수송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V. 무역로 개편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서 다루고자 한다. 현 북한철도 노선 중 수송을 위한 철도노선은 경의선축의 평부선과 평의선이며, 동해선축은 금강산청년선, 강원선, 평라선, 함북선이다. 이 중 경의선축의 노선은 수요대비 복선철도 수준의 선로용량이 필요하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철도 구축 시 기존의 단선에서 복선으로 개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동해선축 수송수요는 단선철도로만으로 선로용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개량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1) 통일철도 연결을 통한 최종 목적지는 수도권지역과 국제항인 부산항이

20) 박호신, 홍승린.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3), (2014). pp277-301.

21) 성낙문, 김연규, 안병민, "남북연결 도로, 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나 광양항 지역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남한의 철도의 정비도 요구된다.

<표 4> 남북한 연결 가능한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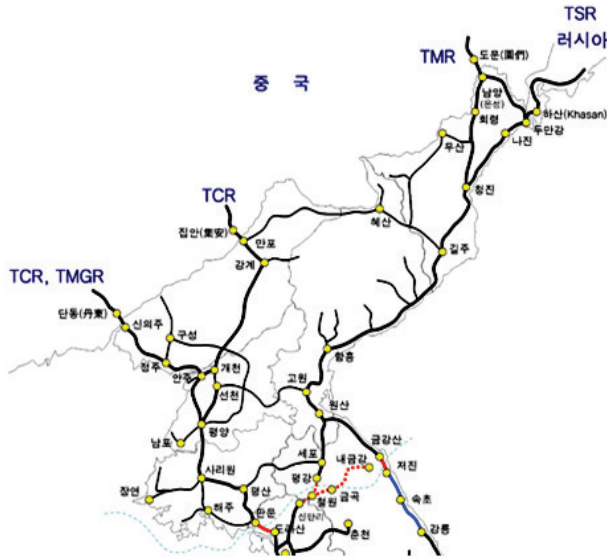
노선	단절구간	연결현황
경의선(서울-신의주)	-남측: 문산-군산분계선 -북측: 군사분계선-개성	-남: 2002년 12.31 완료 -북: 2004년 10월 궤도완료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신탄리-군사계선 -북측: 군사분계선-평양	
금강산선(서울-금강산)	-북측: 철원-군사분계선 -남측: 군사분계선-내금	
동해북부선(강릉-원산)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북측: 분계선-온정리	-남: 2005년 12.31 완료 -북: 2004년 10월 궤도완료

자료: 통일부, "2014 통일백서"

통일한국이 이뤄지면 단절되었던 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 Korean Railway)의 복구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고횡단철도의 건설과 함께 동북아 차원의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금강산선 등의 연결구간을 지칭한다. 현재 경의선만 구축된 상태로 나머지 연결구간들의 부설이 남아있는 상태다.²²⁾ TKR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및 유럽의 연결을 목표로 추진하는 철도 노선으로서,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륙연결철도망에는 신의주시~TCR(중국종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연결하는 노선과 원산시~두만강역~TCR 연결노선, 평양시~남강~TMR(만주횡단철도) 연결노선, 신의주시~베이징~TMGR(몽골횡단철도)연결노선과 원산시~두만강역~TSR연결노선이 있다. TKR의 부설과 연결은 동북아의 지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을 결합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동북아의 단일 운송망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및 동북아의 삼각교역지역을 잇는 주요 루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래의 <그림 4>은

22) 김경희, 이학승, "동북아 물류 중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종단철도(TCR)의 연계추진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04), pp289-309.

TKR과 연결되는 동북아의 철도망을 보여준다.



<그림 4> 한반도,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 연결도

2. 해상 운송로

1) 동해의 주요 운송로 ; 나진항 ~ 포항항 , 부산항

이전부터 동해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 그리고 사할린 주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한반도, 동쪽으로는 일본이 감싸고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대륙세력(북한,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한국,미국,일본)을 불문하고, 모두 동해에 자국의 이익선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최근 국제 정치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어 동해가 중요한 상업항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²³⁾

23) 이영형,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아태연구, 20권 3호 (2013), 41pg.

이렇게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동해의 중요한 상업항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해상 운송로는 바로 나진항 ~ 포항, 부산항 이다. 북한의 동해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 항구들엔 나진항, 청진항, 김책항, 홍남항, 단천항, 원산항 등이 있지만 이 항구들 중에서도 나진항이 가장 유력한 출발지가 될 첫 번째 근거는,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항구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급격히 증가할 항만물동량과 항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만 개발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해양 운송로의 기능을 감당할 하부구조와 시설은 필수적이다. 현재 나진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의 주요 관심 대상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진항의 부두 사용권을 선점하고 있으며, 북한이 동시에 2010년 북한 북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인 라선 특별시를 특수경제지대로 설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항만물동량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한국의 속초와 부산, 러시아의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해상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내륙과의 연결 작업에도 착수했다. 두만강에 접한 라선특별시 원정리와 동해쪽의 라선시 나진항을 잇는 53km 구간의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공사가 완공되면 훈춘시~권하~원정리~나진항이 93km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중국의 동해 출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는 평화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계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하부구조와 시설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중개항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운송로이다. 동해안 항로에서 나진항과 부산항을 중심항만으로 삼는다면 나선 자유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활발한 화물운송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계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 내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반 출입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특히 나진항은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일본, 동남아, 호주 등 여러 나라의 화물 중계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항항은 북한지역의 철광석 반입 및 제강, 제철제품 반출 항만으로 자리잡게 되면 그 효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회령시와 무산군에서 나오는 철, 온성군에서 나오는 갈탄 등을 포항항으로 반입하게 될 시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철강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나진항 뿐만 아니라, 위 노선이 나진·선봉항까지 확대된다면 남북연안 해운망을 기반으로 하여 동해안 항로를 구축한 후, 하카다-시모노세키-아키다 등 일본 서안의 주요 항만들과 자루비노-나호드카-보스토치니 등 러시아의 주요 항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환동해 해양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2) 서해의 주요 운송로 ; 남포항 ~ 인천항

서해의 주요 운송로로 자리 잡을 노선은 ‘남포항~인천항’ 노선이다. ‘남포항~인천항’ 노선은 실제로 1995년 개설돼 5.24조치 전까지 정기화물선이 운항했다.

남포는 1970년대부터 북한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해왔다. 남포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가히 평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남포는 평양에서 1시간 거리로, 수도권 항만으로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할 조건을 갖추었다. 실제로 2001년에 송원 터미널을 건설하면서, 항구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내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만약 북한의 수도권 항만인 남포항과, 남한의 수도권 항만인 인천항의 노선이 복원되고 이 노선이 평택항, 당진항과 연계된다면 남북연안해운망이 형성될 것이다. 만약 남북연안해운망이 형성된다면, 군산/새만금항과 목포항, 광양항 등을 경유하는 서, 남해안 항로를 구축 한 후 상해 이북의 북중국 주요 항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환황해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박창호강상근,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권 제1호 (2015.03). 33pg.

통일 한국에서의 인천항과 남포항 특화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천항은 위탁 가공용 원, 부자재의 반출 및 완제품의 반입기지, 남한의 합성섬유, 의류, 설탕, 전자제품 등 공산품 반출 항만으로 기능을 특화시켜야 한다. 남포항은 남포공단을 대상으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입 및 완제품의 반출, 남한의 컨테이너화된 공산품 반입이 주를 이루면 효율적이다.²⁶⁾ 또한 남포항은 자원 반출 항만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지하자원인 석탄, 시멘트, 흑연, 석고의 반출과, 해외로부터의 석유를 남포항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석유를 수입, 저장하는 남포항 인근 수상송유시설에서 1개였던 부두를 2개로 늘리는 증설 공사를 2015년 10월 이후 진행했다.²⁷⁾

3. 항공 운송로

항공운송은 짧은 운송시간과 해상, 육상 운송에 비해 높은 안전도로 보 험료와 포장비 절감에 있어서 타 운송 수단보다 높은 효율을 가진다. 따라서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육상과 해상 교통망의 경우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이 과다하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비교적 신속하다. 수요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인 항공운송로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은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어 항공교통망의 확충이 타 국가들보다 더 시급하다.

현재는 북한과의 항공 노선망의 연계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2004년 건 교부에서 시행한 ‘한국공역체계 개선연구’는 북한의 항공로와 항행시설 및 공항을 중심으로 다음 항공로를 구성하였다.

25) 박창호·강상곤,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권 제1호 (2015.03). 33pg.

26) 이태우·임종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권, (2000), 7g.

27) 디지털뉴스국, “RAF'북한' 석유수입 통로'남포항 송유시설 확장”,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03666>>, 2017.10.04.

<표 5> 통일 전 남북 항공로 구성(안)

1	서울-평양 서해 우회 항공로	안양 VORTAC - G597 GONAV - N3800,E12420 - N3848, E 12420-B332 - 순안
2	서울-평양 직항로	안양 VORTAC - 평양 하 백/DME
3	서울-금강산 항공로	안양 VORTAC - 강원 VORTAC - 금강산
4	서울-백두산 항공로	안양 VORTAC - 강원 VORTAC - KIMCH - 백두산
5	서울-나진 항공로	안양 VORTAC - 강원 VORTAC - KIMCH -나진

<표 6> 통일 후 항공로 구성 계획도 (안)

구분		항공로 구성
1	서울-신의주	안양-평양-A575
2	서울-강계	안양-평양-강계
3	서울-백두산	안양-원산-신도-장진-백두산(신무송,금란)
4	신의주-함흥	신의주-함흥
5	강계-청진	강계-청진
6	신의주-경원	신의주-강계-백두산-경원
7	평양-백두산	평양-신도-장진-백두산
8	평양-원산-강원	평양-원산-금강산-강원
9	안양-북창-평양	안양-북창-평양

이 중 통일 한국에서의 항공 운송로 중 물류 네트워크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노선은 ‘서울 ~ 나진’ 노선이다. ‘서울 ~ 나진’ 노선은 나선지역 및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구, 러시아와의 육로 운송 연결과 청진 공업단지의 직접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진, 선봉지역과 같은 북한의 대외 개방도시는 교류 물량이 많고 고가 화물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의 중국-한국 간 항공화물처럼 화물 차터 항공편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특히 서울 노선의 김포공항은 국제선 예비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 직항로 출발, 도착공항으로 매우 높은 활용가치가 있다. 국내선 허

28) 김연명·김제철 외 3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방안 구상”, 교통개발연구원, (2004.01), 55pg.

브공항으로서 김포공항을 통일한국에서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항공로 중 북한의 평양, 신의주, 함흥(선덕),청진 지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면 시설활용과 정치적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서울~나진’ 노선 이외에도 무역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추가할 수 있 공 운송로는 ‘서울 ~ 함흥’ 노선이다. 이 노선은 신포의 KEDO 사업 현장, 함흥 공업단지로의 접근이 양호한 노선으로 KEDO 관련 인적 이동 및 금속, 기계, 화학공업과 관련된 남북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이다.²⁹⁾

IV. 통일한국 운송로 개편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1. 통일한국 운송로 개편의 기대효과

통일한국시대에 국제 운송로의 개편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막대한 효과가 가져올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교역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운송로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중심화를 실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³⁰⁾ 아래에서 다음의 기대효과들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먼저, 교역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교역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UNESCAP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건설을 통해 향후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국제 운송로를 통한 수송 물동량은 2.4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전 세계의 53.2%차지하고 있었던 물동량이 71.3%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시아 역내 수송 물동량 또한 동 기간 사이 2.69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기존에 항공 및 해운에만 의존했던 운송로가 육로로 개편되면 통행시간, 대기시간, 여객 정차시간 및 상 하역 정차시간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육상수

29) 김연명·김계철 외 3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방안 구상”, 교통개발연구원, (2004.01), 55pg.

30)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18.

단에 비해 최대 5배 높았던 운임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므로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교역 물류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³¹⁾ 이렇듯,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제운송로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물류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인적, 물적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교류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류 중심화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입지여건이다. 통일한국은 입지적으로 동북아경제권에 중심에 위치하여 있어 물류중심기능 확보의 잠재력이 크다. 이런 여건에서 TKR이 건설되어 대륙철도와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등이 연결됨에 따라 중국을 넘어 유럽까지 철도의 이용을 통한 운송이 가능하게 된다. 남북한 철도의 연결은 여러 차례 합의된 바 있지만 TKR이 TAR과 연결되는 경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이 크다. TKR은 4개 지점에서 TAR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한국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4개의 통로는 두만강역과 러시아 학산을 통한 TSR과의 연계, 신의주와 중국 단중을 통해 TCR과 TMGR과의 연계, 만포와 중국지안을 통한 TMGR 및 만주횡단철도와의 연계 등이다. 이같이 육해공의 국제 운송시설이 완전히 연결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관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통합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2. 통일한국 운송로 별 제언

1) 육로

육로는 현재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무역에서 중요한 운송로로 사용되고 있다. 육로 운송로는 도로 운송로와 철도 운송로로 나뉜다. 이 중 도로 운송의 경우 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수송로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리적 여건, 에너지 절약, 주민 통제

31) 이백진. "한중아시아안하이웨이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국토연구원, (2014)

등의 이유로 도로개발을 억제하고 있어 도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 철도 운송의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과 국토공간의 협소로 인해 장거리 운송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³²⁾

향후 통일한국시대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의 육상 운송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³³⁾ 본 육상 운송로 제언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시대에 육상 운송로의 시설 및 체계에 대한 제언과 지역별 제언을 도로운송로와 철도운송로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운송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제외한 운송로 자체에 대한 제언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도로 운송로의 수송로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시대에 증가할 물동량을 대비해 대체 수송로의 개발 및 새로운 수송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부 노선과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과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 즉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별도로 조정함으로써 화물차량의 소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 운송로는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은 경우 해상운송이나 철도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이 단축되며 그 비용도 절감된다. 따라서 수송로의 확충은 물류산업에서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철도 운송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철도를 정비하고 분절지역을 연결하여야 하며, 국토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성이 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철도구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령 산업특구의 개발과 연계한 철도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이나, 나진·선봉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동북 3성의 화물 중계 기지로서 중계무역 및 그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의 서해안 관문인 남포와 동해안 관문인 원산도 역시 특구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해당지역들에 대한 철도운송로의 우선 구축이 문제점

32)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19.

33) 백승구, 「김천, 남양주, 김포 제1 물류도시로 부상」, 월간조선 뉴스룸, 2017.10.7.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³⁴⁾

통일한국시대에 육로 운송시설 및 체계에 대한 제언은 도로운송로와 철도운송로로 나누어 복원해야할 운송로와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한다.

먼저 도로 운송로의 경우 남북한 단절구간의 복원 및 확충을 해야 한다. 이때, 신규노선의 공급보다 기존의 단절도로의 복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울-평양축의 경우 통일한국시대의 가장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이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는 현 국도 1호선의 확장 및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동해선축은 현재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도7호선과 연결되어 있지만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 31호선, 국도 43호선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도 3호선 혹은 국도 5호선의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한반도의 지형학적 중심지인 철원 지역과 평강을 연결하여 동으로는 원산을 경유하여 동해축의 주요지점에 연결하고, 서로는 신계를 경유하여 경의축에 주요지점에 연결해야 한다.

둘째, 교통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도로의 경우 노후구간 및 시설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이 많다. 경의축의 안주와 신의주를 잇는 도로의 경우 북한 내에서는 1급도로이지만 선형이 나쁘고, 차선폭도 좁아서 아시안 하이웨이, AH1 중 가장 열악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의 남한의 고속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도로와 위계가 맞는 고속도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령 경의축은 남한의 고속도로의 맞게 4차선의 고속도로가, 동해축의 경우 기존에 연결되어있는 원산-금강산의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의 위계에 맞춰 2차선 고속도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육상 국제운송로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연계도로의 정비로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주요항만이 될 해주항과 남포항에 경의축과 동해축을 연결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 해주항과 개성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50번으로 2급 도로에 해당하며 시설이 열악하다. 심지어 이마저도 예성강에서 단절되어 다른 곳을 경유해야 해서 이동시간이 매우 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34)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19.

항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³⁵⁾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도로 운송망과 동북아 육상교통망을 연계해야 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로 연결되는 구간(AH6), 2개의 노선이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위해서 신의주~안주도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본 도로 연결 사업의 규모는 127.9km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4차로 연결 사업이다. 중국은 단둥~선양~장춘, 단둥~대련 고속도로이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지역의 평양~희천 고속도로를 연계하게 된다. 이때 남한의 문산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도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도로의 설계기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등의 상호의견교류가 요구된다.³⁶⁾

북한은 철도 화물운송 분담률이 90%이상이므로 통일한국에서의 철도 운송로의 통합 및 개편은 분단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통일한국의 경제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대용량, 고속의 철도 기반시설의 확충은 저비용·고효율의 한반도 국제운송로 확충을 앞당기고,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첫째, 철도운송로도 도로운송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한의 철도를 정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의 북한철도노선을 정비하고 교량, 터널, 침목 등의 낙후된 부분을 개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래의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여 선로의 복선화 개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의선축의 경우 동해선축과 달리 개성과 평양을 경유하여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로서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측되기에 복선화 개량이 요구된다. 남한철도는 철도연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제항인 부산항, 광양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 철도와 경의선, 경부선, 중앙선만으로 통일한국 시대의 화물을 운

35)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20.

36) 이백진. "한중아시안하이웨이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국토연구원, (2014)

송하기에는 선로용량이 부족해 선로용량을 확충해야만 한다.

둘째, 경의선을 복선화, 전철화하고 경부선의 선로용량을 확보하는 계획 등 남·북한철도의 국지적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는 접경지역 특구활성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한반도 내의 철도는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항만, 산업단지와의 철도 연결망 미비로 화물유치가 어려우며, 도로와 달리 문전운송(door to door)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역간의 연계운송 및 환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될 특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계운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행노선과 정차역의 선정, 차량기지, 기관차, 객화차사무소의 운영, 열차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철도를 통합한 이후에는 유라시아지역을 잇는 국제철도망과 통합된 국제운송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 철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 간의 양자간, 다자간의 철도협력이 필요하다. 통일한국, 러시아 철도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TKR(한반도 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연결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TKR노선을 확정하고 북한의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주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철도의 개보수를 완료하고 부산-나진 간의 컨테이너 해상운송과 TSR을 연계하는 운송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⁷⁾

2) 해양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고 평야보다 산이 70%정도나 되어 육로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이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또한 기본적으로 항만은 통일 이후 경제성이 입증된 북한의 광대한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필요시설이다.³⁹⁾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해상 운송을 완전히 활용하지

37)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291

38) 이태우·임종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권, (2000), 4pg.

못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육로수송에 대한 의존이 강하고, 해상운송에 대한 경제성 인식이 부족하여 해상운송의 원활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⁰⁾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유지만, 그마저도 육로 수송 환경이 열악해 내륙지역으로부터 항구를 고립시켜 남한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통일한국 시대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는 곧 항만물동량 증가와 급격한 항만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항만개발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독일 역시 통일 이전부터 항만물동량의 격증을 예상하여 항만개발은 물론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에 적극적이었으나,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에는 항만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착안해서 우리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운송로를 하루 빨리 구축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고, 그에 따라 필요한 하부구조와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한다. 본 해상운송로 제언은 하부구조와 시설 마련을 위한 총체적 제언과 효율적인 국제운송로 개발을 위해 특화된 지역별 제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일단 통일한국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항만 개발 전략은 남북항만시설의 통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 항만시설의 일체화된 현대화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의 항만시설과 남한지역의 항만시설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각종 하역장비이다. 하역장비는 항만의 물동량 처리 능력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장비로, 하역장비의 현대화는 곧 작업속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작업속련도가 동등한 장비운전기술자라 할지라도 사용 장비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작업자의 시간 당 업무처리 효율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⁴¹⁾ 연속 된 항만물류 처리 시스템 하에서 하역장비의 노후

39) 향진회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Ⅲ)”,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276pg

40) 이태우·임종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권, (2000), 4pg.

41) 향진회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Ⅲ)”,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293pg

화로 인하여 하역업무의 처리능력이 여타 시설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바로 하역업무의 적체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여타 물류처리 작업의 원활한 흐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신속한 화물처리에 큰 방해가 된다.⁴²⁾ 따라서 항만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일체화로 통합방향이 이루어져야 통일시대 해양 운송로에 기여하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 허브항과 연계가 가능한 항만시설 대형화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이 환황해, 환황해 네트워크에서 중개물류 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항만과 항만간의 해상화물의 운송을 가능케 하는 적정규모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처리를 할 수 있는 항만규모를 확보해야 한다.⁴³⁾ 실제로 세계 주요 정기 선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송단위당 운송비 절감을 위해 선박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만 보조 인프라 설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365일 중단 없는 화물처리 작업인 선진 물류산업운영을 위해서는 항만운영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의 안정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안정화된 전력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전력난은 남한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일한국 시대의 항공 운송로의 출발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난제이다. 만약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설비운영시간이 단축 된다면, 항만 화물처리의 지연으로 해상화물의 운송시간 증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서비스질의 저하의 원인이 되어 국제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또한 전력설비 노후화로 잦은 갑작스런 전력공급 중단은 전산설비 등 민감한 첨단 설비에 심각한 해를 끼쳐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지역별 제언의 경우, 본문에서 제안한 핵심 해양로 이외에 발전시켜야

42) 향진회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Ⅲ)”,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 293pg

43) 향진회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Ⅲ)”,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 294pg

44) 향진회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Ⅲ)”,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 294pg

할 항구들로 북한의 주요 공업지대의 관문인 청진항과 동해안의 북방 교역항으로 개발된 동해항을 연결하는 항로가 각각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한 간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서해안의 신의주, 해주항과 군산, 목포항간의 항로와 동해안의 나진, 원산, 홍남항과 동해안의 속초, 포항, 울산항의 항로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⁵⁾ 따라서 이들 항로의 항만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안해운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통일 한국에서 항해거리가 연안해운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부산항, 광양항, 나진항을 중심으로, 청진, 남포, 해주, 홍남, 원산항 등과 남한의 항만들을 활발한 연안 해운을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구별 통일이후 항만개발 방향은 이태우, 임종길이 제시한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7> Port development strategy in South Korea

항만	현행	개발 방향
인천	살화물(유류, 모래, 철재, 시멘트), 컨테이너	다목적(컨테이너, 살화물, 잡화)
평택	모래, 유류	다목적(컨테이너, 살화물)
군산	유류, 시멘트	다목적(컨테이너, 살화물, 잡화)
대산	유류 전용	현행 기능 유지
목포	살화물(유류, 모래, 시멘트)	다목적부두(컨테이너, 살화물, 잡화)
군산	살화물(유류, 시멘트, 모래, 광석)	현행 기능 유지
여수	살화물(유류, 시멘트, 모래)	현행 기능 유지
광양	살화물(유류, 광석, 철재, 시멘트, 모래), 컨테이너	현행 기능 유지(환적항)
마산	시멘트, 유류	다목적(컨테이너, 살화물, 잡화)
부산	컨테이너, 살화물(유류, 시멘트, 철재, 모래)	현행기능유지(환적항)
울산	살화물(유류, 시멘트, 철재, 모래)	현행 기능 유지
포항	살화물(광석, 철재, 유류, 시멘트)	현행 기능 유지
옥계	살화물(시멘트, 광석)	현행 기능 유지
목호	살화물(시멘트, 광석)	현행 기능 유지
속초	살화물(시멘트)	관광항
동해	살화물(시멘트, 광석)	다목적(컨테이너, 시멘트, 관광항)

45) 이태우·임종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권, (2000), 12pg.

<표 8> Port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항만	현행	개발 방향
남포	살화물취급부두(석탄, 곡물, 시멘트)	다목적 부두(컨테이너, 살화물)
해주	시멘트 전용항	현행 기능 유지
송림	제철전용부두	현행 기능 유지
나진	잡화부두	컨테이너 전용항(대러시아, 만주, 일본중계항)
선봉	유류부두	유류부두시설 확충 및 공업항으로 개발
청진	살화물 취급부두(철광석, 곡물, 각재 등)	다목적 부두(컨테이너, 살화물)
홍남	살화물 취급부두	현행 기능 유지
원산	살화물 취급부두	다목적부두(컨테이너, 살화물, 관광항)

3) 항공로

통일 후 남북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류량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류 및 인적 유통의 예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항공로를 적절히 분석하여 항공노선을 구축해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남북한 공항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항공운송산업 주체는 정부로, 항공시설 및 수송기가 매우 노후화 되어 있어 국제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용자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가 심각하다. 따라서 남북한 공항은 그 운항 횟수, 여객 수, 물동량이 크게 차이난다. 이런 차이가 가장 적은 공항부터 공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성공적인 통합운영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⁴⁶⁾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항공관련 시설 및 관리 운영 조직의 항공 운송 분야 수준이 남한에 근접하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든 공항의 통합 대신, 성공적인 통합운영 모델을 제시 한 후에 단계적으로 남북한 공항의 수준을 항공 운송로에 맞게 발전시킨다면 항공운송의 통합 운영을 앞당기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6) 향진희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346pg

특히 항공 ‘운송’은 해상운송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위해 존재하는 운송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야 한다. 항공기 항복의 한계로 인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대량의 운송이 필요한 자원들은 항공운송으로 수송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운임을 감수하더라도 짧은 운송시간을 요구하는 물품들이 해상운송로로 운송될 것이다. 따라서 항공화물터미널을 이러한 특성이 도드라지는 지역의 노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화물터미널은 수출입 항공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출 항공화물이 반입, 보관, 포장, 통관, 적재 및 수입 항공화물의 분류, 보관, 포장, 통관, 운송 등의 조업공정이 집중화된 보세구역이다.⁴⁷⁾ 주로 이러한 특성 물류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공항과 값 비싼 농산품을 신선하고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특산물 생산지와 가까운 공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V. 결론

무역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지원 내지 뒷받침하고 나아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효율적인 운송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시대에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합의 국제운송로를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은 통일한국의 중요한 국제운송로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해당 운송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시대의 국제운송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육, 해, 공 운송로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모든 운송로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단절된 남한과 북한의 도로망, 철도망, 항로 및 항공로를 연결하여 북한과 남한의 주요 항만

47) 향진희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12), 343pg

과 대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은 물류부문의 효율화를 가져와 화물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경제의 각 부문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새로운 국제 운송로의 개편은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 연계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통일한국이 유라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국제운송로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물류통합단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단계, 먼저 한국은 북한의 교통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주요단절구간에 대한 복원 및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북한 교통기반 시설의 신규 건설 및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3단계, 남북한 국제운송로를 완전히 통합하는 순서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져야한다. 또한 효율적인 단계별 사업진행을 위해 조직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남북 교통물류 부문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해당기구는 통일한국의 해운,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연결 및 연계운행에 관련된 실무적 차원의 차원부터 국제운송로 전반의 건설과 운영의 관련된 단계별, 사업별 로드맵 구축 및 이행방안의 도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제관계 전문가 파라그 카나는 그의 저서 『커넥토그래피 혁명』에서 지리적 연결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는 연결의 'connect'와 지리를 뜻하는 'Geography'의 합성어로 지역 간의 연결망 강화 및 통합을 통해 경제발전 및 정치적 진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책에서는 1965년 갈라섰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기반시설의 통합을 통해 상호의존관계를 발전시켜 기능적 연방국가로 통합되어 놀라운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중·횡단 철도 및 도로들은 '팍스 아프리카나(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

를 꿈꾸게 한다고 설명한다.⁴⁸⁾ 이는 통일한국의 국제 운송로 개편을 통한 남북한의 연결과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과의 지리적 연계는 단순히 교통망의 개편을 넘어선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여준다. 통일한국은 국제 운송로 개편을 통해 상품, 서비스, 금융, 인적자원, 데이터 분야에서 모든 흐름을 전달하는 중심지 자격을 가진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매킨지글로벌연구소의 연결지수에 따르면 위의 중심지 자격을 가진 도시는 뉴욕, 런던, 홍콩, 도쿄, 싱가포르, 두바이가 있다. 향후 통일한국이 평양, 개성, 원산을 연결해 중국의 만주와 연해주,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연결한다면 위의 거대도시들에 버금가는 정치적, 경제적 거점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8) 한승동, "연결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RINT/799038.html>>, 2017.10.9.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정한경·김영호·최창열, 세계화와 무역, 개정판, 형설출판사, 2008.

〈국내 학술지〉

이영균,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1.12).

국가정보원, “북한의 실태 및 구조개선방안”, (1999).

박신, “남북한 도로체계비교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2005).

송선욱, “한국 수출입 물류기반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증(12), (2001).

김덕녕·조성민, “아시아인 하이웨이 정부간 실무그룹 회의 및 공동 세미나”, 대한토목학회지, 64(1), (2016).

박호신·홍승린,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15(3), (2014).

성낙문·김연규·안병민, “남북연결 도로, 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김경희, 이학승, “동북아 물류 중심인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중단철도(TCR)의 연계추진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04).

이백진, “한중아시아인하이웨이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국토연구원, (2014).

정봉민 외 6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 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항진희 외 15명,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12).

이태우·임종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0).

박창호·강상곤,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권제1호 (2015.03).

성원용, “흑해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 국제운송의 정치경제: 트라세카와 남-북 국제운송로를 중심으로”, e-Eurasia, 7권(2008).

김연명·김제철 외 3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운송 협력방안 구상”, 교통개발연구원(2004.01).

이영형,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북동부 진출과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 아태연구, 20권 3호(2013).

배형수, “국가 해양력 발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정책 심포지엄, 3회 (2006.08).

〈신문기사〉

박연직,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경쟁 치열」, 세계일보, 2017.09.10.

백승구, 「김천, 남양주, 김포 제1 물류도시로 부상」, 월간조선 뉴스룸, 2017.10.7.

〈인터넷 자료〉

디지털뉴스국, “RAF“북한, ‘석유수입 통로’ 남포항 송유시설 확장”,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03666>>

한승동, “연결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RINT/799038.html>>

입 선

통일인문학과 ‘민족’이라는 이름의 타자

- 소설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유현성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통일인문학과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 III. ‘민족’이라는 이름의 ‘타자’와 남한 사회
- IV.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통한 통일문제 재고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통일인문학과 ‘민족’이라는 이름의 타자

- 소설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통일 담론이 사회학·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통일 담론은 ‘북한’을 ‘동일’, ‘동질’로 이해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가 경제 사회 분야에 간혀 정서적, 문화적 통일 사회의 모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는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가진 ‘통일인문학’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을 방법론으로 한다. ‘통일인문학’은 ‘인문학적 관점의 통일 담론’과 달리 통일과 분단에 대한 가치-정서-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학문의 중점적인 개념으로는 ‘분단의 아비투스’와 ‘타자’다. ‘분단의 아비투스’는 분단이 생산하는 사회적 신체, 다시 말해 ‘분단’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를 말하며 이것이 다시 ‘분단’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구조의 재생산은 ‘북한’을 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분단 정서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타자’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동질성’, ‘동일성’, ‘민족’으로 파악한 것에 반해 ‘타자’로 이해한다면 더 넓은 통일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카프라가 제시한 ‘역사’와 ‘기억’의 개념에서 본고는 ‘일차 기억’과 ‘이차 기억’을 제안한다. ‘이차 기억’이란 사건 당사자와 참여 관찰자가 만나는 기억으로 이는 문학텍스트와도 같다. 이에 문학 작품인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와 이웅준의 『국가의 사생활』을 ‘이차 기억’의 텍스트로 삼아 분석한다.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는 현재 ‘남남갈등’과 ‘헬조선’이라는 두 담론을 표층적으로 잘 보여줘 통일 사회로 나아가기 전의 남한 사회를 점검할 텍스트로 판단된다. 이웅준의 『국가의 사생활』

활』은 기존 통일 문학과 반대로 디스토피아 통일 사회를 보여준다. 이것은 ‘장밋빛 통일’을 말하던 연구들과 다른 지점과 가치를 나타낸다. 본 작품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돼서는 안 될 통일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주된 통일 당위성으로 제시된 ‘민족’을 ‘동질’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타자’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타자로서 ‘민족’을 다시 재고해야 함을 제안한다. 통일은 회복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할 가치다.

본고는 현재 남한 사회가 처한 상황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담론이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 통일 담론에서 정작 배제되어 온 것은 북한 사회가 아닌 ‘남한 사회의 현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헬조선으로서의 남한 사회’가 앞으로 통일 사회에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와 이용준의 『국가의 사생활』을 분석하면서 ‘헬조선 사회’의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사회 역시도 그대로 ‘헬조선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을 젊은 층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헬조선 사회’의 자생적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흡수통일로 통일 사회가 이뤄진다면 ‘난민’ 성격의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며 그대로 ‘헬조선 사회’의 2등 국민, ‘국민이지만 국외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고는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동질성의 ‘주체’로서 통일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과 북이 ‘주체-주체’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타자-타자’, ‘역지사지’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환대의 권리’를 서로가 가져야 하는데, 기존의 ‘환대의 권리’는 이주 사회에서 사용하는 개념임으로 이를 우리의 특수성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주인 없는 집’, 다시 말해 ‘게스트 하우스’형 통일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의 통일 사회는 ‘타자-타자’의 만남임으로 ‘주인’이 없는 공간이 ‘통일 사회’여야 한다.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만남은 서로가 타자로서의 만남임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합하여

지내야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서로가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족이 되어야할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중도적 담론을 '게스트 하우스'형의 통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주제어: 통일인문학, 민족, 타자, 트라우마, 아비투스, 분단, 통일, 헬조선,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라카프라, 타인, 레비나스, 헤겔, 통일 담론.

I. 서 론

1. 문제제기

기존의 통일 담론은 사회학·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가적, 사회적 층위에서 논의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층위의 논의는 국민, 시민으로까지 닿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의무로서만 논의되어 실질적으로 통일 주체들이 통일에 대한 담론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의 ‘흡수통일론’, ‘평화통일론’, ‘통일대박론’, ‘민족통일론’ 등이 통일 담론의 쟁점이 되어왔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통일 담론들은 지식인 담론으로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현재 민족이라는 통일 당위성에 위협을 가했다. 특히 ‘민족통일론’은 분단된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일한 ‘민족’임을 강조하여 남과 북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둘째, 국가 중심의 통일 담론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통일대박론’과 ‘흡수통일론’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있지 않다. ‘사람’이 없는 경제, 사회적 통일 방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셋째, 남/북 간의 통일 인식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통일의 실리적 이유를 들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인식의 간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넷째, 통일 주체의 분열을 나타냈는데, 북은 ‘김 정권’과 ‘북한 주민’이라는 통일 주체로 분열되어있다. 정작 남한의 통일 협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 정권과 논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또한 남은 다문화사회에 들면서 여러 통일 주체들이 등장하여 이들 역시 포섭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다섯째로는 통일 주체가 국가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 들이냐에 따라 그 정책의 효율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에서의 북한’과 ‘분단에서의 북한’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통일에서의 북한’은 민족, 동포, 동질이 강조되는 반면에

‘분단에서의 북한’은 전쟁 위협, 이념 차이, 국방, 등으로 강조된다. 즉 북한이 ‘타자’인지 ‘민족’인지에 대해 혼란이 매년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우리에게 ‘타자’로서 약 70년간 존재해왔다. 오히려 같은 ‘민족’임을 상기하는 것보다 위협적인 ‘타자’로 인식되는 것이 북한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점 역시도 지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바로 북한은 ‘민족’이라는 ‘타자’라는 새로운 인식과 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사회학보단 인문학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인문학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양상과 형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자신의 심리적 층위를 분석한다. 따라서 … 사회과학의 기계적 결합 또는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문학적 고유의 관점과 방법, 대상에 기초”¹⁾한다.

고로 논자는 통일인문학(humanities for unification)과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두 관점을 축으로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헬조선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의 문제가 통일 사회에서도 존재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학은 긴밀하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논자가 통일 담론을 연구하는 동안 사회과학적 조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문학과 예술은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에 있다. 타자에 대한 욕망은 문학과 예술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가 텍스트로 삼은 작품은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와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다. 소설 「한국이 싫어서」는 현재 남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투사하여 보여준다. 우리는 ‘통일 사회’에 진입할 때, 그저 ‘통일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에서 ‘통일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니 현재의 사회 이해는 통일에 대한

1)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92집, 철학연구회, 2011. 144면.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싫어서』는 통일 주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국가적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통일 사회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가치를 제시할 것이다. 『국가의 사생활』은 “더 이상 통일이 ‘장밋빛 전망’ 이 아닌 현실, 유일하게 가능한 통일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이라는 현실”²⁾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대한민국의 디스토피아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되선 안 될 통일사회 지점들을 점검해 볼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많은 사회학적 연구 중에 논고와 진행 방향이 맞는 연구로는 최우선, 황태희, 최영준, 주형민³⁾의 연구이다. 이들은 최근 편익계산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요인이 남한주민의 통일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익계산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논문으로는 김병로와 최경희⁴⁾의 연구인데, 남한의 통일의식과 북한의 통일인식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고 대북, 통일 정책에 있어 유효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남보단 북한 주민들이 더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적 이질성과 차이가 크다는 점, 상호 불신과 불안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북한의 통일인식 조사 대상이 탈북자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인문학적 통일담론(humanistic discourse for unification)⁵⁾의 연구는 몇 편이 존재한다. 남한의 다문화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변중헌⁶⁾의 논문이 있다. 그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통일의 주체, 통일 필

2) 장성규, 「통일문학을 넘어 탈분단 문학으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0. 61면.

3) 최우선, 황태희, 최영준, 주형민,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59집 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4) 김병로,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분석」, 통일과 평화 4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5) “통일인문학(humanities for unification)은 인문학적 통일담론(humanistic discourse for unification) 다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143면 참고.

6) 변중헌,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일담론」, 윤리교육연구 34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요성의 이유와 근거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족동질성 관념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논의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과 이 변화가 남북한 사이의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임채완, 정소영⁷⁾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실천 과제에 있어 독일의 사례가 중요하다고 주지한다. 통일이란 국가기구나 영토와 같은 외형적 통합뿐만 아니라, 통일문화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회내적 통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결론에서 정책적, 사회 문화적 의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다문화 담론과 반대편에 있다고 볼만한 민족적 시각의 논문은 상당했다. 해당 논문들은 기존의 민족적 시각을 유지하는 입장보다는 그에 대한 수정 통일담론이 주를 이뤘다. 허명철⁸⁾은 정치적 제도적 요소와 이데올로기 등은 통일을 이룩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이익과 민족소망이란 두 가치이념의 합일화는 통일의 전제 과제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접한다면 분단은 해외 동포도 포용한다는, 민족대통합, 대화합의 입장이라고 점지한다. 조성환⁹⁾은 민족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햇볕정책'에 전제된 '민족 패러다임'이 민족담론을 주도했지만, 그 지식사회학적 결과는 '남남갈등'의 심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즉, 민족이라는 에피스테메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박순성¹⁰⁾은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해한다. 그는 민족이나 국민국가 자체는 통일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통일과정이나 이후에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더 이상 '남북' 정체성보단 '한국인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
- 7) 임채완, 정소연, 「한국 통일문화의 다문화적 접근」, 대한정치학회보 22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14.
- 8) 허명철, 「민족적 시각에서 보는 통일담론」, 통일인문학 50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 9) 조성환, 「통일론의 비판적 지식사회론-민족패러다임의 비판적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3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 10)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14집, 북한연구학회, 2010.

통일인문학(humanities for unification)적 관점으로 연구된 사례는 『통일인문학』 논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통일인문학은 2009년에 연구단을 출범하여 ‘북한학’과 다른 학문적 성과를 올렸다. 김도식¹¹⁾은 ‘통일인문학’의 개념과 학문적 목표를 정리하여 제시했고, 김성민과 박영균¹²⁾은 다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인문학’의 기초적 개념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¹³⁾

II. 통일인문학과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연구방법으로 ‘통일인문학’은 ‘인문학적 통일담론’(humanistic discourse for unification)과는 다르다. ‘인문학적 통일담론’은 통일을 사유한 인문학자들의 논의 또는 인문학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통일에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그러나 ‘통일인문학’은 분단체제를 작동시키는 가치-정서-문화를 다룬다.¹⁴⁾ ‘통일인문학’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의 필요성과는 다른 측면, 즉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¹⁵⁾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통일담론은 ‘동질성 대 이질성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통일’과 ‘민족’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힌 듯이, ‘하나 됨’

11) 김도식, 「‘통일인문학’의 개념 분석」, 통일인문학 51집, 155~172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05.

12) 김성민, 박영균,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인문적 비판과 성찰」 통일인문학 56집, 85-113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강민길, 백낙청,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범한철학 59집, 범한철학회, 2010. 507-533면.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92집, 철학연구회, 2011., 143-172면.

13) 통일인문학의 시론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김성민, 「분단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인문학」, 대동철학 52집, 대동철학회, 2010. 김성민, 「분단시대, 통일 사유와 철학의 실천」, 철학 128, 191-215면, 한국철학회, 2016.

14)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92집, 철학연구회, 2011.

15) 김도식, 앞 논문, 155~160면 참고.

을 강조한 탓이다. 통일은 회복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다. 분단이 70년이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동질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통일인문학’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은 ‘타자’에 있다. 김성민과 박영균은 이것이 기존의 통일담론과 가장 다른 점임을 지적한다. 그들은 송두율의 ‘휴전선’ 개념을 든다. ‘휴전선’이란 서로에게 경계체험을 제공하고 타자의 본질을 타자 내부에게 찾는 내재적 비판적 방법론이다. 통일철학의 존재론적 패러다임은 ‘타자의 타자성’¹⁶⁾에서 출발해야 한다.¹⁷⁾ 우리가 북을 타자로 인정할 때, 그때야 말로 우리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날 수 있다. 한병철은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시스템은 자기파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레비나스의 동일자와 타자의 개념을 들면서 ‘타자의 부정성은 동일자에 형체와 척도를 제공’해주며, ‘동일자는 타자에 대한 차이 덕분에 형태와 내적 밀도, 내면성을 지닌다고 말한다.’¹⁸⁾ 이것은 김성민도 지적한 ‘분단의 아비투스’와 상통한다 볼 수 있다.¹⁹⁾

그렇다면 ‘분단의 아비투스’는 무엇인가? 먼저 ‘아비투스’란 부르디외의 사회철학적 개념으로 그는 아비투스를 “객관적인 유형 분류가 가능한 실천의 발생적 원칙이며, 실천의 분류 체계이자 표상된 사회체계, 즉 생활양식의 공간이 구성되는 것은 실천을 발생시키는 능력(아비투스)과 이러한 실천과 그 결과물(취향)을 차별화하고 평가하는 능력 사이의 관계를

16) “의식의 차원에서 타자는 합리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내 안의 타자’와 ‘역지사지’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의 타자는 내 안의 타자로서, 최소한 나와 의사소통의 규칙을 공유한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무의식의 차원에서 타자는 나와 규칙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내 밖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타자이다. 남과 북의 적대성은 바로 이 ‘타자의 타자성’을 통해서 작동한다.” 김성민, 박영균, 위 논문, 149면

17) 김성민, 박영균, 위 논문, 148~150면.

18) 하지만 김성민과 박영균이 말하는 ‘타자의 타자성’이 반드시 한병철의 타자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통일인문학은 ‘타자의 타자성’을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며 그것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병철이 말한대로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8~9면.

19)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은 사회의 ‘신체’ 분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통일에 있어 남북 갈등보다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해서 결정”²⁰⁾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성민과 박영균은 그의 개념에 덧붙여 “체화된 성향체계이자 신체의 사회적 사용이며, 사회화된 신체의 생산이다. ‘그것의 뿌리는 신체를 유지해주고 떠받치는 하나의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자신을 변모시키면서 스스로를 생성시키고 영속시키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신체의 지속적 존재방식이고 환경과의 이중적 관계, 즉 구조화되고 구조화시키는 관계’이다.(Bourdieu pierre) 따라서 ‘아비투스’는 우리 신체의 운동들 가운데 일부를 생산하는 본능만큼이나 거의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본능’이”²¹⁾라고 정의한다.

‘분단의 아비투스’는 분단체제론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층위를 가진다. 첫째, 분단 체제 그 자체가 남과 북이라는 결손국가의 결핍을 메우면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아비투스’와 둘째,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지향성에 의해 생산되는 ‘남과 북의 아비투스’, 마지막으로 근대화 서구적 근대화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전통들과 함께 있는 ‘식민지화/탈식민화의 아비투스’가 그것이다.²²⁾

요약하자면 ‘통일인문학’에서 가장 중점인 개념은 ‘분단의 아비투스’ 그리고 ‘타자’이다. 이것의 분석을 통해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통일인문학’의 목표이다. ‘분단의 아비투스’는 남남갈등을 설명 할 수 있다. 북한을 ‘타자’가 아닌 ‘민족’이라는 동일성으로 파악한 기존의 통일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 것이다.

그런데 ‘분단’과 ‘통일’은 역사적 사건이다. 가치-정서-문화를 다루는 ‘통일인문학’에서 역사성이란 실증주의 역사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트라우마’란 ‘실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사건)’를 기억하는 방식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라카프라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관점을 주창해낸다. 역사학자 카가 ‘역사는

20) 홍성민, 「아비투스의 두 얼굴-프랑스 지성사에서 부르디외 학문의 위상」 프랑스문화연구 제 12집, 프랑스문화연구학회 2006. 228면.

21)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157면. 재인용

22)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157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역사 상호텍스트성'은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에서 언어란 증상이자 치유 방법이듯, 과거와의 '대화'는 정신분석적 치유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그 피해자일 수도 있다. 카의 대화가 '역사적인 것'을 통한 대화였다면 라카프라는 '언어적인 것'을 통한 역사와의 대화이다.

따라서 라카프라는 '대화로서의 텍스트 읽기'를 강조하며 그 내부에 있는 긴장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있는 '목소리'를 읽기 위해 바흐친의 대화화²³⁾를 강조한다. 텍스트는 단일한 독백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갈등과 긴장을 이루며 모여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 안에 있는 목소리와 대화하는 것이다.²⁴⁾ 라카프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떠한 맥락에서 텍스트를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라카프라의 관점은 우리가 통일과 분단에 대한 역사를 접근할 때 유용할 것이다. 남과 북이 (오로지 동질성만 강조하는 태도로) 각각의 역사의 '사실성'만을 강조한다면 절대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수사학적 인간'으로서,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타자와 대화를 한다²⁵⁾면 진정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만들어 가는 '공통의 언어규칙'이다."²⁶⁾

23) '대화화' 라고도 하기도 하며 '다성성多聲性' 이라고도 한다. 바흐친은 '다성성'을 강조하면서 민중성, 즉 민중의 언어가 반영되는 것이 소설이라고 정의한다.

24) 라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346면

25) 이 점에 대해 "고진은 '자기대화' 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내성' 적 사유로부터 우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진이 말하는 타자와의 대화란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 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김성민과 박영균은 이에 어떤 언어규칙도 공유하고 있지 않기에 소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언어의 공동규칙을 창조 또는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어 속에서 연기를 다시 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어떤 구조에도 헌신하지 않으며 언어 놀이 자체를 즐긴다." 라는 라카프라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150~151면.

26)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151면.

그런데 ‘트라우마’란 역사가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분단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여기서 라카프라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역사와 기억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서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결코 완벽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열린 변증법적 작용을 한다. 기억은 역사 그 이상이기도 하고 이하이기도 하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역사는 기억이 지닌 어떤 요소를 결코 포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령 어떤 경험에 대한 느낌, 기쁨과 고통의 강렬함, 사건의 질적 측면 같은 것 말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이런 한계와 함께 기억이 규명하지 못하는 인구 통계학적, 생태적, 경제적 요소를 내포한다.²⁷⁾

라카프라에게 ‘역사’와 ‘기억’은 콘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이다. 더 나아가 라카프라는 기억을 ‘일차 기억’과 ‘이차 기억’을 구분한다. 일차 기억이란 어떤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그 사건을 특정한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초점화하여 봐야할 기억은 ‘이차 기억’이다.

“이차 기억이란 일차 기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일차 경험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분석자나 관찰자, 역사학자 같은 간접 목격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건 당사자와 참여 관찰자는 이차 기억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 지점은 그들이 정확한 기억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다.”²⁸⁾

이 장소는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문학’이 될 수 있다. 문학은 다시 기억

27) 라카프라, 앞 저서, 84면.

28) 라카프라, 앞 저서, 84면.

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트라우마에 관한 기억은 항상 이차적’이다.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은 바로 경험 속으로 통합되거나 직접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데, 하나의 사건은 그것이 일으킨 여러 가지 효과와 자취를 통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²⁹⁾ 문학은 곧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는 증상이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증상도 트라우마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문학’, ‘통일문학’, ‘분단문학’ 모두 ‘이차 기억’이다. ‘이차 기억’이란 통일인문학과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읽어야 할 ‘텍스트’인 것이다. 또한 통일과 동떨어진 ‘헬조선이라는 남한 사회’역시도 마찬가지로 통일 역사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읽는다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이차 기억’ 속의 트라우마이다. 그래서 논자는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싫어서』는 현재 남한 사회의 아비투스를 보여준다. 또한 ‘계나’라는 인물이 ‘남한 국민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회, 국가, 사람의 통일이 목적이 목적인 우리에게 이 소설은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통일과 아주 밀착되어 있다.

남한사회의 트라우마나 아비투스를 우리 자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힘이 있어야 통일사회의 문제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다. ‘이차 기억’속의 ‘분단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알아야 한다.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신체를 재생산하는 아비투스 말이다. 바흐친이 말하는 다성성, 다양한 목소리도 문학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자면, 본고는 통일인문학이 제안하는 연구 방법과 대상에 있어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즉 콘텍스트(더 정확히는 역사철학)를 통해 ‘이차 기억’(문학 텍스트)에 적용해보고 이를 통해 밝혀진 ‘분단의 아비투스’와 ‘분단의 트라우마’, 그리고 ‘헬조선 아비투스’를 밝혀 분단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29) 라카프라, 앞 저서, 85면.

Ⅲ. ‘민족’이라는 이름의 ‘타자’와 남한 사회

1. 민족과 타자

민족은 ‘본질주의’와 ‘구조주의’ 이원론적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다. 민족을 ‘시기적으로 근대에 일차적으로 언어, 지역, 문화, 정치, 경제, 역사의 공동 및 민족의식과 부차적으로 혈연의 공동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공동체’로 보는 본질주의적 시각과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했으며 민족은 일개의 ‘상상된 공동체’로 인식되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구조주의 입장에서 민족은 이전에 존재하던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물려 받아야하고 여러 가지 신화와 기억, 상징을 합체시켜야 하며 그 자신의 것들을 고안해야 한다. 민족형성은 단순한 근대화과정의 일부인 것은 아니며 민족적 선조에 의해 결정된다.³⁰⁾

그러나 우리에게 ‘민족’은 본질주의와 구조주의라는 이원론적 시각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왜 ‘민족주의’를 주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김성민과 박영균은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한다.

분단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남/북의 적대적 대치 속에서 ‘분단국가의 국민’을 생산해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분단국가’는 민족≠국가라는 결핍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는 ‘민족≠국가’라는 결핍을 감추고 ‘민족=국가’로 자신을 상징화함으로써 한민족에서 유일한 민족국가로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리에 ‘국가’를 놓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리가 바꾸는 전치의 과정을 필요로 했

30) 이에 덧붙여 허명철은, 구조주의적 인식이 현재 민족대통합이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적합한 개념이라고 본다. 허명철, 앞 논문, 311~313면.

다. 따라서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는 ‘민족=국가’를 ‘국가=민족’으로 전치시킴으로서 ‘민족=남/북’이라는 분열과 결핍을 ‘남=민족’ 또는 ‘북=민족’이라는 상징화를 통해 그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자로 내세울 수 있었다.³¹⁾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민족주의는 우리 스스로를 응집시키는 힘이었고 이것이 지속되어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국가의 당위성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박정희 시대의 주체적 민족 사관에 따라 강화된 민족주의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족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이해처럼 여러 문화 중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현재 남과 북에서 민족은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근대주의적 입장을 지닌 에릭 홉스봄은 종족과 언어 면에서 동질적이며 단일국가로서의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세계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든 국가를 한국으로 뽑고 있다.³²⁾ 이와 관련한 민족과 통일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매번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에 ‘같은 민족이라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근대에 이르러 ‘민족’이 재호명되고 있어도, 에릭 홉스봄이 말한 ‘동일적 민족’의 의미가 그대로 남한 사회에 적용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차승윤도 다양한 관점이 아닌 현재 중등·고등교과서에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다고 주의한다.³³⁾

이병주는 “민족주의 이념을 그 자체로 정당화하는 것보다 민족주의의 현실적 힘을 인간다운 삶의 지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모색과 지혜롭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민족주의는 계급,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이념적 지향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논해질 대만 유의미하다”³⁴⁾고 지적한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방향의 민족정체성을

31) 김성민, 박영균, 앞 논문, 91~92면.

32) 그는 또한 “역사와 문화 혈연적 기반들이…근대로 이어졌고, 전근대시대에 기원한 문화적 혈연적 유대가 근대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한다. 이병수, 앞 논문, 360면

33) 차승윤, 앞 논문, 참고.

찾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트라우마에 묶여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이 되지 못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민족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민족은 ‘기억’의 공유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역사가 아니다. ‘기억’은 누가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정서도, 재현도 다르다. ‘기억’은 일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는 객관성을 확보해야함으로 모든 사실들을 ‘일치’시켜야 한다. ‘분단의 아비투스’라는 지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분단의 아비투스’는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처럼 한민족을 응집시키는 장소이다. 기억은 ‘장소’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람의 통일’이란 ‘한 사건에 대한 공동 기억’이어야 한다. 논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민족정체성’이란 ‘공동 기억의 공동체’다. ‘공동 기억’은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평화주의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담론들은 ‘분단’에 대한 각각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공동 기억의 민족’은 통일인문학의 개념인 ‘타자의 타자성’에서 ‘타자성’이 배제된 ‘민족정체성’이다. 기억의 공유는 서로가 타자임을 인정한 공유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축된 기억 외의 타자성, 예를 들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부터 교육기관, 아파트 등의 모든 이질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때 ‘타자성’은 소통할 수 없는 ‘타자성’이다.

박민철³⁵⁾은 헤겔의 ‘타자’ 개념에서 이를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다. 그는 ‘나와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의 타자, 그리고 사유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타자성의 기본적 틀을 헤겔의 타자 개념’에서 찾는다. 그는 헤겔이 ‘서로가 구별되면서 서로가 매개되어 있는 존재와 무의 통일로서 생성의 의미를 <타자와의 통일>로 정의’했다고 언급한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가 ‘無(무)’이기도 하다. 타자의 존재는 나와 동시에 발생한다. ‘헤겔식의 타자와의 관계는 동일성으로의 회귀를 전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타자는 동일성으로

34) 이병주, 앞 논문, 24면

35) 박민철, 「헤겔 ‘타자’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단, 2011. 217면.

포함되는 이행적인 계기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헤겔의 타자 개념을 적용시켜보면 북한은 남한과는 상이한 존재로서 타자이다.³⁶⁾ 하지만 그의 주장은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북한이라는 '타자'를 인식하며 그 차이를 드러낸 점과 더불어 '타자'를 동일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시킬 무엇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와 '타인'을 구분한다. 타자는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자아 자체가 결코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대해 외재적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신비와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외재성은 공간의 특성으로서,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는 빛(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³⁷⁾ 즉 우리는 통일이라는, 분단이라는 '외재성'에서 만나야 한다. 그것은 '사건'이기도 하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이며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이다. <받아들인> 타자, 그것은 <타인>이다.³⁸⁾ '타자성'은 '타인'과도 구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트라우마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의 트라우마가 다르다는 것은 그 치유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트라우마'는 주체가 겪은 사건에 대한 최초의 방어기제로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민족적 리비도'가 '트라우마'를 생성한 것은 '주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인 것이다. 정신분석학적인 '트라우마'의 치료에 있어 방어 기제를 갑자기 해체하면 내담자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한다. 즉, 피드백,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트라우마' 치유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로 응집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36) 박민철, 위 논문, 219~221면 참고.

37)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85면.

38) 레비나스, 위 저서, 91면.

2. 헬조선의 사회로서의 통일

현재까지의 통일 담론은 언제나 지금의 ‘남한 사회’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한 사회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일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2014년에 접어서자 ‘헬조선’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헬조선이라는 말에는 청년들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정서가 담겨 있다. 헬조선은 청년들의 경제적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³⁹⁾

특히 ‘헬조선’이란 용어가 ‘청년’들에게 나타났다는 점은 아주 큰 문제다. 통일의 주체라며 기성세대들이 추켜세워도 그들은 정작 ‘통일 주체’가 될 생각이 없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세대로 일컬어지던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여 ‘N포 세대’라고까지 지칭되고 있”⁴⁰⁾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2000년대 이후 전쟁발생방지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리적인 이유들, 경제 성장, 북한 자원 활용 등이 더 부각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⁴¹⁾

남한 사회가 통일을 ‘실리주의’적 ‘합리주의’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났다. 최우선 외 3명⁴²⁾은 ‘민족주의적 유대감은 그 영향이 더 분명하게 약화되고’ 있고 ‘N세대는 당위론적 통일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물론 아직까지 ‘민족’이라는 당위성은 통일에 있어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헬조선’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민족이 타당한 당위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정훈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청년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39) 정정훈, 「헬조선의 N포 세대와 노력의 정의론」, 문화과학 86권, 문화과학사, 2016.

40) 정정훈, 위 논문, 136면

41) 김병로, 최경희, 앞 논문, 107면.

42) 20대가 당위적, 감정적 차원보다는 실리적,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최우선 외, 앞 논문, 참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지 ‘헬(hell)’인 것만이 아니라 또한 ‘조선(朝鮮)’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에는 전근대 사회의 ‘미개함’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강력한 특성이라는 의미 역시 담겨 있다. 그 미개함이란 무엇보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한 현실이 마치 신분제 사회 조선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체념이 헬조선이라는 말에 결부되어 있다.⁴³⁾

이 헬조선에 ‘통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헬헬조선’이 될 것인가? 청년들은 오히려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려 하고 있다. 청년들이 외면이 아니라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북’이 미개가 아니라 ‘보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상’이나, ‘기성세대들이 주장하는 허위의 통일 당위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 배후에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화가 놓여 있다. 더 문제인 것은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헬조선’이 만들어내는 담론이다. ‘분단의 아비투스’보다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것은 ‘헬조선의 아비투스’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사회적 신체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재생산하는 방식이 자신의 신체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노오력’은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하고 있다.⁴⁴⁾ ‘노오력’은 ‘노력’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신조어이다. 훗날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노오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지금 당장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사회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과정으로서의 통일’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43) 정정훈, 앞 논문, 138면.

44) 대학생들의 학벌에 대한 섬세한 구별의식과 다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그들이 정의감과 공감 없이 특권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들의 삶의 태도로서 노력의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입시 준비를 통해 신체에 새겨진 노력하는 삶은 이제 이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태도가 되었으며, 정의에 대한 감각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의 보수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 이면에는 바로 이 노력의 도덕, 노력의 ‘정의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정훈, 앞 논문, 146~147면.

분명하다. 남한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를 ‘민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문제를 표층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통일에서 ‘인문학적 인식’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IV. 『한국이 싫어서』와 『국가의 사생활』을 통한 통일 문제 재고

1. 『한국이 싫어서』

- ‘헬조선’의 남한사회

『한국이 싫어서』는 위와 같은 ‘헬조선 아비투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준다. 소설은 ‘계나’라는 인물이 한국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호주로 이민을 간다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의 애인 ‘지명’을 한국에 두고 호주로 떠난다. 호수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녀는 ‘2등 시민’의 삶을 체험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숙박비를 내고, 아르바이트는 최저 시급도 못되는, 그것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런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기대하는 것은 호주의 ‘시민권’이다. ‘시민권’이 있다면 ‘계나’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지.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무턱대고 욕하진 말아 줘.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는 있

는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생략)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2015. 10~11면. 이후 면수만 표시)

그녀가 ‘한국을 싫어’ 하는 이유는 그녀가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싫어서’ 는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 와 같다. ‘못 살겠어서 한국이 싫다’ 는 감정은 그녀를 ‘멸종 돼야 할 동물’, 호모 사케르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서러운 동물은 호주에서도 ‘동물’ 처럼 말도 못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나 적어도 ‘멸종 돼야 할 동물’ 은 아니다. 호주에 있다는 것이 계나의 굳은 희망이자 의지였다. 호모 사케르도 어느 ‘국가’ 에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 사회엔 ‘분단의 아비투스’ 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헬조선의 아비투스’ 역시 존재하며 ‘분단의 트라우마’ 와 더불어 ‘헬조선의 트라우마’ 가 있다. 아비투스와 트라우마의 다성성 확인은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계나는 ‘헬조선’ 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계나는 ‘난민’ 의 위치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고국에서 ‘도피’ 한 것이다. ‘난민은 국민국가의 질서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표상’ 한다. 무엇보다도 ‘난민이 인간과 시민 사이의 동일성, 출생지와 국적 사이의 동일성을 깨뜨림으로써, 주권의 원초적 허구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난민이라는 분명 주변적인 형상은 국가-국민-영토라는 낡은 삼위일체를 파괴’ 한다.⁴⁵⁾ 즉 경쟁력 없는 ‘한국인’ 이란 ‘난민’ 이라는 말이다. 이점은 통일 이후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연 북한 주민들을 ‘난민’ 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난민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기에 있다.

45) 조르조 아감벤, 「인권을 넘어」,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06, 240~241면.

또한 계나가 ‘내가 태어난 나라라도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적 접근이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헬조선 아비투스’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난 나라’도 부정함에 있어 ‘민족’이란 더 이상 국가의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 언급했듯, ‘민족’은 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출생’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세계화와 다문화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Identity’가 아니라 ‘From’이 중요해진다. ‘From’은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국경선’을 생성하여 경계성의 ‘타자’를 생산한다. 그녀가 호주로 가겠다는 것은 ‘휴전선’보다 ‘국경선’이 더 낮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휴전선’은 항상 긴장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긴장이 지속되면 히스테리적으로 모든 일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From’의 한국인으로서 호주에 도착했을 때도, 그녀는 자신의 ‘Identity’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는 ‘From’의 이유로 2등 시민이 된다. 이 점은 통일 사회에 있어 이북 주민들이 ‘From’과 ‘Identity’ 사이에서 큰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중략)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중략)

중년 남자들이 「빙고」를 부르는 이유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아닐까. 다들 이 땅이 너무 싫어서 몰래 이민을 고민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부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걸고 싶은 거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라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라고. 그런데 왜 이민을 가면 안 되지?
(24~25면)

대한민국을 버티게 하던 정신은 ‘맨주먹’ 정신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 어낸 주역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신전은 서울에서 있고 제의는 야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주술적 의미가 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다~, 나 바라는 대로!” 라는 주문을 외우며, 모든 것이 마음먹 기 달렸다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다고 다독인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다는 언술 주체와 언술 행위 주체자의 불일치를 보여준다.⁴⁶⁾ 그러니 ‘완전 희망찬 노래’만 부르던 언술 주체와 비참하게 죽어버린 터틀맨, 언술 행위 주체의 대비는 현 한국사회의 주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을 나타낸다.

그녀가 “내가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런 거대한 톱니바퀴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야. 아마.”(28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계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더 이상 ‘중년 남자’처럼 한국에 남아 ‘버티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통일은 거대한 톱니바퀴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톱니바퀴일 것이다. 청년들은 중년 남자들의 ‘맨정신’도 없고 ‘버틸 의지’도 없다. 헬조선의 청년들은 이미 ‘헬조선’에 살고 있기에, 통일이란 거대한 톱니바퀴를 피하려 떠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헬조선’사회의 탈피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헬조선 사회의 탈피는 스스로 ‘헬조선 아비투스’를 인식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먼저 전자가 이루어져야 ‘통일’에 대한 의식이 변화된다. ‘헬조선 아비투스’라는 톱니바퀴가 굴러간다면, ‘통일의 바퀴’는 이음새가 맞지 않아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헬조선 이데올로기’가 문제인 것은 ‘첨예한 極(극)’에 다 달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극, 경제의 극, 빈부격차의 극에 달아있다.

46) 이에 대한 예시는 지젝의 예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공포정치 시대에 살고 있는 두 소녀가 대화를 나눈다. “내가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좋아했다면 그것을 먹어야 하잖아? 그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언표 주체와 언술 행위 주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억압하는 사회체제에서 소녀는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아스파라거스를 욕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담론 속에서 감춰지면서 드러나는 무의식 주체의 역설적 위치이다. 두 주체의 분열은 언어적 속성이기도 하고 사유와 존재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김석, 『에크리』, 살림, 2007. 170면.

“한국이 그렇게 싫은 이유가 뭐니? 한국 되게 괜찮은 나라야.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따지면 20위권에 있는 나라야.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와 별 차이 없다고.”

애가 기자 시험 준비하더니 쓸데없는 지식만 늘었다고.

“아니, 난 우리나라 행복 지수 순위가 몇 위고 하는 문제는 관심 없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런데 난 여기서는 행복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호주에서 살아 본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거기 가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난 여기서도 2등 시민이야. 강남 출신이고 집도 잘 살고 남자인 너는 결코 이해 못해.” (61면)

‘한국 되게 괜찮은 나라’라는 지명의 이야기는 국가가 주장하는 ‘애국적 이미지’와 같다. 애국적인 이미지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계나는 ‘행복’에 대해 묻는다.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라서 답을 할 수 없을 듯하지만, 인문학이 통일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행복’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부분에서는 ‘호주-호주인 아래 한국인’, ‘한국-한국인 아래 동남아 사람’으로 등치되고 있다. 하지만 계나는 한국의 ‘동남아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생활수준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이야 어떻게 되든 괜찮아. 망하든 말든, 별 감정 없어. 이제 내가 호주로 가는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아직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라면 더 쉬울 거라는 직감이 들었”(161면)⁴⁷⁾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타자화’시키면서 각

47) 이런 점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서울이 옛날이랑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야. 나아지는 게 없어.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어.” 장강명, 앞 저서, 103면.

자의 삶,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 한국의 ‘동남아 사람’, 호주의 ‘한국사람’으로 살기 선택했다는 것은 ‘사람의 통일’에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애국가 가사 알지? 거기서 뭐라고 해? 하느님이 보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만세를 누리는 것도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나는 그 나라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야. (170면)

국외자라는 게 참 서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이곳에서는 평생 국외자겠구나, 그런 체념도 했지. 그런데 난 한국에서도 국외자였어.

나더러 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조국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든. 솔직히 나라는 존재에 무관심했잖아? 나라가 나를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지켜 줬다고 하는데, 나도 법지키고 교육받고 세금 내고 할 건 다 했어.

내 고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줄 구성원을 아꼈지. 김연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주로 ‘나라 망신’이라는 딱지를 붙여줬어. 내가 형편이 어려워 사람 도리를 못하게 되면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의 명예를 걱정해야 한다는 식이지. (170~171면)

난민 의식은 ‘국외자’로 표현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애국을 말하지만, 정작 국가에겐 ‘애민’이 없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국가는 ‘나라는 존재에 무관심’했다. ‘나라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도리를 못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라의 명예’를 걱정해야 한다.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는 언론, 학교 등의 기관에서 행사하는 힘이기도 한데, 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계나, 현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다. ‘고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

다. 통일 사회는 주체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외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 인식이 지속 되었을 때, 이러한 ‘헬조선’ 인식은 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합병증처럼 문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시민을 ‘난민화’ 시킨다는 것은 곧 시민을 ‘타자화’ 시킨다는 것이다. ‘헬조선’의 시민들은 이런 점에서 민족, 국가와 결별하고 ‘국가’를 선택하는 이데올로기를 갖는다. ‘헬조선’의 기억을 애도 과정 없이 ‘공동 기억’으로까지 가지고 간다면 ‘공동 기억’ 중에서도 심각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래한 통일 사회와 그전과 같은 ‘헬조선’이 되지 않을지, 남한 주민은 더욱 통일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통일 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은 당위성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도 해당된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경제적’ 이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자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탈근대적 주체들은 공식적인 제도, 이데올로기를 알면서도 따르고, 또 그것에 대해 냉소한다. 송두율이 말한 ‘남과 북 모두 살리기’에 대한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를 ‘국외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말이다.

2. 『국가의 사생활』

-디스토피아 통일 사회

“아니예요 아니야. 그럼 내가 열스럽지. 듣기 좋으라고 통일이지 우리야 남조선에 피난 온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요? 통 큰 동포애가 없다면 이럴 수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엔 최열 회장님 그분 민족주의자요. 일제시대였다면 분명히 항일 투쟁을 령도하셨을 거예요. “(이용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61면. 이후 면수만 표시)

『국가의 사생활』에서는 흡수통일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실상 ‘피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생활』은 실제 통일 관련 저서들을 총 56권을 참고하여 집필된 소설이다. 그만큼 작가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소설 자체는 ‘범죄’의 영역에서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웅준은 작가의 말에서 ‘환란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환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지하 세계’이다. 지하로 끌려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웅준은 『국가의 사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인 ‘리강’은 북한의 빨치산 영웅의 손자로 엘리트 군인이었다. 그러나 통일이 된 이후에 그는 북한 군인들과 이북인들이 모인 폭력조직 ‘대동강’에 들어가게 된다. ‘대동강’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그가 ‘립병모’라는 인물의 죽음을 파헤치면서 소설은 진행된다. 이 ‘죽음’을 파헤치면서 나타나는 서사들은 단순히 ‘범죄의 재구성’을 위한 구성이 아니다. 작가는 이 ‘재구성’ 속에 치밀하고도 세밀하게 ‘흡수통일’의 모습을 그려낸다.

과거 북한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들의 경력은 통일 조국에서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가령, 북한의 교사들은 거의 전부 교단에서 방출당했다. 처음에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든 재교육해 끌어안아 보려 하였으나 이남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북학생들이 훨씬 강력하게 북한 출신 교사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7면)

북한의 사회적 ‘상징(지위)’은 이제 통일 조국에서 더 이상 사회적 ‘상징(지위)’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들이 사회에서 인허 받았던 전문직들은 모두 무효화되는 것이다. 즉 두 사회가 합쳐지면서 ‘지배 상징(사회)’이 그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두 ‘직감’한다. 이북학생들도 이를 빠르게 수용하여 북한 체제의 ‘상징’들을 모두 거부한다.

통일에 있어서도 이 점이 중요하다. 서로 각 다른 의미부여를 받은 ‘통

일 주체'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상징(지위)을 어떻게 인정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한쪽 사회 체계가 '붕괴'된 상황은 상징 그 자체를 '무효'화 시킨다. 통일 한국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의료계를 인정할 것인가?(이것은 출신 성분의 차별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허가와 같은 문제로서), 우리는 북한의 군인을 '군인'으로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역설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북한이 주적이 아닌 남한 군인에게도, 해당 된다.) 북한의 변호사를 '변호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헌법도, 형법도 다른 법체계를 다시 교육할 것인가?)

이것이 '흡수통일'의 가장 큰 단점이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 '흡수통일'만큼 현실적이고 예상되는 통일은 없다. '흡수통일'은 그저 담론으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체', '실재'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레드아이는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환상을 보다가 잠이 들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제2의 대마초쯤으로 통했다. (중략) 진위 파악이 불가능한 일성에 의하면 이북 출신의 어느 젊은 천재 약학자가 통일 이후 서울에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효자동의 한 다락방에서 발명했다는 데 이제는 국가명 색인에서 삭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피바다 정신을 기리는 붉은 눈, 그리하여 레드아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알약이서서 운반과 복용이 간편한 레드아이는 명칭만 레드아이지 까끌까끌한 회색이고 짝 쥐면 바로 부서졌다. (42면)

무엇보다도 내재화된 '국가 이데올로기'는 쉽게 제거되기 어렵다. 작가는 이 점을 착안하여 이데올로기를 '마약'이미지로 만들어낸다. 『국가의 사생활』에서는 이북 출신들이 '2등 시민'이기에, 모두 과거로 돌아가는 '레드 아이'에 집착한다.⁴⁸⁾ 레비나스는 '얼굴과 얼굴의 맞댐'이 서로의 눈

48) 이러한 부분은 "이북 사람들이 이남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당장의

동자에 ‘타자’가 맺히면서 ‘타자’가 내 안으로 교감한다고 설명한다. 즉 서로를 인식함으로써 서로의 사고에 ‘타자’가 생겨 그 ‘타자’와 교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굴과 얼굴의 맞담’이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 ‘레드 아이’라는 렌즈가 있다면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맺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남한’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정말 ‘레드 아이’에 취해 있는 것은 북한 인민들만 일까? 아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아직까지 ‘빨갱이’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레드 아이’라는 렌즈는 남한 시민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남한 시민들은 북한 주민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레드 아이’에 취해 그들을 차별하고 2등 시민 취급할지도 모른다. “이남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에 관해 이것저것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왜일까? 이북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96면) 막상 그 ‘레드 아이’는 부질없이 ‘회색이 고 짝 쥐면 바로 부서’지는 것임에도 말이다.

이것을 ‘남한’과 ‘북한’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작가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준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조선도 과학과 이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야. 이남 사람들 역시 이북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것을 무작정 갈망하는 에너지가 흘러넘쳐. 그렇지 않고서야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번성할 수는 없는 거지. (중략) 북이나 남이나 조선 놈들은 하나같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미신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가난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습성이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개인 의식은 미약한 반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지독히도 강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비단 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인격이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인해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을 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징후였다. 국가 같은 거대 조직이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주로 자기보다 높은 자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행복과 존재감을 부여받는 경향이 농후하다. 삶에서 자아가 소외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란 곧 공포다.”(98~99면)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

다분한 민족이야. 이남 사람들도 이북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가.” (182~183면)

작가가 ‘레드 아이’라는 마약을 제시했듯, 남한은 이미 신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마약’에 취해있다. 신자유주의는 ‘절대적인 것을 무작정 갈망’하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지배 방식은 규율사회와 같이 규율로서 객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부과함으로써 다룬다. ‘할 수 있음의 자유는 해야 함의 규율보다 더 큰 강제를 낳’는다. “해야 함에는 제한이 있지만, 할 수 있음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 수 있음에서 유래하는 강제는 한계가 없다.”⁴⁹⁾ 남한은 ‘레드 아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시각에 놓여 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현실은 이러한 ‘마약’에서 주체들을 깨워 버린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들은 ‘레드 아이’를 다시 복용하거나 아예 ‘신자유주의’에 취해버린다.

계속해서 앵커는 과거 북한의 핵 시설에서 근무했던 지도국 예하 부대원들이 방사선 오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한 중년 남자가 이북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는 이남 노동단체들에 항의하며 분신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었다. (131~132면)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이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남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헬조선’은 그대로 이어져 올 것이다. 이미 질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질병에 걸렸다고 지병이 덜 아픈 것은 아니다. 이미 ‘헬조선’에 ‘이북’이라는 ‘헬Hell’이 더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흡수통일 된 통일 사회에서, 북한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문제로부터 자생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적하는 것은 바로 ‘통일 사회=남한 사회’가 되는 것을 지적한다. ‘북한 사회’는 지하 세

49) 한병철,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10면.

계로 향하고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문제는 남한 사회에서 겪었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 사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이끌려 들어갈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데, 『국가의 사생활』 과 같이 고문, 협박, 폭력, 등의 암적인 문제가 더 치밀해질 수 있다.

여기서의 ‘민족’은 그래서 ‘타자’다. ‘민족’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 통일 이후에도 ‘타자’로서 남을 것이다. ‘이북민’은 ‘통일 사회’에서 ‘타자’로 남아 있다. 디스토피아 통일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통일’이 실패한 모습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앞서 분석한 『한국이 싫어서』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 통일사회의 모습은, 현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V. 결론

- 타인에 대한 환대

본 논문은 기존의 통일 담론이 사회학·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통일 담론은 ‘북한’을 ‘동일’, ‘동질’로 이해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가 경제 사회 분야에 간혀 정서적, 문화적 통일 사회의 모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는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가진 ‘통일인문학’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을 방법론으로 한다. 현재까지 주된 통일 당위성으로 제시된 ‘민족’을 ‘동질’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타자’의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타자로서 ‘민족정체성’을 다시 재고해야 함을 제안한다. 통일은 회복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통일 사회’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나’는 ‘난민’으로 ‘리강’은 ‘2등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원권’, ‘환대의 권리’를 각자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권리로써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정치하게 그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

김현경은 ‘환대’의 개념을 ‘성원권’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⁵⁰⁾ 성원권은 인권과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싼 보편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간격을 단지 규범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주 사회’에 있어 이주민들이 국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국 사회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 사회, 제도, 문화 등을 교육시킨다.

환대엔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로 나뉜다.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타자, 새로운 이민자, 손님에게 그들을 규정하는 어떤 것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당신의 주권성과 집을 강탈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 환대의 조건이다(당신의 공간, 집, 국가의 주권성을 포기하는 것). 참기 어려운 일이다. 51)”

5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참고.

51) 이병하, 「환대의 개념과 이민정책」, 문화와정치, 4집,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재인용 65면

하지만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는 법과 정치에 의해 제한을 가하는 조건적인 환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두 가지의 환대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⁵²⁾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들 대부분은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평화’라는 이름하의 ‘무조건적 환대’에 가까운 주장했다.

결국 우리는 ‘조건적 환대’를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 사회’의 논점이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 사회’로서의 통일 국가 설정은 ‘흡수통일론’, ‘통일대박론’과 다를 바가 없다. ‘이주 사회’의 개념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통일 사회’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주체-주체’론이 아니라 ‘타자-타자’론을 제시하고 ‘게스트 하우스론’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의 어떤 부분들도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당연한 관점이자 시각이다. 그러나 ‘함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남과 북은 서로가 ‘주체-주체’론으로 통일 담론을 이끌어 왔지만 여야 하지만 ‘주체’의 형성은 ‘타자’에 있고 ‘타자’의 형성은 ‘주체’에 있기 때문에 ‘주체-주체’론은 각 주체들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반면 ‘타자-타자’는 서로의 양립이 가능한 시각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자’에 대한 ‘타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타자’역시도 ‘나’라는 타자로 인한 ‘타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자의 타자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타자성’은 타자간의 공통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타자는 ‘타인’이다.

환대의 권리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설명된다. 왜냐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통일이란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음에도 ‘주인

52) 이병하, 위 논문, 65면.

-손님'의 개념이 있다면 진정한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과연 서로가 그 집이 편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미 '주인'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집'의 개념이 중도적으로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게스트 하우스'는 소유주는 있어도 주인의 권리를 가진 이가 없다. 몇 가지의 규칙을 정하고 그 외에는 게스트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게스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불편'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공간, '불편'으로 배려하는 공간이 '게스트 하우스'인 것이다.

이 공간은 남과 북이 '타자와 타자'로 만날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 낸다. 서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내에서 서로 자유롭게 지내면서 '불편'을 감소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통일의 중간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할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지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먼저 건립해야 한다. 먼 친척이 와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려면 가족도 가족이 될 시간이 필요하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덧 가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食口(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말한다. 가족은 곧 식구이다. 가족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거주하는 형태로서 유지'하여 친화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의 중간 단계를 합의한 기존의 회담과도 일치한다.

통일 주체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게스트 하우스'에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내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며 밥을 먹다보니 '공통점'을 알게 된다. '게스트 하우스'의 강점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게스트 하우스'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떤 '실체'로 나타나야 하는가의 질문을 한다면, 논자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개념의 이해는 법학자, 정책담당자, 통일관계자 행정부, 통일부 등이 남과 북을 '게스트'로서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법, 정책, 행정제도를 제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역할 담당을 위한 '전문가'인정 역시도, 이런 '게스트 하우스'에 지내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역할을 나누듯이, 서로서로 공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모두가 손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손님'과 지낼 수 있는 상태인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문헌

-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2015.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참고문헌

- 김석, 『에크리』, 살림 2007.
김영범,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 민중사 심화와 기억사회학』, 한국학술정보, 201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라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한병철,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참고논문

- 김도식, 「‘통일인문학’의 개념 분석」, 통일인문학 51집, 155~172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원구원 2011.05.
김성민, 「분단시대, 통일 사유와 철학의 실천」, 철학 128, 191~215면, 한국철학회, 2016.08.
김성민, 「분단과 통일, 그리고 한국의 인문학」, 대동철학 52집, 대동철학회, 2010. 451~470면,
김성민, 박영균,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인문적 비판과 성찰」 통일인

문학 56집, 85-113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강민길, 백낙청, 송두율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범한철학 59집, 범한철학회, 2010. 507-533면

김성민, 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92집, 철학연구회, 2011., 143-172면

김병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01-139면

박민철, 「헤겔 ‘타자’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 통일인문학논총, 건국대학교인문학연구원 제 51집, 2011.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14집, 77-104면, 북한연구학회 2010.

변중현,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일담론」, 윤리교육연구 34집, 한국윤리교육학회, 339-359면 2014.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집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이병수, 「남북 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체제와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48집, 9-32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11.

이병하, 「환대의 개념과 이민정책」, 문화와정치, 4집,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임채완, 정소연, 「한국 통일문화의 다문화적 접근」, 대한정치학회보 22집 1호, 대한정치학회, 133-153면 2014.

장성규, 「통일문학을 넘어 탈분단 문학으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0.

정정훈, 「헬조선의 N포 세대와 노력의 정의론」, 문화과학 86권, 문학과학사. 2016.

조르조 아감벤, 「인권을 넘어」, 양창렬 김상운, 오늘의 문예비평, 2006.

조성환, 「통일론의 비판적 지식사회론-민족패러다임의 비판적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3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239-269

최우선, 황태희, 최영준, 주형민,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59집 3호, 84-112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허명철, 「민족적 시각에서 보는 통일담론」, 통일인문학 50집, 건국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303-320면, 2010.